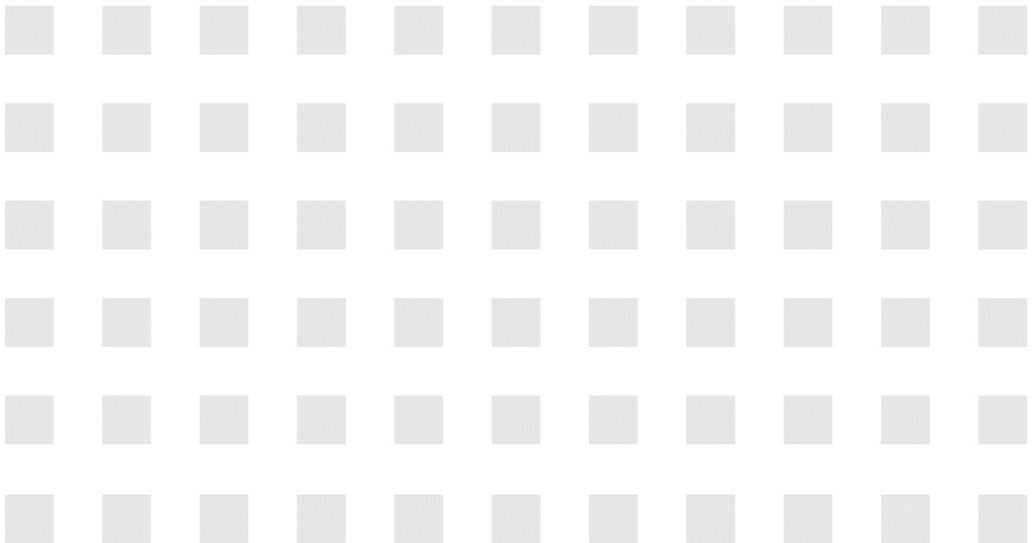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

양정필 · 노우정 · 오승주 · 현미애 · 현수성



발 간 사

제주학연구센터 〈2021 제주학 연구비 공모 지원 사업〉 기획주제 부문에 선정되어 연구한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은 제주의 근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일제 신문기사 자료집을 바탕으로, 크게 다섯 가지 주제 '항만 수축, 초등교육, 해녀, 면장, 고순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항만 수축'은 섬인 제주에서 항만은 육지부와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하고 중요한 교통 시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주 주요 항만의 구축은 근대 제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제주도민의 초등교육기관 설립 운동을 주제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일제 강점기에, 제주도는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초등교육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제주 마을 주민들의 경제력과 강력한 마을공동체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셋째, 일제강점기 제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제주해녀의 생활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제주 해녀의 공동체성이 더욱 뚜렷해져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넷째,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 제주지역 일제강점기 '면장'과 그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제강점기 제주도 아나키스트 운동을 주도했던 고순흠의 생애와 활동을 통해 일제 강점기 제주도 지식인의 저항운동과 그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제주학에 있어 제주 근현대사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제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공모과제에 참여하여 이 연구를 위해 애쓰신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의 양정필 교수님과 노우정·오승주·현미애·현수성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해 애쓴 우리 센터 고은솔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목 차 CONTENTS

I. 총 론	1
II. 일제강점기 제주 주요 항만의 축항과 영향	7
1. 머리말	7
2. 축항 필요성 대두	8
2-1. 운항 증가와 해상 안전 확보	8
2-2. 제주 개발의 기반 시설 확충	12
3. 축항기성회 조직과 주요 활동	14
3-1. 산지항 축항기성동맹회의 조직과 활동	14
3-2. 서귀포항과 한림항의 축항기성회	24
4. 조선총독부의 제주도 개발계획과 항만 수축	32
4-1. 1937년 제주도 개발계획 수립	32
4-2. 주요 항만의 축항 계획 및 시행	35
5. 축항이 지역 사회에 끼친 영향	41
5-1. 축항 이후의 개선점	41
5-2. 축항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변화	42
6. 맺음말	46
III.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의 초등 교육기관 설립과 그 특징	48
1. 머리말	48
2. 초등 교육기관 설립 추이	51
3. 초등 교육기관 설립 운동의 특징과 구좌면 사례	58
3-1. 초등 교육기관 설립의 특징	58
3-2. 구좌면의 공·사립 보통학교 설립 운동	61

4. 초등 교육기관 설립의 원동력: 경제력과 마을공동체	69
4-1.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의 경제력 성장	69
4-2. 마을 공동체성과 주민의 협력	73
5. 맺음말	75
IV. 일제강점기 해녀노동의 재인식과 제주사회의 변화	77
1. 머리말	77
2. 근대 경제체제의 유입과 해녀 노동가치의 변화	80
2-1. 근대의 도래와 수산물 상품성의 발견	80
2-2. 해녀 노동가치 상승에 따른 해녀수 증가	85
3. 경계를 넘어선 해녀 노동의 확장, 출가물질	93
3-1. 출가물질의 원동력 - 생존과 이윤 축적	93
3-2. 출가해녀의 이중고 - 착취구조와 입어분쟁	99
3-3. 해녀조합의 형성과 출가물질의 확장	105
4. 일제강점기 해녀가 가져온 제주사회 변화 양상	108
5. 맺음말	113
V.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면장(面長)에 관한 연구	
: 구좌·신좌·구우면을 중심으로	116
1. 머리말	116
2. 일제강점기 지방지배정책과 면제	119
2-1. 면제 실시와 면장	119
2-2. 제주에서의 면제 실시: 행정구획과 면장 명단	121
3. 면 현황과 면장의 활동: 구좌·신좌·구우면	127
3-1. 구좌면: 중심인물을 통한 모범면(장) 만들기	127
3-2. 신좌면: 계속되는 지역유력인사 포섭하기	135
3-3. 구우면: 식민지배와 이어지는 면민 저항	142
4. 맺음말	149

Ⅵ. 일제강점기 제주도 지식인의 저항운동

: 죽암(竹岩) 고순흙의 생애와 활동을 중심으로	153
1. 머리말	153
2. 불행한 탄생·성장과정에서 일으킨 전통사상과 아나키즘 사상 간의 긴장 ...	161
2-1.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과 고순흙의 인성론(人性論)	161
2-2. 고순흙의 성장과정에서 만난 여성들	165
2-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자주운향운동에 대한 주도면밀함	168
3. 고순흙의 교육계몽 사상과 덕치주의적 반공사상	171
3-1. 고순흙의 교육계몽 사상	171
3-2. 고순흙의 덕치주의적 반공사상	176
4. 맺음말	179
참고문헌	182

표차례

〈표 2-1〉 1925년 제주지역 명령항로 운항 선박	9
〈표 2-2〉 제주도내 연안에서 축항 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한 해난 사고	11
〈표 2-3〉 1929년도 서귀포항 이출입물품 내역	12
〈표 2-4〉 1923년 조직된 축항기성동맹회 임원 주요이력	16
〈표 2-5〉 1925년 조직된 축항기성동맹회 임원 주요이력	18
〈표 2-6〉 산지항 2기 축항기성동맹회원의 주요 이력사항	22
〈표 2-7〉 한림항 축항기성회 연도별 기부금 적립액	29
〈표 2-8〉 제주도개발회사 자금소요액	33
〈표 2-9〉 제주도개발 토목공사비 일람표	35
〈표 2-10〉 제주도개발계획안의 항만수축공사 계획	35
〈표 2-11〉 서귀포항 간이수도 사용료 수입	43

〈표 3-1〉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추이	57
〈표 3-2〉 매일·동아·조선 세 신문의 교육 관련 면별 기사 건수	59
〈표 4-1〉 일본과 체결한 수산업관련 협정	82
〈표 4-2〉 일제강점기 신문에 나타난 해녀수 및 수익의 양상	89
〈표 4-3〉 해녀 출가물질의 비용과 이익	98
〈표 4-4〉 1939년 지역별 제주도 농민의 생활비 비교	109
〈표 5-1〉 일제강점기 각 면별 소속 리 현황	125
〈표 5-2〉 일제강점기 각 면별 면장 명단	126
〈표 5-3〉 일제강점기 구좌면 인구수	127
〈표 5-4〉 일제강점기 면별 전염병 발생 및 사망자 통계	128
〈표 5-5〉 일제강점기 구좌면 역대 면장 명단	129
〈표 5-6〉 일제강점기 신좌면 인구수	136
〈표 5-7〉 일제강점기 신좌면 역대 면장 명단	137
〈표 5-8〉 일제강점기 구우면 인구수	142
〈표 5-9〉 일제강점기 구우면 역대 면장 명단	143

그림차례

〈그림 2-1〉 산지향 1기 방파제 공사 준공도	20
〈그림 2-2〉 산지향 2기 축항 평면도	23
〈그림 2-3〉 1934년 서귀포항 재해복구공사 평면도	26
〈그림 2-4〉 한림향 2기 축항 방파제 위치도	30
〈그림 2-5〉 1943년경 제주항 평면도	39
〈그림 3-1〉 1932년 명진학숙 창립 5주년 기념	55
〈그림 3-2〉 1930년대 법환서당	55
〈그림 3-3〉 1936년 수원서당 제2회 졸업기념	56
〈그림 3-4〉 1928년 구좌보통학교 운동회	64
〈그림 3-5〉 1936년 중앙보통학교 제6회 졸업 기념	67

〈그림 3-6〉 1940년 하도학교 음악부	68
〈그림 4-1〉 1920~1930년대 제주도해녀 (무라야마 지준 사진)	87
〈그림 4-2〉 제주도해녀의 어포상황 (매일신보 1934.7.17.)	95
〈그림 5-1〉 일제강점기 면장 휘장	122
〈그림 5-2〉 제주도행정구역지도	124
〈그림 5-3〉 제주도관내도	124
〈그림 5-4〉 구좌면 이원화 면장 기념비	128
〈그림 5-5〉 구좌면 강공칠 면장 기념비	131
〈그림 5-6〉 구좌면 강공칠 면장 사진 및 신문기사	131
〈그림 5-7〉 신좌면 한보권 면장 공덕비	139
〈그림 5-8〉 구우면 임창현 면장 기념비 및 신문기사	145
〈그림 5-9〉 구우면 김창우 면장 기념비	146
〈그림 6-1〉 고순흠 사진 (연합 아카이브)	157
〈그림 6-2〉 만년의 고순흠 (연합 아카이브)	160
〈그림 6-3〉 통신중학강의록 (제주항일기념관 소장)	172
〈그림 6-4〉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 고순흠의 묘	175

I. 총 론

역사적 경험이 현재의 제주사회 및 제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끼쳐왔는가를 해명하는 작업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각 시기별로 제주사회의 역사문화를 검토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그것이 제주사회와 제주인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근대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여 당시 제주 사회의 주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그 자체로 역사학적인 연구 성과가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제주사회와 제주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항만 수축, 초등교육, 해녀, 면장, 고순흠 등 세부 주제의 연구 성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제주사회, 제주인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고, 각 주제를 선정한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 내용 및 그 의미를 정리하였다.

II. 일제강점기 제주 주요 항만의 축항과 영향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주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축항의 사례들을 살펴, 지역민의 항만 시설 확충 요구와 실제 축항이 제주도민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당시 제주민들에게 축항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산지항·서귀포항·한림항·성산포항·모슬포항 등 도내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축항의 내용과 과정을 검토하였다.

섬이라는 지리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제주에서 항만은 해상 교통의 필수 기초 시설이다. 1600년대부터 약 200여 년간의 출륙 금지가 폐지된 이후, 제주민들은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동과 교류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후 제주-내륙, 제주-오사카 간 정기 항로가 개설되고, 교육·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외부로의 이동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항만의 이용과 접근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의 승강과 화물 선적에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 시설을 갖추는 것은 제주민의 생활 및 경제 활동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항만 시설의 이용 주체가 다양한 만큼 어선 조업이나 해운업 등 바다 이용을 생업으로 삼는 쪽에서는 경제적 이윤 또한 항만 축항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일제 당국은 식민지 개발의 기반시설로써 항만을 관리하였으므로, 이들이 의도했던 축항의 측면도 존재한다.

1920~30년대 제주 지역 축항은 지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운·운송업자, 상업인, 지역 행정당국자, 공공단체 관계자 등 조선인과 일본인을 망라한 이른바 지역 유력자들이 주축이 되어 ‘축항기성회’를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축항 규모 및 공사비 재원 등을 계획하고, 일제 당국에 다양한 진정 활동을 전개하였다. ‘축항기성회’ 구성원의 성격 상, 일제 당국의 요구와 각종 이익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축항이 과연 제주민을 위한 개발이었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실제 축항 사업은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었고, 지역민들은 부역, 부과금, 기부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축항 사업에 참여하였다.

일제는 재정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의 항포구 수축을 선별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각 지역의 차별적 개발로 이어졌다. 실제 축항 설비 결과 또한 완전하지 않아 미완에 그쳤기 때문에 지역민의 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항만의 수축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항만 이용 선박의 급수를 통해 면재정에 충당할 계획을 세우거나, 항만을 중심으로 시가지의 물리적 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후반 식민 당국은 ‘제주도 개발계획’이라는 거대한 산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도내 산지항·서귀포항·한림항·성산포항·모슬포항 5개 항만의 수축을 계획하였다. 일제의 의도가 집약된 이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출입을 위한 항만의 수개축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앞서 시행된 축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본 계획은 첫째, 제주도민이 배제된 채 식민 당국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것과 둘째, 계획 수립 직후 발발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수정된 계획은 군사적 목적에 맞추어졌고, 전쟁으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 제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항만 정비도, 제주인을 위한 시설 정비도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항만 수축은 사실상 수탈의 교두보이자 제주 개발의 시작점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식민지 근대화와 수탈론의 주요한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보다는 축항의 경위, 시행 과정과 내용 등 실상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Ⅲ.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의 초등 교육기관 설립과 그 특징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주도민들의 초등교육기관 설립 운동과 그 특징 그리고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써 제주도민의 경제력과 마을 공동체 문제를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제주도민들은 초등교육기관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열심히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총독부는 우민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학교를 세울 수 없었다. 그래서 우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초등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당시에는 이를 개량서당, 개량서숙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개량서당은 1920년대 후반 50여 개에 이르고 1939년에 69개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개량서당이라고 불렀지만 전통적인 서당과는 판이하게 다른 교육기관이었다. 독립된 학교 건물은 물론 운동장도 있었고 교사도 근대적인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다. 교과목도 당연히 보통학교의 그것에 준하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제주도의 개량서당에 대해 보통학교로 승격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대적 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개량서당으로 마을의 학령기 아동들에게 근대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개량서당은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졸업을 하더라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이미 설립한 개량서당을 학력이 인정되는 보통학교로 발전시키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는 총독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였다. 경제력이 있는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그래서 개량서당을 설립한 이후에는 기본금을 마련하고 보통학교로 승격을 추진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총독부도 보통학교의 증설을 추진하였으므로 재정적인 준비가 된 개량서당은 보통학교로 승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대개 4년제 보통학교로 인가하였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6년제 보통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 했다. 4년제 보통학교 졸업으로는 바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학교를 설립한 마을에서는 다음 단계로 4년제를 6년제로 승급시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역시 적지 않은 재원이 요구되었다. 마을에서는 이 역시 주민들의 공동 부담으로 해결하였다.

이처럼 초등교육기관을 마을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마을의 경제력이 중요하였다. 일제강점기 제주도는 해녀의 물질 수입과 재일 제주인이 보내온 돈이 있어서 이전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 그리고 다수의 제주도민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서 사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여유를 자체 교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초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제주도 마을의 공동체성,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협력심도 학교 설립에 큰 동력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금전적 여유가 있었다해도 몇몇 집안에서 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면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 마을에서 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보도한 신문 기사는 없다. 이것이 그런 갈등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대다수 마을 주민은 학교 설립에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을 공동체성이 여전히 강고하였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IV. 일제강점기 해녀노동의 재인식과 제주사회의 변화

해녀집단 고유의 공동체성과 강인한 생활력, 생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추구하는 배려심이 해녀의 물질노동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개항과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화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시각은 해녀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전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로만 구성된 해녀집단의 상대적 폐쇄성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기를 꺼려했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근대 이후 해녀공동체의 변화 양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이어져 왔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여러 신문에 기술된 해녀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근

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해녀공동체의 특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근대 이전 해녀들의 물질노동은 오랜기간 동안 봉건적 억압과 수탈의 대상이었으나 개항을 전후한 시기 일본이라는 근대화에 앞선 타자의 등장으로 인해 일시에 성격이 바뀌게 된다. 자본주의적 상품경제가 침투하면서 해녀들

이 물질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확물은 시장에서 고부가가치의 환금성을 가진 상품이 된다. 척박한 화산토양에서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제한적이었고, 어업분야 역시 선진화된 기술과 막강한 자본으로 무장한 일본어민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다만 해녀들의 물질노동이 해안선과 가까운 연안어장을 생산의 거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우위가 있었다. 따라서 근대 이전 전체적으로 제한된 인원만이 종사하던 물질노동에 뛰어드는 제주여성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물질노동의 고부가가치에 눈을 뜨게 된 제주의 해녀들에게 섬이라는 제주의 좁은 어장환경은 점차 해녀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질곡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출가물질’이다. 초기 출가물질에 대한 기록은 19세기 말에 이미 시작된 것을 보여주지만 강제 병합 이후 일제당국에 의해 근대적인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출가물질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해녀들의 출가물질은 대상지역인 한반도 남쪽의 해안지대에 마땅한 경쟁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블루오션’이었다.

하지만 출가물질 과정에서 제주해녀들은 물질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출가물질의 자본을 제공하는 일본 해조상과 객주에 의해 중층적인 수탈이 이루어졌고, 제주해녀가 자신들의 어장에 진입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반발하는 지역민들과의 충돌 또한 불가피했다. 해녀들은 입어료와 각종 명목으로 대상 지역 어민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입어료에 상관없이 출가물질을 강제로 금지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이에 대한 제주해녀들의 대응은 ‘해녀조합’의 설립이었다. 제주지역의 유지들에 의해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나 대다수 해녀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해녀조합은 창립 초기부터 자본과 행정 모두에게 적절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해녀들의 출가물질이 법제도적으로 ‘관행어업’으로 인정받으며 고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출가물질 대상 지역민들과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제주의 해녀들은 멀리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연해주까지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출가물질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에 이른다.

재평가된 물질노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출가물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해녀들의 경제적 기여는 제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는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제주사회를 변모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어촌지역에 대한 산촌지역의 우위는 일찌감치 반전되었고, 해녀집단 뿐 아니라 제주여성 전체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제주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한 것 또한 제주해녀와 그들의 출가물질에 의존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를 구성하는 일차자료인 일제강점기 신문자료들은 수치적 엄밀성이 떨어지고 이국취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일정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해녀들의 생활상을 큰 틀에서 재구성하기에 모자라지 않는다고 본다.

V.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면장(面長)에 관한 연구

이 글에서는 제주지역에서의 구체적인 면장의 활동을 살펴보고 역할을 정리하여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법제적 측면에서 면제가 시기별로 변천해가는 과정을 살폈고 이 과정에서 면장의 임용조건, 면의 업무와 면장의 역할, 면장의 지위에 대해서 정리했다. 기초조사로서 제주지역에서의 면 구역과 면 현황 그리고 면장 명단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제주지역의 구좌·신좌·구우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면 중 시기와 인물을 고려하여 면장 활동의 특성을 면별로 도출해보았다.

구좌면은 강공칠이라는 ‘중심인물을 통한 모범면(장) 만들기’의 특징을 보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강공칠은 일제강점기 가장 오랫동안 면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면 관련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일제 당국에 의해 각종 포상을 받았다. 강공칠과 구좌면은 사실상 일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방 지배와 행정

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자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신좌면 지역 면장 임용의 특징은 타 면에 비해 면장의 임용 기간이 짧다는 점이었다. 또한 면 리 중 조천리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면장이 임용되었는데, 임명된 몇몇 면장의 경우 서로가 친척인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유력인사로 임명된 면장으로는 김태호와 한보권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역의 대표적인 유지였다. 신좌면은 1910년대 조천만세운동이 있었던 지역이었다. 이후 지역 유지를 임용하여 적극적이며 장기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는 면과 면장을 만들어 보고자 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신좌면의 면장 활동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계속되는 지역유력인사 포섭하기’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활발히 활동한 구우면장으로는 임창현과 김창우가 있다. 이 둘은 15년 이상 면장으로 재임한다. 이들 면장은 장기간 임용되는 특징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우면민의 저항도 적지 않았다. 임창현은 면장 재직 당시 산업·금융·상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었으나 누적된 면민들의 불만과 면사무소 이전 관계 문제로 면민들에게 배척당한다. 이어 면장이 된 김창우는 1930년대 이후 교육 시설 확충과 향만 개발과 같은 행정을 적극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구우면민들에 의한 저항과 반대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전시체제 이후 중일전쟁에 적극 협력한 결과로 지나사변 공로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구우면 지역 면장의 활동에서는 ‘식민지배와 이어지는 면민 저항’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주도내 구좌·신좌·구우면의 면 현황과 면장의 활동 그리고 면민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면 지역별로 역사적 상황, 사회적 배경 그리고 면장의 역할 수행에 따라 조금씩 특징을 보이고 차이도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면장의 역할은 특징적인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제주 면장의 역할은 첫째, 일제 식민 지배를 위한 지역의 정책과 행정을 실현하는 자, 둘째, 제주도 전체 면장들의 조직인 면장협의회 구성원, 셋째, 해당면의 자문기구이자 의결기구인 면협의회 당연직 의장, 넷째, 면과 관계된 각종 조합의 책임자, 다섯째, 제주도 농회 통상의원, 여섯째, 면민의 이해를 반영하여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 면장은 현대사회에서 민원인에게 공공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의 일반적 공무원이 결코 아니었다. 면내에서 최고 실력자이자 행정 권력을

주고 있었다. 면민에게 억압적인 방식으로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존재였다. 면민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억압자였다. 동시에 조선총독부와의 관계에서는 지배 정책을 집행하는 현지의 명령 수행자이자 실천자였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거나 조명받지 못한 제주지역 일제강점기 면장 활동의 다층적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VI. 일제강점기 제주도 지식인의 저항운동 : 죽암(竹岩) 고순흙의 생애와 활동을 중심으로

3.1운동 이후 제주에서 펼쳐진 활발한 저항운동은 ана키스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일제 당국의 억압과 대중의 지지에 따라서 세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구분이 분명해졌다. 특히 죽암(竹岩) 고순흙(高順欽, 1893~1977)이 주도했던 제주도 ана키스트 운동은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순흙이 도일(渡日)했다는 이유로 저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순흙이 제기한 질문조차도 중시되지 못했다.

고순흙은 노사(蘆沙)학파의 거유(巨儒) 기정진(奇正鎭)의 문하로서 성균관 교수를 지낸 정통 유학자인 능봉(陵峰) 고성겸(高誠謙)의 아들이다. 비록 7세에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기는 하지만 5세 때 ‘유림 태자후보’였고 19세에 노자(老子)의 철학에 입각해 불혹(不惑)하게 되었다고 자술하고 있듯 동양학 전통의 사대부 면모를 보인다. 또한 그는 크로포트킨과 코토코 슈스이[幸德秋水]의 영향을 받았으며 3.1운동 직후 결성된 대한독립단 비서국장으로 활동하며 단장인 신채호에게 영향을 받아 ана키스트가 되었다. 이는 ана키즘이 현지화되는 좋은 모델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통 유학과 노장사상이 ана키즘 사상과 결합하는 형태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크로포트킨을 축으로 하는 고전적인 ана키즘 개념으로 ана키스트 고순흙을 분석했으며 동양사상과 ана키즘의 결합형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 고찰하였다.

정통 동양사상과 ана키즘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고순흙이 실제 현실에서 실천하는 활동 역시 결합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성균관 교수로 활동하다

가 어머니가 70 고령이 돼 노쇠해졌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지체 없이 제주로 귀향했던 아버지의 선례를 따라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였던 고순흠은 유독 여성의 처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고성경과 어머니, 고순흠과 어머니로 이어지는 3대의 가족 개념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 관념(유학의 용어로 하자면 ‘차등애(差等愛)’라고 할 수 있고 아나키즘 용어로는 ‘단힌 가족’)에서 열린 가족으로 나아간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것은 전통 유학의 배경에 선 고순흠이 아나키즘 사상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특성일 뿐 아니라 고순흠과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아나키즘의 지역화와 관련해서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단순 지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처지가 개선될 때까지 집중했던 모습은 제주해녀어업조합 창립 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고순흠의 책임감은 여성을 넘어서서 당시 교육 기회가 적었던 청소년을 위한 통신강의록 배포 사업에서 엿보이고, 제주-오사카 항로로 생계를 잇던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배 샅을 부과한 일본 선박회사에 대항한 자주운항운동에 나타난다.

고순흠의 교육계몽사상은 통신중학강의록과 조선노동공제회 기관지 『공제』의 연재물인 「다원설과 맑스설」 등에도 직접 나타나지만, 고순흠의 모든 활동에 녹아 있다. 선각각후각(先覺覺後覺, 먼저 깨달은 자가 나중에 깨달을 자를 각성시킬 책임이 있다는 『맹자』의 구절) 정신에 입각해 개인의 자주성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둔다. 이는 개인의 자주성을 강조한 아나키즘 운동과 조직력의 강화 또는 유지를 강조하는 공산주의 운동이 제기하는 근본적 질문을 환기시켜 준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주성이 강화되지 않는 한 조직력은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집단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일반적으로는 개인을 희생하기 마련이며 일제강점기 이후의 한국 현대사와 정부 성립기는 개인의 무수한 희생을 강요했다. 하지만 고순흠은 단 한 번도 개인을 희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집단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순흠이 제기한 질문은 개인과 집단이라는 평면적인 차원이 아니다. 집단의 힘은 개인의 연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 개인들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집단의 힘은 한계와 좌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고순흠이 하려고 했던 일이며, 해방 이후부터 제주4.3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이 겪은 한계와 좌절도 결국은 '개인'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I. 총론

현재의 제주사회와 제주인의 특징은 ‘탐라 1천년, 제주 1천년’이라고 하듯이 2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이 오랜 역사적 경험이 현재의 제주사회 및 제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끼쳐 왔는가를 해명하는 작업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각 시기별로 제주사회의 역사문화를 검토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그것이 제주사회와 제주인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 현재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근대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여 당시 제주 사회의 주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그 자체로 역사학적인 연구 성과가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제주사회와 제주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 주로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 영역에서는 항만 수축, 초등교육, 해녀, 면장, 고순흠 등을 그 구체적인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각 연구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우선 각 세부 주제의 연구 성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제주사회, 제주인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제주사회의 긴급한 현안 중 하나는 항만 수축이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항만 수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점진적으로 결실을 맺었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제주도민은 아동 교육에 대단한 열성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초등교육기관을 활발하게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무엇보다도 후세 교육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제주도민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시기에 들어서 해녀들의 경제 활동이 제주사회에 크게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해녀들은 가장 힘든 물질을 하여 어렵게 돈을 벌었다. 해녀 숫자와 그들의 수익에 대해서 아직 정리된 내용이 없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제주사회의 새로운 유력자층으로서 면장이 등장하였다. 면장은 총독부 정책을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면서 도민과 협조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유력자층으로서 면장의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고순흠은 아나키스트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의 사상과 활동은 유교적 소양

위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천하는 제주 지식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대의 제주도민은 해녀들의 물질 수입 등이 증대하고, 또 무어보다 제주도민 특유의 근검절약하는 생활에 의해서 어렵게 번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저축하였다. 그 결과 이전 시기보다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제주도민들은 아동 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다수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항만 수축 등을 이끌어 냈다. 새로운 지배층 면장은 지역사회 유력자로서 대우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총독부 정책을 수행하면서 도민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식민지 하의 새로운 유력자층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고순흠으로 대표되는 제주의 지식인은 시대의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실천으로 대응하였다. 이 시기에 확인되는 제주도민들의 몇몇 특징들은 이후에도 하나의 흐름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4.3이라는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전도민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모습, 여전히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 해녀들의 강한 생활력, 유력자층의 재생산, 비판적 지식인의 활동과 역할 등은 현재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인된다. 몇몇 특징은 본토의 다른 지역과 비슷하지만 또 몇몇 특징은 제주도에서 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세부 주제 외에도 몇 개의 중요한 주제들, 예컨대 재일제주인, 관광 산업의 역사, 감귤 등이 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까지 연구된다면 제주사회와 제주인의 특징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각 주제를 선정한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 내용 및 그 의미를 정리해본다.

항만 수축 : 제주도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본토와 떨어져 있는 섬이다. 따라서 전근대에는 본토를 왕래하기 위해서는 배편을 이용하였다. 19세기까지 배편은 바람과 해류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는 기선이 등장하여 육지와와의 교통수단이 좋아졌다. 육지와와의 빈번한 교류, 교역을 통해 제주 사회도 변화를 겪었고, 제주도민도 영향을 받았다. 기선이 등장하였지만 기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은 매우 미흡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 제주도 사회의 긴급한 현안 중에 하나는 안전한 항만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20년대 들어 산지항을 비롯하여 한림항, 서귀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항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항만 수축에 특히 관심이 컸던 세력은 본토와 활발하게 교역하는 실업가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항만 시설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항만 수축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조선총독부

를 비롯한 제주도청 등의 관에서도 정책적인 견지에서 항만 수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한 주체로 나섰다. 제주도민도 의연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각각의 목적을 갖고 항만을 수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서 항만 시설이 확보되는 항구가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기선이 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큰 기선은 먼 바다에 정박하고 종선으로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날랐다. 이처럼 항만 수축은 꾸준히 전개되었지만 한계도 존재하였다. 반면 1940년대 들어 일제는 병참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주정공장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 주정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구비된 항만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주정공장 설립과 연동하여 산지항이 개축되어 항만으로서 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제주도는 섬이었고 당시 교통수단의 대종은 선박이었던 만큼 항만 수축, 개축은 제주 사회의 긴급한 현안이었다. 그리고 항만 시설 수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참여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항만은 제주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토 및 일본을 왕래할 때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이 시기 항만 수축은 제주사회와 제주도민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초등교육 : 제주 교육도 근대에 들어 큰 변화를 겪었다. 조선 말기 제주도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대개 유배인들이 제주도 교육에 끼친 영향이 많이 연구되었다. 반면 당시 제주도 내의 전반적인 교육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부족 등으로 연구가 미진하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에는 대개 마을별로 서당이 있었고, 서당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한문 수학이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또 전체 조사가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웬만한 마을에는 서당들이 있었고 그 서당에서 기초적인 한문 교육이 이루어진 사실은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태의 제주도 교육계는 20세기 들어서 큰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통적인 서당이 여전히 적지 않게 존재하였다. 그곳에서는 한문 중심이 교육이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서당 교육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 특히 근대 교육을 받게 되면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 등 친일적인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전통적인 서당 교육과 근대적인 교육이 공존하였다. 그렇지만 시대는 근대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였다.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전통 서당의 비중은 축소되고 근대적인 교육기관은 증가하였다.

제주도민은 근대적 교육을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1920년대 이후 여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근대적인 초등교육기관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높은 교육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제는 우민화 정책, 실업교육 중시의 교육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는 매우 인색하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3면 1교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1920년대를 지나면서는 1면1교제로 변경하였지만 당시 조선인의 높은 교육 열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제주도민은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당시에는 그것을 ‘개량서당’이라고 불렀다.

개량서당은 대개 마을 단위로 설립되었다. 한 마을이 설립하기도 하고 혹은 두세 마을이 협력하여 세우기도 하였다. 이름에 서당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전통 서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였다. 교수 내용도 근대적인 과목이었고, 교사도 근대적인 중등 교육 이상을 이수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도 갖추고 있었다. 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못해 정식 학교가 되지는 못했지만, 정식 학교인 보통학교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다.

1910년대부터 이러한 개량서당은 설립되었다. 그러나 대개 3,1운동 이후인 1920년대를 거치면서 개량서당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추세는 1930년대까지 이어졌다. 개량서당은 마을 단위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근대적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던 어린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제주도의 교육기관 설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앞서나간 것이었다. 여기에는 제주도민의 공동체성, 마을의 경제력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 활발하게 설립된 초등교육기관 덕분에 미군정기 조사에 의하면 북제주군은 전국적으로 초등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해녀의 활동 : 근대 제주사회의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해녀들의 활동이다. 조선후기에도 해녀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진상에 대한 부담이 가중하였고, 출륙금지령으로 인해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물 짚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었다. 또 당시에는 해녀들이 물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신체 노출도 적지 않았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야 했던 해녀들은 대개 천대를 받았다.

그런데 개항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진상의 과중한 부담은 없어졌다. 그리고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수요자는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제 해녀들은 해산물 채취로 돈을 벌며 집안 경제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당시 일본인 수산자본가, 한국인 객주 등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일부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실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 수입의 적은 부분만이 해녀의 몫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처럼 일본 수산자본가-한국인 객주-해녀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많은 부분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해녀들이 수중에 들어온 돈은 이전과 비교하면 많은 액수였다. 해녀들의 경제 활동이 이전 시기에 비해 제주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커지게 되었다. 해녀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으로 가정 경제도 유지하고 땅도 사면서 생활해 갔다. 가정뿐 아니라 제주 사회에 대한 해녀들의 경제적 기여는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 해녀들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것은 그들의 수입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몸에 베어 있던 근검절약하는 생활 태도도 중요하였다. 해녀 나아가서 많은 제주 어머니들은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돈을 헛되게 쓰지 않았다. 약삭같이 모은 돈을 학교 설립 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놓았다. 당시 학교 설립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해녀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개항 이후 제주사회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중에서 해녀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역할 증대 및 그들이 지역사회에도 끼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면장의 역할 : 근대로의 전환은 제주도 내의 유력자 혹은 지배층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목사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향리들이 제주도 내에서 유력자층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근대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새로운 유력자층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대개 관직이나 공직에 적을 두고 활동하면서 그러한 지위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 면장도 새롭게 대두한 지역의 유력자, 지배층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조선시대에도 면리제가 시행되었지만, 면장의 역할이나 위세는 인상적이지 않았다. 면장 보다 상급자인 군수나 현령 등의 지방관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또 그들이 실제로 해당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면장은 그 보조자로서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지방지배 방식을 바꿔서, 지방통치 수단으로 면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면장은 이전처럼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니라 그 지역의 강력한 권한을 지닌 존재로 부상하였다. 즉 일제하 면장은 명목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면의 행정을 총괄하는 유력자로 등장한 것이다.

면장은 현장 일선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민 업무를 맡은 존재이므로 일제는 일본인 보다는 한국인을 주로 임명하였다. 면장의 가장 큰 역할은 총독부의 정책을 현지에서 시행하는 것이었다. 총독부 시책이 현지 주민들의 요구와 일치하게 되면 면장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존재로 활동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교육기관 설립을 들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였고, 면장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당국과 교섭하여 실제로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면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면장은 기본적으로 총독부 시책을 집행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총독부 시책이 주민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만 면장이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총독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면장은 주민들의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정책을 일선에서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공출을 꼽을 수 있다.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가 크게 부족

하자 일제는 조선에서도 온갖 물건을 징발하였다. 무상으로 빼앗아간 것은 아니지만 강제로 내놓아야 할 수량을 할당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았다.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공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렇지만 면장은 공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따라서 주민들과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근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유력자 층의 한 부류로 면장은 이처럼 주민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도 하였지만 반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그럴 경우 관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고순흙의 활동 : 일제강점기는 일본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였던 만큼 그에 저항하는 제주도민이 적지 않았다. 3대 항일운동이라고 일컫는 법정사 항일 운동, 조천 만세운동, 해녀항일 투쟁은 물론 이외에도 많은 제주도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에 저항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저명한 항일운동가도 다수 배출하였다. 항일운동을 한 제주도민이 모두 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사상은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 제주도인들 중에는 아나키즘을 받아들여서 활동한 이들도 있었다. 당시 아나키즘은 주류라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아나키즘의 영향력이 있었다. 고순흙은 아나키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순흙에 대한 연구는 아나키스트로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글들을 보면 그의 사상 저변에는 유학적 소양이 흐르고 있다. 그가 아나키즘을 받아들일 때도 노장 사상 등에 기반하여 이해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는 고순흙 집안이 유교적 분위기였고 어려서 한학을 배운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순흙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유학적 소양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것이 성인이 되어 서구 사상을 수용할 때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순흙은 교육에도 남다른 열성을 갖고 있었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교육 계몽 운동에 헌신하였으므로 고순흙의 활동이 특별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순흙은 여성, 사회적 약자 등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고순흙의 면모는 기존 연구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다.

고순흙은 엄혹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제주도 출신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저항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제주도 출신 지식인들 중에는 고순흙과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고순흙이라는 개인이지만 그의 생애와 활동을 통해서 불의에 저항하는 제주인들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전통은 현재에도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일제강점기 제주 주요 항만의 축항과 영향

1. 머리말

제주인에게 바다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중요한 터전이다. 또한 외부 세계와의 연결로이면서 동시에 제주와 내륙을 단절시키는 환경적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적 시점에서 제주와 외부를 연결하는 가장 신속하고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비행기이지만, 근대 시기까지 제주인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바다를 운항하는 배가 유일했다.

현재 제주 하늘길의 교통로 기능과 더불어 어업 활동 근거지로서, 제주 바다는 운항 기선 및 연안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바다 조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 학업이나 출가 노동차 타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 장사를 위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 이들 제주인들은 다양한 삶과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배에 올랐다.

어선, 상선, 여객선 등 다양한 선박의 이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기초 시설이 항만이였다. 항만은 선박의 정박 및 계류 설비, 선객 및 물자의 이동을 위한 선착 및 승하강 설비, 각종 안전 및 편의 시설을 갖추어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동 및 계류를 도모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특히 기상에 따른 풍랑은 선박 운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인데 기상 악화로 인해 이동과 교류 등 선박의 항행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랑으로 해안에 정박한 선박이 파손 또는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박지(泊地) 내 일정한 정온(靜穩)을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피항을 위한 방파제 설비를 축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한편 항만 이용자들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주체가 생각하는 항만의 기능 또한 다양하다. 즉 어업자, 해운업자, 선박 이용객 등의 항만 이용 용도가 다르고, 행정 당국이 구상하는 항만 정책과 설비 등 항만의 이용 주체가 요구하는 축항의 내용과 필요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항만은 바다를 이용하고 극복하기 위한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축항 사업 자체에는 지역민을 포함한 어업자, 해운업자, 행정 당국 등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결과물을 낳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주도 내에서 진행된 축항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항만 축조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의도와 축항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축항 계획과 재원 조성 등 실제 축항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축항에서 비롯된 제주인의 삶과 제주 지역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진행된 축항 사업이 가진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축항이 진행된 산지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모슬포항 등의 축항 과정 등을 공문서 기록과 신문 자료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로 하겠다. 특히 이들 주요 항만 중 가장 대규모로 개발이 진행된 산지항을 중심으로 축항의 시행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축항 필요성 대두

2-1. 운항 증가와 해상 안전 확보

제주는 1600년대부터 1800년대 초반에 걸쳐 약 200년간의 출륙금지 시기를 거쳤다. 이 시기에는 허가를 받은 항행(航行)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제주인의 내륙 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출륙금지가 해제되고 제주인의 외부 이동 및 교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항로는 1800년대 말부터 차츰 운항되기 시작했다. 1894년 이종문이 인천 굴력상회(掘力商會)와 교섭하여 연안 운항 기선을 월1회 제주에 비정기 기항토록 했다. 그러나 적절한 항구가 없어 안전하지 않았고 수지가 맞지 않아 3년 만에 폐지되었다.¹⁾

한편 이윤용(李允用) 등은 개항 이후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던 항해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1900년 6월에 대한협동우선회사(大韓協同郵船會社)를 설립하여 우편물 및 화객 운송업에 종사하였다. 이 회사에서 운항하던 선박들도 제주를 거치는 노선을 운영하였다.²⁾ 이후 부산기선주식회사 소속 배가 제주—부산 사이를 월1회, 목포의 후쿠다(福田) 회조부(回漕部) 소속 소기선이 제주—목포를 월1·2회 왕복 운항하였다.³⁾

1)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한국수산지』, 1911; 김은희 譯,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73-74쪽.

2) 현익호는 군산-목포-제주-부산-원산-북관(北關) 방면에 배정하여 대외항로 및 연안항로를 운항하였다. 이후 정부에서 새로 불하받은 한성호와 새로 구입한 순신호·일신호는 각각 제주나 연대(煙臺)·상해(上海), 나가사키(長崎)-고베(神戸) 방면과 군산-목포-제주 방면 및 진남포-만경대 방면에 배정하였다. 이들 기선의 기항지는 수시로 바뀌어 노선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인천을 중심으로 진남포-만경대와 군산-목포-제주도-부산-원산-북관지방 등을 경유하는 연안항로를 개설함으로써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 연변을 모두 항행하였다. 이운사의 운항 항로는 나에자, 『한국근대해운업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108-109쪽 참고.

3)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한국수산지』, 1911; 김은희 譯,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73-74

1910년 중반 조선총독부의 명령항로 운항을 기점으로 정기선의 편수가 증가하면서 제주—내륙 간의 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연안의 항로에 대해 명령항로를 지정하여 교부금을 주면서 이들 항로 운항을 지원하였다. 제주를 운항하는 항로로 1913년 4월부터 제주—목포간, 1915년 4월부터는 제주—부산간 명령항로가 개설되었고, 이를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가 경영하였다. 정기항로의 증설로 점차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승객과 물자의 수송이 증가하였다.⁴⁾

1920년대 초반 명령항로 운항을 담당했던 조선우선주식회사 소속 정기선의 산지항 담당 회조점은 일본인이 맡고 있었는데, 불친절한 응대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22년 제주 지역 유지들이 ‘제주상선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일반 하객의 불만과 고충에 대응하는 한편 항로 운항 증설을 도모하였다.⁵⁾ 즉 1922년 무렵에는 당국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제주—목포, 제주—부산 간 명령항로 운항이 하객 대응면에서 적절치 못하였을 뿐더러, 이용자의 증가로 정기항로 편수의 증설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때부터 1923~24년에 걸쳐 아마가사키 기선부와 조선우선주식회사에서 제주—오사카 간 직항로 운항을 개시하였다. 제주와 오사카 사이 직항로 개설은 제주인의 도외 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기점으로 제주에서 외부로의 이동량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당연히 제주인의 항포구의 이용과 접근이 더욱 빈번해졌다.

1925년경 명령항로를 운항하는 기선은 <표 2-1>과 같이 200~300톤급의 비교적 소형 선박이었다.

<표 2-1> 1925년 제주지역 명령항로 운항 선박

항로명	운항횟수	기항지	선박명	총톤수
부산—제주도	월5회	여수, 거문도, 성산포, 김녕, 조천, 제주(월5회), 한림, 모슬포, 서귀포(월3회)	경성환(鏡城丸)	372톤
목포—제주도 (東廻線)	월4회	소안도, 제주, 조천, 김녕, 성산포, 표선, 모슬포, 한림, 추자도	종신환(宗信丸)	203톤
목포—제주도 (西廻線)	월4회	추자도, 한림, 모슬포, 표선, 성산포, 김녕, 조천, 제주, 소안도	종신환(宗信丸)	203톤

주) 이기훈, 「일제강점기 도서지역의 교통과 일상생활」, 『도서문화』 4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 149쪽의 표 일부 편집하여 재인용.

쪽; 하지영, 「조선총독부 해운정책과 조선우선주식회사의 항로 경영」,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4쪽.

4)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농촌경영의 변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명령항로 등 일제강점기 제주 지역 해상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44~50쪽 참고; 하지영, 앞의 논문, 2019; 조선총독부의 해운정책과 명령항로에 대해서는 설정에 대하여는 35~46쪽, 조선우선주식회사의 명령항로 및 연안항로 운항에 대해서는 56~63쪽 설명을 참조할 것.

5) 『동아일보』, 1922.06.13.; 『동아일보』, 1922.08.06.

그러나 도내 항포구는 이들 선박이 해안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제주도내 대부분의 항포구는 수심이 낮고 접안 계류 시설이 미비하여 선박의 기착이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이들 선박이 해안에서 떨어진 먼바다에 정박하면 사람과 화물은 부선으로 다시 옮겨 타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육지에 상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로웠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일도 발생했다. 풍랑이 거세거나, 이른 새벽 또는 늦은 밤에 승·하선을 할 경우 안전 사고가 생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 항포구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선과 편의를 위해서 축항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항만은 기본적으로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방파 시설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선착장 등의 부두 시설을 기본으로 조성되며, 이용 주체에 따라 필요한 시설도 다양하다. 어업자는 어선을 위한 안전한 정박 시설과 어획물의 처리 및 작업 시설을 필요로 하고, 선박 이용 승객은 승하선의 안전과 이용 편의 시설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해운업자 입장에서는 승객과 물류의 효율적 하역과 이동을 위한 선착 및 안전 시설, 운영과 관련한 편의 시설에 대한 요구가 기본적으로 제기된다. 다양한 요구 조건 중에서 무엇보다 각 이용 주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우선 시 되는 것은 안전성 확보의 문제일 것이다.

제주도내 각 항포구의 축항은 해당 지역민에게는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였다. 지역민, 면행정관계자, 운항업자 측에서 우선 생각하는 축항 시설은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시설과 선박의 피항을 고려한 방파제 조성이었다.⁶⁾ 기상의 영향이나 선박 고장으로 선박이 운항 도중 조난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닌, 방파 설비의 부족으로 풍랑에 대응하지 못해 선박 파손되거나, 정박 및 계류 설비가 불완전하여 선박이 파도에 떠밀려 유실되는 사고, 선객 및 화물의 승하선 시 발생하는 안전 사고 등은 항포구 시설 미비로 인한 해난 사고에 해당한다.

〈표 2-2〉는 당시 신문에 실린 해난 사고 기사들 중에서, 운항 중 조난이나 파선을 제외하고 항만 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사고의 대부분이 연안에 정박한 선박으로 승선객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중·부선의 파손 또는 침몰 사고였다.

6) 『동아일보』, 1931.01.15.

〈표 2-2〉 제주도내 연안에서 축항 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한 해난 사고

날짜	지역	사고 내용	피해 상황
1917.04.14.	산지항	조선우선 종선 침몰 ⁷⁾	3명 사망
1920.02.	조천항	부두 시설이 불완전하여 종선 침몰 ⁸⁾	13명 사망
1922.07.	서귀포항	발동선 조난 ⁹⁾	선박 3척 피해
1925.03.29.	한림항	풍랑으로 정박한 일본 선박 파손 ¹⁰⁾	피해액 1만2천여원
1925.09.06.	고산	풍랑으로 피항 중 선체 파손 ¹¹⁾	
1928.01.27.	대포	풍랑, 승객 초과로 종선 침몰 ¹²⁾	32명 사망
1929.02.21.	표선	종선 전복 ¹³⁾	11명 사망
1933.01.07.	모슬포항	정박 기선을 향하던 종선 전복 ¹⁴⁾	8명 사망

주) 표의 해난 사고는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의 신문기사를 정리하여 작성.

1925년 발생한 한림항과 고산에서의 사고는 풍랑을 피해 정박중이던 선박이 파손된 건으로 방파제 등의 피항 설비 미비에 의한 사고에 속한다. 사고 피해는 선체가 파손되거나 침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갔다. 특히 1928년에는 좌면(左面) 대포항(大浦港)에서 조선우선회사 소속으로 오사카 항로를 운항하던 함경환(咸鏡丸)의 종선이 침몰하여 승선하려던 승객 3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풍랑에 흔들리던 종선이 승객 초과 상태에서 침몰하기 시작하자 함경환이 구조 노력 없이 출항하여 큰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게 선박 이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항포구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접안 시설을 확충하여, 승선객과 화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하선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마찬가지로 제주와 목포, 부산, 일본 지역의 운항 항로에 취항한 기선회사와 취항 기선의 선객을 관리하는 회조업 운영자들도 안전과 더불어 사업의 측면에서 항만 시설 정비가 필요하였다. 종선의 침몰과 더불어 인명사고는 회사 경영의 측면에서 매우 큰 손실이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진들은 축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산지항 축항에 직접 참여

7) 『매일신보』, 1917.04.15.

8) 『매일신보』, 1920.03.25.

9) 『매일신보』, 1923.06.04.

10) 『매일신보』, 1925.04.11.

11) 『동아일보』, 1925.09.12.; 『매일신보』 1925.09.09.

12) 『동아일보』, 1928.01.29.; 『동아일보』, 1928.02.07.; 『동아일보』, 1928.02.28.; 『동아일보』, 1928.03.02.; 『동아일보』, 1928.03.20.; 『매일신보』, 1928.01.29.; 이 사고는 당시 정기선의 승객을 관리했던 회조점을 비롯하여, 운항사인 조선우선회사의 사고 대응 및 후속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13) 『동아일보』 1929.02.24.; 『동아일보』, 1929.03.05.; 『동아일보』, 1929.03.06.; 『매일신보』, 1929.02.25.

14) 『매일신보』, 1933.01.13.

한 축항기성동맹회의 임원은 대부분 상선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선 또한 마찬가지로, 어획물의 이동 뿐만 아니라 특히 방파제를 조성하여 항만 내에 안전하게 정박하는 것은 풍랑으로 인한 선박의 파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2-2. 제주 개발의 기반 시설 확충

항구는 제주와 외부세계가 최초로 만나는 공간이면서, 제주 내륙 간 이동의 시작점이자, 제주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육지와와의 왕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제주 안에서의 이동과 생활면에서도 항·포구는 필수 시설이었다. 지역의 항포구는 연안 어업선의 출항과 정박지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였고, 제주도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 시에도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포구는 지역민의 생활에 필수 시설이었다.

당시 제주도를 일주하는 일주도로의 노면 상태나 교량 시설의 미비 등 도로 교통의 한계로 인해 바닷길은 유용한 이동 통로였다. 따라서 이를 항포구 시설의 구축과 정비 측면에서 생각하면, 화물의 승강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서 물양장, 선착장, 부두 및 방파제 등의 축조가 요구되었다.

〈표 2-3〉은 1929년도 서귀포항에서 이출입된 일부 화물의 품목과 도내 이동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3〉 1929년도 서귀포항 이출입물품 내역

품목	단위	수량	단가(円)	가격(円)	도착지
쌀(精米)	石	210	20	4,200	조천, 제주
채소(蔬菜)	斤	1,120	0.17	190	제주, 목포
주류(酒類)	石	4.5	80	360	성산, 모슬포
봉밀(蜂蜜)	斤	1,070	0.7	749	성산포, 오사카, 부산, 목포
과자(菓子)	斤	800	0.3	240	표선
기타 잡품				54,482	제주, 성산포

주) 「서귀포항」, 『소화사년 항만자원조사(을호)』, 내무국 토목과, 1929(국가기록원 소장문서).

제시한 품목들은 타 내륙 지역에서 서귀포항으로 들여와 도내 타 지역으로 이출했던 물품이 아니라, 서귀포 지역에서 생산되어 도내 각 지역 포구로 공급된 것들이다. 이는 도내 생산 물품의 도내 이동 및 공급 시에 도로 교통이 아닌 바닷길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929년도 서귀포항에서 상품 교역이 이루어진 곳은 제주(산지), 조천,

성산, 모슬포, 표선 등의 지역으로 확인된다.¹⁵⁾

한편 제주도의 사업자, 도 행정 관련자 등 소위 지역 유력자 등은 항만의 조성을 제주의 개발과 발전에 가장 기본 사항이자 중요 사항으로 생각하였다. 항만이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항만의 수축을 도모하였다. 즉 제주도 행정 당국과 지역의 유력자들은 당시 제주도내 항만 설비의 미비로 인해 제주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각 항만의 축항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면 행정 담당자, 해운업 관련자 등 지역 유지라 일컬어지는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시 제주의 발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상교통의 개선으로 여겼다. 즉 축항 설비가 완비되고 선박 운항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타지방에서 제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제주가 개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결국 항만 개발을 자신의 사업, 영업의 측면에서 바라본 사업자들, 제주 지역의 개발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 관련자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축항기성동맹회를 조직하고 각 항구의 축항 계획 수립 및 공사비의 국고보조 청원을 활발히 진정하였다.

각 개발 주체의 축항 의도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식민 당국에 대한 부분이다. 항만은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교통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므로, 이것의 정비는 늘 지역의 현안이었다. 그러나 일제 당국이 의도한 항만의 개발은 근본적으로 식민 경영을 위한 어항 시설 확충과 군사적 목적성을 가진 개발의 목적성을 지니고 있었다. 식민 당국은 제주를 어업의 주요 근거지로 여겼고, 일본인 조업자들의 어업 활동에 안전하고 편리한 피난항 시설을 갖춘 어항의 수축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일제가 조선의 도로, 철도, 항만을 적극적으로 정비한 원인은 원활한 식민 경영을 위함이었고,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반출 즉 수탈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식민 당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우선 순위를 조절하며 전국의 항구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갔다. 따라서 식민 당국에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의 항구 시설 정비는 진행이 더디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항구 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한 열악한 환경 조건 하에서 각 지역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 내 포구의 축항을 행정기관에 요구하거나, 지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시급한 시설의 정비에 나서기도 하였다.

15) 인용 자료에는 쌀이나 주류, 과자의 경우 목포나 부산 등지에서 서귀포항으로 이입되는 경우, 그리고 제시한 것과 같이 서귀포항에서 도내 타 지역으로 이출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이입, 이출의 단가가 달랐는데, 서귀포항으로 들어오는 이입 단가가 높았고, 서귀포항에서 나가는 이출 단가가 낮았다. 따라서 목포나 부산 등지에서 이입된 물품이 서귀포항을 거쳐 제주도내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형식이 아니라, 서귀포에서 생산된 품목이 제주도 내 각 항구로 이동하여 도내 각 지역에 공급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축항기성회 조직과 주요 활동

앞서 살펴보았듯이 승선객, 운항사, 어업 조업자, 행정 당국 등 축항의 주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항만 시설의 조성이 필요했다. 이용 승객이나 운항사 측은 승하선 안전 및 편의와 시간 단축, 식민 당국은 산업 개발 기반 시설 구축과 어업근거지 조성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축항기성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검토한 바에 따르면 산지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모슬포항 등 도내 주요 항만의 축항에 지역 유지가 주축이 되어 조직한 축항기성회가 참여하였다. 이들 각 항만의 축항기성회의 결성 과정과 주요 구성원들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산지항 축항기성동맹회의 조직과 활동

산지항 개발을 위해 제주 지역 유력자를 중심으로 축항기성동맹회가 조직되었다. 1921년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의 제주 시찰 시, 당시 도평의원(道評議員) 김근시(金根蓆)는 ‘20만이 거주하는 중요한 곳에 완전한 항구가 없음은 실로 유감이며, 축항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산지항 축항 공사비 보조를 진정하였다.¹⁶⁾ 이후 도내에서 축항 여론이 고조되어, 관민 유지를 중심으로 ‘축항기성동맹회’ 결성을 협의하면서 산지항 축항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21년 10월 16일 제주공립보통학교에서 ‘축항기성동맹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조직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김근시가 회장이 되었고 지역 유지 여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¹⁷⁾

1921년도를 기점으로 축항 여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축항기성동맹회 결성에 이르게 된 것은 총독부의 지방제도 정비와 관련이 있다. 1920년 일제는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면협의회원, 도평의원을 임명 또는 선출하였다.¹⁸⁾ 면협의회원은 면장, 도평의원은 도지사의 자문기관이었으며 의결 권한은 없었다.¹⁹⁾ 제주에서도 1920년에 제주면협의회원과 도평의원이 임명되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면 사무를 논의하였다.²⁰⁾ 1921년 결성된 축항기성동맹회가 김근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그가 면협의회원이자 도평의원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6) 『매일신보』, 1921.09.20.

17) 『매일신보』, 1921.10.22.; 『매일신보』, 1921.11.28.

18)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도평의회·도회의원을 중심으로』, 선인, 2011; 1920년대 지방제도에 대해서는 42-51쪽의 기술을 참조.

19) 동선희, 앞의 글, 2011, 45쪽.

20) 1920년 11월 22일 임명된 면협의회원은 김근시, 김하련, 현승규, 김기수, 김형진, 김이주, 문창호, 소판의현(少坂義憲), 신현오, 오재병, 김달영, 조봉수, 고경수, 김창중이다(『매일신보』, 1920. 11.28.). 김근시는 1920년 12월 6일 투표를 통해 도평의원으로 당선되었다(『매일신보』, 1920. 12.14.).

결성된 축항기성동맹회는 축항 논의를 통해 공사비 약 6만원 규모의 공사를 계획했다. 공사 재원 조성은 공사비의 반은 총독부에서 축항 공사비 보조를 받고 나머지 반은 일반 민의 기부로 충당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최초의 산지항 축항 논의 내용이 지역 주민의 민의(民意)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에는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산지항 축항 계획이 지역 내부에서 일정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23년까지는 축항기성동맹회의 두드러진 활동을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제주상선주식회사의 관련자인 박종실이 1922년 ‘제주축항기성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는 언급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1921년 이후로도 꾸준히 축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축항기성동맹회가 본격적인 진정 활동에 들어간 것은 최초 결성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으로, 1923년 5월 마에다 겐지(前田善次)²²⁾가 제주도사로 부임하고 조직을 재조직한 이후였다. 마에다의 부임 직후 전라남도청 차원에서 축항과 도로정비를 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고,²³⁾ 제주도청에서도 도(島)사무과장 추원구장(荪原駒藏)을 전라남도청으로 파견하여 축항 문제를 협의하였다.²⁴⁾ 전라남도 당국과 제주도 당국 사이에서 산지항 축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1923년 9월 26일 축항 예산안 결의와 축항 진정위원 선정을 위해 제주공립보통학교에서 제주면민대회가 개최되었다.²⁵⁾

이날 논의된 축항 계획안은 부선 출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항만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공사비 예산은 약 5만 6천원으로 계획하였는데, 공사 재원은 전라남도 지방비 보조 2만원, 정기선 운항사인 조선우선주식회사 기부금 1만 5천원, 제주상선회사와 아마가사키 기선부 기부금 5천원, 기타 보조금 6천원, 그리고 제주면민 부담금 1만원으로 편성되었다.²⁶⁾ 면민대회의 주요 결의건은 산지항 축항 예산 중 1만원을 면민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는데 마에다는 이를 ‘지방의 희생적 부담 차원’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마에다가 공사비 일부를 면민 부담금으로 조성하려고 한 점은 ‘사용자 부담’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1921년 조직된 축항기성동맹회가 총독부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려 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1923년 10월 제주도사 마에다와 제주면장 홍종시(洪鍾時)가 총독부와 전라남도청을

21) 고광명, 진관훈, 「제주도 기업가 청암 박종실 연구」, 『한국학』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7쪽.

22) 마에다 겐지(前田善次)의 제주도사 재임기간은 1923.05. ~ 1928.07.이다.

23) 『매일신보』, 1923.07.14.

24) 『매일신보』, 1923.10.05.

25) 지속적인 축항 진정 활동을 위해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4인의 진정위원을 선정해 상도하여 전라남도청과 총독부에 청원할 것을 결의하였고 조선인 대표로 홍종시와 최윤순이 선정되었다(『매일신보』, 1923.10.04.).

26) 『조선일보』, 1923.10.04.; 『매일신보』, 1923.10.05.; 해당 면민대회의 협의 내용을 보도한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면 축항 예산액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매일신보』는 53,763원으로 보도하였으나 그 상세 내역이 없으므로, 본고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우선 인용하였다.

방문하여 산지향 축항비 국고보조를 출원하였다.²⁷⁾ 마에다는 제출한 축항비 보조 신청안의 총독부 승인을 위해, 11월 30일에 제주공립보통학교에서 제주인민대회를 개최하여 축항기성동맹회를 재조직하고 본격적인 진정 활동을 시작했다.²⁸⁾ <표 2-4>는 1923년 조직된 축항기성동맹회 임원의 주요이력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2-4> 1923년 조직된 축항기성동맹회 임원 주요이력

직책	이름	주요 이력
총무	마에다 겐지 (前田善次)	제주도사
간사장	김근시	제주상선회사 사장, 면협의원, 도평의원
간사	유동묘태랑 (有働卯太郎)	제주경찰서 경부
	최원순	변호사
	추원구장(萩原駒藏)	도(島) 서무과장
	김시진	제주금융조합 감사
	박종실	제주상선회사 이사
	고석중	제주상선회사, 삼성사재단이사
	산구원장(山口源藏)	면협의원, 조선우선 하객취급소
	이윤희	제주운송합자회사(1924)

주) 인물들의 주요 이력 사항은 국가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베이스'의 『조선총독부 직원록』, 『한국근현대회사 조합자료』와 신문자료 등을 토대로 기술.

구성원은 마에다 제주도사(총무), 김근시(간사장)를 중심으로 간사 유동묘태랑(有働卯太郎), 최원순²⁹⁾, 추원구장(萩原駒藏), 김시진, 박종실, 고석중, 산구원장(山口源藏), 이윤희 외 22인과 평의장 홍종시와 각 구장(區長) 및 지방유지 약 70여 인의 평의원이었다.³⁰⁾

기성회의 재정비는 시기적으로 1923년 11월 20일 제주면협의회가 새롭게 선출, 임명³¹⁾된 직후인 11월 30일에 이루어졌다. 기성회의 조직적인 운영과 면민 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면협위원과 각 구장들을 간사 및 평의원에 배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현안이었던 산지향 축항은 제주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면의 사무처리를

27) 『매일신보』, 1923.11.18.

28) 『매일신보』, 1923.12.07.

29) 『매일신보』, 1923.11.18.; 해당 기사에는 '최원수'로 표기되어 있으나 '최원순'의 오키로 판단하여 정정하였다.

30) 『매일신보』, 1923.12.07.

31) 제주면은 14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리마다 1명의 면협위원을 선출하여 제주면협의회는 총 14인이었다. 1923년 11월 선출된 제주면협의회원은 다음과 같다. 일도리 김근시, 이도리 박리혁, 삼도리 김하련, 건입리 山口源藏, 화북리 강원호, 삼양리 강영민, 도련리 신경석, 영평리 김치경, 월평리 강위청, 도두리 문성옥, 이호리 김봉림, 도평리 신현오, 노형리 현승규, 오라리 송기휴(『매일신보』, 1923.11.30.).

자문하는 면협의원과들 각 구장의 참여는 의무적이고 당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각 방면의 행정 인력들이 총망라되어 기성회가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산지항 축항이 당시 제주면 지역의 최대 개발 사업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마에다가 기성회의 총무가 된 것과 도속(島屬)인 유동묘태랑과 추원구장이 간사에 포함된 것은 마에다를 중심으로 제주도청 차원에서 축항기성동맹회 조직에 관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축항기성동맹회 주요 임원들은 제주도청 관계자, 제주면에 거주하는 해운 및 운송업 관련자, 제주면협의원, 제주 지역 단체의 장들로서 당시 지역 유력자로 통하는 인물들이었다.

특히 1922년 설립된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운영자들은 제주면의 현안해결 뿐 아니라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도 산지항 축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축항기성동맹회의 활동은 면민의 편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넘어 특정 이익을 위한 사업 참여의 의도가 포함되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산지항 축항은 국비보조를 받아 진행되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의 지정항(指定港) 설정과 관련이 있다. 1925년 1월에 총독부는 전국의 20개 항을 지정항만으로 고시하였는데 산지항이 지정항만에 포함되었다.³²⁾ 지정항은 조선공유수면 취체규칙 제3조에 의해 각종 시설물 또는 견고한 건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수면의 구역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 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등에 관한 행정상의 처분이 조선총독의 권한에 속하는 항만을 말한다.³³⁾ 일제는 전국의 항만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책상 중요도가 높은 개항장의 개발이 일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지정항의 정비를 통해 식민지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산지항의 지정항 설정은 축항 사업에 대한 당국의 보조 계획과 관련 깊은 조치로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당국은 산지항을 '제주도 정치·경제의 중심이 되는 제주읍의 문호를 점유하는 중요한 항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⁴⁾ 산지항이 지정항에 포함되면서 총독부에서 축항비 국고보조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축항기성동맹회는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항 공사를 보조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축항기성동맹회는 1925년 1월 17일 축항기성임시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설정의 건을 결의하고 예결산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키는 등 업무 진행을 논의하고 구성원을 재조직하였다. 이때 구성된 축항기성동맹회 임원의 당시 주요 이력사항은 <표 2-5>와 같다.³⁵⁾ 재조직된 축항동맹기성회 임원들은 대부분 이전 임원직을 연임하였다. 새로 참여한

32) 『조선총독부 관보』, 1925년 1월 16일자.

33) 조선총독부, 『조선토목사업지』, 1930, 615-619쪽. 지정항만은 당초 여수, 포항, 삼천포, 경이포, 장전, 서호진, 신포, 웅기 등 여덟 개 항에서 이후 증감을 통해 제주항을 포함 27개의 항으로 늘어났다. 1928년 기준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주요 항만으로 관리하는 곳은 122개 항으로, 개항(開港) 11곳, 지정항(指定港) 27곳, 세관지정항(稅關指定港) 9곳, 어항(漁港)을 포함한 지방항(地方港)이 84곳이다.

34) 조선총독부, 「공유수면매립의건 지령안」, 1925.09.11.(국가기록원 소장문서).

임원의 경우도 각종 단체의 장으로 재직하여 제주에서 정치·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유력자들로 해운·운송업 관련자가 대부분이었다.

〈표 2-5〉 1925년 조직된 축항기성동맹회 임원 주요이력

직책	이름	이력사항
회장	김근시	제주상선회사 사장, 면협의원, 도평의원
상무	홍중시	제주면장
	추원구장(萩原駒藏)	제주도사무과장
이사	박이혁	면협의원
	최원순	변호사
	화도구차(樺島久次)	버섯재배업, 상업
	촌정빈(村井彬)	제주상선회사 지배인
	이양우	前 제주면장
	박종실	제주상선회사 이사
	이윤희	제주운송합자회사 사장
감사	삼근이지십 (三根伊之十)	조선식산은행 지점장
	마장오랑(馬場五郎)	제주금융조합 이사
	최윤순	제주상선회사 전무이사
	양상룡	삼성사재단 이사, 제주상선회사(1928)

주) 인물들의 주요 이력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베이스’의 『조선총독부 직원록』, 『한국근현대회사 조합자료』와 신문자료 등을 토대로 기술.

산지항 1기 축항공사는 크게 방파제 축조와 해안매립공사 즉, 서방파제 축조에 해당하는 ‘산지항 수축공사(山地港 修築工事)’와 서방파제 일대 해안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산지항 매축공사(山地港 埋築工事)’로 구분된다. 해안매립공사는 1925년 9월 허가를 받아 1926년 2월 15일에 공사 착수를 보고하였으나,³⁵⁾ 본격적인 해안매립은 1926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 부록편에는 해안매립공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1926년 여름 제주성 삼면을 훼손하여 산지항을 축조하는데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³⁷⁾

이 중 해안매립공사는 시행 중 공사계획이 몇 차례 변경되고, 매립권이 개인에서 제주

35) 『매일신보』, 1925.01.23.

36) 홍중시, 「공유수면매립공사착수계」, 1926.2.19.(국가기록원 소장문서)

37) 김석익, 『탐라기년(耽羅紀年)』, 丙寅(1926) 夏 大旱, 毀州城三面 築山地港.; 『탐라기년』 사료의 기사를 통해 산지항 해안매립에 제주성곽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산지항방파제공사설명서’에서도 제주성곽의 석재를 방파제 축조에 사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제주면, 「산지항방파제축조공사설명서」, 1926;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면으로 양도되는 등 진행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개인 명의로 홍종시가 제출한 매립면허 공사 신청안에는 ‘매립은 제주항 수축공사의 일부이며 …’라는 내용이 있다. 해안매립공사는 산지항 축항 공사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제주면 차원에서 매립권을 신청하지 않고 면장 개인의 명의로 매립을 신청한 점이 매우 흥미롭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21년 김근시와 1923년 마에다가 주축이 된 축항기성동맹회가 계획한 축항 공사의 내용은 산지항에 부선 등 소형 선박의 접안을 용이하게 하는 소규모 항만 조성이었다.³⁸⁾ 그러나 1924년 6월 조선총독부 당국자의 현지답사를 전후로 축항 공사비 예산 규모가 6만원에서 약 39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당시 제주면의 재정으로는 공사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항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어 부담이 가중되었다. 제주면은 지정면이 아닌 보통면이었기 때문에 면기채(面起債)를 통한 재원 차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업비의 면 부담액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에 대한 부담으로 방파제 공사와 해안매립공사를 분리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안매립공사는 당시 제주면장의 개인 명의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27년 4월 25일 매립권자 홍종시와 부산의 청부업자 야마모토 분이치(山本文市) 간에 공사 청부 계약이 있었다. 계약 내용은 청부업자가 매립공사 일체를 맡아 시행하며 매립권자 기부금을 대납하고, 매립공사 완공 후에는 매립지를 청부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청부업자 야마모토는 1928년 3월 말까지 약 3,840평의 해안매립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중간에 자금난으로 매립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른다. 이에 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이익금 등 매립권자와 청부업자 간 일체의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홍종시는 해안매립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해당 매립권을 제주면에 양도하였다.³⁹⁾ 이 과정에서 서방파제 축조 공사비 재원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안매립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서방파제 축조 공사비 조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축항의 전체적인 완공이 늦춰지게 된다.

부족한 공사비를 보충하기 위해 축항기성동맹회와 제주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 제주면은 공사비 재원 등 각종 개발과 관련한 재원을 기채 차입하기 위해 1926년 지정면 승격을 신청하였다.⁴⁰⁾ 결과적으로 축항 등의 개발자금 마련을 위해 제주면의 행정체제가 변경된 것이다. 축항기성동맹회에서는 축항 자금 마련을 위해 1923년 12월 1일부터 1931년 3월 말일까지 산지항에서 승강하는 여객과 화물에 대해 승객은 1인당 10전씩, 화물은 1개에 1전씩 부선 사용 명목의 요금을 추가 부과하였다.⁴¹⁾ 이렇게 거두어들인 부선비는 축항기성회 자금으로 조성되어, 축항 기부금에 포함되어 납부되었을

38) 『조선일보』, 1923.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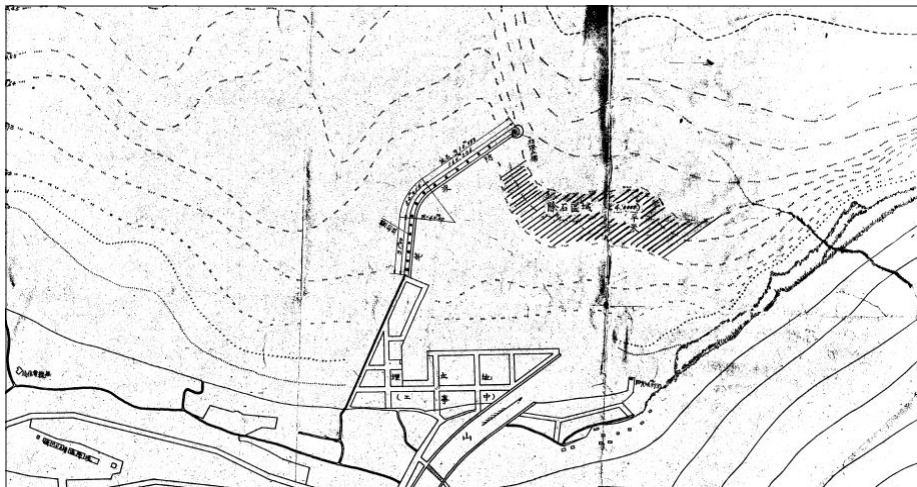
39) 제주면, 「면사무처리인가신청서」, 1928.7.12.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40) 『매일신보』, 1927.01.10.

41) 『매일신보』, 1923.12.11.; 『매일신보』, 1923.12.26.; 『조선일보』, 1923.12.16.; 『부산일보』, 1931.02.28.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제주 사업인들을 중심으로 축항 후원금을 모금 하기도 하였다. 1927년 3월 6일에는 마에다와 김근시가 축항 경비 마련을 위해 오사카 를 방문하였다.⁴²⁾ 1927년 10월 17일 도 서무과장 석교송일(石橋松一)과 추원구장(萩原 駒藏), 박종실 등 5명은 부산, 오사카, 시모노세키 등을 방문하여 축항 공사비 재원 마련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후원을 요청하였다.⁴³⁾ 이외에 오사카 출가노동자나 개인 등이 축항 기성 경비를 기부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⁴⁴⁾

산지항 1기 축항은 당시 제주의 상황으로서는 시급했던 항만시설 확충을 제주면의 요 구에 의해 진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운, 운송업자가 주축이 된 ‘축항기 성동맹회’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였기 때문에 공공의 이용과 개인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림 2-1〉 산지항 1기 방파제 공사 준공도

산지항 1기 축항공사의 방파제 축조는 1929년 3월 31일, 해안매립공사는 1930년 3 월 31일 각각 공사를 종료하였다. 〈그림 2-1〉은 완성된 서방파제와 공사 중인 해안매립 지를 표기한 ‘산지항 1기 방파제 공사 준공도’이다.

한편 산지항 2기 축항 공사는 조선총독부에서 1931년부터 3개년 연속사업으로 실시한 ‘제1차 국민구제토목사업(窮民救濟土木事業)’을 통해 이루어졌다.⁴⁵⁾ 당시 조선의 상황은

42) 『매일신보』, 1927.03.17.

43) 『부산일보』, 1927.10.19.; 『부산일보』, 1927.10.20.

44) 『매일신보』, 1927.06.26.; 『부산일보』, 1928.10.20.

45) ‘국민구제토목사업’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국민구제사업은 경기부양책이자 국민을 구제하기 위 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지만 실제 운영의 사정이 국민구제에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종범, 「1930 년대 초의 ‘국민구제토목사업’의 성격」, 『전남사학』 2, 전남사학회, 1988; 이상의, 「1930년대 일제의 노동정책과

1920년대 이래 지주제의 심화로 몰락 소작농민이 증가하고, 세계경제대공황의 여파로 실업난이 가중되어 도시 빈민이 증가하였다. 더군다나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토목공사 시행이 대부분 금지되었기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 총독과 일본 내각은, 조선인이 구직을 위해 일본에 도항하는 것을 막고자 1930년 2월 24일 '실업구제토목사업' 실시에 합의하였다.⁴⁶⁾ 총독부는 실시안을 검토·조율하여 1930년 9월에 사업비 약 6천만원의 예산안을 수립하였다.⁴⁷⁾

총독부는 1931년 이래 3개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하천, 도로, 항만, 사방공사 등의 대규모 '제1차 공민구제토목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11개의 항만이 국고보조를 받았으며, 산지항도 '제1차 공민구제토목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1931년부터 2기 축항 공사에 해당하는 '산지항 확충공사(山地港 擴築工事)'가 진행되었다.

산지항 1기 축항과 마찬가지로 2기 축항에도 축항기성동맹회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축항기성동맹회는 2기 축항의 조속한 국고보조를 위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과 내무국장에게 진정서를 보냈다. '제주도 산지항 축항기성동맹회 진정서(濟州島 山地港 築港期成同盟會 陳情書)'에 축항기성동맹회 임원 13명과 도민대회 유지대표 14명 등 총 27명이 서명했다.⁴⁸⁾ 진정서 발신 직후인 6월 28일 정무총감을 방문하여 2기 축항을 추가로 진정하였다.⁴⁹⁾

제주도 이 시기 일본 경제불황의 여파로 출가노동자들의 귀환이 늘고 있었다.⁵⁰⁾ 제주도 당국에서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제주면은 공민구제토목사업 실시를 통해 추가 축항이 시급한 산지항 공사와 귀환 노동자 구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였다. 축항기성동맹회도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제출한 진정서에는 '일본 사업의 영향으로 일본 출가 노동자들 수만명이 귀향함에 따라 이들을 구제하고 당면한 기아문제를 구제하기 위해 2기 축항공사를 진정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사업의 시행 목적에 '공민구제'의 뜻을 의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2기 축항을 위한 축항기성동맹회의 임원은 1기 축항 때처럼 대부분 면협의회원이거나 제주도청과 유관기관에 소속된 인물들이었다. 주요 진정 위원들은 이전과 같이 김근시, 홍종시, 최원순, 이윤희, 추원구장(萩原駒藏)이었으며, 몇몇 임원들은 약간의 변화가 있다.

노동력 수탈', 『한국사연구』 94, 한국사연구회, 1996; 김광열, 「1920~30년대 조선에서 실시된 일본의 '공민구제' 토목사업」, 『근·현대 한일관계와 제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서일수, 「1930년대 전반 공민구제토목사업의 대도시 사례와 성격-경성·부산·평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고태우,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공민구제토목사업'과 지역사회」,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고태우,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공민구제토목사업과 지역개발」, 『역사와 현실』 86, 한국역사연구회, 2012.

46) 김광열, 앞의 논문, 1999, 109쪽; 『동아일보』, 1930.02.27.; 『동아일보』, 1930.02.27.

47) 『매일신보』, 1930.09.23.

48) 제주도축항기성동맹회(濟州島山地港築港期成同盟會), 「진정서(陳情書)」, 1930.6.20.(국가기록원 소장문서).

49) 『중외일보』, 1930.06.29.

50) 『목포신보』, 1930.09.06.

새로운 임원은 제주도청과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재직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후임자가 선임에 이어 임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은 축항기성동맹회원의 주요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⁵¹⁾

<표 2-6> 산지항 2기 축항기성동맹회원의 주요 이력사항

이름	이력사항	이름	이력사항
김근시	前도평의원, 前면협의회원, 제주상선주식회사 취체역	萩原駒藏	現면협의회원, 제주상선주식회사, 제주주조(주)
홍종시	제주면장, 제주산업조합	宮本茂	제주도청 도속
최원순	現도평의원, 前면협의회원, 제주상선주식회사	村井彬	現면협의회원, 제주상선주식회사, 제주주조(주)
박종실	現면협의회원, 제주상선주식회사, 제주주조(주)	黑崎峰三	제주우편국, 무선전신국장
이윤희	現면협의회원, 제주운송합자회사, 제주주조(주)	樺島久次	제주산업조합, 상인
최윤순	現면협의회원, 제주상선주식회사, 제주주조(주)	澤田次良吉	제주면 부면장
三矢久彌	제주도청도속, 제주산업조합	角建輔	제주주조(주), 제주잡화상조합
安達要藏	제주영림서 소속	衛藤伊三郎	前면협의회원, 제주주조(주)
垣内準三	제주보통학교 촉탁강사	村田嘉藤治	제주주조(주), 제주잡화상조합
小坂義憲	학교조합관리자	古賀龜太郎	제주잡화상조합
大越英三	제주재무서 소속	江夏友次郎	학교조합의원
양흥기	現면협의회원	四元勝美	現면협의회원, 제주주조(주)
조병채	공립소학교 훈도	立野角之助	제주도청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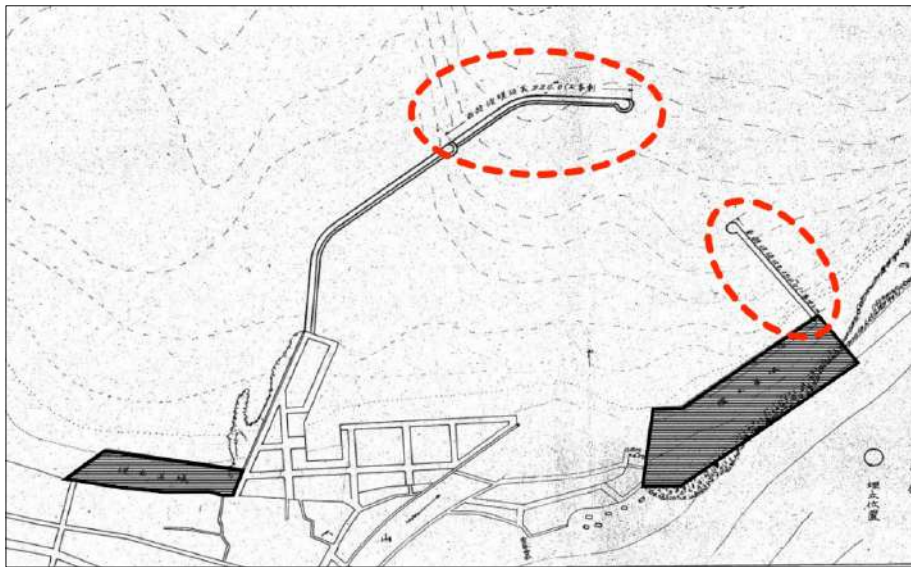
주) 1927년 5월, 1930년 5월 각각 면협의회원 선거가 있었다. 1927년 임명받은 면협의회원은 前면협의회원, 1930년 임명받은 면협의회원은 現면협의회원으로 표기하였다.

회원 구성원을 살펴보면 임원진은 1기 축항공사 유치를 위해 조직했던 축항기성동맹회의 임원과 거의 동일하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수가 비슷하다. 그러나 도민대회유지대표들로 불리는 회원들은 일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확인 가능한 도민대회유지대표자들은 제주성내에 소재지를 둔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로, 이른바 1927년 1월 조직한

51) 1927년 5월, 1930년 5월 각각 면협의회원 선거가 있었다. 1927년 임명받은 면협의회원은 前면협의회원, 1930년 임명받은 면협의회원은 現면협의회원으로 표기하였다(1927년 지정면 승격이후 제1회 면의원은 村井彬, 이한철, 박종실, 최윤순, 이윤희, 김근시, 衛藤伊三郎, 최원순, 문재혁, 김재선, 송기휴, 장용건, 박이혁, 신현오; 1930년 면협의회원은 高橋憲治郎, 김영선, 萩原駒藏, 박종실, 최윤순, 양흥기, 이윤희, 四元勝美, 문성반, 문재석, 박병직, 오남호, 村井彬, 임형권).

일본인 잡화상 동업조합인 제주잡화상조합원(濟州雜貨商組合員)들이다.⁵²⁾

산지항 2기 축항이 ‘국민구제토목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시행될 것이 확정된 후, 축항기성동맹회는 1931년 3월 31일부로 약 10년간의 활동을 마쳤다.⁵³⁾ 아울러 축항기금 명목으로 부과했던 부선비도 3월 31일부로 폐지하였다. <그림 2-2>에서 산지항 2기 축항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하단의 검게 칠한 좌, 우 두 곳은 매립 구역이고, 타원형 점선은 각각 왼쪽이 서방파제 연장부와 오른쪽이 신규 축조한 동방파제이다.



<그림 2-2> 산지항 2기 축항 평면도⁵⁴⁾

1934년 2기 축항 공사가 종료되고 3월 27일 준공식이 거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준설이 없으면 항만으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지역민들은 추가 축항을 진정하였다. 1934년 3월 당시 도평의원이었던 양홍기는 전라남도회의 석상에서 산지항 3기 축항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제주도 축항공사는 제1, 2차 공사까지 종료되었으나 3차 공사를 하지 않으면 흘러들어온 토사(流砂)가 쌓여 점점 알아져서 이전 1, 2차 공사까지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제3차 축항공사에 대해 당국은 고려해달라.⁵⁵⁾

52) 上田耕一郎 著, 『濟州島の經濟』, 釜山商工會, 1930, 85쪽.

53) 『부산일보』, 1931.02.28.

54) 제주읍, 「공유수면매립면허원」, 「제주도제주항매축공사위치도」, 1933.6.(국가기록원 소장문서).

그러나 3기 축항 공사는 바로 뒤이어 시행되지 못하였고, 추가 축항의 도민 진정은 계속되어 1934년 6월 제주도를 순시한 정무총감에게 축항을 요구하였다. 도민대표들이 정무총감에게 제주의 시설확충에 대해 5대 사항을 진정하였는데, 제일 먼저 ‘산지항 방파제 3기 축성’을 요청하였다.⁵⁵⁾

그러나 산지항의 추가 축항은 총독부가 1937년 수립한 ‘제주도 개발계획안’에서 도내 5개 항만의 수축과 함께 논의되었고, 이후 1939년 일제의 연료국책화 계획에 따른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무수주정공장 설립과 함께 부속 사업으로 시행될 때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추가 축항이 당장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제주민의 축항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일제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용도로 추가 개조되는 것에 그쳤다.

3-2. 서귀포항과 한림항의 축항기성회

3-2-1. 서귀포항

서귀포는 비교적 일찍부터 포경 어업자 및 수산 가공업자 표고버섯 재배업을 경영하는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았다. 1916년 서귀포 지역에 제주도 지청을 개설한 이래 경찰관주재소·등기소·우편소·학교 등이 설치되었다. 일제는 서귀포항을 어업 근거지로 하여 이주어촌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는 상당수의 일본인이 서귀포에 거주하였고, 1923년 무렵 일본인들을 포함한 축항기성회가 조직되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서귀포항 축항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조선, 일본인 유지 서향무십(西鄉武十), 강응세(康應世), 중야작태랑(仲野作太郎) 등 여러 명의 발기로 작년 7월 발동선 3척의 조난에 비추어 장래 교통의 편리와 생명 재산의 완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항의 필요를 감각(感覺)하고 당지 관현축 봉곡(蜂谷) 서기 및 산구(山口) 경부와 논의한 후 축항에 대한 약 3만원 보조금을 당국에 출원 중인데, 인민 측에서는 해도(海途)의 완전을 위할 뿐 아니라 점차 육상 운수에도 편의를 갖추기 위하여 교량 기타 산간 도로까지 수축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⁵⁷⁾

인용한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서귀포 해안에서 1922년 7월 발동선 3척의 조난 사고가 발생했다. 자세한 사고의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를 계기로 교통 편의와 지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을 위해 축항 시설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당시 우면장 강응세와 서귀포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사업자들, 그리고 행정 인력들을 중심으로 축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 공사비 보조를 당국에 출원하였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참여 인물은 우

55) 『매일신보』, 1934.03.15.

56) 『매일신보』, 1934.06.15.

57) 『매일신보』, 1923.06.04.

면장(右面長) 강응세, 표고버섯 재배업자 서향무십(西鄉武十), 버섯재배업 및 서귀금융조합 소속 중야작태랑(仲野作太郎) 등이다. 이들이 주축이 되고, 행정 담당자인 도서기(島書記) 봉곡죽태랑(蜂谷竹太郎), 도경부(警部補) 산구심사랑(山口甚四郎) 등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 축항기성 보도 기사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자들은 면장인 강응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이다. 따라서 이들이 제주인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서귀포항 축항 문제가 제주인에 의해 계획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이 언급된 자들은 일종의 대표성을 띄고 있었던 이들로 판단되며, 축항 기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기타 발기인에는 제주인이 다수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민 행정 세력을 제외하고도 당시 제주에 거주하던 일본인 사업자, 사업자들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들 제조일본인들이 제주 생활자라는 위치에서 참여했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앞의 기사에서는 축항기성회라는 언급은 없으나, 1923년 12월에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 내용에 ‘제주 산지포, 성산, 서귀포의 3개소에서 축항기성회를 조직하고 기성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볼 때, 이들 서귀포 지역의 조선인, 일본인 지역 유지와 행정 담당자 등이 축항기성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축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⁵⁸⁾

서귀포 축항기성회에서 최초에 계획했던 공사는, 공사비 예산이 3만원 정도의 소규모 축항이었다. 사고의 경위나 공사의 내용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한의 방파 시설과 계류 설비 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어선과 물자 운송을 담당한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 시설 확충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축항기성회에 주요 발기인으로 참여한 자들 중에 표고버섯 재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인 사업자가 주축이 되었던 것을 보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축항에 참여했던 원인이 자신들의 사업적 이해를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이러한 내용이 축항 계획에 일정 부분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도 있겠다.

공사비 예산 3만원의 서귀포항 축항 계획은 1924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제주의 주요 3개 항만을 조사하면서, 예산 19만 8천원 규모의 공사로 확대된다.⁵⁹⁾ 이는 공사비 규모가 6배 이상 확장된 것으로 공사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음을 뜻한다. 공사 규모 변경은 식민 당국이 서귀포항을 어업기지로 이용하고자하는 의도와 제주-오사카간 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기존의 연안 정기항로 운항 선박에 비해 규모가 커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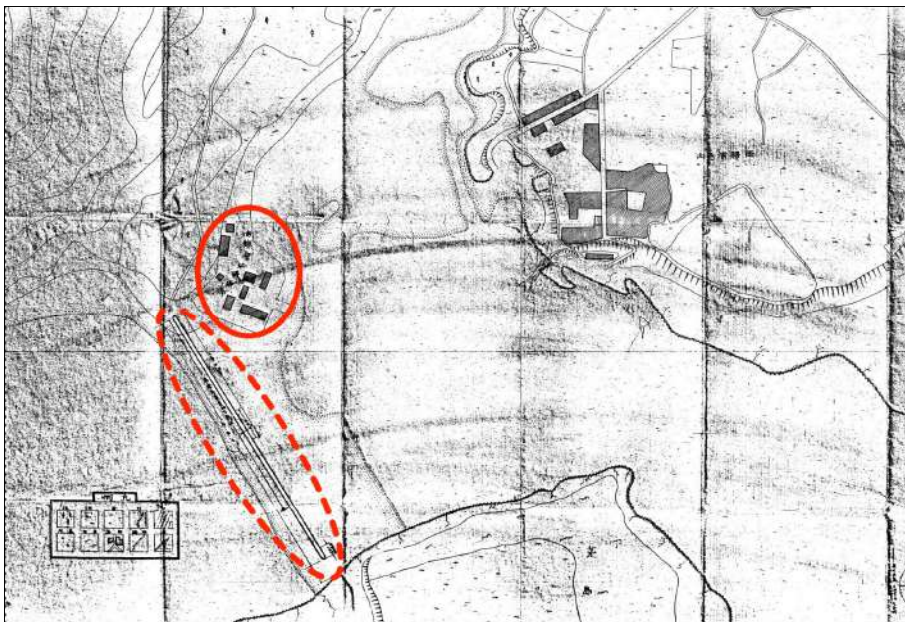
본격적인 축항 공사는 1925년에 시작되었다.⁶⁰⁾ 산지향과는 달리 조선총독부의 공사비

58) 『조선일보』, 1923.12.16.; 이 글에서는 이들을 ‘서귀포 축항기성회’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59) 『매일신보』, 1924.06.13.

60) 『부산일보』, 1925.11.18.

보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지방비 보조와 함께 지역민의 공사 자금 모금으로 축항이 이루어졌다. 당시 축조된 방파제의 형태와 위치는 공사 계획 및 준공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확신할 수 없으나, 1925~26년 축항 이후 서귀포항에서 추가 축항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1933년에 해당 방파제의 재해복구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33년 시행된 서귀포항 복구공사 자료에 의하면 해당 방파제는 현재 새연교의 기초부를 이루는 부분으로 추정되며, 그 길이는 225m이다.⁶¹⁾ 〈그림 2-3〉은 1934년 시행된 서귀포항 재해복구공사 평면도이다. 왼쪽의 점선으로 표시된 타원형 표시부의 내부가 방파제이며, 오른쪽 실선의 원형 표시 내부는 일본의 동양포경회사의 포경업 기지 구역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2-3〉 1934년 서귀포항 재해복구공사 평면도

축항 공사는 광주지역 토목청부업자가 시행하였다. 해당 청부업자는 인부의 임금을 전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는데, 발행 초과로 인해 전표 부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⁶²⁾ 이때 발생한 부도 사건으로 야기된 공사비용 문제는 지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현재의 서귀포 재주자는 관민 구별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존망의 대문제에 선처해서 민사의 궁지를 벗어날 수 있을 까를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제1회 공사 비용 부담의 융통

61) 전라남도, 『서귀포항방파제재해복구공사설계서』, 1933.(국가기록원 소장문서).

62) 『부산일보』, 1926.07.25.

어음조차 아직껏 여러 형태로 질곡이 되어 그 중압을 벗어날 수 없는 지역민이 아무리 애가 타도 자력으로서는 대책을 세울 재주도 없다.⁶³⁾

축조된 방파제에 인접한 서흥리 해안에 1927년 일본의 동양포경회사가 어획물 처리용 잔교 등을 설치하였고,⁶⁴⁾ 서귀포항은 본격적으로 포경업 기지로 활용되었다.⁶⁵⁾ 이처럼 1925~26년 한차례의 방파제 축조 이후로는, 1933년 재해로 인해 기 축조된 방파제가 일부 훼손되어 1934년 1만 1,400원 규모의 복구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외에 개인이나 어업조합 등이 주도한 소규모 해안 매립 정도가 있었을 뿐이었다. 일제 당국은 서귀포항을 지정항만으로 관리하였으나 이렇다 할 축항 설비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36년 경에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축항기성회를 결성하였다.⁶⁶⁾ 서귀포항 축항 기성회는 당시 오사카, 고베, 목포, 여수 운항 선박의 기항지이자 연 150만원의 수산수익을 올리는 항만에 축항 시설이 부족함을 호소하였다. 이때 조직된 기성회의 축항 계획은 현재까지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기성회 조직 직후인 1937년, '제주도 개발계획안'과 함께 제주도내 주요 5개 항만에 대한 대대적인 축항 계획이 발표되었으므로, 이들의 계획이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결국 서귀포항에 대한 추가 축항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는 계속 있어 왔지만, 산지항의 추가 축항과 마찬가지로 1937년 수립된 '제주도 개발계획'에 따른 5개 항만 공사 계획 논의 이전까지 식민 당국에서는 추가 축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3-2-2. 한림항

한림 지역은 1880년대부터 비양도 주변을 중심으로 일본인 어업자들의 조업이 활발한 출어 지역이었다.⁶⁷⁾ 그러나 1914년 제작된 '구우면 한림리'의 지적원도 상에는 일본인 명의의 소유지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이 시기 이전까지 한림항 인근에 직접 거주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비양도 등 유용한 어장에 가치를 두어 성어기에 이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물며 어획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대 전반까지 구우면에서 진행된 사회 기반 시설의 계획 및 설치는 한림 지역민 주도로 진행되었다. 1919년 지역민들은 한림항 내로 흐르는 유수(流水)로 인해 이동로의

63) 『목포신보』, 1932.06.05.

64) 朝鮮總督府, 「工作物設置並ニ海面占用期間延長ノ件 指令案」, 1932; 東洋捕鯨株式會社, 「海面占用期間」滿了ニ付繼續占用許可申請書」, 1932.(국가기록원 소장문서); 1927, 29년 일본수산회사가 포경근거지를 설치하기 위해 서귀포 서흥리 일대에 해면 점용을 신청하는 문서와 1932년 점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5) 내무국 토목과, 「서귀포항」, 『소화사년 항만자원조사서(을호)』, 1929(국가기록원 소장문서); 1929년 18두의 고래를 동경으로 이출하였다.

66) 『매일신보』, 1936.07.21.; 『동아일보』, 1936.07.22.

67) 河原典史, 「植民地期の朝鮮における水産加工業-缶詰製造業を中心に-」, 『近代日本の地域形成』, 海靑社, 2007, 232쪽 재인용.

중간이 나뉘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 자체적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지역의 시설을 정비해 나갔다.⁶⁸⁾

1924년 지역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한림항 축항기성회를 조직하고, 기부금을 모집하여 축항 재원을 마련하는 등 한림항 축항 공사의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던 중 1925년에 들어서 제주면업주식회사의 조면(縑綿)공장이 설치되고, 1926년 다케나카통조림(竹中缶詰)⁶⁹⁾ 공장이 설립되는 등 당시 제주 지역에서는 규모가 큰 제조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⁷⁰⁾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림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선인, 일본인 사업자와 행정 당국자들에 의한 적극적 지역 개발이 시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27년 3월 당시 구우면장 임창현은 명월리에 위치한 면사무소를 옹포리로 이전하여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은 2차례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면사무소 이전 반대 운동을 시작하였고, 더불어 고발장 및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면장 배척 운동에 나섰다. 동년 12월에는 면민대회를 다시 개최하고 면민대표, 면민유지 등 대회의원을 선출해 조직적으로 배척운동을 진행했다. 결국 1928년 4월 임창현이 경질되었고, 임창현에 이어 김창우(金昶宇)가 신임면장으로 임명되었다.⁷¹⁾

김창우는 면장직 부임과 동시에 첫 사업으로 한림항 수축을 계획한다.⁷²⁾ 이는 한림항 축항을 통한 항만 시설 확보가 당시 지역의 현안이었음을 보여준다. 한림항 축항은 1928년 경 신임면장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나, 1924년 조직된 축항기성회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이미 축항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한림항의 축항을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우선 1924년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한림항 축항기성회가 조직되었고, 이때부터 축항기성회는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적립하기 시작하였다. 1928년 신임면장에 의해 축항 계획이 본격화 되면서, 1929년 최초 계획인 방파제 40m 축조안이 제출되었다. 이 한림항 축항 초기 계획안은 반려되었으며, 이후 한림항 수축은 1930년 53m의 방파제 공사를 시작하여 1930년 9월 25일에 완성하였다.⁷³⁾

방파제 축조 계획안의 입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자. 1929년 5월 31일 오후 1시 5분 개최한 구우면협의회에서 한림항 방파제 하양장 축조 건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를 통해 하객 편의의 지방 발전을 위해 방파제를 축조가 필요하며, 축항 재원은 지방비 보조, 지역유지 기부금, 면민 부역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림 지역에 축항이 시급한 이유로 한림항이 속한 구우면 뿐 아니라, 인접한 대정면 서북부 지역, 신우면 서남부 지

68) 『매일신보』, 1920.02.03.

69) 고광명, 「일제강점기 축종관할제작소의 제주도 진출과 사업전개」,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주학회, 2015;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과 경영자인 다케나카 신타로(竹中新太郎)에 대해 참조.

70) 『매일신보』, 1925.05.13.; 『매일신보』, 1926.05.15.

71) 『중외일보』, 1928.05.14.

72) 『매일신보』, 1928.12.02.

73) 『매일신보』, 1930.4.21.; 『매일신보』, 1930.10.08.

역 일대가 한림항을 관문으로 삼고 있으므로, 제주도 북서부 지역 개발에 가장 중요한 곳임을 내세웠다.

1929년 구우면에서 제출한 초기 계획안은 총독부에 의해 반려되었다. 이후 방파제 길이를 연장하는 등 일부 수정하고, 산지항 축항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공사면에서 유리함을 피력하여 변경안을 제출한다. 실제 한림항 1기 축항 공사에서 축조된 방파제 길이는 53m로 산지항이나 서귀포항의 축항과 비교해 방파제 길이가 매우 짧고, 공사비 예산도 8,200엔 가량으로 공사의 규모가 작다. 그러나 당초 한림항 축항기성회에서 계획한 방파제 길이는 40m였기 때문에, 공사 설계 변경 분에 대해 증액된 예산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사비 실투입 예산은 8,200엔 가량으로 기 기부금 모금액 4,200엔에 지방비 보조 4,000엔의 예산을 계획하였으나, 지방비 보조액이 공사비에 못미쳤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전액 부역을 통해 충당하게 되었다. 즉 최초의 방파제 축조안과 실제 공사 계획안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증액된 공사비를 한림항 인근 지역민의 부역을 통해 보충하게 되었다.

설계 변경에 있어 부족 재원을 부역으로 구하는 것은, 타 재원을 변통할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역으로 진행해도 공사 시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공사의 이해관계는 주로 기부금을 내는 해운업자와 긴밀하지만, 일반 면민 또한 이에 대한 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음을 감안해, 호별세 부과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면민에게 부과하고자 한다.⁷⁴⁾

산지항, 서귀포항, 한림항의 축항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예산 증액이 동반되었고, 증가한 공사비는 지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초래했다. 한림항의 경우는 부역의 형태로 지역민의 부담이 되었다. 한편, 한림항 축항기성회가 1924년도부터 조성한 기부금 적립 내역은 <표 2-7>과 같다.

<표 2-7> 한림항 축항기성회 연도별 기부금 적립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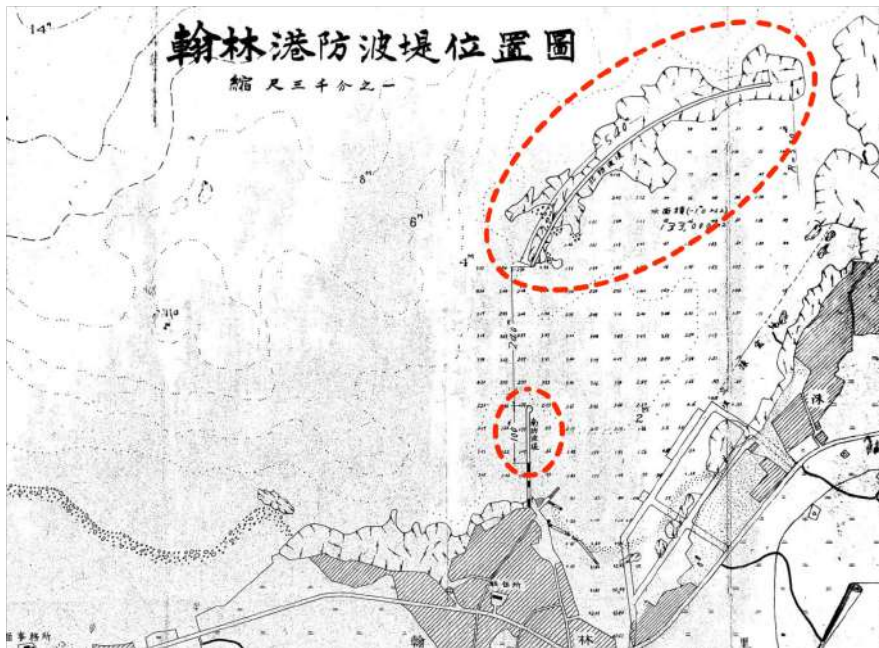
연도	금액(円)
1924 (大正 13년도)	765
1925 (大正 14년도)	722
1926 (大正 15년도)	1,416
1927 (昭和 2년도)	708
1928 (昭和 3년도)	589
계	4,200

주) 구우면, 면사무처리인가신청, 1929.(국가기록원 소장문서)

74) 전라남도지사, 『방파제 및 하양장 사무처리의 건』, 1930.(국가기록원소장문서).

주요 지정 기부자는 조선우선 회조점과 제주상선회사 회조점이었으며, 적립된 돈은 제주도축항기성동맹회장 제주도사 명의로 제주금융조합에 예입하여 보관하였다. 앞서 언급한 주민 부역은 당초 1,800엔 규모에서 최종적으로 3,038엔으로 증액되었다. 한림항 1기 축항은 1930년 9월 53m의 방파제를 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뒤이어 한림항의 2기 축항은 1934년 제2차 공민구제사업으로 진행되었다. 1기 축항을 전액 지역민 부역과 면비, 기부금으로 충당했던 것과 달리, 본격적으로 조선총독부와 전라남도의 공사비 보조를 받아 축항이 시행되었다. <그림 2-4>는 한림항 2기 축항 시 축조된 방파제의 위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쪽의 긴 타원형 구조물이 540m 길이의 북측 방파제 이고, 아래쪽이 100m 길이의 남측 방파제에 해당한다.



〈그림 2-4〉 한림항 2기 축항 방파제 위치도⁷⁵⁾

산지항의 2기 축항이 1931~33년 제1차 공민구제사업으로 시행되었고, 한림항 2기 축항도 이를 이어 1934~35년 제2차 공민구제사업으로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한림항 지역은 제주도내에서 제주면에 뒤이어 일제 당국에 중요 관리 지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75) 조선총독부, 「한림어항수축공사준공의견 지령안」, 1937(국가기록원 소장문서).

3-2-3. 모슬포항

모슬포항은 1926~27년 축항 공사가 진행되었다. 1926년 6월 축항기성회 주도로 기부금 등의 축항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자체적으로 항구 시설의 조성에 들어갔다.

제주도 모슬포에서 도로 호안 및 방파제의 수축은 이곳의 오랜 숙망이었다. 축항비 및 기부금 등으로 총액 5천원의 공사비로 착수하게 되었다. 그 기공식을 지난 달 16일 이곳 보통학교에서 지방유지 다수 초대하고 성대히 거행됐다. 이 기성회장은 축산(築山) 우편소장이고 기사는 곡전부의지(谷田部義之) 씨이다. 이 항구가 완공될 즈음에는 목포 부산항로선 등의 기항으로 편리하고, 승강 화객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⁷⁶⁾

앞의 신문 보도 내용과 같이 모슬포항은 1926년 도로 호안 및 방파제 축조 공사가 시행되었다. 축항 공사에 조선총독부 국고보조나 전라남도 지방비 보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 내에서 재원을 조성했다. 공사비 예산은 약 5,300엔으로 이중 4,000엔을 모슬포 축항기성회 적립금으로, 1,300엔은 면비로 충당하는 등 지역민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축항하였다. 이를 통해 1926년 축항 당시까지는 모슬포항이 일제 당국에게는 중요도가 높은 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2년 알뜨르 비행장이 건설되고,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모슬포항은 군사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항구로 부상하게 된다.

3-2-4. 성산포항

성산포 지역에서도 축항기성회가 조직되어 축항 진정 활동을 하였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⁷⁷⁾ 총독부는 1924년 경 제주 산지항, 서귀포항, 성산포항에 대한 측량 등의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축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위 3개 항에 대한 축항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⁷⁸⁾ 그러나 서귀포항과 성산포항은 이러한 실지 조사와 구체적 축항 계획 입안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제 축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즉 도내에서 산지항, 서귀포항, 성산항 3개 항이 축항 계획을 신청하여 실지 조사 등이 이루어졌는데, 산지항 한 곳만 최종심사에 올랐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산지항, 서귀포항, 한림항, 모슬포항, 성산항의 수축을 목표로 결성된 축항기성회는 대체로 비슷한 조직 성격을 갖는다. 대표 구성원들이 소위 지역 유지들이며, 면 행정 관련자, 사업인, 공공 기관 관련자로 조선인, 일본인 연합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구성원의 배경을 바탕으로 축항기성회는 지역 내 축항 여론을 조직, 실

76) 『부산일보』, 1926.07.24.

77) 『조선일보』, 1924.01.05.; 『조선일보』, 1924.02.19.

78) 『매일신보』, 1924.06.13.; 『조선일보』, 1924.06.14.

제 축항 계획을 입안, 기부금 적립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대부분 면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할 사업에 축항기성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물론 이는 면사업이므로 면장 등도 축항기성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앞서 검토한 제주도내 주요항만 이외의 도내 여러 곳의 항포구는 행정 당국의 지원 없이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정비되었다. 중문면에서는 어항 시설 마련을 위해 지역민이 호(戶)당 평균 4회의 부역으로 공사에 참여하였다.⁷⁹⁾ 이들 지역은 일제가 식민 통치 정책상 개발에 부합하지 않아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곳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었음에도, 축항 공사는 차등적으로 지원되었던 것이다. 당국의 공사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은 중문면의 경우와 비슷하게 부역과 면부과금을 감당하며, 자체적으로 축항을 진행하였다.

당국의 공사비 보조를 받은 주요항만이 속한 지역의 주민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역 또는 면부과금 증액 등을 감당해 나갔다. 즉, 조선총독부의 지원은 지역적으로 차별 적용되었고, 지원되는 규모도 공사비의 약 50% 정도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비 재원은 지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온전히 식민 당국에 의해 축항이 진행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4. 조선총독부의 제주도 개발계획과 항만 수축

4-1. 1937년 제주도 개발계획 수립

전라남도 1936년 제주도 농·수·축산업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자체적으로 각 분야의 개발 방안을 수립하여 총독부에 제출한다. 해당 안이 단초가 되어 1937년 6월 ‘제주도 개발계획안’이 수립되었다.⁸⁰⁾ 1937년 수립된 ‘제주도 개발계획안’은 무수주정 제조사업, 면양 사육사업, 전력, 지하수, 기타 농수산업 등 제주도에 적합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개발회사의 설치를 위해 작성되었다. 총 사업 기간은 사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년을 예정으로 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도로 개량 및 개수 공사와 항만 수축공사 등의 부속 토목사업도 계획하였다.

총독부는 1937년 2월 농산, 임업, 목축, 수리, 수산 각 부 과장 및 분야 기술자들을 제주로 파견하였다. 이들 ‘제주도 산업조사단’은 실지 조사를 마치고 전라남도청에서 ‘제주도개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면양 증식, 양돈 및 축우를 중심으로 한 목

79) 『매일신보』, 1935.07.03.

80) 전라남도, 『제주도개발계획안개요(濟州島開發計劃概要)』, 1937.6.(국가기록원 소장문서).

축 개발, 고구마 증산과 맥주보리 증산을 중심으로 한 전작, 원양어업 근거지로의 수산개발, 용천수 개발을 통한 음용수와 동력 개발, 사방공사 방풍림 조성, 교통 및 운수 시설 개발 등 대규모의 개발계획이 논의되었다.⁸¹⁾ 이후 제주도 개발방침의 재검토협의회가 다시 총독부에서 개최되었고, 앞서 전라남도청에서 논의한 계획안 심의와 함께 고구마를 원료로 한 무수주정 제조회사를 제주도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⁸²⁾

여러 차례 전라남도와 총독부 측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37년 7월 제주도 개발에 대한 총독부의 방침이 확정되었다.⁸³⁾ 확정된 ‘제주도 개발계획안’을 통해 ‘제주도 개발회사’라는 특수회사가 무수주정 제조, 면양목장 경영, 젓소 목장 경영, 수산업 및 부속 사업의 경영, 이민사업, 전기사업 등을 직영하게 되었다. 총독부와 전라남도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초 시설 투자 및 보조 사업에 투자하고, 방풍 방사림과 도로 개량, 항만수축, 상수도 부설, 지하수 조사 등의 토목사업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추산한 소요 경비는 총독부 11,315,016원, 전라남도 8,707,067원, 개발회사 7,500,000원으로 약 10년간 총경비 27,522,083원에 이른다. 이 중 개발회사의 예상 자금소요액 7,500,000원은 <표 2-8>과 같이 대부분 주정공장 설치비와 주정의 원료인 고구마 생산을 위한 휴한지 매수비가 큰 비율을 차지한다.

<표 2-8> 제주도개발회사 자금소요액

종별	금액(圓)	종별	금액(圓)
면양구입비	92,000	운반선 건조비	300,000
면양목장 용지매수비	160,650	어목제조 설비비	22,300
면양목장 건설비	31,115	제빙 설비비	208,000
젓소 구입비	16,384	제재 설비비	9,600
우유생산장비	48,273	통조림제조 및 돼지가공설비비	300,000
제유공장 설치비	9,508	수력발전 장치비	200,000
공동처리장 설치비	1,810	사무소 숙사 건축비	510,000
주정공장 설치비	1,317,620	사무소 설비비	50,000
휴한지 매수비	2,000,000	창립비	10,000
어선건조비	1,395,000	운전자금	526,500
어구구입비	45,000		
중유탱크설비비	90,000	계	7,500,000

주) 전라남도, 『제주도개발계획개요』, 1937.6.(국가기록원 소장문서)

81) 『조선일보』, 1937.02.05.; 『조선일보』, 1937.02.14.; 『매일신보』, 1937.02.14.; 『목포신보』, 1937.02.17.; 『목포신보』 1937.02.18.; 『조선일보』, 1937.2.18.

82) 『조선일보』, 1937.2.25.

83) 朝鮮總督府, 『濟州島開發計畫ニ關スル件』, 1937.7.(국가기록원 소장문서).

1937년 2월 총독부 조사단이 현지 조사 직후 수립한 내용과 최종 계획안을 비교하면, 제주를 무수주정 원료 생산지에서 무수주정 제품 생산지로 개발 범위를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마의 적극적 증산 계획이 무수주정 제조공장 설립 계획으로 변경된 것은 총독부가 제주도를 개발하는 주요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계획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무수주정 원료 증산과 제조사업이었다. 특히 주정원료인 고구마 증산을 위해 전라남도 내 인구 조밀지역의 농가 7천 5백호를 제주로 이주시켜 고구마 경작을 지원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들의 정착과 경작을 위해 휴한지를 매입하고, 용수지 또는 계곡의 물을 저수하는 방식으로 음료수 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민 부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1936년 3월 조선 총독에 임명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앞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추진한 북선개척, 조선공업화, 농촌진흥정책들을 더 강화하여 농공병진으로 포장한 대륙병참기지 정책을 실시했다. 그는 전 총독의 정책 중점 사업인 농산어촌진흥운동의 근본 기조를 유지하고 중요 정책은 연속하여 실행하겠다고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축산 분야의 축우 대중식 및 마정계획, 면양증식, 농업 분야의 고구마 증산 등 미나미가 강조했던 농·축·수산 자원 개발 요소들은 ‘제주도 개발계획’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1938년 9월 미나미 총독이 제주를 시찰하여 밝힌 제주도 개발의 근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전체 면적 18만 정보 중 농지가 9만 정보에 이르며 그중에 미개척지가 2만 여정보에 달하는데 이를 개척해야 한다. 제주도 개발의 근본 방침은 축산제일주의이며 시국도 이를 요구하는 바이다. 미개지를 개척하여 고구마를 재배하고 무수주정을 제조하는 한편 가축의 사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⁸⁴⁾

1930년 후반부터 일제가 표방한 내선일체와 국가총동원 체제 방침 하에 조선 내에서 갖가지 사업이 시행되며 정신적, 물질적 자원의 침탈이 진행되었다. ‘제주도 개발계획’의 입안과 본격적인 시행은 이러한 방향에 맞춰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독부는 제주도 개발계획의 수립 이유로 ‘제주도의 열악한 환경과 궁핍한 도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고 발전 시키고자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본 제주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면, 제주도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도의 산업개발을 명분으로 중·일 전쟁을 뒷받침하는 대륙병참기지화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제주도 개발계획안’에는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도로 개량 및 개수공사와 항만 수축공사 등의 부속 토목사업도 포함되었다.

다음의 <표 2-9>에서 제주도 개발계획에 따른 토목공사 항목과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다.

84) 『매일신보』, 1938.09.15.

〈표 2-9〉 제주도개발 토목공사비 일람표

공사명	수량	금액(円)
도로개량사업	교량 21개소 암거 52개소 수발 86개소	200,000
도로개수사업	16선	2,800,000
항만수축사업	5개소	1,980,000
상수도부설공사	6개소	1,100,000
수력발전공사	1개소	200,000
부락음료수시설공사	25개소	420,000
지하수조사	21개소	87,000
합계		6,787,000

주) 전라남도, 『제주도개발계획개요』, 1937.6.(국가기록원 소장문서)

토목사업안에 따라 제주항, 성산항, 서귀포항, 모슬포항, 한림항 5개의 항만을 수축 개량하기로 하였다. 5개 항만의 공사 예산액과 공사기간은 〈표 2-10〉과 같다. 이에 대한 총공사비 재원 198만원은 국고보조금 1백38만6천원, 전라남도 보조금 39만 6천원, 지방부담금 19만 8천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2-10〉 제주도개발계획안의 항만수축공사 계획

공사명	금액(円)	공사실시기간
제주항 수축공사	800,000	1~3년도 사업예정
서귀포항 수축공사	300,000	1~2년도 사업예정
한림항 수축공사	360,000	1~3년도 사업예정
모슬포항 수축공사	220,000	4~5년도 사업예정
성산포항 수축공사	300,000	4~5년도 사업예정
합계	1,980,000	

주) 전라남도, 『제주도개발계획개요』, 1937.6.(국가기록원 소장문서)

4-2. 주요 항만의 축항 계획 및 시행

계획안의 수립 직후 발발한 중·일 전쟁과 일제의 정책을 고려하면서 시행 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계획과 시행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중일전쟁과 이어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국민총동원 체제 등 시책 변화 및 군사적 대응과 관련이 있다. 계획안에서 중점

시행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연료국책화 정책에 따른 동양척식회사의 무수주정 제주공장 설립과 그 원료인 고구마 생산이었으며, 기타 일부 계획도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모 생산을 위한 면양 사육은 기존에 남면북양(南綿北羊) 정책에 의해 북선(北鮮)에 집중되었는데, 총독부의 면양 증식 장려 계획을 고려하여 제주도에서 대규모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시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면양사육은 1937년부터 호주에서 코리델종의 원종양(原種羊)을 수입하여 아라리와 오라리 소재의 목장을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었다. 시행 결과로 보자면 계획했던 사육두수 10만두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실제 시행 결과는 목표에 비해 저조하나 일제의 개발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시기 일제 당국의 통치는 일제의 대륙침략 수행을 위해 조선을 병참기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러한 의도가 ‘제주도 개발계획안’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총독부는 1938년 연료국책화 정책에 맞춰 제주산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대체 연료 생산 공장의 설립을 추진했다. 여러 논의 끝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무수주정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제주항 확장공사 및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개발의 시기와 내용이 식민 당국이 정하는 순서와 범위로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일본 척무성에 제출한 ‘제주 주정사업 경영인가 신청안’에 기술한 제주 무수주정 공장 설립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번 조선총독부의 종용(慫恿)에 따라 액체연료증산의 국책에 순응하기 위해 또 전라남도 제주도 개발을 위해 별지의 계획과 같이 동도(同島) 제주읍에 연산(年産) 2만석을 목표로 하여 무수주정 제조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며, 무수주정 제품은 총독부 납입(納入)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⁸⁵⁾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식민 당국은 지속적으로 인지해 왔으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시행하지 않았다. 제주항의 추가 축항은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던 사항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무수주정 공장의 설치의 선결 조건으로 축항을 요구하게 되면서 결국 시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제주항 추가 축항 내용도 도민 이동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무수주정의 원료인 고구마의 도내 이동 루트와 기타 원료 및 생산품의 선박 선·하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식민 당국이 의도하는 개발의 형태가 일반 조선민의 요구, 편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제주도 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안이었으며, 개발계획안에서 실제 시행된 사항은 시국을 반영한 주정 생산과 관련한 원료 확보 및 시설 확충에 그쳤다. 주정과 전분의 원

85) 東洋殖産株式會社, 「濟州酒精事業經營認可申請ノ件」, 1939.

료인 고구마는 1938년도부터 증식에 착수하였다. 1939년 자료에 의하면, 1938년에는 작부면적 7,357정보(町步), 수확량 2,343만관(貫)에 이르렀고, 1939년은 작부면적은 1만 정보로 확대, 수확량은 3,200만관으로 전망하였다. 당초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무수주정공장을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제주도에는 도민대회를 개최하여 주정공장의 제주도 설치를 주장하며 무산될 경우 제품 원료인 고구마를 도외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각처에 진정하기도 하였다.⁸⁶⁾ 이미 제주도에 고구마 경작지 확대와 대대적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수주정 제조공장의 설립에 따라 고구마 수매와 처리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 무수주정 공장 설립에 따른 제주항의 개조도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항만 수축이 아닌 기업의 제품 생산과 수송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주도 개발계획안 수립이나 무수주정 공장 설립 논의는 제주도민은 배제된 채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논의와 시행의 주체가 되었다.

한편 기타 항만 시설 개선을 위한 토목공사의 경우도 일부 시행되는 것에 그쳤다. 실제 시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제주·한림·모슬포항의 공사 또한 공사 내용과 예산은 당초의 ‘제주도 개발계획’의 토목공사 계획안에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다음의 기사는 1938년 미나미 총독이 시찰을 위해 제주항에 도착하여 하선하는 장면이다. 제주항은 여전히 착부 승하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주항에 다 온지 30분이건만 마중 나온 발동선은 우리가 타고 있는 금강환에 와서 발을 붙여보지 못할 만큼 제주항의 파도는 성년 말과 같이 뛰었다. 한참 고생을 한 뒤에 가까스로 발동선으로 옮겨 타고서 잔교를 디뎠다.⁸⁷⁾

제주항은 2기 축항 이후로도 지역민들의 지속적 추가 축항 요구가 있어왔다.⁸⁸⁾ 그러나 제주도 개발계획 수립 이전까지 당국은 지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1937년 제주도 개발계획안과 함께 제주항의 추가 축항 계획이 수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축항 계획 또한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무수주정공장 기반 시설의 형태로 그 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었다.

‘제주도 개발계획’의 토목사업에 따른 제주항 축항 계획은 1938년 7월 동척의 제주 무수주정공장 설립이 확정된 후, 공장부지 조성권 원료 및 제품의 수송 편의에 맞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938년 7월 23일 제주항 축항 3차 계획안에 해당하는 ‘제주항 확장공사’ 계획안이 작성된다.⁸⁹⁾ 산지항 3기 축항은 크게 동방파제측 매립지 확장을 위한 ‘제주항

86) 『조선일보』, 1938.06.12.

87) 『매일신보』, 1938.09.20.

88) 『매일신보』, 1934.03.15.; 『매일신보』, 1934.06.15.

89) 조선총독부, 「제주항확장공사비보조」, 1938.7.(국가기록원 소장문서).

확장공사'와 무수주정공장 부지 조성, 일주도로와 공장부지 연결을 위한 도로 개수, 방파제 추가연장, 준설 및 접안 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제주항 매축공사' 등 2개의 공사로 진행되었다.

'제주항 확장공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국책적 산업개발 상 매우 긴요한 사항이 되어 항만설비를 1939년, 40년에 걸쳐 총공사비 55만원으로 수축하고자하나 도(道)재정으로는 전액 부담이 어려우므로 70%인 385,000원을 국고보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공사내용은 동방파제 내측부 면적 12,200㎡를 매립하여 기존 동방파제 매립지와 연결하여 확장하고, 길이 125m 호안과 120m의 안벽을 축조하여 승강 승객과 화물의 선·하적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항내 면적 48,000㎡를 평균 수심 6m 깊이로 준설하여 부두에 착부할 수 있는 선박 용량을 1천 톤급으로 증강하고자 하였다.

'제주항 수축공사' 및 '제주항 개선설비공사' 계획안을 전라남도에서 작성한 것과 달리 '제주항 확장공사'는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작성한 계획안이다. 또한 사업 시행 주체도 산지항 1·2기 축항공사는 사업주체가 제주읍(면)이었으나 3기 축항공사는 전라남도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었다. 이는 앞서의 1·2기 공사와 3기 공사가 뚜렷하게 차이나는 부분이다. 제주항 축항이 승객의 안전과 승강 편의 도모라는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책적 용도로 설립되는 무수주정 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과 원료의 선·하적이 용이하도록 항만을 개축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연료국책화를 위해 무수주정 생산이 시급한 문제였고, 무수주정 공장 설치를 위해서는 항만의 확장이 선결 조건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앞서 3차례 작성된 제주항 축항 계획안들과 최종적으로 작성된 '제주항 확장공사' 계획안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매립지 조성의 위치 선정이다. 당초 계획안들은 기존 서방파제측 매립대지와 연결하여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고, 1천톤 급 이상의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안벽을 축조하고 해저를 준설하는 등 기본적으로 서방파제측 매립대지를 확장하는 안이었다. 즉 승객과 화물의 이동이 서방파제측 매립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계획하였다. 보통의 항만계획은 기본적으로 물류의 이동의 접점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부두를 조성하여 해운과 육운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게 계획된다. 해운의 종착점이 육운의 시작점이므로 기존에 제주도 내에서 물류 이동의 중심이 되는 제주성내로의 접근이 수월한 서방파제 매립지 쪽으로 부두를 확장하여 육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제주성내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그런데 1938년 7월 동척에서 제주에 무수주정공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그 부지가 제주항 방면으로 선정될 것으로 논의가 진전되면서 제주항 확장계획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본 계획안은 이전 계획안의 서방파제측 매립부 확장안이 아닌 동방파제와 동방파제측 매립부를 중심으로 매립지를 추가 확장하는 것이다. 이전의 계획안과 비교하면 산지천을 중

심으로 매립지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와 같이 동방파제측 매립부를 중심으로 항만시설을 정비하면, 선박이 접안하여 하륙한 화물은 1차로 산지천 다리를 건너서 중심지와 연결하는 도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여 물자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신규 매립지에 직통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 총독부는 육운 이동의 번거로움에도 산지천 동방파제 매립지 구역의 추가 확장을 계획하였다. 이는 당초 총독부가 제주도 개발계획의 수립 목적을 ‘도 산업을 부흥시켜 도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발상이었다. 본 계획을 통해 총독부의 제주 개발과 제주항 확충이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님이 확실해졌다. 제주항 확장공사는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시스템 확충을 위한 축항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수주정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항만 개조였기 때문에 무수주정공장 부지와의 연결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된 것이었다.

당시 신문기사는 축항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야 급행으로 공사를 서두르고’, ‘근로자가 천명을 돌파’, ‘여성 노동자도 백여명 참가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한다. 더군다나 해녀들이 준설 작업에 동원되었다는 내용도 확인된다.⁹⁰⁾ 〈그림 2-5〉는 1943년도 당시 제주항에 축조된 방파제와 매립지, 무수주정 공장지역을 지도에 표시한 자료이다.



〈그림 2-5〉 1943년경 제주항 평면도⁹¹⁾

90) 『부산일보』, 1939.08.21.

한편 ‘제주도 개발계획안’ 발표 직후인 1937년 9월에, 전라남도도는 항만수축안을 수정하여 한림항과 모슬포항 시설 확충과 도로 공사 계획안을 총독부에 제출한다. 당초 제주도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토목 공사비를 총독부가 국고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고, 공사를 위해 전라남도도는 군(軍)에 도로공사비 보조와 공사시행 관리를 요청한다. 군에 공사를 요청한 도로는 제주-모슬포선 중 한림~고산 구간, 보성~모슬포 구간, 모슬포~상모리 구간 그리고 모슬포-성산포선(線) 중 대정 상모리~안덕 화순 구간이었다. 이외 한림항과 모슬포항의 준설과 물양장 조성 등의 항만 공사와 고산~모슬포 구간 도로의 개량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총독부의 공사비 보조 문제는 단순 예산 부족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해당 지역의 태평양 전쟁 시기 주요 군사 시설 주둔지였음을 상기하면, 시설 확충이 군사 목적의 시설 증강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수정 제출안의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표 2-10>의 공사실시기간을 보면 원래 모슬포항은 사업년도 4·5년차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였으나, 개발안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수정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공사의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원인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수정안의 기술 내용에서 한림항과 모슬포항 관련 공사가 단순 어항 수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 군사시설 강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목시설 개량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바, 시국에 비추어 특히 급속히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본년도 혹은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계상하여 국비직할공사 또는 전액국고보조공사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⁹²⁾

제주도 개발계획안이 실제 어느 정도 선까지 시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일부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 거듭된 전쟁 수해로 인해 시책이 변화하였고, 각종 사업들이 시책에 맞춰 정비 시행되었다. 제주도 개발계획의 경우도 실제 시행은 전쟁을 뒷받침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부각되었음을 확인했다.

91) 국토정보플랫폼의 근대측량자료(국토지리원, 근대측량자료 『지형도업무경과보고-제주도』)의 지도를 수정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본 지도는 1917년 제작된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지도를 확인하면 해당 도엽에 ‘소화십팔년도측도도(昭和十八年測度圖)’라고 기입되어 있다. 또한 산지항에 무수주정 공장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일주도로부터 공장을 잇는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당 지도를 1943년 산지항 평면도로 제시하였다

92) 전라남도지사, 「시국관계토목공사실시요구에관한건」, 1937.9.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5. 축항이 지역 사회에 끼친 영향

5-1. 축항 이후의 개선점

산지항 1기 축항 이전에는 선박이 해안에서 떨어진 바다에 정박하면 승객과 화물은 다시 부선으로 갈아타서 해안까지 이동했고, 부선마저도 착부할 마땅한 선착 시설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기 축항으로 다소 항만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승하선의 상황은 일부 개선되었다.

산지에 축항이 만들어져 있어 거룻배로부터 직접 상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거룻배로부터 남자(이 남자를 하루라고 했다)의 어깨에 업혀 얹은 여울을 해안까지 건너지 않으면 안되었다. 승선 때, 남게될까 두려워한 손님들은 '하루'에게 특별히 틈을 주는 등 앞다투어 거룻배에 타기도 했기에 부녀자들의 도항 때의 고생스러움은 각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⁹³⁾

그러나 1기 축항 이후로도 100톤 정도의 소형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정도여서, 기선이 바다에 정박하면 승객과 화물을 부선으로 옮겨 태워 산지항에 당도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은 축항 이전과 마찬가지로였다.⁹⁴⁾ 다음은 우에다 코이치로(上田耕一郎)가 1930년에 제주를 방문하여 작성한 『제주도의 경제』에서 산지항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1기 축항 공사 준공 후에도 산지항은 여전히 항내의 풍파, 수심 등이 불량하였기 때문에 상업항구로서도 어선의 피난항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항내는 외해의 풍파를 완전히 막기 어려웠고, 수심도 방파제 서쪽에 쌓여 있던 모래가 서풍으로 방파제를 우회하여 항내로 침입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축항이 필요했다. 부두에 착부시켜 하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발동기선 또는 소형의 돛단배 정도였고, 기선은 모두 바다에서 연결하거나 방파제 끝부분에 닻을 내려 다시 거룻배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하였다.⁹⁵⁾

산지항 1기 축항과 2기 축항에 따라 동,서 방파제가 축조되어 북서풍에 의한 풍랑에 피난할 수 있는 항만이 일부 조성되었다. 또한 호안과 매립지 등이 축조되어 부선이 선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준설이 미비하고 방파 설비로 인해 오히려

93) 梶田一二 著, 洪性穆 譯,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 1930年代の地理・人口・産業・出稼 狀況 等』, 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53-54쪽.

94) 『중외일보』, 1930.06.29.

95) 上田耕一郎, 앞의 글, 1930, 18쪽.

토사가 퇴적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항내의 풍파, 수심 등이 불량하였기 때문에 상업항 구로서도 어선의 피난항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부두에 착부시켜 하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발동기선 또는 소형의 돛단배 정도였고, 기선은 모두 바다에서 연결하거나 방파제 끝부분에 닻을 내려 다시 거룻배로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은 여전하였다. 부산이나 어선과 같은 작은 배들은 항내 정박이 가능했지만 제주-오사카 항로를 운항하는 선적 용량이 큰 기선은 여전히 항외에 정박해야 했다.

배는 서쪽으로 15개항에 기항해서 귀환자를 내리고 동시에 도항자를 태우면서 거의 2주 야로 섬을 일주, 동단의 성산포항을 마지막으로 섬을 떠난다. 그런데 이 15개의 기항지 중 거룻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항구는 단 하나도 없다. 57만엔을 투입한 섬의 앞 현관인 본도 제1의 축항, 산지항조차도 거룻배 없이는 상륙할 수가 없다. 겨울의 북서강풍이 불 어닥칠 때에는 부산과 목포에서 오는 정기선도 착부(着埠)할 수가 없어...(중략)... 날씨가 나쁠 때는 해안 가까이 올 수 없어 며칠이나 해상을 헤매는 일이 적잖았다는 것이다.⁹⁶⁾

앞의 내용은 2기 축항이 마무리 된 직후인 1934년 산지항의 상황이다. 산지항 및 일부 축항을 시행한 항구를 포함한 정기선박 기항지 15곳 전부 선박으로 바로 승선할 수 있는 선착설비가 미비했기 때문에 승객들은 승하선에 불편을 감수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5-2. 축항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변화

한림항은 1934년 2기 축항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축항지 인근의 지역 개발을 도모하였다. 산지항 2기 축항과 더불어 한림항 2기 축항은 조선총독부의 전국 단위 토목 사업인 ‘국민구제토목공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의 영향으로 조선 및 일본 내 경기가 침체 되었고,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노동자의 공적 부양을 위해 임금 살포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935년 5월 1일자 『매일신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한림 시가는 면의 발전함에 따라 상업이 진흥하여 본도 제2위의 중심 세력을 점하였다. 현재 어항 수축 중이며 노임으로 금융이 원활하여 농어촌진흥의 기운이 농후하고 면에서는 시가의 장식을 번창케 하기 위하여 면사무소부터 중심시가지 전부를 망라하여 벚나무 등을 다수 식재하여 장래에는 풍치의 도시화를 도모한다고 한다.⁹⁷⁾

96) 梶田一二 著, 洪性穆 譯, 앞의 글, 2005, 52쪽.

97) 『매일신보』, 1935.05.01.

기사에서 ‘어항 수축 공사 노임으로 인해 금용이 원활하다’ 내용에서 식민 당국의 ‘궁민구제토목사업’과 농여촌 진흥 운동에 대한 홍보의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항만의 수축과 함께 시가지 외관 정비에 들어간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의 외관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한림 지역은 항구 수축을 계기로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이는 항구의 물리적 변화에 맞춰 지역의 외형적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서귀포항의 경우는 서귀포항 조성지의 일부 주민들은 지역의 입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였다. 지역 내 수도 급수시설을 정비하여 정박하는 기선에 식수를 제공하여 면수입을 조성하였다. 서귀리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일본인 유지 15인은 1925년 ‘우면간이수도조합’을 조직하여 상수도 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다. 이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조선식산은행을 통해 1,100엔을 차입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공사 도중 공사비 부족으로 1926년 조합원 중 한 명인 서향무십(西鄉武十)에게 다시 3,500엔을 차입하여 도합 14,500엔의 공사비로 1926년 간이 수도 시설을 완공하기에 이른다.

간이수도의 설치 1차로 주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 보급이 목적이었으며, 이와 함께 서귀포항에 기항하는 선박을 상대로 음용수를 보급하는 급수 사업을 계획하였다. 전후 서귀포항 인근 지역인 서호리와 토평·신흥·하호 지역에서도 주민의 음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공용 수도 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우면간이수도조합’에서 부설한 수도 설비는 서귀포항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사업성에 주안을 두었다는 점에서 인근 지역의 수도 설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서귀포항을 배경으로 물 자원의 수요자가 발생하였고, 서귀포항을 생활 터전으로 삼았던 지역 유지 등 지역 공동체는 이를 선박용 식수로 공급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였다. <표 2-11>의 선박급수의 주요 사용자는 조선우선, 아마가사키기선, 동양포경회사기선 등이었다.

<표 2-11> 서귀포항 간이수도 사용료 수입

년도	급수구역		전용급수		공용급수		선박급수		합계 (円)
	총호 (戸)	총인구 (人)	호수 (戸)	금액 (円)	호수 (戸)	금액 (円)	척수 (石)	금액 (円)	
1926	250	1,254	15	435.70	120	984.95	5,380	691.51	2,112.16
1927	254	1,273	24	670.14	110	637.37	11,389	1,280.87	2,588.38
1927	259	1,293	24	806.40	115	910.80	15,000	1,720.00	

주) 우면, 「제주도우면면차입금의건」, ‘사용료수입누년별표’(국가기록원 문서).

한편 항만의 개발은 제주도내 각 지역 개발의 편중을 야기하였다. 산지항 1기 축항공사와 함께 제주 세관사무의 이동을 살펴보자.⁹⁸⁾ 기존에 제주의 유일한 세관출장소는 성산포항에 위치하고 있었다. 성산포항은 산지항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제주의 주요 항구였다. 산지항과는 달리 자연환경적 조건이 우수한 천연항이었고 어획고가 많아서 어항이나 피난항으로도 유용한 항구였다.

성산포 지역은 조업이 활발하여 일본인 어업자들이 계절적 출어 근거지로 삼았다. 항만 개발의 움직임도 1918년 어항 개발 조사,⁹⁹⁾ 1923년 관세지정항 설정¹⁰⁰⁾, 1924년 전라남도의 축항 계획¹⁰¹⁾ 등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실제 축항이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제주에서는 드물게 내외항으로 분리된 천연 양항(良港)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 피난항으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개발 원인 중 하나로 산지항 축항기성동맹회 측이 제주에서 들고나는 물류의 이동을 산지항으로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성산항의 축항 관계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성산포항은 일본 방면에서 입항하는 선박들이 제주에서 처음 정박하는 지역이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입품목의 세금과 관련하여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성산포항의 세관출장소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지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은 세금 납부, 세금 반환의 수속을 성산항에서 진행하고 산지항으로 입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산지항의 물류 능력은 전도의 70% 가량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항을 근거지로 삼았던 상인과 운송업자 즉 산지항 축항기성동맹회에서는 이른바 ‘산지일항 집중주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었다.¹⁰²⁾

제주에 들어오는 일본 상품에 붙는 이입세(移入稅) 혹은 소비세 납부, 내지세(内地稅)를 돌려 받기 위한 이입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지 항구가 어디든지 세관출장소에서 수속을 받아야했다. 즉 일본에서 오는 모든 선박은 제주 이입화물의 통관과 관련해 성산포를 들러야만 했다.¹⁰³⁾ 세관출장소를 이전 설치한다는 것은 성산포항으로서는 세관업무와 관련하여 파생된 이익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되고, 산지항으로서는 수출입화물량이 증가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지항을 도내 제1항으로 확장하여 모든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은 제1기 산지항 축항 사업 계획 수립에 이미 반영되었던 것이다. 실제 산지항 2기 축항의 시행에 맞춰 세관출장소가 성산항에서 산지항으로 이전되었다.¹⁰⁴⁾

98) 『조선총독부관보』 1931년 2월 14일자; 『매일신보』, 1931.02.18.; 『매일신보』, 1931.03.14.

99) 『매일신보』, 1918.8.15.

100) 『매일신보』, 1923.3.28; 『매일신보』, 1923.4.5.

101) 『매일신보』, 1924.6.13.

102) 上田耕一郎, 앞의 글, 1930, 79-80쪽.

103) 上田耕一郎, 앞의 글, 1930, 19-20쪽.

104) 『매일신보』, 1931.2.18.; 『매일신보』, 1931.3.14.

제주성내 지역 유지, 상인이 산지항을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용한 항만의 위치를 점하기를 바랐음을 항로 변경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조선우선회사의 부산-제주도간 및 제주도-목포간 항로는 횡수를 감하여 1개월 4회 항해로 하고, 또 종래 산지를 중심으로 한 것을 성산포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4월 1일부터 실행하는 것에 있어, 종래 산지의 가는 편 기항(往航寄港)은 오는 편 기항(復航寄港)으로 변경하게 되어, 부산 방면에서 제주성내로 오는 여객은 성산포에 상륙하여 12리를 내륙 이동하는(陸行) 불편이 있고, 또 상거래 상의 불리함이 적지 않아, 동도내(島內) 조선인 유지는 '항로 복구 진정 운동'을 결의하고, 제주학교조합 관리자 樺島久次¹⁰⁵⁾와 2명을 위원으로 하여 3월 31일 목포 조선우선회사 출장소 및 상업회의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진정하고, 거듭 4월 3일 도장관에게 진정하여 동 6일 우선회사 본사로 교섭을 위해 출발하여, 만일 회사에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사외 선주에게 교섭하여 일절 우선회사 선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¹⁰⁶⁾

1915년 4월 제주-부산간 항로의 첫 기착지를 성산항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산지항 인근의 상인 유지는 반발하였다. 사실상 제주-목포간 항로의 기항 순서는 유지하면서, 개정된 제주-부산간 항로의 제주 기항지의 도착 순서를 변경한 것인데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거셌다. 정기선 기항지 변경에 대한 제주도내 조선인 유지는 '항로 복구 진정 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산지항이 제주도내에서 가진 상징성, 즉 도내의 첫 관문이라는 위상을 가진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응의 움직임이 제주도내 조선인 유지들의 의사였다고는 하지만 산지항의 배후지인 제주성내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상인, 유지층이 성산항을 견제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산지항 1기 축항이 마무리되고 2기 축항 계획의 승인이 진행 중이던 시기 성산항에 있던 세관사무소를 산지항으로 이전한 것과 정기선 항로의 입항 순서에 대한 반발을 통해 산지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지역민과 행정 기관 등이 제주도내에서 산지항을 도내 제1항으로 개발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민과 행정기관은 산지항 수축과 설비 증강을 통해 성산포 등 타 항만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축항 활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단편적이거나 제주도 내부에서도 각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것으로 인식하는 지역의 변화와 이로 수반되는 편의,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축항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우와 임금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31년부터 '국민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산지항 2

105) 원문에 기재된 '樺島元次'는 '樺島久次'의 오키.

106) 朝鮮郵船航路變更ニ對スル復旧運動ニ関シ報告ノ件(B11092506700)

기 축항 공사와 관련하여 저가 임금 문제로 축항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국민구제도목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임금 지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노동자의 시위가 증가하였다. 건설 청부업자가 임금을 중간에서 낮게 책정하거나 일정액을 저금의 명목으로 떼어 지급하는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국이 ‘다수의 국민구휼’이라는 명목으로 공사 인부 노임을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는 일제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꾀했기 때문이다. 산지항 2기 축항 공사 현장에서 축항노동자들이 저가 임금에 불만을 제기하여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¹⁰⁷⁾ 노동자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축항노동자 파업의 측면과 제주도 내 사회운동의 측면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역민의 항만 시설 확충 요구와 실제 축항이 제주도민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1920~3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도내 주요 항만 축항 사업의 사례를 축항기성회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1937년 이후 조선총독부와 전라남도청의 주도로 진행된 제주도내 주요 항만 개발을 소략하여 정리하였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환경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 교통 기관의 기초 시설에 해당하는 항만의 수축과 설비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에 필수적이었다. 지역민들의 요구는 승하선 안전 확보가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항만 시설의 이용 주체가 다양한 만큼 항만의 개발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했다. **어선** 조업이나 해운업 등 바다 이용을 생업으로 삼는 쪽에서는 경제적 이윤 또한 항만 축항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망라한 관민 유지들은 항만의 수축이 제주 발전의 시초가 될 것이라 여기고 축항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당시 식민 당국의 의도라는 측면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초기 축항에서 1937년 이후로 갈수록 일제가 전국에 시행한 주요 통치 시책이 축항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1937년 발표된 산지항·서귀포항·한림항·성산포항·모슬포항 등 도내 5개 항만의 수축 계획은 식민 당국이 작성한 ‘제주도개

107) 『조선일보』, 1931.11.09.; 『경성일보』, 1931.11.10.; 『조선일보』, 1931.11.12.; 『목포신보』, 1931.11.13.; 임금인상 시위는 산지항 2기 축항 기공식 바로 며칠 전 발생하였는데, 기공식에는 전라남도 지사 등 주요 인사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국은 이 시위를 제주도 사회운동 계열 단체의 주동에 의한 소요로 판단하여 경계하였다.

발계획'이라는 거대한 산업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해당 계획은 제주에서 생산된 물자의 효율적 반출을 위한 항만 수개축이 그 목적이었으며, 첫째, 제주도민이 배제된 채 식민 당국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것과 둘째, 계획 수립 직후 발발한 중일전쟁과 전시체제기 총동원 정책하에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수정된 계획이 군사적 목적에 맞추어졌고, 전쟁으로 공사의 완공이 미완성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인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항만 정비도, 제주인을 위한 시설 정비도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본고에서 검토한 각 항구의 축항 공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 처한 특수한 정치·사회·경제적 환경과 조선총독부 정책에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다. 항만 수축은 사실상 수탈의 교두보 마련이자 제주 개발의 시작점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식민지 근대화와 수탈론의 주요한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보다는 각 항구 축항 사례와 축항에 관련된 제주도민의 주요 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

III.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의 초등 교육기관 설립과 그 특징

1. 머리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았다.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어서 식민지 치하였지만 한국인의 교육열은 여전히 높았다. 개항 이후는 전통적인 교육이 서구식 근대 교육으로 바뀌어 가는 시기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근대적인 교육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한말보다는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내에서도 1910년대보다는 1920년대를 거쳐 1930년대로 갈수록 근대적 교육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 갔다. 그에 따라 한국인들의 근대적 교육에 대한 열망도 높아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근대적 교육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우선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은 학교 설립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일제는 한국을 통치하면서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에게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문자 해독 능력 함양과 실업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교육관을 갖고 있는 총독부가 한국인을 위한 학교 설립에 거의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다른 한편 총독부의 재정적인 한계도 학교 설립에 소극적이게 하였다. 총독부는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총독부는 재정 투입에서 한국인을 위한 학교 설립을 후순위로 미루었다.

학교 설립에 매우 미온적이었던 총독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1910년대에는 3면1교제로 나타났다. 세 개의 면에 하나의 보통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은 숫자의 학교로는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령기 아동이 갈수록 많아졌다. 이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총독부도 한국인들의 폭발하는 교육열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는 1면1교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면1교제도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을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여 해마다 미취학 아동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한국인 교육에 대해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또 재정적으로도 학교를 설

립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총독부에게 더 많은 학교 설립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사람들은 그 대책을 고민하였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총독부에 기대지 말고 자신들이 직접 초등 교육기관을 세워서 학령기 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인들이 스스로 설립하여 운영한 초등교육기관은 ‘개량 서당’ ‘개량 사숙’ ‘개량 서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대개는 개량서당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량서당이라고 하여 그 이름에 ‘서당’이 붙어 있지만 전통적인 서당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교사(敎舍) 규모나, 초빙된 교사의 이력이나, 수업 내용이나, 학교 운영 방식 등에서 전통 서당과는 크게 달랐고 근대적인 초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개량서당’은 일제의 소극적인 학교 설립에 대응하여 한국인 스스로 아동 교육을 위해 세우고 운영한 초등교육기관이었다. 개량서당은 이후 그 지역에 보통학교 등 총독부 인가 초등교육기관이 설립될 때 모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에서도 교육열은 높았지만 총독부의 1면1교정책이 적용되어 학교는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대안으로 개량서당이 많이 설립되었다. 제주도의 개량서당도 본토의 그것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지만 그러면서도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제주도의 개량서당이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신문보도 혹은 남아 있는 사진들을 보면 개량서당은 독자적인 건물 한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사들도 중등 이상의 근대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다. 수업 내용도 보통학교에 준하는 과목이 많았다. 운동장도 있었고 운동회도 개최되었다. 그리고 개량서당은 일제의 재정 지원 없이 마을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대개 마을 유지 및 청년들이 그 설립을 주도하고 마을 주민 전체가 호응하여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처럼 개량서당은 전통 서당과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다만 개량서당은 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개량서당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해도 그 학력이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개량서당을 세워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개량서당을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보통학교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보통학교 설립을 쉽게 허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총독부는 1920년대에 들어서 1면 1교제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1개 면에는 대개 보통학교 1개교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통학교는 총독부의 교육 정책에 의해서 그 숫자가 정해졌다. 때문에 보통학교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만 총독부는 한국인의 교육열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 수 없었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인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그 결과 보통학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제주도에서도 적지 않은 마을에서 성과를 거두어서 개량서당을 토대로 해서 그 마을에 보통학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였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초등 교육 기관 설립 운동은 본토와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만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설립된 초등교육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많았다. 그 이유는 대개 마을 주민들 간에 단합이 잘 되는 마을 공동체성의 존속, 또 실제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전개된 근대적인 초등 교육기관설립을 개량서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주도만의 특징에 주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제주도 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미 적지 않게 나와 있다.¹⁰⁸⁾ 이들 연구에 의해서 당시 교육 상황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신문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마을 단위에서 학교 설립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사례도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제주도 학교 설립 운동이 활기를 띠며 전개되고 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한 천착도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개량서당으로 대표되던 초등 교육기관의 설립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초등 교육기관 설립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제주도 초등 교육기관 설립 운동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주목하여 논의하였다. 이어서 구좌면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서 실제로 초등 교육기관 설립 운동이 누구에 의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추진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제주도에서 초등 교육기관 설립 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동력과 관련해서 제주도민의 경제력 문제 그리고 마을 공동체성 문제를 논해 보고자 한다.¹⁰⁹⁾

108) 박래봉, 「일제 통치 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제6집, 1984; 백차훈, 「화북리 명칭의 변천과 화북교의 설립」, 『탐라문화』 10, 1990;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초등학교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집, 1992; 양진건,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4, 1995;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교육사 연구」, 『한국교육사학』 19, 1997;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98;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 운동」, 『탐라문화』 24, 2004; 정선영,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2007 등 참고.

109) 지금도 교육기관 설립에는 상당한 자금이 요구된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여서 학교 설립의 가장 큰 장애는 재정적인 문제였다.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재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초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는 당시 제주도민의 경제력이 마을에 따라 독자적으로 학교를 세울 만큼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성도 중요하였다. 초등 교육기관은 주로 하나의 마을 단위로 어떤 경우에는 두세 마을이 합심해서 설립하였다. 그리고 재정 지원은 독지가의 기부금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리민(里民) 경영'이라고 표현되듯이, 마을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 주민 전체가 한 마을으로 동원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을 주민들의 단합과 결속력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속력은 강한 공동체성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의 공동체성 문제도 함께 논해보려고 한다.

2. 초등 교육기관 설립 추이

제주도에서도 1910년대부터 몇몇 마을에서 개량서당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인 1920년대에는 개량서당이 더욱 확산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등교육기관 설립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지역이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계적으로 논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당시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그 정황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당시 제주도민의 높은 교육열과 그것을 기반으로 초등교육기관이 여러 곳에서 세워지던 상황, 다시 말하면 제주도민에 의한 초등 교육기관 설립 추이를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역시 3.1운동 이후 급격히 바뀐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상황은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시대의 변천을 따라 조선인이 부르짖는 향학심과 교육열 수년 전부터 우리 제주도에도 발발하여 면면촌촌(面면村村)에 불완전하나마 교육기관이 봉기함은 우리의 전도를 위하여 누가 치하지 않으리오.¹¹⁰⁾

위 인용문은 1924년의 신문기사이다. 기사 내용 중에는 수년 전부터라는 교육열이 발발하였다는 표현이 있다. 1924년에서 수년 전이라면 대개 3.1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교육계몽 운동이 제주도에서도 활기를 띠고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이 실제로 결실을 맺고 있어서 제주도 곳곳에서 교육기관이 속속 설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의 전도를 밝게 하는 것으로 치하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의 양적 증가는 어떠하였고 당시 세워진 교육 시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사가 참조된다.

근래 기미운동 이후 경향은 물론하고 교육열이 치성하였을 때부터 촌촌 각리에 개량서당을 설치 아니 한 곳이 없었다. 그러나 현하 중학기관으로 완전한 것이 한 개도 없어 일반 도민의 한탄이 그치지 않는다. 교육 보급 상황은 다른 지방에 뒤쳐졌다고 아니 할 만큼 발달되어 다른 지방으로 유학 간 학생이 수백 명에 달한다. 숫자로 교육기관 생도수를 열기(列記)하면 공립보교 11개, 3,485명, 사립보교 4개, 581명, 개량서당 37개, 2,163명이다.¹¹¹⁾

110) 「제주의 창피」, 『동아일보』 1924. 2. 20.

111) 「풍광이 명미한 남국의 정서, 조선의 제1島」, 『동아일보』 1926. 10. 27.

이 기사에서도 3·1운동 이후 교육열이 치성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서 3.1운동이 교육 보급에 획기적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사는 제주도에서도 마을마다 개량서당이 속속 설립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 보급 상황은 다른 지방에 뒤쳐졌다고 아니 할 만큼 발달되어 있다고도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26년 10월 현재 초등교육기관을 보면, 공립보통학교, 사립보통학교, 개량서당이 있었다. 당시 각 교육기관의 숫자와 재학생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공립 보통학교는 11개교, 사립보통학교는 4개교였고, 개량서당은 37개소였다. 그리고 재학생은 각각 3,485명, 581명, 2,163명으로 공립보통학교 재학생이 가장 많았다. 사립보통학교 학생까지 합하면 정식인가를 받은 보통학교의 학생수는 4,066명이 된다. 반면 개량서당 재학생은 2,163명이었다. 1926년 무렵 보통학교 재학생이 개량서당 재학생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학교당 학생 수를 보면 공립보통학교는 약 317명, 사립보통학교는 145명, 개량서당은 58명 정도였다. 공사립에 따라서 또 보통학교인지 개량서당인지에 따라서 재학생 수는 차이가 적지 않았다. 이미 이 무렵이 되면 보통학교가 개량서당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여 교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개량서당은 어떤 성격의 교육기관이었을까. 서당이라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통 서당과 유사한 존재였는가. 개량서당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1927년 무렵 공립보통학교는 1면1교제이고, 농업학교가 한 곳 있으며, 개량사숙이 37개소나 있어 소학 정도의 교육기관은 가급적 구가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등 정도의 학교는 다만 농업에만 편중하는 농업학교 1개소에 지나지 못한 것이 실로 유감이다.¹¹²⁾

위 기사는 1927년 무렵 제주도의 교육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보통학교는 1면1교제를 이룬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공사립 보통학교 수가 16개였고 제주도의 면은 추자면을 포함해서 13개였으므로 수적으로는 1면1교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안덕면의 경우 당시에는 보통학교가 없었다. 안덕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1930년이 되어서였다. 따라서 13개 면 모두에 보통학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편 개량사숙, 즉 개량서당은 37개소 있었다. 1926년에도 37개의 개량서당이 있었다고 하므로 1년 사이에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자면을 제외하면 제주 섬 내에는 12개면이 있었으므로 평균으로는 1개 면당 약 3개의 개량서당이 있었던 셈이다.

위 인용문에서 특히 주목할 내용은 ‘개량 사숙이 있어 소학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가급적 구가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설립된 개량서당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 볼 수 있는데, 그 평가에 의하면 개량서당은 시설, 교사, 교과과정 등의 측면에서 소학

112) 「지방 소개, 遊民 하나도 업는 제주의 사랑(3)」, 『조선일보』 1927. 2. 5.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즉 당시에 당시 제주도의 개량서당은 보통학교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비록 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못해 개량서당으로 남아있었지만, 그 시설이나 교육내용, 교사의 자질 등은 보통학교에 버금가는 수준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개량서당이었다.

앞서 제주도 교육 보급이 다른 지방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상을 살펴보자. 다음은 1938년 기사인데 전라남도 내에 제주도의 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이 잘 서술되어 있다.

전남 도내의 조선인 초등교육기관과 그 취학 상황은 본지에 누보하였다. 이제 서당 교육 상황을 지난 4월 1일 현재로 조사하여 보건대, 서당 수는 578개소, 교원 수는 624명, 취학 아동 수는 17,580명이다. 이를 작년의 16,782명에 비하면 실로 808명의 증가를 보인다. 도내에서 서당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인 바 서당 63개소, 취학아동은 3,693명으로 전부 사립학교로 승격하더라도 좋을 만한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한다.¹¹³⁾

위 기사는 전라남도 내의 개량서당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당시 전남의 개량서당은 578개소이고 교원 수는 624명이었다. 개량서당 숫자와 교원 수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개량서당이 한 명의 교사를 초빙하여 교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취학 아동 수는 17,580명이었으므로, 개량서당 1개소의 평균 학생 수는 30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전남 내에서 서당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특별히 제주도를 언급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에 63개소의 개량서당이 있었다. 이는 1926-27년의 37개소와 비교하면 11년 사이에 16개의 개량서당이 새로 설립되었다.¹¹⁴⁾ 1930년대 들어서도 제주도에서는 개량서당이 꾸준히 설립되고 있었다.

한편 제주도 개량서당의 경우 취학 아동은 3,693명이었다. 개량서당은 63개소였으므로, 개량서당 한 곳의 평균 학생 수는 59명이 된다. 이는 전남 전체의 평균인 30명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학생 숫자여서 주목된다. 제주도의 개량서당은 본토의 전남 지역 개량서당보다는 거의 두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었다. 1926-27년에도 개량서당 재학생 숫자는 약 58명 정도였으므로, 당시 제주도 개량서당은 대개 58-59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문장도 인상적이다. ‘전부 사립학교로 승격하더라도 좋을 만한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1927년에 이미 제주도의 개량서당은 보통학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1938년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복되어 기사화되었다. 바로 사립학교로 승격해도 될 정도로 당시 제주도 개량서당은 서당이라는 명칭을 사

113) 「중시되는 서당 교육, 제주도에 서당이 제일 만화」, 『동아일보』 1938. 7. 8.

114) 개량서당 중에 간이학교 혹은 보통학교로 전환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설립된 개량서당은 16개가 넘을 것이다.

용하였지만 그 체제는 전통 서당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보통학교에 거의 준하는 근대 교육 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1939년에도 제주도 교육 상황에 대한 기사가 있다. 1938년과는 1년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 사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조선인 소학교가 공사립을 합하여 20개소가 있는 외에, 제주도의 초등교육에 특기할 만한 것은 69개소의 서당이다. 이 서당들은 건물과 설비가 소학교에 손색이 없으며 생도 수에서도 역시 공사립 소학교에 지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이 특색이며, 문자보급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¹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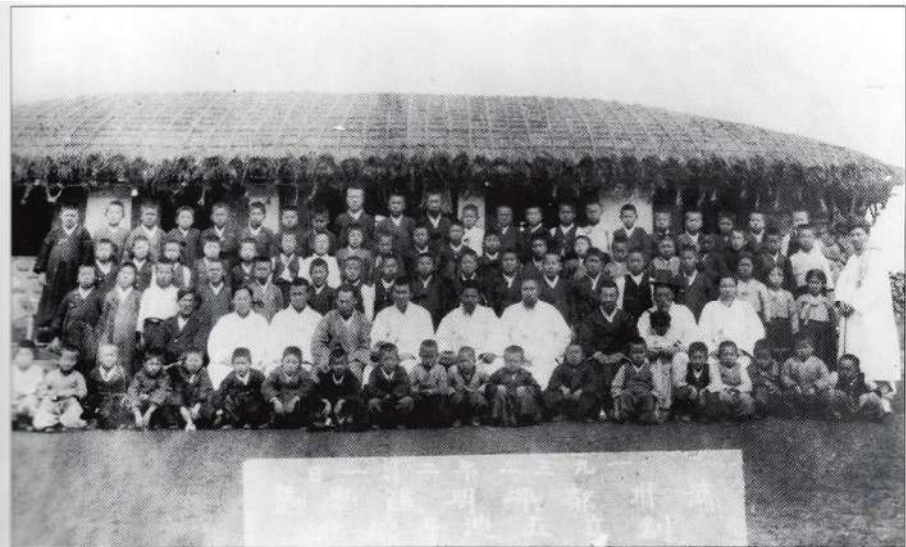
위 기사에 의하면 1939년 당시 제주도에는 공사립 보통학교가 20개소가 있었다. 제주도에는 13개면이 있었으므로 1면1교제를 시행하면 13개의 보통학교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1939년에 이미 20개의 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¹¹⁶⁾ 그리고 개량서당은 69개소로 소개되었다. 1938년의 63개소와 비교하여 1년 사이에 6개소가 증가한 셈이다. 보통학교 20개소와 개량서당 69개소를 합하면 그 숫자는 89개소가 된다. 1939년 당시 제주도에는 근대적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초등교육기관이 89개소에 달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면리 숫자는 13면 167리였다. 그렇다면 1면당 평균 7개소에 달하는 초등교육기관이 있었던 셈이 된다. 리 수준에서 보면 두 개의 리(里)에 하나 정도의 교육기관은 있었다.¹¹⁷⁾ 당시 제주도의 개량서당은 보통학교에 손색이 없을만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사진을 통해서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¹¹⁸⁾

115) 「전설의 나라(3) 제주도의 點描. 팽배한 교육열, 서당의 완비는 이 섬의 자랑」, 『조선일보』 1939. 7. 28.

116) 참고로 1944년에는 제주도의 공립보통학교는 24개소, 사립보통학교는 10개소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공사립 보통학교만 34개소에 달하였다. 평균으로 보면 1면에 거의 2개의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면별로 보통학교 설립이 달랐다.

117)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고 실제로는 면별로 교육기관 설립에서 편차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1948년 제주도의 초등학교 숫자는 95개교였다(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192쪽). 1939년에 이미 89개의 초등교육기관이 있었으므로 미군정기인 1945-47년 사이에 43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118) 아래의 사진들은 제주교육박물관, 『사진으로 엮은 제주교육 100년(1905-2009)』, 2009년에 수록된 것을 사용함.



1932년 2월 1일, 제주 도평 명진학숙 창립 5주년 기념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정규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교재로 삼아 열심히 배우는 남다른 열의가 있었던 명진학숙의 초가 교사 앞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찍었다.

〈그림 3-1〉 1932년 명진학숙 창립 5주년 기념



1930년대. 법환서당 개량서당인 교사 앞에서 둥그런 안경알이 있는 안경을 쓰고 민족중흥의 의지가 보이는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 찍은 기념사진.

〈그림 3-2〉 1930년대 법환서당



1936년 3월 20일, 수원서당 제2회 졸업기념 개량서당에서 정규과목을 배우고 졸업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림 3-3〉 1936년 수원서당 제2회 졸업기념

위 사진들은 1930년대 제주도 개량서당의 모습을 보여준다. 1932년의 도평 명진학숙은 교사가 초가로 되어 있어서 다른 두 곳과 비교가 되지만, 창립 5주년 기념에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찍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제주도 개량서당의 학생 수는 60명 내외였는데, 그 정도의 학생이 실제로 보인다. 그리고 뒷줄로는 성인인 듯한 학생도 있지만 학령기 아동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실제로 개량서당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배움의 장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환서당과 수원서당을 보면 우선 배경이 되는 학교 건물이 주목된다. 도평의 명진학숙과는 달리 모두 근대적인 건물들이다. 당시 제주도의 개량서당이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사진들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환서당은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어서 인상적이다. 그리고 수원서당은 학생들이 교복 같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 비록 개량서당은 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이었지만 사진을 보면 개량서당이 보통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0-30년대 연도별로 제주도 내의 개량서당 설립 동향을 정리해 보면 〈표 3-1〉과 같다.¹¹⁹⁾

1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2011, 79쪽. 당시 신문 기사 내용의 개량서당 숫자도 추

〈표 3-1〉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추이

연도	서당 수	교원 수	학생 수			출전
			남	여	계	
1926	37				2,163	『동아』 1926.10.27.
1929	53	83	2,039	51	2,360	제주도편람
1930	52	77	1,982	27	2,009	전남사정지
1935	64	81			2,352	제주도세요람
1937	69	90			3,254	
1938	63	89	3,397	296	3,693	전남의教育と宗教 『동아』 1938.7.8.
1939	69	86	3,280	418	3,698	제주도세요람 『조선』 1939.7.28.

위 표에서 보듯이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개량서당 설립은 1939년까지는 대개 증가 추세였다. 특히 1937년과 39년에는 69개소의 개량서당이 있어서 가장 많았다. 1940년 이후에는 이들 개량서당이 국민학교로 발전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되었다. 1939년 무렵 공사립 소학교가 20여개였지만, 1944년 무렵 제주도의 국민학교는 52개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¹²⁰⁾ 1939년에서 1944년 사이에 30여 개의 국민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국민학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거개가 그 지역에서 운영되던 개량서당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국민학교가 급증한 결과 1945년 무렵 개량서당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 기록에 의하면 그 숫자가 30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¹²¹⁾ 그리고 19개 개량서당의 경우 그 폐지 원인을 조사한 기록도 있는데 그에 의하면 13개 개량서당이 보통학교 설립 혹은 합병과 관련하여 폐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개량서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토 내 다른 지역의 개량서당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비교가 쉽지 않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제주도만큼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이 설립된 지역은 극히 적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만큼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의 학교설립운동과 그 성과는 대단히 인상적인 것이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의 교육열과 교육기관 설립 운동이 성과를 거두면서 제주도의 청소년들 중에서 초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다른 지역보다 많게 됨은 당연하였다. 그래서 해방 이후 제주도의 초등학교 졸업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가하였다. 그리고 1939년의 경우 위 책에서는 서당 수가 59개로 되어 있지만 당시 신문기사에 69개소로 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120) 제주도특별자치교육청, 앞의 책, 192쪽.

121) 제주도특별자치교육청, 앞의 책, 80쪽.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군정청 여론국은 1947년 2월에 조사한 전국의 초등학교 이상 졸업생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대상은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에서 2개 군씩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북제주군 1개 군 등 모두 15개 군의 15세 이상 남자 중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졸업생 비율이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제주군의 초등학교 이상 졸업생 비율은 35.7%로 15개의 시군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창원으로 28.7%, 3위는 강릉으로 25.6%였다. 조사대상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12.1%에 불과하였다.

일제강점기 제주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성, 그리고 개량서당 설립 등을 통해 그러한 열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간 결실이 1947년 조사에서 북제주군의 초등학교 이상 졸업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초등 교육기관 설립 운동의 특징과 구좌면 사례

3-1. 초등 교육기관 설립의 특징

일제강점기 1920~30년대에 제주도에서 개량서당을 중심으로 한 초등교육기관 설립 운동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초등교육기관 설립 현황을 보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적 격차가 있었다. 제주도를 크게 북제주군 지역인 산북과 남제주군 지역인 산남으로 구분해서 보면 산남보다 산북 지역에서 초등교육기관 설립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산북 지역 내에서도 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같은 면에서도 해안 마을이나 중산간 마을이나에 따라서도 교육기관 설립 운동은 차이를 보였다. 같은 면내에서도 교육기관 설립이 활발하게 전개된 곳은 해안 마을이었다. 이에 비해서 중산간 마을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다만 중산간 마을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산남과 산북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같은 산북 지역에서도 면에 따라 또 면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산남과 산북 그리고 산북 내에서도 면별로 차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실상을 당시 신문 기사 건수를 통해서 살펴보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기사 중에서 제주도의 학교 설립과 관련된 것만 뽑아서 면별로 그 건수를 정리해 보았다. 세 신문의 기사는 해당 마을의 개량서당 혹은 보통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면내에서 이루어진 교육기관 설립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 세 신문에서 제주도 교육 관련 기사를 발췌하고 그것을 다시 면별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이 표를 통해서 면별 초등교육기관 설립 상황을 살펴보자.

〈표 3-2〉 매일·동아·조선 세 신문의 교육 관련 면별 기사 건수

면	건수	면	건수	면	건수	면	건수
구좌면	48	정의면	17	대정면	14	서귀면	4
제주면	31	조천면	17	안덕면	6	표선면	4
한림면	21	애월면	15	중문면	5	남원면	2

〈표 3-2〉를 보면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내 12개 면의 교육 관련 기사 건수는 그 격차가 컸다. 기사가 가장 많은 곳은 구좌면으로 48건이었다. 이어서 제주면이 31건, 한림면 21건으로 20건이 넘었다. 이어서 정의면과 조천면이 17건, 애월면이 15건, 대정면이 14건으로 10건 이상의 기사가 있었다. 반면 안덕면, 중문면, 서귀면, 표선면, 남원면은 모두 10건 이하 정확히는 6건 이하의 기사만 실렸다. 면별 기사 건수의 격차를 통해서 당시 교육 기관 설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면과 비교적 미약했던 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기사 건수에 의한 분석이지만, 실제로도 기사 건수에 조응하여 기사가 많은 면일수록 학교 설립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사 건수가 많은 6개면에는 산북의 다섯 면(제주면, 구좌면, 한림면, 조천면, 애월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산남에 속한 면의 경우 정의면과 대정면이 그나마 17건과 14건이고 나머지 4개면은 모두 6건 이하였다. 산남에서도 동쪽과 서쪽 끝인 정의면과 대정면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 있는 네 개 면의 학교 설립 운동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라고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면별 상황을 보면 면별로 격차가 적지 않았다.¹²²⁾

미군정기 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산북과 산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전 제주도 내 초등학교는 52개교로 조사된다. 이 52개교는 산북 지역에 32개교가, 산남 지역에 20개교가 있었다. 그리고 해방 직후인 1945년에 6개교가 새로 설립되었는데 모두 산북에 있었다. 다만 1946년에는 33개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중에 21개교가 산남에 있었고 산북은 12개교였다. 1947년에는 각각 2개교씩 세워졌다. 그래서 1948년 상황을 보면 산북은 52개교, 산남은 43개교였다. 두 지역 사이에 초등학교 숫자 차이가 크지 않다.¹²³⁾ 이를 보면 산북 지역에서는 1945년까지 36개교가 세워졌고 산남은 20개교였다. 산북 지역이 훨씬 앞서서 학교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48년이 되면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드는데, 산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학교 설립 속도가 늦었음을 의미한다.

면별로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전 연구에서는 초등 교육 기관 설립 과

122) 일제강점기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4.30이 일어났을 때 무장대를 배출한 주요한 지역이 대개 이 시기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곳과 겹치는 것 같아서 흥미롭다.

123) 제주도특별자치교육청, 앞의 책, 192쪽.

정에서 보이는 면별 격차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없는 것 같다. 또 당시에도 이는 주목의 대상이 아니어서인지 신문 기사 등에서도 관련된 언급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몇 가지 추론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우선 마을에 따라 교육열에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자제 교육에 관심과 열성이 높았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열성을 실현시키는 데는 경제적 인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다. 이 경제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이 활기를 띠었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열성에 비해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산북과 산남을 나누어 볼 때 경제적 격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격차가 존재해서 산북이 산남보다 비교적 잘 살았다고 하면 산북에서 교육기관 설립이 활발하게 전개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설립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면 교육기관은 설립될 수 없다.

다음으로 산북은 본토와 직접 대면하고 있어서 산남보다는 본토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당시까지만 해도 본토의 영향이란 바로 선진적인 문물의 유입을 의미하였으므로 아무래도 산북 사람들이 좀 더 선진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다. 이러한 문명에 대한 인식 및 자각의 차이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다.

같은 면내에서도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에 따라서 교육기관 설립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구좌면의 사례를 통해서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구좌면은 제주면을 제치고 학교 설립과 관련된 기사 건수가 가장 많았듯이 일제강점기 초등 교육기관 설립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또 그 만큼 큰 성과를 거둔 지역이었다. 구좌면의 교육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920년대 전반기에 이미 구좌면 내에 공사립 보통학교가 세 개나 설립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는 총독부가 점진적으로 1면1교제를 추진하던 시기였다. 제주도 내에서도 중문면과 안덕면에는 아직 보통학교가 설립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구좌면에는 3개의 공사립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그 세 개의 보통학교는 구좌공립보통학교(김녕리, 1923. 9. 1), 사립중앙보통학교(월정리·행원리, 1924. 5. 20), 사립하도보통학교(하도리, 1923. 4. 5)이다. 세 학교 모두 1923-24년 사이에 설립되었다. 아마 당시에 전국적으로도 1면 3교제를 성취한 곳은 구좌면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이처럼 구좌면의 교육열은 남다른 바가 있었다. 그런데 구좌면 내에서도 里별로, 마을별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 구좌면 내에는 14개의 리가 있었다. 동복리·동김녕리·서김녕리·덕천리·송당리·월정리·행원리·세화리·상도리·한동리·하도리·종달리·연평리·평대리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1920년대 개량서당 이상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지 못한 곳은 덕천리, 송당리, 상도리, 평대리 정도였다. 이 네 개의 리 가운데 평대리를 제외한 세 곳은 중산간 마을이었다. 물론 송당리 등지에도 1930년대가 되면 간이학교 등이 설립되기는 하지만,

구좌면 내에서 중산간 지역에서 교육기관 설립 운동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구좌면뿐 아니라 제주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해안 마을이 중산간 마을보다 교육기관 설립이 훨씬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개량서당은 마을 단위에서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이들은 마을의 유지 및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성회 등의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였다. 대개 마을 주민들은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따르는 분위기였고, 학교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참여하였다. 학교 설립과 관련된 당시 신문 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셋째,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큰 재원이 필요하였다. 하나는 개량서당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이었다. 당시 개량서당은 서장택에서 공부하는 전통적인 서당이 아니고, 교실과 운동장 등을 구비한 근대적인 학교였다. 따라서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 건물을 짓고 또 선생님을 초빙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시에 큰돈이 필요하였다. 마을에 따라서는 뜻있는 이들이 학교 부지를 희사하기도 하고, 유력자가 거금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몇 사람의 기부가 큰 도움이 되지만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충당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량서당 설립으로 재정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설립된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되었다. 교사 월급 등이 그것이다. 이 재원은 학비를 받아서 충당하기도 하였지만 학비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래서 마을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성회 등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개량서당을 설립하였지만 운영 경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에서 개량서당이 다수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마을에서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넷째는, 마을의 공동체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마을 유지들이 주도하여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할 때 다수의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재정적인 지원도 자담하였다. 이는 당시 제주도 마을이 나름 공동체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적 성격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할 텐데 이 부분 역시 4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2. 구좌면의 공·사립 보통학교 설립 운동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전국적으로 높았다. 제주도가 특별히 높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교육열을 실제 초등교육기관 설립으로 결실을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었다. 무엇보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개 개량서당의 형태였다. 사람들은 개량서당 수준에 만족할 수 없었다. 졸업하면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통학교로 승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보통학교 수는 총독부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설립이 쉽지 않았다. 어떤 지역에서는 두 마을이 유치 경쟁에 나서기도 하여 경쟁에서 이겨야 마을에 보통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당시 대다수의 보통학교는 4년제로 인가를 받았다. 4년제를 졸업하면 상급 학교로 바로 진학할 수 없었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6년제 학교 졸업증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제주도민은 보통학교를 설립한 다음에는 6년제 학교로 개편하기 위한 승급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이처럼 초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었지만 크게 보면 세 단계를 거쳐야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첫 단계는 개량서당을 설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개량서당을 기반으로 보통학교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4년제로 인가받은 보통학교를 6년제 보통학교로 승급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교육기관을 확대 발전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초등 교육기관이 완비되어 갔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총독부가 보통학교의 수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보통학교 유치 및 6년제 승급을 둘러싸고 마을 간에 경쟁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교를 설립하였던 사례를 구좌면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좌면은 1923-24년 무렵에 보통학교가 이미 1면 3개교를 달성할 정도였다. 각 보통학교의 설립 과정을 통해서 개량서당에서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보통학교로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4년제 보통학교를 6년제 보통학교 승급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923년에 총독부는 보통학교 증설 방침에 따라서 제주도에도 4개의 공립보통학교를 증설하기로 하였다. 이미 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있던 제주면(1907년), 정의면(1909년), 대정면(1911년), 서귀면(1920), 조천면(1921)은 제외되고 한림면, 애월면, 성산면, 구좌면의 4개 면에 각각 1개의 보통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각 면과 각 리에서는 보통학교 유치 및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구좌면을 제외한 세 개 면에서는 그 중심이 되는 한 마을에서만 설립을 신청하여서 별다른 문제 없이 보통학교의 위치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유독 구좌면에서는 두 마을에서 동시에 보통학교 설립을 희망하여 보통학교 유치를 둘러싸고 경쟁이 벌어졌다. 그 두 마을은 행원리와 월정리 연합과 김녕리였다. 김녕리는 동북리, 덕천리, 송당리의 지원을 받으면서 보통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 3천여 평과 현금 6천원을 모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 당국과 협상하였다. 학교 기지와

현금은 모두 김녕리에서 모집한 것이었다. 김녕리 주민들은 김녕리가 구좌면 내에서 인구 및 지세 상으로 중앙임을 내세웠다.¹²⁴⁾

김녕리뿐 아니라 월정리·행원리 연합도 기부금으로 1만원씩 모집하여 저축하고는 열심히 유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기본 조건이 비슷하였으므로 도 당국에서도 임의로 선정하기는 곤란하였다. 그래서 실지를 시찰한 후에 보통학교 설립 마을을 결정하고자 하여 담당자가 출장도 나왔다. 김녕리는 인구 중심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반면 행원리·월정리는 거리 상 중심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결국 당국도 실지 조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조건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으므로, 포기하게 되는 마을에 줄 수 있는 위로금 금액을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즉 두 지역의 유지를 초대하여 조사 현장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 두 곳 대표가 각각 비밀 회의를 하여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마을에 사립보통학교 설립 보조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입찰하였다. 개찰 결과 김녕리에서는 행원리·월정리가 포기하게 되면 그 대가로 4천6백원을 지출하겠다고 기재하였다. 반면 행원·월정리에서는 김녕리가 만약 보통학교 설립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3천3백원을 지출하겠다고 기재하였다. 결국 더 많은 보조금을 적어낸 김녕리가 보통학교 설립지로 결정되었다. 이 학교가 공립구좌보통학교이다. 대신 행원리·월정리에서는 4천6백원의 보조금과 자신들이 모집한 공립보통학교 기본금 1만원을 합하여 1만4천6백원을 기본금으로 삼아서 이듬해에 사립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¹²⁵⁾ 이 학교가 사립중앙보통학교이다.

이러한 유치 경쟁을 거치면서 1923년에 제주도에 4개의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한림면의 구우공립보통학교, 정의면의 성산공립보통학교, 애월면의 신우공립보통학교는 모두 5월 15일부로 인가가 났다. 그렇지만 구좌면의 경우 마을 간 경쟁으로 위 세 지역보다 보름 늦은 5월 30일에 인가가 났다.¹²⁶⁾

우여곡절 끝에 구좌면에 세 개의 보통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이때 설립된 구좌공립보통학교는 4년제였다. 다른 사립보통학교 2개교도 4년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면 상급학교에 바로 진학할 수 없었다. 6년제 보통학교에 편입하거나 해서 6년제 졸업 자격을 얻어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4년제 보통학교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일단 보통학교를 유치한 그들은 4년제를 6년제로 승급시키기 위한 운동을 또 전개하였다.

승급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192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승급을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경비 마련이었다. 구좌공립보통학교의 경우 당시에 어떤 방책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그런데 왕여환이란 이가 건축비로 5백 원이란 거액을 기부하였다.¹²⁷⁾ 그

124) 『동아일보』 1923. 1. 23.

125) 『조선일보』 1923. 5. 3.

126) 『조선일보』 1923. 6. 15. 당시 네 개 면에서 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한 경제적 기반은 현금 1만원씩과 기지 1천여 평이었다.

127) 『동아일보』 1927. 4. 22.

려나 당시 마을 안에서 기부금 모집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이 해에는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28년, 구좌보통학교 운동회 동네 어른들 등이 함께 참석하여 손자들의 재롱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만국기가 지금과 같이 펄럭이고 있다

〈그림 3-4〉 1928년 구좌보통학교 운동회

구좌공립보통학교가 6년제로 승급한 것은 몇 년 뒤인 1934년이였다. 이 해에 경비 4천원을 지방 주민이 부담하기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이다. 마을별 부담 상황을 보면 동김녕리와 서김녕리 그리고 동복리 일부에서 2천원을, 월정리 외 9개 리에서 2천원을 부담하는 방식이었다.¹²⁸⁾ 구좌보통학교는 보통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 마을에 4천 원이 넘는 금전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4천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어쨌든 1934년에는 4천원을 모금하여 6년제 보통학교로 승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공립보통학교 경쟁에서 탈락한 월정리·행원리는 사립중앙보통학교를 설립하였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 학교는 월정리에 위치하였다. 사립중앙보통학교가 개량서당에서부터 6년제 보통학교로 승급하기까지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행원리에서는 1913년 무렵 사립교육 기관(개량서당으로 짐작된다)이 있어서 구좌면 내에서도 모범으로 굴지하였다. 그런데 중간에 다소 고장이 있어서 교육열이 소침하였고 그

128) 『매일신보』 1934. 3. 15.

에 따라 청년 사회의 풍기가 문란해졌다고 한다. 이에 마을 유지들은 소년회를 발기하고 창립회를 개최하였다.¹²⁹⁾ 또 다른 기사에서는 1918년 무렵 홍순중의 발기로 구서당 제도를 개량하여 국정 교과서를 응용하여 교수 중이라고도 하였다.¹³⁰⁾ 1913년의 사립교육기관과 1918년에 홍순중이 개량한 교육기관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행원리에서는 1910년대부터 개량서당을 통한 근대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월정리의 경우에는 1920년에 개량서숙을 조직하고 선후책을 협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¹³¹⁾ 그리고 3년 후에 월정리에 있는 사립 영신학교에서 여름 방학을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¹³²⁾ 이 두 기사를 보면 1920년 무렵 월정리에서도 개량서당이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학교 이름은 영신학교였던 것 같다.

두 마을은 보통학교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행원리와 월정리에서는 1915-16년부터 이미 개량사숙, 즉 개량서당을 세워서 자체들을 교육하고 있었다고 한다.¹³³⁾ 그런데 1923년에 면내에 공립보통학교 1개소를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마을 사람들은 공립보통학교를 월정리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기지 1천여 평과 건축 비용으로 현금 1만원을 모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1만원을 불과 5~6일만에 모집했다는 사실이다. 마을 유지들은 모집한 자금을 은행에 저축해 두어서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위해서도 당국과 교섭하였다.¹³⁴⁾

앞서 보았듯이 두 마을이 합심하여 노력하였지만 공립보통학교를 월정리에 유치하는데 실패한다. 그렇지만 이미 보통학교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총독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공립보통학교 대신 사립학교 설립을 인가해 준 것 같다. 그래서 1924년 8월경에 사립중앙보통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고 10월 4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건축 비용만 7천원에 달할 정도로 두 마을 사람들은 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기꺼이 부담하였다.¹³⁵⁾ 이렇게 해서 월정리에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중앙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중앙보통학교는 4년제였다. 4년제 보통학교의 한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사립중앙보통학교를 세운 두 마을 주민들도 6년제 보통학교로 승급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역시 중요한 문제는 기본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지원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학교 승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재정적

129) 『매일신보』 1923. 10. 12.

130) 『매일신보』 1918. 3. 5.

131) 『매일신보』 1920. 4. 8.

132) 『조선일보』 1923. 8. 2.

133)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월정리에서는 1920년 무렵 행원리에서는 1913년 무렵 개량 서당이 별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34) 『조선일보』 1923. 3. 30.

135) 『매일신보』 1924. 10. 17.

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주민들의 기부 행위를 찬미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그 기사들을 통해서 저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신문 기사에 의하면 중앙보통학교는 마을 사람들의 열성으로 1만원을 모집하여 재단법인을 완성하고 이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런데 4년제임을 마을 사람들은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학년 연장 운동을 일으켰다. 중앙보통학교를 6년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립금 8천원이 있어야 했다. 이 8천원은 사립보통학교로 승격할 때 요구되었던 1만원과는 다른 것이었다. 5년이 채 안 되어 다시 8천원을 모금해야 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지않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당시 언론은 이를 소개하였다.

예컨대 1929년 3월에는 1백 원씩 기부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을의 하인이었다.¹³⁶⁾ 또 4월에는 강녕이란 이름의 여사가 4백 원, 고명서와 이원백이 각각 1백 원씩 기부하였다.¹³⁷⁾ 또 세화리 문필주의 처 강씨는 50세가 넘은 노인으로 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4백 원을 자진 기부하여 미담으로 소개되었다.¹³⁸⁾ 이러한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6월 무렵에는 4천 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미구에 인가 신청을 제출하려고 하였다.¹³⁹⁾

그리고 1930년 4월이 되면 8천원을 모두 모집하였다. 당시 중앙보통학교 후원회 간부는 김성률로 그의 주선으로 적립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개인적인 노력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가 출원을 하고 나서는 원만한 양해를 구하기 위해 대표로 홍순중과 교장 강세독이 도 당국에 지방 교육의 향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곧 허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¹⁴⁰⁾ 결국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1930년 4월 26일자로 인가가 되었다.¹⁴¹⁾

136) 『동아일보』 1929. 3. 19.

137) 『매일신보』 1929. 4. 13.

138) 『동아일보』 1929. 5. 8.

139) 『조선일보』 1929. 6. 24.

140) 『매일신보』 1930. 4. 23.

141) 『매일신보』 1930. 5. 10.



〈그림 3-5〉 1936년 중양보통학교 제6회 졸업 기념

1931년 12월에는 재단법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당국에 출원하였는데, 법인의 내용을 보면 기본금이 1만8천 원, 이사 5인 감사 2인의 체제였다.¹⁴²⁾ 여기서 1만8천 원을 사립보통학교로 승격할 때 마련한 적립금 1만원과 6년제로 승급할 때 마련한 기본금 8천 원을 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사립중양보통학교는 개량서당에서 출발해서, 4년제 보통학교 단계를 거쳐 1930년에 6년제 사립보통학교로 승급하였다. 이를 위해서 두 마을 사람들이 모집한 금액은 1만8천원이었다.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을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모았다. 두 마을의 경제력은 이 정도의 지원은 감당할 정도는 충분히 되었던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마을 한 마을 혹은 한두 마을 단위에서 이 정도의 액수를 모금할 수 있어야 마을 자체적으로 보통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좌면의 세 번째 보통학교인 하도사립보통학교 설립 과정을 살펴보자.

하도리에서도 1920년에는 개량서당이 존재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향곡 아동의 교육을 발전키 위하여 구식 서당제를 개량하고 보통학교의 과정을 응용하여 교수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늘어나는 경향이었다.¹⁴³⁾ 하도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교육기관의 완전한 기본을 성립하기 위하여 하도리 각종 어업 면허의 특수한 이익 권리를 양여한 사실이다.¹⁴⁴⁾ 하도리는 해안마을로 어업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

142) 『매일신보』 1931. 12. 31.

143) 『매일신보』 1920. 5. 20.

144) 『매일신보』 1922. 5. 24.

다.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재정 지원은 학교 운영을 훨씬 안정적이게 하였을 것이다.

하도리에서는 공립보통학교보다는 사립보통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하도리에서는 1918-19년부터 개량사숙을 설립하여 아동 교육에 열심이었다. 향학열이 비등하여 입학 지원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교실이 협착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를 본 유지 강공칠, 부원경, 김창학 등이 발기하여 사립보통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금전 혹은 토지, 물품을 기부하였고 그 액수가 1만3천원에 달했다. 당시 하도리는 3백 호에 불과한 촌락이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을 출연하여 보통학교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근방에서는 모범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¹⁴⁵⁾



1940년, 하도학교(하도초등학교의 전신) 음악부원 학생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1940년대부터 제주도내 몇몇 학교에 음악악기들이 들어와, 음악부가 생겼다.

〈그림 3-6〉 1940년 하도학교 음악부

마을 주민들의 열성적인 관심과 경제적 후원으로 1만원을 모집한 하도리에서는 사립보통학교를 설립하고자 노력하여 사립보통학교 설립 허가원을 출원하였고, 1923년 4월 5일에 허가를 받았다.¹⁴⁶⁾ 4월에 허가가 났지만 적당한 선생님을 모시지 못해서 개교를 하

145) 『조선일보』 1923. 3. 25.

146) 『조선일보』 1923. 5. 17.

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오사카 모모야마학교를 졸업한 현길홍과 경성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은행 오사카 지점에서 근무하던 서재완을 초빙하여 11월 1일에 개교할 수 있었다.¹⁴⁷⁾ 교사뿐 아니라 학교 건물도 문제가 되었다. 교사가 협착하여 지원 학생 전부를 수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리민 대회를 개최하여 교사 증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의연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도리 거주민은 地稅의 4배를 출연하여 증축하기로 하였다.¹⁴⁸⁾

이처럼 구좌면에서 해안 마을인 김녕리, 행월·월정리, 하도리에서 각각 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공립학교는 1면1교였으므로 김녕리에만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고 다른 두 곳은 사립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들 보통학교는 이전에 있었던 개량서당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개량서당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통학교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다. 당시 위 세 마을의 주민들은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재정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 초등 교육기관 설립의 원동력: 경제력과 마을공동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교육열이 높았고, 많은 마을에서 열의를 토대로 개량서당, 보통학교 등의 초등 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설립해 갔다. 1920년대 보통학교 설립이 가장 활발하였던 구좌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면별로 또 면내에서도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초등교육기관 설립은 본토의 여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있었다. 제주도에서 학교 설립이 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제강점기 제주도 사회의 여러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제주도민의 경제력과 마을의 공동체성에 주목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4-1.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의 경제력 성장

개량 서당은 물론 보통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었다. 수준 있는 교사를 초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교과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보다 가장 어려운 문제, 어쩌면 학교 설립의 핵심 관건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에서는 개량서당의 형태가 될지라도 근대적인 초등교육기관을 설립할

147) 『조선일보』 1923. 12. 14.

148) 『매일신보』 1930. 5. 6.

수 있었다. 반면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육기관 설립이 지연되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중산간 마을보다 해안마을에서 학교 설립이 보다 활기를 띠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대개 19세기까지는 제주도에 중산간 마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제 중심지는 해안 마을로 이동했다. 일주도로 개설과 축항으로 해안 마을의 교통이 중산간보다 훨씬 좋아졌다. 특히 기선의 등장으로 본토와 일본 등지를 왕래하는 것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해진 상황에서 해안 마을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산간 마을 사람들보다 그 혜택을 누리기 쉬웠다.

그리고 이 시기 해안 마을의 경제력 상승과 관련해서는 해녀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9세기 후반까지 해녀들은 사회적 멸시를 받았고 그들의 활동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개항 이후 본토 및 일본 등지에서 해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녀들은 물질을 통해서 이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당시는 일본 수산 자본이 한반도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해녀들은 그 수산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에서 최하위에 위치하였고, 가혹한 노동 조건 속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수입은 자신들 채취한 해산물 가격의 20-30% 정도였거나 혹은 그 이하였다. 이처럼 해녀들이 처한 조건은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였다. 그렇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해산물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해녀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이전에 비해 꽤 큰돈이었다.

일제강점기 해녀들의 1년 수입은 해마다 달랐고 또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해녀들의 수입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있어서 그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1924년 신문 기사에서는 전체 해녀를 1만 명 이상으로, 출가해녀는 약 4,5천 명으로 추산하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출가 해녀가 약 40만원, 전체 해녀 수입을 약 70만원으로 보았다.¹⁴⁹⁾ 1935년에는 5천여 명의 출가 해녀가 약 70만원의 수입을 얻고, 도내 해녀는 약 27만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추산하였다.¹⁵⁰⁾ 둘의 수입을 합하면 97만원으로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였다. 1936년과 1937년 신문기사 역시 출가 해녀가 각각 1년에 1백만원, 70만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도했다.¹⁵¹⁾ 해녀들의 정확한 수입을 알기는 어렵지만,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1920년대 전체 해녀 수입이 대략 70만원 내외 수준으로 짐작되면, 193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는 1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70만원과 1백만 원이란 수입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수입은 이전에는 접하기 쉽지 않았다.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얻은 수입은 해안 마을의 경제를 이전보다 여유롭게 하였다. 해안 마을이 해녀 물질에 의해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반면 중산간

149) 『매일신보』 1924. 12. 22.

150) 『조선일보』 1935. 8. 7.

151) 『매일신보』 1936. 9. 11.; 『조선일보』 1937. 4. 29.

마을은 해녀 물질만큼 특출난 수입원이 부재하였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차이가 학교 설립에도 영향을 끼쳐서 해안 마을이 중산간 마을보다 훨씬 학교 설립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제주도는 해녀 물질을 통한 수입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수입원을 갖고 있었다. 재일 제주인의 경제적 지원이 그것이다. 일제강점기 많은 제주도민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도일한 제주인의 숫자를 보면 1920년대는 2-3만명 수준이었고, 1930년대에는 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재일 제주인의 출신지는 제주도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었다.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바로 가는 배편이 제주도 전역을 일주하고 출발하였기에 교통편의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본 가는 배를 쉽게 탈 수 있는 곳은 부두가 있는 해안 마을이었던 만큼 중산간 마을 출신보다는 해안 마을 출신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일 제주인은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일본 내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일부를 고향 마을로 보냈다. 그 송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1920-30년대에 그 액수가 수십만 원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재일 제주인이 보낸 돈 역시 제주도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제주도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 사나 생활에 곤궁을 느끼는 일이 적다고 하며 현재 대판에 건너가 사는 제주도인 중에 1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삼백여 명이라는 다수에 달함은 최근 대판부청의 조사한 사실이라고 하여¹⁵²⁾ 재일 제주인의 경제활동의 일면을 전하고 있다.

당시 생필품의 절반 이상은 오사카에서 보내온 것이어서 제주도에는 일본적인 분위기가 꽤 강했던 것 같다. 1936년에 나비 채집을 위해서 한 달 간 제주도를 돌아다녔던 석주명은 그 인상을 1937년에 『제주도의 회상』이란 수필로 남겼다. 그 수필에서 그는 제주도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대판풍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제주도의 인상을 적고 있다. 또 육지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보된 느낌이 있다고 적고 소도시의 상점이나 이발소 등도 개성보다 낫다고 하였다.¹⁵³⁾

일제강점기 개성은 한국인 중심의 도시였고, 한국인 중심 도시 중에서는 가장 부유하다는 평판을 듣던 곳이다. 그리고 석주명은 당시 송고고보 교사로 재직 중이어서 개성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석주명이 1936년 무렵의 제주도를 개성과 비교하여 낫다고 표현하였다. 반드시 경제적 측면에 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제주도는 개성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52) 「평배한 교육열! 서당의 완비는 이 섬의 자랑」, 『조선일보』 1939. 7. 28.

153) 『지리학연구』 14권 5호, 1937.(일본언)(『제주도자료집』에 재수록).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를 꼽을 수 있다. 돈을 모으는 데는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주도민이 이전과 다른 수입원이 생겨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여윳돈을 유흥이나 사치로 소비한다면 학교 설립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데 다수의 제주도민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서 사치를 하지 않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의미 있는 교육에 적극 투자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신문 기사가 참고가 된다.

이곳 주민들은 예전부터 일년 이상 식량을 저축하여 두는 습관이 있다 하니 그 이유를 듣건대 다른 곳 육지와 사이에 교통이 불편하던 관계상 교통이 끊기고 도내에 흉년이 들 만일의 경우를 염려하여 그와 같이 일년 이상의 식량을 저축하여 오던 것이 습관이 되어 교통이 편리해진 지금에도 역시 식량을 저축하여 두고 있다. 내지 각 노도이장에서 벌어들인 현금도 금융기관에 예금을 아니 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의 생활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절약하고 있어서 ... 그와 같이 도민에게는 근로와 절약의 정신이 옛날부터 머리에 박혀 있다. ... 그와 같이 먹을 것을 잘 먹지 아니 하고 입을 옷을 잘 입지 아니 하며 절약하고 저축하는 그들에게도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성은 어느 지방에서도 볼 수 없을 만한 것이다. ... 아동들 수업료 납부 성적이 좋은 것은 물론 학기 초나 또는 가끔 학용품을 살 때에나 학교에 관한 .. 등은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성의를 보이므로 교육시키는 데도 무리가 없다 한다.¹⁵⁴⁾

위 인용문을 통해서 제주도민이 경제력의 향상 못지 않게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였고 교육에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태도가 있었기에 학교 설립이 활기를 띌 수 있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제주도는 이전과 달리 크게 두 계통에서 큰 수입이 있었다. 당연히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과 재일 제주인들이 보낸 돈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 해녀 수입과 재일 제주인이 보낸 돈을 합하면 1930년대에는 1백50만원 내외는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었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초등교육기관 설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이러한 경제력에 있었다.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자식들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다.

해안마을이 중산간 마을보다 상대적으로 학교 설립이 활발했던 이유는 경제력의 차이에 있었다. 해안 마을은 해녀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70만원에서 1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컸는데, 중산간 마을에는 이런 수입이 없었다. 아무래도 중산간 마을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어려웠고 이는 교육기관 설립이 늦어지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하도리는 300~500여 호에 불과한 마을이었지만 독자적으로 1만 원 이상의 재원을 단기

154) 「팽배한 교육열! 서당의 완비는 이 섬의 자랑」, 『조선일보』 1939. 7. 28.

간에 모을 수 있었다. 김녕리와 월정·행원리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마을들은 모두 해녀들의 물질 활동이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구좌면 더 좁게는 김녕리, 하도리, 월정·행원리에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보통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일제강점기 해녀와 재일 제주인의 활동으로 마을의 경제력, 마을 주민들의 경제력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중요했다.

4-2. 마을 공동체성과 주민의 협력

1930년대가 되면 해안마을뿐 아니라 중산간 마을에서도 초등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39년이 되면 그 숫자가 무려 89개나 되었다. 이는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마을에서는 대부분 초등기관을 설립했다는 의미가 된다. 호수가 100호 내외로 규모가 작은 마을이나, 경제력이 특히 부족한 마을 등에서는 독자적으로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웃한 마을과 공동으로 세우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월정리와 행원리의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된다.

이처럼 많은 마을에서 초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던 데는 앞서 논한 경제력이 기본 조건이지만, 실제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대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마을 주민 모두가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여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학교에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마을의 공동체성과 주민의 일치협력 문제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일이 몇몇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60% 이상의 리 단위 마을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했기에 89개교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다. 이들 마을은 학교를 운영할 경제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합심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89개의 마을이면 당시 167개 마을 중에서 절반 이상이다. 이는 제주도 마을의 경우 한두 마을이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되는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학교 설립에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하여 학교를 세우는 모습에서 당시까지 강하게 남아 있던 마을의 공동체성을 보게 된다. 제주도 다수의 마을에서 의례 마을 주민이 한 마음이 되어 학교를 세우고 또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그 마을의 경제력 못지않게 당시까지만 해도 마을들이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제주도 마을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기사에서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제주도 마을의 공동체성의 형성과 유지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제주도 마을은 빈부 격차가 심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서로 격의 없이 어울리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일본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감탄하는 바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전 특히 출륙금지령 시대에는 대다수가 가난하였지만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재산들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수산업과 목축업이 큰 기여를 하였다. 제주도는 농지가 매우 척박해서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게다가 벼농사도 거의 되지 않는다. 보리나 조 메밀 등을 농사지어서 그걸 먹고 살았다. 농업환경이 이처럼 불리했지만 해안 마을에서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해산물이 있었다. 그들은 그 해산물로 생계를 보충할 수 있었다. 중산간 마을에서는 목축업이 있었다. 최소 한두 마리의 소나 말이 있었고 부유한 집안은 30-40두의 소나 말이 있어서 생계를 지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당연히 마을 내에서도 빈부 격차는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그 격차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 장벽이 될 정도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로 격의 없이 어울리면서 지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경제적 격차였다. 다음의 신문기사를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농가에서 남자들은 단 몇 십원의 금전을 융통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도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빈곤한 가정끼리라도 수십원을 융통하기는 문제가 안 될 만큼 부녀들이 경제적 세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도민의 전반적 생활상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적다. 큰 지주도 없는 한편 극빈자도 적다. 갑부라 하는 재산가라야 이십만원 소유 정도이며 소작쟁의도 없는 동시에 절도 같은 범행도 볼 수 없는 평화향이다.¹⁵⁵⁾

‘유유상종’이라고 하듯이 경제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어울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비교적 균등한 제주도민의 경제력은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대지주 양반과 소작농 평민이 같이 사는 마을을 생각해 보자. 그런 마을에서는 양반과 평민이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 간에 넘을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면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 마을은 대부분 빈부 격차가 심하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데 익숙하였다.

사회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신분제가 철저하지 않아서 신분 차별도 심하지 않았다. 조선 시대 신분제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양반제도가 될 것이다. 한 마을에 관직에 진출하여 정치권력을 지니고 또 상당한 규모의 토지와 노비도 소유한 양반들이 있다면 그들이 일반 평민과 격의 없이 어울려 지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정치권력을 갖고 있고 또 상당한 재산까지 소유한 명실상부한 상층 양반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주도에도 ‘반촌’

155) 「팽배한 교육열! 서당의 완비는 이 섬의 자랑」, 『조선일보』 1939. 7. 28.

이라고 칭하는 중산간 마을들이 있었고 그곳 주민들은 자신들을 양반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스스로 양반이라고 칭하고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이었지 본토의 당당한 양반 가문과 같은 무게감을 갖지는 못했다. 그리고 양반이라고 자칭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격을 두어서 생활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제주도의 경우 양반 문화가 미약하였고 그런 만큼 마을 사람들이 신분적 차별로 인해 화합을 못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혼인으로 서로 친인척으로 얹혀 있는 사회적인 관계도 마을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켰다. 출륙 금지령은 2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 기간에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하고만 혼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 사람끼리 혼인한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꽤 큰 섬이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지역 단위로 혼인이 이루어졌다. 특히 당시는 지금보다 교통이 훨씬 불편하여서 먼 지역과는 교류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에는 모슬포 사람과 성산포 사람이 혼인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혼인은 면내에서 이웃한 마을 간에 이루어지거나 조금 멀리 떨어진 경우라 해도 이웃한 면 출신과 혼인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협소한 지역 내에서 혼인이 2백년 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다수의 사람들이 대개 친인척 관계로 얹히게 되었다. 이처럼 혼인 관계로 서로 얹혀 있는 관계도 마을 주민들 간의 공동체성을 강화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도 제주도 마을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한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지니고 있었다. 서로 간에 다른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알고 지냈다. 집성촌이면 한 마을 내에서 여러 가구가 친인척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친척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냈다. 제주도 사람들이 이웃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강한 마을 공동체성은 일제강점기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을 사람 중에 일부가 경제적인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면 마을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았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마을 주민들은 한마음이 되어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마을 주민들 간의 강한 공동체성, 서로 간에 신뢰와 믿음, 친밀감과 유대감 등이 학교 설립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5. 맺음말

일제강점기 제주도에는 다수의 초등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연구가 부족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주도에서 성과가 매우 좋았다. 다수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았다. 우선 산남과 산북을 비교했을 때 산북

지역이 산남보다 월등히 많은 교육시설을 세웠다. 같은 산북 지역이라고 해도 해안 마을이 중산간 마을보다 더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지역적 차이가 확연하였다. 다만 이런 차이는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초등 교육 선진 지역은 산북 해안마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개량서당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는데, 1910년대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개량서당은 3.1운동 이후 1920년대 여러 지역에서 설립되어서 1920년대 후반에 50여 개교에 이르렀고, 1939년에는 69개의 개량서당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이들 개량서당은 보통학교로 승격을 희망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보통학교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4년제 보통학교를 6년제로 승급시켰다. 이 모든 노력이 마을 주민들 전체의 참여로 가능하였다.

제주도에서 초등 교육기관 설립이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되었던 이유, 좁게는 산북의 해안 마을이 산남이나 산북 중산간 마을보다 활성화되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경제력의 차이가 중요하였던 것 같다. 당시는 학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총독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재정적 부담을 마을 단위에서 맡아야 했다.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학교 설립이 활발하였다. 다르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제주도 산북지역 해안 마을이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제주도에는 새롭게 두 개의 큰 경제적 수입원이 있었다. 하나는 해녀의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재일 제주인의 송금이었다. 제주의 해안 마을은 다른 지역보다 이 두 요소가 활발하여서 경제력이 비교적 우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 교육기관 설립을 주도해 갔던 것이다.

경제력 못지 않게 제주도 마을이 지닌 강고한 공동체성도 학교 설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개량서당은 거의 대부분 한 마을 혹은 한두 마을 단위로 세워졌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재정적인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마을 안에서 몇몇 집이 학교 설립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마을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여 한마음으로 개량서당을 설립하였다. 여기에는 마을의 공동체성에 기반한 마을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 정신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전개된 초등교육기관 설립은 그 자체로 제주도민의 교육열과 교육활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 의의는 교육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 설립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은 당시 제주도 사회가 갖고 있던 장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제주도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IV. 일제강점기 해녀노동의 재인식과 제주사회의 변화

1. 머리말

오랫동안 제주해녀는 직업으로써 존중받지 못하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다. 이는 해녀들 특유의 물질작업 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여전히 해녀들이 수행하는 어업을 공식적으로 ‘나잠어업(裸潛漁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벌거벗은 몸으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엄격한 유교적 인식과 관습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 신분적 예측까지 더해져 해녀라는 직업과 물질이라는 노동은 애당초 기피의 대상이었다.

해녀들 스스로 자기인식 또한 외부인들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물질이라는 해녀의 노동은 ‘배움이 적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혹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일’에 다름없었다. 해녀항쟁이 발생했던 1932년을 전후로 만들어진 노래 〈우도 해녀가〉에서도 스스로를 가엾고 비참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자기인식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에 물걸 우에 시달리던 이내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어린 아이 젖 주면서 저녁밥을 짓는다
하루 종일 하였으나 버는 것은 기막혀 살자하니 근심으로 잠도 안 오네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파도 세고 물걸 센 저바다를 건너서 기 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가요

배움없는 우리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은 착취기간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간다 가이없는 우리해녀 어디로 갈까¹⁵⁶⁾

156) 좌혜경, 권미선, 『제주해녀노래집-이여 이여 이여도사나』, 제주해녀박물관, 2010, 185-186쪽.

해녀들이 자신들의 주제가로 여기며 불러온 노래이니 만큼 노래의 가사는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해녀들 사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어져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래 1절에서는 가없고 비참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만, 2절과 3절에서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막막함과 그에 대한 결단으로 섬 밖으로 ‘출가물질’을 떠나는 의연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 4절에서는 자신들의 노동을 착취당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노래의 가사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의 혁우동맹 야학에서 교육받은 해녀 강관순이 만들었다고 하는 점을 보면 일정 정도 당대의 사회인식과 해녀들의 의식고취라는 목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해녀들이 당시에 불렀던 다른 노래, 그 중에서도 노동 현장을 오가며 불렀던 노동요에 표현된 ‘출가물질’은 위 〈우도 해녀가〉에서 애처롭게 표현된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는 주된 정서는 공유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물질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엿보이는 것이다.

때문은 돈 아니민 부모형제 피땀을 다 떨어두곡 흘리느냐
 울산강산 뒀이나 좋아 부모형제 이별을 헝곡 요산천을 오랏던고
 (중략)
 고향산천 버려두고 타향땅을 고향삼아 여기오란 말모른 돈아 돈아
 돈이 좋지 않으면은 어느 누굴 믿고서 여기왔나

위의 노래와 앞에서 본 〈우도 해녀가〉에 공통적으로 ‘울산’이 들어가는 것이 특이하다. 울산은 근대이후 제주해녀들이 출가물질을 위해 건너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지역이다. 두 노래에 공히 등장하는 울산은 고향을 떠나 물질노동을 해야했던 ‘타향’의 상징인 셈이다. 제주를 떠나 멀리 타향으로 출가물질을 가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였다.

요벳들아 혼디가게 저긔디랑 내몬저강 메역이랑 내몬저헝저
 울산강 돈벌어당 가지늦인 큰집 사곡 멩에느진 큰밧사곡 재미나게 살아보게
 (이 벳들아 함께 가자 저 가에는 내 먼저가서 미역일랑 내 먼저 하네
 울산가서 돈벌어다가 처마 늘린 큰집 사고 밧머리 늘어진 큰 밧사고 재미나게 살아보자)

이 노래는 한층 노골적으로 출가물질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물질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집과 땅으로 대표되는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겠다는 욕망과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해녀들은 근대 이전 오랜 기간 동안 천시되어온 자신들의 물질노동에서 비로소 경제적 지위상승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제주의 해녀들이 출가물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일종의 ‘이주노동’을 집단적으로 실행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머나먼 타향으로의 출가물질을 추동한

근본적 동력은 그것이 충분히 돈벌이가 된다는 물질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근대를 맞이하면서 제주의 해녀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어로활동의 생산물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충분한 교환가치를 가지면서 노동이 화폐로 전환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해녀들의 물질노동, 특히 출가물질을 바라보는 것은 한 측면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의 도래와 더불어 재평가가 이루어진 해녀들 물질노동의 가치가 제주 연안어장의 어업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출가물질이라는 것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당대의 사회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의 해녀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서 어떤 방식으로 분투하며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갔는지, 그리고 제주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해녀들의 물질노동과 출가물질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기존에도 존재한다. 박찬식은 「개항 이후(1876~1910) 일본어업의 제주도 진출」¹⁵⁷⁾에서 개항 이후 일제강점 이전까지 일본 어민들의 제주도 해역 진출이 일본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해녀를 비롯한 제주인들은 일본어민에 의한 어장침탈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어장 황폐화 등을 감당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주었다. 일제의 제주도 어장 침탈이 해녀들로 하여금 출가물질에 나서게 했던 원인 중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진관훈은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¹⁵⁸⁾에서 일제강점기 해녀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제주사회의 중심지역이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해녀 물질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해녀의 출가물질이 점차 사회변동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라는 뼈대 위에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해녀들의 삶’이라는 살을 덧붙이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해녀수의 증가추세, 해녀들이 벌어들인 경제적 수익의 규모를 산출하고 출가물질로 대표되는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들 활동 양상을 당시에 간행된 신문기사들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신문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한계가 존재한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것이 여전히 언론의 속성인지라 대중의 주목을 끌만한 선정적 사건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태도 역시 당시의 언론보도에도 분명히 존재했다. 더구나 제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 취재를 통한 기사의 경우에도 미국취향으로 접근하는 낭만적인 기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선총독부와 하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홍보성 관급기사가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구체적 수치에 있어서는 중구난방인 경우가 적지 않다.

157) 박찬식, 「개항 이후(1876~1910)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 『역사와 경계』 68, 부산경남사학회, 2008, 147~176쪽.

158) 진관훈, 「일제하 濟州島 경제와 海女勞動에 관한 연구」, 『한국학』 27(1), 한국학 중앙연구원, 2004, 149~178쪽.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해녀들의 삶의 현장과 사회상을 전해주는 1차 자료로서 당시에 간행된 신문들이 가지는 위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당시 신문들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기사의 행간에 숨어있는 사회적, 역사적인 맥락을 찾아가 보고자 한다.

2. 근대 경제체제의 유입과 해녀 노동가치의 변화

2-1. 근대의 도래와 수산물 상품성의 발견

봉건적 왕조시대의 상당 기간 동안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은 공납과 부역의 대상물이었고 상품으로써의 거래는 제한적이었다. 생산물이 많아진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봉건적 의무의 부담만 커질 뿐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이익의 증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구나 1629년부터 1823년까지 약 2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제주를 육지로부터 고립시킨 이른바 ‘출륙금지령’이 실시되어온 터라 제주는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차단되면서 자급자족에 가까운 경제체제를 유지해야만 했다.

조선시대의 전반에 걸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자급자족 경제의 양상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물류와 운송은 조세와 공납의 운반수단으로써의 역할이 강조되었을 뿐이고 시장의 발달은 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나마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근대적 상품경제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출륙금지령에 의해 사실상 봉쇄상태에 머물렀던 제주사회에는 그러한 변화의 영향이 매우 미미했다. 제주사회가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으로 수산물과 목축이 존재했고 부분적으로는 육지와와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기도 했지만 제주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본격적인 근대가 도래하면서 급변하게 된다. 차츰 봉건적 생산질서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대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 공급과 수요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는 현상이 제주해녀의 생산물에도 적용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제주해녀의 생산물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한 것은 내부적 사회발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메이지유신 이후에 급속하게 근대화를 진행해 온 일본을 통해서였다.

근대적 선박기술과 어로방식을 도입하여 수산업을 확장시켜온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연근해, 특히 제주 해안 일대는 무주공산에 가까운 지경이었다. 근대를 전후로 제주의 수산업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이 어떠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비록 일제에 의한 한반도 강점이 20년 가까이 지난 1929년에 간행된 신문기사임에도 여전히 제주인들의 수산업 역량이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시모노세키(下関)에 근거가 있는 트롤선 70척은 제주도의 서북방에서 황해, 동지나해를 무대로 해서 눈부시게 활약을 계속하고 있다. 상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지인(일본 중국인)합동의 트롤 회사의 소유선 20척, 대만 동포가 갖고 있는 4척의 트롤선에서 어느 것이나 다 제주의 서방부를 유일한 어장으로 하고 있다. …(중략)… 제주도 인사는 자신의 주머니 속의 돈을 소매치기에게 털리면서도 빙그레하고 미소 짓고 하등의 자극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듯이 약간의 미역과 전복소리를 채취하는 해녀를 두고 있는 것을 이득이라고 하고 있는 사회에서 선전하고 있다. 재보의 산에 살면서 보물을 캐려고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그 보물을 훔쳐도 태연히 들어와 앉는다.¹⁵⁹⁾

주변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수시로 찾아와 막대한 어획고를 올리는 생산성 높은 어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해녀의 물질노동을 통한 수익확보에 안주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제주해역, 그리고 한반도 해역은 오랫동안 근대적 수산업의 손길이 닿지 않은 황금어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쿠로시오해류로 대표되는 남쪽으로부터의 난류와 쿠릴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한반도 주변의 해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어장이었다. 하지만 개항 이전 조선의 사회는 적극적으로 수산업의 진흥을 추진하지 못했다. 근대적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선박의 건조와 이에 동반한 어로장비 확보를 위한 자본의 축적, 수확물에 대한 시장수요의 존재와 물류유통을 위한 도로 및 운송수단 등의 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근대이전의 조선사회는 이러한 것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통영지역과 같이 다도해 섬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어족자원이 풍부한 일부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의 자본을 투입하여 정치망을 설치하는 등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이러한 어장의 상당수는 개인들의 이익추구 활동이 아닌 왕실과 관청의 수입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능했을 뿐이었다.

원양어업이 가능한 선박과 근대화된 어로기술로 무장한 일본어민의 한반도를 향한 어장 침투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고, 제주어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근대이전에도 일본어민들은 풍요로운 어장을 찾아 한반도 남부는 물론이고 제주 연안 근해를 찾아와 어로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어민들의 어로활동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 이전에는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불법조업이었다. 하지만 일본 제국 주위의 침탈은 국제정세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토대 위에서 전방위적이면서도 시기별로 세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시기에 일본과 조선(혹은

159) 『木浦新報』, 1929년 6월 12일.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약 내지는 협정 중에서 수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일본어민들이 불법활동을 마다않고 조선 영내에서 어로활동을 해나간 것은 각종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해도 좋을 만큼 조선의 어장이 충분한 생산성과 이익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쇄국정책에 기반해서 외국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이른바 ‘공도정책(空島政策)’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던 한반도 주변 섬 지역의 거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육지로 정착시켜온 조선에서는 수산업이 정체상태에 머물러있었다. 그와 달리 일본은 일찍부터 네덜란드를 필두로 외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근대적 어업을 발달시켜왔다.

〈표 4-1〉 일본과 체결한 수산업관련 협정

명칭	체결시기	수산업관련 주요조항	비고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규)	1876년 2월27일	- 부산, 인천, 원산 3개항 개항 - 일본에 연안축랑권 인정	
조일통상장정	1883년 7월25일	전라, 경상, 강원, 함경의 4도 연안어업권을 통어형태로 인정	일본어민 어로 합법화
조일통어장정	1889년 11월12일	- 어업면허세 납부시 중단 (어업면허증)발급 - 일본어민만 영사재판권 인정	- 제주도 통어는 연기 1900년 경기도 개방 1904년 충청, 황해, 평안 개방
한일어업협정	1908년 10월31일	- 조일통어장정 폐기 (어업면허제도 폐지) - 연안,항만,하천으로 어업권확대	- 일본어민 이민촉진 1909년 〈어업법〉 제정

하지만 개항과 더불어 일본 어민들에게 채워졌던 조선 영내 어업활동의 족쇄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기 시작했다. 일본어민들의 조선 진출 초기에는 일본 지역에서 출항하여 조업 활동 이후에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한반도내의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정착하여 어업의 근거지로 삼고 활동했다. 이미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본지역의 근대적 어업이 성행함에 따라 어장황폐화의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대적 어로활동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조선의 영해는 말 그대로 ‘황금어장’이었다. 일본 내 영세어민들의 조선 이주가 총독부의 후원아래 이루어지던 것과 별개로 일정한 자본력을 갖춘 어업자본들 역시 속속 한반도에 들어와서 어업회사를 설립하면서 수익창출에 나섰다. 제주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일본 어민들의 유입이 시작되었는데, 비교적 제주사람들과 부딪힐 우려가 적은 성산

포, 서귀포 등이 주된 정착지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일본어민들이 정당한 어업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제주사람들이 맞닥뜨린 일본의 어민들은 '잠수기어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제주지역에서 처음 잠수기선 출현이 보고된 것은 강화도조약의 체결 직후라고 할 수 있는 1879년의 일이다. 나가사키(長崎)의 어부 요시무라(吉村興三郎)가 비양도(飛揚島)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이 목격된 것이다. 제주도 연안으로 전복과 해삼을 주로 채취하기 위해 도입된 이들 잠수기선은 제주바다 밑바닥까지 훑어서 전복과 해삼을 매우 약탈적으로 채취해 갔다. 첫 어로활동 이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미 상당수의 잠수기선이 제주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고, 전복의 경우에는 어족자원 고갈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당시 일본어민들은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익 추구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해안가 마을에 상륙하여 주민을 살상하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등 끊임없이 불안과 분쟁의 상황을 조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은 일본어민들의 제주어장에 대한 불법 어로활동에 대해 제주목사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고, 이는 1889년 <조일통어장정>이 체결될 당시 부속도서를 제외한 제주도는 일본어민의 통어에서 제외시키는 유예조항 설치의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때 불법조업을 일삼던 일본어민들은 합법적으로 제주어장 진출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서 초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제주어장으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앞선 장비와 기술을 가진 일본어민들의 어획고는 제주어민들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다. 1903년 당시 제주 어장에서의 일본어민의 어획고는 전복 6만 7천5백근, 돔 6만근, 상어 7만5천근, 해삼 8만6천4백근 등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복 5만원, 상어 9만원, 돔 1만8천원, 해삼 5만1천원에 이를 정도였다.¹⁶⁰⁾ 제주의 어민들과 해녀들로서는 일본어민들이 제주어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상대적으로 열악한 선박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주어민들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주의 어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어업활동의 활로를 모색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멸치어업이었다. 일정 규모의 자본축적이 난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해안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종의 공동투자조합¹⁶¹⁾을 만들어서 멸치를 대상으로 삼아 집단적인 어로활동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제주도 전역의 마을어장에서 펼쳐진 멸치어업은 매년 300만근 내외의 수확을 올릴 수 있었다. 1908년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체 상품은 금액으로 보면 47만3천10원인데, 이 중에서 수산물은 31만7천10원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멸치는 전체

160) 靑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1905, 50쪽.

161) 이러한 공동투자조합은 명칭을 '망대(網代)'라 하였다. 원래 '망대'는 그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차츰 그물을 공유하는 어장과 협동조직으로 용어의 사용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수익이 7만3천40원으로 수산물 생산액 중 약 23%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²⁾ 잡아들이는 멸치는 평지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인근의 후쿠오카나 시모노세키 등으로 옮겨져 일본 전역의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그런데 1908년 통계에서 드러난 수산물 어획고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멸치의 비중이 23%로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보다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훨씬 컸다는 점이다. 같은 통계에서 전복이 16만원, 감태가 3만5천원, 우뚝가사리가 1만2천원, 미역이 5천원, 합계 21만2천원으로 전체 수산물 수익 총액 31만7천10원의 약 66%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주로 남성들로 구성된 멸치잡이 어업에 비해 해녀들의 어획고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초기에 있어서 제주 수산업이 일본어민들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상업적 수산업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 존재해야 했고, 이를 기반으로 근대화된 기계식 설비를 갖춘 선박은 물론이고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등이 골고루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통적 어로활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생산성 역시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과로 해녀들의 물질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 수익 규모의 차이는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이후에도 제주사회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섬의 1년간 조선인 수산물 어획고는 22만5천270원에 달하는데 부녀자가 채취하는 패류 조류의 어획고는 1년에 13만5천470원에 달한다. 남자는 8만9천800원이라는 통계로 보아도 제주도의 해녀가 얼마나 남자보다도 활동력이 이기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¹⁶³⁾

제주사회에서 해녀의 물질노동이 남성의 어업활동보다 생산액이 많았던 것은 해녀들의 주요 생산품목이 일제강점기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 유통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환금성이 컸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더군다나 전근대적인 어로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각종 사고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남성들과 달리 해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마을 인근 어장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여 생산활동을 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근대를 전후로 일본어민들은 앞다투어 제주해역을 찾아 앞선 어로기술을 바탕으로 약탈적인 방식까지 불사하면서 막대한 어획고를 올리고 수익을 얻는 자본주의적 어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성노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주의 연근해 어로활동은 경쟁력을 거의 갖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162)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조선수산지』 3권, 1909, 396-399쪽.

163) 『부산일보』, 1916년 7월 21일.

일본 어민들에 의한 제주 연안에서의 상업적 어업활동은 제주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수산업 생산물의 상품성에 대해 각성하게 만드는 효과를 제공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타자, 즉 일본어민의 고수의 창출을 지켜보면서 제주의 어민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당장 이에 맞설 자본과 기술의 부족은 오래전부터 제주사회에 존재해온 해녀들의 노동과 해녀노동 생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

타자의 행동을 통한 주체의 각성을 통해 해녀들 스스로 자신들의 물질노동이 근대의 도래와 더불어 변화한 시대상황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더 높은 상품가치를 갖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노동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해녀가 되도록 하면서 물질노동에 나설 유인으로 작동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제주의 여성들, 특히 해녀들은 고유의 생존본능과 생활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수행하는 물질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2-2. 해녀 노동가치 상승에 따른 해녀수 증가

근대이전 제주사회에서 오랫동안 해녀, 즉 잠녀는 ‘잠녀안’에 기록되어 관청에 예속된 상태로 미역이나 전복을 공급하는 부역의 의무를 가진 존재였다.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 특수한 직역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고, 제주 해안마을의 여성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기피 대상이었던 일종의 천역(賤役)으로 간주되었다. 1746년(영조 22년)에 시작된 잠녀안의 혁파가 완결되는 1849년(헌종 1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봉건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해녀 숫자의 자연적 증가를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이었다. 조선후기 제주에 얼마나 많은 해녀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보다 앞선 1695년(숙종 21년) 제주목사로 있던 이익태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관청의 공식적 관리대상으로 해녀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상(進上)하는 추인복(搥引鰓·주:말린 전복)을 전복잡는 잠녀(潛女·주:해녀) 90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왔는데, 늙고 병들어 거의가 담당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역 캐는 잠녀가 많게는 800명에 이르는데...¹⁶⁴⁾

이를 보면 많아야 약 1,000명 정도의 해녀가 제주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시 해녀의 숫자는 공납과 부역이라는 봉건적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필요와 더불어 지방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는 정도의 이 해녀의 숫자는 신분적 차별에 따른 물질 기피현상과 결합되어서 근대가 도래하기

164) 이익태,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85쪽.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제가 한반도 강점 직후의 신문을 보면 제주 해안마을 ‘부녀자의 대부분은 해녀’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제주도의 여자 활동력은 매우 왕성하여 부녀자의 대부분은 해녀가 되어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개량조개 등의 조개류와 미역, 천초, 감태, 청각채, 비료조 등의 조류를 채취하여 자가의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판매하여 섬의 경제계에 공헌하는 것도 크다.¹⁶⁵⁾

당시에 이미 제주지역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거부감 없이 자발적으로 해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해녀 숫자의 확대 양상은 같은 시기에 발간된 다른 신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조선인 채포자는 부녀자에 한해서 남자는 절대 어업 종사하지 않고 전도 연안 수백 개의 어촌포에 거주하는 부녀자는 거의 모두 잠수 기술을 갖고 있으며 봄 여름 가을은 물론 겨울이라 해도 바다 속에서 활약하는 모양...¹⁶⁶⁾

이는 제주의 해녀들이 생산한 어패류와 해조류의 수산물이 근대 이후에 도입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충분한 교환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주의 여성들로서는 해녀 물질노동을 통한 생산물이 곧바로 화폐로 전환되어 구매력 확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놀라운 장면을 관찰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해녀가 되어 물질노동에 참여할 이유가 생겨난 것이다. 위의 두 신문기사와 같은 해에 간행된 1916년 <매일신보>를 보면 제주에 머무르지 않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육지로 출가물질을 떠나는 제주해녀의 숫자가 2천 5백명 가까이 된다고 적고 있다.

165) 『부산일보』, 1916년 7월 21일.

166) 『부산일보』, 1916년 7월 20일.



〈그림 4-1〉 1920~1930년대 제주도해녀 (무라야마 지준 사진)¹⁶⁷⁾

... 이 해녀들은 일면 훈절초를 볶지 아니 하고 각기 마음대로 제초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고로 그 인원수를 통계할수는 업는 바이나 최근 이삼년동안의 평균수로 말하면 전라남도 각 섬에 삼백명 경상남도 방면에 천칠백명 기타에 오백명 합계 이천오백명이라 하면 별로 틀림이 업슬듯 하더라 이왕에 엇더한 도청에서 도사헌바에 의한즉 제주도의 해녀가 약 육천인이라 하였스나 이는 해녀들이 이어촌저어촌으로 도라단이며 버리하는 것을 각 어촌계에서 보고되로 계산하였스즉 필경 그 수효가 중복되 꺾뉘인 듯 하더라.¹⁶⁸⁾

이 무렵 제주도 전체 해녀의 규모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출가물질에 나서지 않는 해녀의 숫자가 출가물질에 나서는 숫자보다 적지 않았을 가정을 기반으로 추정한다면 적어도 제주도 전체 해녀의 숫자를 5천명 내외로 산정할 수 있다.¹⁶⁹⁾ 당시 제주의

167) 무라야마 지준, 『조선인의 생로병사:1920~1930년대:무라야마 지준 사진집』, 신아출판사, 2014, 82쪽.

168) 『매일신보』, 1916년 8월 8일.

169)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추산한 해녀의 숫자 역시 이러한 추정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10년에 4,950명 정도의 해녀가 있었다는 김수희의 「일제시대 제주해녀의 해조류 채취와 입어」, 『제주해녀,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 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2006년)의 자료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규모가 채 20만명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5천명이라는 제주해녀 숫자는 제주 지역 전체 여성 중에서 해녀의 비중이 많아야 5%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조선 다도해의 3대도 연안 60리 여촌의 수백 삼십여 개 마을로서 인구 18만8천922명이다. 그 중에서 남자가 9만3천331명, 여자가 9만5천591명, 즉 남자보다 여자가 2천2백여 명 많다.¹⁷⁰⁾

하지만 이러한 해녀의 숫자는 불과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1920년에 이르게 되면 만명 가깝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1920년 <동아일보> 기사이다.

그런데 이와 가치 매년에 바다에 나가서 해조류와 어류는 잡는 여자의 수효는 만여명에 달하고 그 중에 매년 사월부터 구월까지 부산(釜山) 울산(蔚山) 등디에 나아가서 활동을 하는 여자의 수효가 사천명이상이나 되며....¹⁷¹⁾

1920년에 이르러 제주해녀의 숫자가 만명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제주 여성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거의 2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인구가 획기적인 증가없이 대체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급격한 해녀 숫자의 증가는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¹⁷²⁾ 해녀의 숫자가 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적지 않은 제주 해안지역 마을의 여성들이 물질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의 여성인구 중에서 노동활동이 힘든 고령층과 저연령층을 제외한 생산가능 연령대의 여성만을 놓고 본다면¹⁷³⁾ 실제적으로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물질에 종사하는 해녀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해녀숫자의 증가양상은 1936년경에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섬내의 해녀는 그 수효가 실로 일(一)만오천여명을 넘는다. 그들은 제주도 연에서는 작업을 할뿐아니라 조선안의 각연해는 말한것도 업고 멀리는 내지로 또는 지나(支那)로도 진출하여 독특한 기술과 건강한 체력으로 활약을 하고 잇서 그수매년 오(五)천여명에 이

170) 『부산일보』, 1916년 7월 21일.

171)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

172) 『동아일보』, 1930년 12월 19일. “제주도는 이번의 국세조사결과 인구 이십(二十)만 팔(八)천삼(三)백 이십오(二十五)인중 남자는 구(九)만 육(六)천 이(二)백 십사(十四)에 불과한데 여자는 십일(十一)만 이(二)천 일(一)백 십일(十一)인으로다 넘치기가 일(一)만 오(五)천 팔(八)백 구십(九十)칠(七)이다”.

173) 『매일신보』, 1924년 12월 22일 기사를 보면, “제주도 연안부락에 생(生)한 여아는 오육세경부터 해변천수에 입(入)하여 수족을 동(動)하여 수영의 연습을 하여 팔, 구세가 되면 상당한 거리까지 수영하며 십세이상이 되면 천소(淺所)의 조(藻)며 개(介)를 채(採)하며 십사세가 되면 능히 일인사(一人事)를 하고 이십이상 사십오육세까지가 활동이 성흔대 차후로는 점점 기술이 쇠하여 대개 육십세이상이 되면 해녀의 작업을 지(止)흔 제주도해녀는 기하의 수가 있는지 판연치 못하나 하여간 일만인 이상 재(在)함은 확실하다”고 적고 있다. 대략 14세부터 60세 정도를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해녀의 생산가능 연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르는 현상이다.¹⁷⁴⁾

각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제주의 여성인구에 비해 해녀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더불어 제주 해녀들의 강인한 생활력과 생산활동에 대한 찬사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각각의 기사마다 제시하는 해녀의 숫자가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조차도 제각각이기 일쑤라는 점이다. 그러한 불일치의 배경에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해녀들의 대략적인 숫자는 1920년에 해녀조합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조합에 가입한 해녀의 숫자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 이전까지는 굳이 행정 당국에서도 해녀들의 전체적 인원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하다. 제주해녀가 제주도내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어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실을 떠올리면 매우 의외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표 4-2〉는 신문지상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여지는 수치의 모호함은 통계 작성의 곤란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녀들은 기본적으로 물질뿐 아니라 농업과 가사 노동도 병행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해녀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어민이기도 하고 가정주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해녀들 스스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자신들의 노동활동을 통한 ‘벌이’에 대해 적극적인 공개를 꺼려왔다는 점도 이러한 해녀 숫자와 수익의 모호함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표 4-2〉 일제강점기 신문에 나타난 해녀수 및 수익의 양상

번호	발행 년월일	해녀수	해당 지역	수익	출처
1	1916.07.23	2천5백명	출가해녀		부산일보
		최근 3년간 출가자 평균수: 전남 다도해 방면 3백명, 경남 다도해 방면 1천7백명, 그 외 5백명			
2	1916.08.03		도내해녀	1년 13만5천470원	매일신보
		1년 해산물 22만5천270원 중 남자 8만9천8백원			
3	1916.08.06	2천명	출가해녀		매일신보
4	1916.08.08	2천5백명	출가해녀	한사람 평균 33원	매일신보
		최근 2,3년간 평균수: 전남 각 섬 3백명, 경남 방면 1천7백명, 기타 5백명			
5	1916.08.10		출가해녀	반년동안 1인 9원, 해마다 5~9만원	매일신보

174) 『매일신보』, 1936년 9월 11일.

번호	발행 년월일	해녀수	해당 지역	수익	출처
6	1918.05.27	1천2,3백명	출가해녀		부산일보
7	1919.03.11	7,8백~ 1천4,5백명	울산		매일신보
8	1919.04.08	5,6천명	전라경남각도		매일신보
9	1919.04.18	약 2천5백명	부산 울산 동래		매일신보
		1백50명	거제도		
		700명	강원도 원산방면		
		작년 1인 평균 3백원 내외, 본년 동래 부산 1명에 1원20전, 울산은 3천4백91원 60전의 예산			
10	1920.02.17	1만	제주도 해녀		매일신보
		인구 22만중. 최근 4,5년간 출가해녀 약 6,7백명. 작년은 1천6,7백명			
11	1920.03.06	1천6백명	울산		매일신보
12	1920.04.22	1만여명	전체해녀	1년에 수백만원	동아일보
		4천명이상	출가해녀		
		1명 평균 3백원 생산, 4천명 총수입 1백20만원			
13	1923.05.14	5백여명	기장군		조선일보
14	1924.12.22	1만명 이상	제주도 해녀		매일신보
		4,5천명	출가해녀	약 40만원	
		수산물 대략 1만원 이상. 합계 70만원 이상			
15	1926.08.13	약 1백명	원산근해	1인 4,5원	매일신보
16	1927.05.06	3천	경남도		조선일보
17	1927.08.04	1만명 이상	제주도		매일신보
		2천명 가량	출가해녀	1인 2원이상	
		일일 2원이상, 보통 7,80전 가량, 제주도내 30만원 이상			
18	1931.04.05	1천720명	출가해녀		매일신보
		경남 동해안 5백명, 입어로 (부산3원, 울산6원45전 동래5원25전)			
19	1931.08.25	8천	제주도		조선일보
20	1931.08.27	8천여명	제주도		매일신보
21	1932.01.27	5백여명	일본 대마도		매일신보
22	1932.03.24	1만명 이상	제주도		매일신보
		약 2천명	경남도해안		

번호	발행 년월일	해녀수	해당 지역	수익	출처
23	1932.05.12	약 1천1백명	부산, 동래, 울산		부산일보
	1927년	1,712명		24만3천원	
	1928년	1,508명		21만2천원	
	1929년	1,570명		17만3천원	
	1930년	1,468명		12만3천원	
	1931년	1,282명		9만2천원	부산일보
해마다 입어자 감소 경향. 해조액 격감으로 점차 타도로 입어하는 경향 때문					
24	1932.05.13	2백명	부산		조선일보
		약 5백30명	동래		
		6백92명	울산		
25	1935.08.06	2만명	제주도	1백원~3백원	조선일보
		여자의 약 20%는 해녀. 제주도해녀어업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해녀의 수 도내 1만2천여명(16세 이상 50세 미만)+ 15세이하 후보생급+50세이상 예비역급			
26	1935.08.07	5천여명	출가해녀	한해 70만원	조선일보
		*70만원÷5천명=1인당 140원			
			도내해녀	한해 27만원	
		후보생급 & 예비역급			
27	1936.09.11	1만5천여명	제주도		매일신보
		5천여명	출가해녀	1년에 1백만원	
28	1937.04.29	5천여명	출가해녀	총수입 70만원	조선일보
		1만5천명	도내해녀		
29	1937.08.31	5만	대판등지 출가		동아일보
30	1942.07.22		출가해녀	한철 1~4백원	매일신보
		미역 9단 5,60원			
31	1943.04.19	1천여명	일본		매일신보

그런데 출가물질을 통해 거둬들인 1인당 평균수익을 보면 33원(표 4-2)의 4번 항목, 1916년 8월 8일)에서부터 300원 내외(표 4-2)의 9번 항목, 1919년 4월 18일)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략 140원(표 4-2)의 26번 항목, 1935년 8월 7일)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 중간값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1910년대 광산 노동자(운산 금광)의 임금이 평균 82전으로, 일본인 노동자는 2원

45전 이었고, 성인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1원51전이었던 점¹⁷⁵⁾이나 1925년 무렵 상대적으로 고임금 업종으로 여겨지던 인천 성냥공장의 남성 근로자의 임금 1원 20전¹⁷⁶⁾과 비교해보면 해녀들 출가물질의 수익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질노동의 수익성이야말로 해녀의 수가 늘어나게 된 일차적 요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이 근대적 상품경제 체제에서 적지 않은 가치를 갖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제에 의한 한반도 강점이 자본주의의 유입과 동시에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의 일본은 급속하게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안정적인 식재료와 산업원료의 공급원을 필요로 하던 외부적 시장요인과 맞물리면서 제주 해녀의 물질노동은 매우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그러한 결과, 제주지역 여성 스스로 자신들이 천시해온 물질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해안 지역의 여성들로 하여금 해녀가 되어 바닷물에 들어가도록 추동했던 것이다.

반면에 제주지역 농업생산물의 경우에는 요즘과 달리 운송시설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 제주도내에서 소비될 뿐 외부와의 상업적 유통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농업생산력에 있어서 제한이 적지 않았던 제주사회에서는 해녀의 노동이 거의 유일한 경제적 활로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해녀의 물질노동은 자본과 기술로 무장한 일본어민들의 어로활동과 비교해서도 많은 부분 배타적 경쟁우위에 있었다.

해녀 물질노동의 가치가 상승한 배경에는 한반도에서 산출되는 저렴한 수산물에 대한 일본 내의 수요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점기 당시 일본은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식재료 및 산업원료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 시장의 존재, 무역상과 객주, 시중꾼으로 이어지는 중간착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해녀들로서는 어업활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받았기 때문에 출가물질은 충분히 매력적인 노동활동이었다.

문제는 제주해녀의 수적 증가와는 무관하게 제주에서 물질노동이 가능한 영역은 섬이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수적으로 증가한 해녀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마을어장의 규모는 크지 않았고, 그렇다고 각자도생으로 무제한적인 이익추구에만 골몰한다면 연안어장의 황폐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해녀들이 눈을 돌린 곳은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이었다. 그들 지역에는 해녀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질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수익이 보장될 수 있었다. 이른바 ‘출가물질’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75) 김정인 외, 『한국근대사.2: 식민지 근대와 민족 해방 운동』, 푸른역사, 2016, 56쪽.

176) 『시대일보』, 1925년 12월 8일.

3. 경계를 넘어선 해녀 노동의 확장, 출가물질

3-1. 출가물질의 원동력 - 생존과 이윤 축적

해녀의 수적증가가 출가물질의 확대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주해녀의 육지로의 출가물질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1958년에 양홍식과 오태용은 함께 펴낸 『제주향토기』에서 1887년 경남 부산의 목도(牧島, 지금의 영도)에 출어한 것이 최초라 밝힌 바 있는데¹⁷⁷⁾ 기록상 남아있는 제주해녀의 출가물질 시기 중에서 가장 앞서있다. 한편 1915년 당시 제주군의 서기였던 에구치 마쓰다카(江口保孝)는 1892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으로 출어한 것이 최초라고 한 바 있고¹⁷⁸⁾, 일본의 지리학자 마쓰다 이치지(桵田一之)의 연구논문¹⁷⁹⁾과 일제강점기 경상남도에서 입어분쟁의 과정을 서술한 「제주도해녀 입어문제경과」¹⁸⁰⁾에는 공히 ‘1895년 부산부 목도에 출연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 서술되어있다. 비록 정확한 개시 시기를 규명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189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출가물질이 시작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출가물질의 초기단계에서는 해당지역 어장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제주의 해녀들을 데려간 측면이 컸고 따라서 해녀들의 숫자도 소규모가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 출가물질은 임금노동의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었겠으나 해녀의 희소성과 경쟁의 부재로 인해 수익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출가물질의 고수익성이 제주도 전체로 알려지면서 1910년대에 접어들어 출가물질은 일종의 해녀들 사이에서 열풍이 되고, 종사하는 해녀의 숫자도 급증하게 된다. 다음의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녀라는 전통적인 직업과 타고난 건강함으로 생산하자, 발전시키자 해서 해녀 수련생은 해마다 증가해서 반농해녀도 전업해녀도 제주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생존경쟁이 맹렬하게 되어서 일부분은 도외로 흘러나가서 내선 각지의 해안에서 채취하게 되었지만…¹⁸¹⁾

하지만 제주의 해녀들이 출가물질에 나선 것에는 다른 이유들 역시 존재한다. 그러한 원인 중 하나는 근대 초기부터 성행한 잠수기어업 등과 같은 일본어민들의 약탈적 어로활동과 더불어 수적으로 증가한 해녀들의 물질 활동으로 인해 제주 연안 어장황폐화가 적지

177) 양홍식, 오태용, 『제주향토기』, 필사프린트본, 1958, 56쪽.

178)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127쪽 재인용.

179) 마쓰다 이치지 저, 홍성목 역, 〈제주도 해녀〉, 〈〈개정판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20쪽

180) 경상남도, 〈제주도 해녀 입어문제 경과〉, 1920~1935, 3쪽

181) 『木浦新報』, 1932년 1월 30일.

않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동일한 노동력을 투입할 때 출가물질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생산량을 올리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에 머물렀던 해녀들에게는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중간상인의 존재가 필수적이었고 그에 따른 수익의 부분적 감소가 불가피했던 반면에 소비지와 육지로 연결된 출가물질은 그에 따른 비용지출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제주연안의 마을어장은 공동체적인 소유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생산활동에도 제약이 있었다는 점 또한 출가물질의 계기로 작용했다. 개인의 무제한적인 어로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공동체적인 제한이 존재한 것이다. 하지만 육지의 출가물질 대상지역이 되는 연안어장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사실상 제한없는 생산활동이 가능했고, 능력에 따라 혹은 노력에 따라 성과가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어장환경이었다. 일제강점기 제주의 해녀들로서는 한반도 연안의 바다야말로 말 그대로 ‘블루 오션’이었던 셈이다. 해녀의 생산활동이 가능한 별도의 어장이 존재함에 따라 수적으로 증가한 제주의 해녀는 제주도 내부에서의 격렬한 갈등 없이 자신들의 활동무대를 확장할 수 있었다.

1933년 <조선신문> 기사를 보면 출가물질에 나서는 지역이 한반도에 제한되지 않고 일본 각지로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 해녀 전체의 숫자를 약 3만명으로, 출가물질에 나선 해녀의 숫자를 8천명까지 보고 있다.

내지에는 제주 해녀의 일터가 많고 또한 미발견의 보고(寶庫)도 있고, 자연히 해녀는 내지로 내지로 나간다. 제일 많은 곳은 대마도로 금년은 6백명의 해녀가 출가하고 있다. 그 외 대판, 동경, 시즈오카(靜岡), 구주(九州) 방면에서 멀리는 북해도까지 가서 해초, 소라,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하여 1일 평균 3원 정도 벌기 때문에 내지에서 4개월 간 일한 해녀는 3백원에서 4백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것이 전남, 경남 연안의 출가라면 50원에서 1백원 정도의 수입 밖에 없어서 해녀가 내지로 내지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주 해녀는 노인까지 포함하면 약3만 명인데, 이 중 출가하는 사람은 약 8천 명이다.¹⁸²⁾

제주해녀들의 주된 출가물질 지역은 울산, 부산, 기장 지역이었다. 이들 동해안 남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의 해안지역은 해안선 길이가 길면서도 수중 지형이 복잡해서 해조류의 성장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다. 제주도의 연간 우뚝가사리 생산량이 20만근 정도 되는 것에 비해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에 4배에 달하는 80만근 정도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³⁾ 이보다는 덜 선호되었지만 통영과 거제 일대를 포함하는 남해안 지역의 경우에도 이른바 다도해라 불리는 명칭에서 보듯이 섬들로 둘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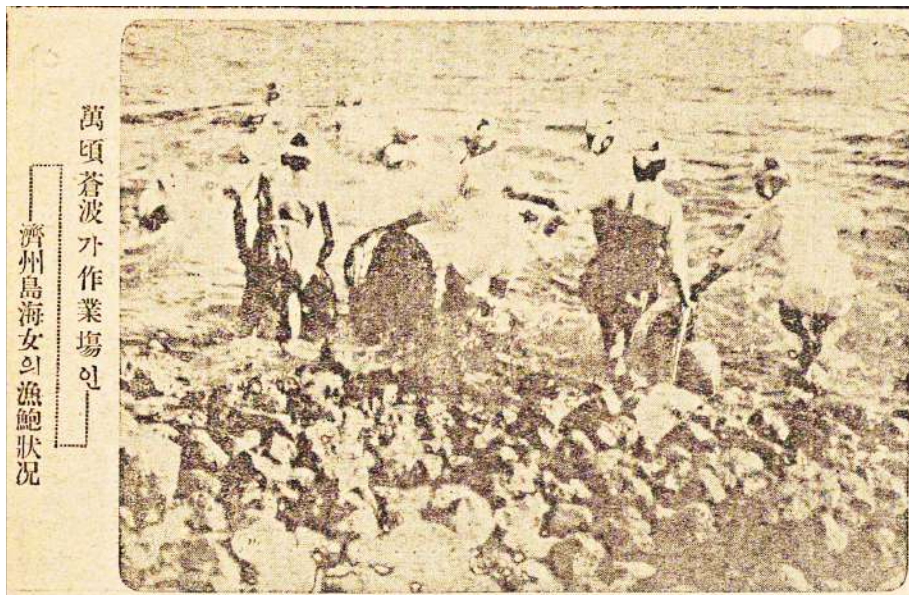
182) 『朝鮮新聞』, 1933년 5월 19일.

183) 강대원, 『제주점수권역투쟁사』, 제주문화, 2001, 7쪽.

싸여 있어 바람과 풍랑의 영향이 비교적 적어 해녀들이 물질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해조류와 어패류의 어족자원은 풍부한데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채취, 포획할 기술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한반도 남부의 해안지역에서 해녀들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해녀들로부터 입어로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온 출가물질 대상지역 주민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었기에 한반도 남동부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장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제주의 해녀들은 출가물질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수중환경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면서 새롭게 어장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기도 했다.

…많은 경우 출가해녀는 신어장을 스스로 발견하고 있어 현재도 대체로 제주 해녀와 그 지역 어업조합원의 어장과는 장소를 달리하고 있다. 즉 보통의 어업자가 특종의 장치에 의하는 이외는 어업을 할 수 없는 곳을 제주 해녀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어업권 인정 중에 관행은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¹⁸⁴⁾



〈그림 4-2〉 제주도해녀의 어포상황 (매일신보 1934.7.17.)

184) 『木浦新報』, 1932년 2월 6일.

제주해녀들의 출가물질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만든 요소 중에는 외부의 자본이 개입하여 해녀들이 집하와 판매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물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분업체계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도 있다. 출가물질의 인적기반은 절대적으로 해녀의 노동이었지만, 물적인 토대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더불어 생산된 채취물을 멀리하는 일본과 중국 등지로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판매망을 가진 일본 자본이었다.

이천명의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은 결코 적지 아니한 수요에 일어난다 이 어획물은 반드시 객주의 손을 거쳐서 팔게 되었더라 해녀의 객주는 현재 부산 목도(牧嶋)에 거주하는데 그 수가 십륙명이며 이 해녀 객주는 다년 근사를 모아야만 되는 것이고 결코 돈만 잇스면 아모 사름이던지 하는 것은 아니라 그림으로 객주의 출신지는 대개 제주도이며 대개 근본은 버리는 가는 해녀와 고향 각처도단이며 버리를 하다가 점점 그 도디의 현편도 알게 되고 또 무역상에게 대한 신용도 얻게 된 결과로 목도에 객주를 덩하고 무역상에게 붓치며 한편으로는 해녀의 모집원겸 감독자가 되어 매년 음력 일이월경이 되면 위선 제주도에 건너가 각 연안 어촌으로 단이며 해녀를 모집하더라.¹⁸⁵⁾

여기에서 보이는 무역상은 한반도의 해조류를 매집하여 일본의 수산시장으로 넘기는 역할을 했고 거의 전부 일본인들이었다. 이들은 휘하에 다수의 객주들을 거느리고 영업을 했는데, 이들 무역상이 객주와 해녀들에게 제공한 것은 일종의 금융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제주의 해안마을 여성들에게 일시적으로 대부를 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출가해녀들을 모집하는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일본에 방적공녀 유괴가 있듯이 제주도에는 해녀 유괴의 수단이 있다. 그것은 각 객주가 필요한 해녀를 모집하기 위해 만약에 부족할 경우 유부녀 해녀 등 돈으로 유괴하여 남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출가를 계약하거나 또 미혼 해녀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데려오는 것이다. 일단 계약이 이뤄지면 객주로부터 기선임 및 식비 등의 전대금 없이 즉시 기선으로 출가지로 출발시키고, 시중꾼 남자는 어선으로 출발하게 한다.¹⁸⁶⁾

‘유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제주해녀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녀들의 출가물질은 임금노동자로 자본주에게 고용되는 형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춘 제주도의 어가에서는 객주에게 구속되지 않는 친족운영의 자영업 형태를 갖는 ‘독립출가’에 나서기도 했다.

185) 『매일신보』, 1916년 8월 6일.

186) 『부산일보』, 1916년 7월 22일.

출가 해녀에게는 전술과 같이 객주의 모집에 따라 고용되어 가는 것 외에 독립 출가도 있다. 이것은 즉 객주에게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10여 명의 해녀가 한 조가 되어 독립해서 출가하는 것으로 해녀의 남편 2, 3명이 한 척의 어선을 사들여 각자 아내나 딸 혹은 고모나 조카 같은 근친자의 해녀를 태우기 때문에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자기 어촌 혹은 이웃 마을에서 2, 3명을 권유하여 태워서 한 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독립자는 비교적 자력이 풍부하므로 객주 등으로부터 가불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그리고 이것을 객주에게 고용되는 해녀와의 수를 비교하면 대략 6과 4할로 되어 있다.¹⁸⁷⁾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독립출가’의 경우에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녀 노동에 대한 중간 착취가 덜하고, 물질로 거둬들인 생산물에 대해서도 중간 마진없이 시장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다수 해녀들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호적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독립출가물질이든 아니면 고용에 의한 출가물질이든 간에 일정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또한 결코 적지 않았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916년 출가물질을 나간 제주해녀의 평균적인 수익을 알 수 있다. 1916년 직전의 3년 동안 평균 2천5백명 넘게 제주도를 떠나 각지로 출가 물질을 나갔는데, 어선 한 척에 해녀 약 10명과 물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하는 남성 4~5명의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조직적으로 물질노동을 진행하는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출가일수가 1년에 약 6개월반 그 중 출어 일수는 1개월 15일로 보아 무방하다. 그리고 채취액은 하루 평균 1원 즉 87원 정도이다. 이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면 만일 지금 울산 연해로 출가하기 위한 것으로 일금 7원 20전 기선 부산 왕복 3등 실비 일금 10원 80전 3개월 식량 자택에서 준비하는 보리, 조 등 하루 금 15전씩 일금 21원 3개월 반 출가지에서 구입하는 쌀 식료 하루 20전씩 일금 6원 50전 신발 의류 기타 잡비 일금 8원 울산군(4원 30전) 그 3곳에서(3원 70전) 입어로 일금 50전 어업세 합계 54원 차감 잔액 33원. 즉 해녀가 6개월 반에 얻는 부분의 이익은 1인당 평균 33원이라고 봐도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해녀의 순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¹⁸⁸⁾

전호에 기술한 대로 해녀 혼자 출가 중의 수입은 87원으로 경비가 54원 차감 혼자 평균 33원 이익이지만, 이 이익금으로 곁에서 시중꾼 남자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10명의 해녀에 대해 4,5명은 있으니까 그들의 경비를 계산하면 남녀 한명 평균 한 어업 기간 불과 9원23전 정도의 순익에 해당한다.¹⁸⁹⁾

187) 『부산일보』, 1916년 7월 23일.

188) 『부산일보』, 1916년 7월 23일.

189) 『부산일보』, 1916년 7월 24일.

해당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바꾸어 보면 <표 4-3>과 같다. 출가물질 지역으로의 이동비용과 입어료를 비롯하여 현지 생활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해녀 출가물질의 비용과 이익¹⁹⁰⁾

*울산 연해 출가 (배1척) 기준				
	항목	수입	지출	비고
해녀	채취액	(+)87원		하루평균 1원
	기선비		7원20전	부산 왕복 3등실비
	식량		10원80전	3개월 식량 자택준비(보리, 조 등) 1일 15전씩
	쌀, 식료		21원	3개월반 출가지 구입 쌀, 식료 등 1일 20전씩
	기타 잡비		6원50전	신발, 의류 등 잡비
	입어료		8원	울산군 4원30전 + 기타 3개소 3원70전
	어업세		50전	
	지출 합계		(-)54원	
	차감 잔액	=33원		해녀 순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시중꾼 남자	식량		10원80전	3개월 식량 자택준비(보리, 조 등) 1일 15전씩
	쌀, 식료		21원	3개월반 출가지 구입 쌀, 식료 등 1일 20전씩
	기타 잡비		6원50전	신발, 의류 등 잡비
	지출 합계		38원30전	
총계	해녀 10명	3백30원		
	남자 5명		1백91원50전	
	1인 순익	=9원23전		(해녀10명 수입-남자5명 지출) ÷ 15명 = 1인당 수입

6개월이 넘는 출가물질 기간을 통틀어 해녀의 1인당 순수익이 10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다소 의문의 여지는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하루 평균 1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동강도가 매우 강했던 광산 노동자(운산 금광)의 1901년대 평균 임금에 82전¹⁹¹⁾이었다는 것을 보면 해녀의 물질노동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해녀들로서는 출가물질을 고수익을 올릴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충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190) 『매일신보』, 1916년 8월 8일; 1916년 8월 10일.

191) 김정인 외, 『한국근대사.2: 식민지 근대와 민족 해방 운동』, 푸른역사, 2016, 56쪽.

출가물질로 벌어들이는 해녀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1922년에 19만원이던 것이 1923년에는 22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29년 당시 제주도내 해녀 7,300명이 도내 연안에서 생산 활동으로 25만원을 벌어들인데 반하여 일본으로 출가한 해녀 3,500명이 40만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니 출가해녀의 수입원이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했음을 알 수 있다.¹⁹²⁾

물론 출가물질을 나서지 않고 제주에 머물면서 물질노동에 종사한 해녀들이 거두는 수익 역시 적지 않았다. 출가물질이라는 것이 온전히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훨씬 큰 수익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지불해야하는 비용과 중간착취의 존재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가물질에 나선 해녀들과 제주에 머물면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에 있었다. 나이가 들어 출가물질을 다녀온 해녀들 대부분이 얻은 수익으로 집을 마련하고 농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영농으로서의 기반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출가물질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녀들 대부분, 그리고 일년의 절반 정도를 출가물질에 나선 해녀들조차 나머지 절반의 기간에는 제주에서 가사와 농업활동을 병행했다는 것을 보면 물질노동 만큼이나 농업노동 역시 주요한 소득기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가물질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제주에 머물면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올리는 수익보다 커지면서, 그리고 이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전반적인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면서 출가물질이 갖는 매력은 보다 더 커지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해녀의 출가물질은 일제강점기 내내 제주도 해안마을은 물론이고 제주 지역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3-2. 출가해녀의 이중고 - 착취구조와 입어분쟁

출가물질 초창기에 해녀들은 장거리 이동과 일시정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었고 따라서 자본력을 가진 상인들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출가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해녀의 원활한 물질노동을 위해 필요한 몇몇 부수적 노동이 추가적으로 필요했고 이는 중간착취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객주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출가물질에 나선 제주해녀는 출가물질이 이뤄지는 각각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중간착취에 시달려야 했다. 객주는 계절적으로 어로활동이 중지되는 매년 1~2월경에 제주로 와서 해녀를 모집하면서 출어준비자금의 명목으로 해녀들에게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는데, 이는 나중에 해녀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또한 해녀들은 물질을 허용한 육지의 해안 마을이나 어업조합에 입어료를 내야 했고, 선주에게는 이용료 명목으로 뱃삿을, 거간꾼에

192) 육지출가의 경우 수입을 현금으로 가져와서 그 금액을 유추할 수 있으나 명확치 않다. 하지만 일본에 출가한 해녀의 경우 송금액이 존재하여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1939.).

게는 알선 사례비를 지불해야했다. 이러한 단계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명목의 비용과 더불어 객주들은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의 양과 가격을 속여 해녀에게 지불해야할 수익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태 또한 빈번했다. 오죽하면 “열두놈 훈착 먹어서 줌수초지 온다 (12인 이상에게나 뜯기고 나야 잠수들 뭍이 남는다)”는 속담이 생겼겠는가.

소의 물상객주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주도사람이요 해녀의 남편 노릇하는 사람이 만흐니 …(중략)… 교활한 객주와 일본사람들은 엇더한 룡락을 하얏던지 실상 백근되는 물건을 구십근만 회계하는 버릇을 만들고 그 외에도 적을눈을 속히어서 맨 나중에 해녀의 수입으로 되는 것은 백근에 칠십근밖에는 못되며 이것도 객주에게 빚으로 빼앗기는 등 여러가지로 부정한 수단아래에 모다 해녀의 수입으로 잇지를 못하게 된다 …(중략)… 해녀는 할 일 업시 못된 객주와 일본사람들이 제 욕심만 차리는 흉악한 수단에 떠러져서 반년동안이나 죽을 고생한 갑도 업이 부인손을 쥐고 도라가게 된 것이다.¹⁹³⁾

출가물질이 있었던 거의 전 시기에 걸쳐 제주의 해녀들을 괴롭힌 것은 대상 지역의 어민들과의 갈등이었다. 물론 출가물질 대상지역의 어민들로서는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와서 조업활동을 벌여 이익을 추구하는 해녀들은 질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출가물질의 초창기에는 이러한 해녀와 지역민 사이의 갈등이 주로 제주에서 온 해녀들에 대한 천대와 멸시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 우리 해녀들은 일본사람들의게도 압박을 받고 조선사람들의게도 압박구속을 바드니 이와 가치 구구한 이중생활을 하는 것보담 차라리 이 김흔바다물 가운데 빠져 죽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심으로 일시는 대혼잡을 일우엇다한다 (…중략…) 디방사람들은 우리를 대 할때마다 제주년이니 보작이년이니 하고 사람의 대우를 아니해줍니다¹⁹⁴⁾

특이한 점은 제주해녀와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로 건너와서 물질을 수행한 일본인 해녀들¹⁹⁵⁾에게는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것이다.¹⁹⁶⁾ 물론 육지로 올라오지 않고 배에 머무르며 작업하는 일본인 해녀의 물질 작업특징도 그들에게 관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지역어민들로서는 같은 조선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장을 찾아와 소득을 올리는 해녀들에 대해 시기심을 느끼는 동시에 마을 고유의 풍습이 외지에서 온 해녀들에 의해 훼손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신문기사에서는

193)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

194) 『동아일보』, 1924년 4월 28일.

195) 당시 조선의 해역에서 물질작업을 수행한 일본인들을 보면 여성으로는 해녀(아마), 남성으로는 해사가 존재했다. 이들은 조선해역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제주의 해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 달 중에서 물질을 수행하는 기간은 제주의 해녀들이 더 길었다. 고임금과 경쟁력부족으로 인해 일본인 해녀, 해사들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조선의 어장에서 철수하게 된다.

196)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 4, 1903, 92쪽.

해녀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출가해녀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해녀는 타지방에서 알몸이 되어 바다 속으로 들어가 예의범절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계력이 발달한 시대에서 맨 주먹 바다 속에 잠입하는 것은 어둔함의 극치로 오히려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당연한 설이다.¹⁹⁷⁾

출가물질 대상 지역민들의 질투와 멸시로 인해 곤란을 겪기는 했으나, 출가물질 자체는 1911년에 공포된 <어업령>에 의거해 법적 정당성을 갖고 진행된 활동이었다. <어업령>의 제 5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해 그 어장에서 어업을 하는 자의 입어를 거부할 수 없다. 전항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하여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제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출가물질을 해온 해녀들의 물질노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관행어업권’이라 하는데, 제주의 해녀들은 입어료를 내고 오래전부터 해온 출가물질을 제약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구한말부터 부산, 울산, 기장 등의 지역을 근거로 출가물질을 해온 해녀들의 해당지역 어업활동은 관행어업권에 의해 보호받는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는 활동이었다.

울산에서 동래에 지(至)하는 간(間)에 재(在)한 한천(寒天)의 재료인 해초채취에 취(就)하여 동도청의 재료인 해초채취에 취하여 동도청과 협의하였는디 유래우한천(由來右寒天)의 재료인 해초채취에 취(就)하여는 법규상관습상여(法規上慣習上予)의 임지(任地)인 전남 제주도의 해녀의 입어의 권리를 인정한 지점에 대하여는 일정한 입어료를 지불하는디 그 채취한 것은 부산에 재(在)한 해초객주가 차(此)를 매수하여 내지에 이출하며 당해녀의 입어에 취(就)하여는 간혹 예외가 유(有)하나 대부분은 목도(牧島)의 선인해녀객주의 자금을 전차(前借)하여 종업(從業)하는도다.¹⁹⁸⁾

면허에 의해 정당한 자격을 가진 주체가 국가로부터 어업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근대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법령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출가물질 대상지역의 어민들의 입장에서 관행어업권을 인정받으며 일시적으로 찾아와 자신들의 지역 수산물을 채취하여 이익을 얻는 해녀들이 반갑지만은 않았고, ‘관행어업’의 범위를 ‘제주해녀’라는 일반적인 직업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법령의 제정 이전에 출가물질을 다녀온 해녀들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 『부산일보』, 1916년 7월 24일.

198) 『매일신보』, 1920년 2월 17일.

따라서 마을어장에서의 어업권과 마을어장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두고 권한의 다툼, 즉 입어분쟁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¹⁹⁹⁾ 그리고 입어분쟁의 계기는 제주해녀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입어료를 인상하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제주해녀의 출가물질에 심각한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1924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출가물질 지역의 어민들과 충돌사태를 겪고 하소연하는 제주해녀의 인터뷰기사가 담겨있다.

…작년부터 충돌과 분쟁이 이러나서 동래군기장 방면의 어업조합에서는 말하기를 우리 조합에 가입치 않으면 제주보직(海女)이들은 바다 근방에도 발을 못드려 늦게 한다고 하는데 가진 펄박을 바다 오다가 금년에도 사월삼륙일이 해조류채취를 시작하는 법당기일인데 …(중략)… 부산어업조합에서는 강제력 수단으로 해녀 십여명을 감언리설로 유인하여 조합에 가입케하고 그 가입된 해녀들에게는 법당기일전에 해초채취를 용서한 까닭에 기일만 기다리고 잇는 해녀들과 서로 충돌이 생겨서 …(중략)… 그 지방사람들은 무조건으로 배를 룽디에 끄러올리고 압길을 막으며 행선을 못하게 한일이 잇섯다. 그뿐 아니라 인류에 비치못할 욕설과 폭행으로 고통과 압박을 준일이 세상에 발표되게 되었다.²⁰⁰⁾

출가물질 대상 지역민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대체로 해녀들에게 우호적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멀리 타지를 찾아와 고된 노동을 기꺼이 감수하는 해녀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출가물질을 통해 한반도 남부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해녀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삼사년간을 두고 싸와나왔스나 아직 해결의 호안을 발견치 못하고 간금(干今)분요중(紛擾中)에 잇는 소위해녀문제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경남도해안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삼십년전에 해녀로 말미암아 해조를 발견하게 되자 제주해녀는 매년해조어기를 당하면 약 이천명이 집단하여 차(此)해조채취로써 그해의 전가족의 생활을 보지(保持)하여 나왓다. 그러한 인과관계상 자연법률상으로 차(此)의 입어에 대하여 철저적보호를 해 나왓는 것이다. 그리하는 것이 근년에 와서는 경남연안에 잇는 어업조합등이 발달됨을 따라 자연, 어장의 소유권이라는데 대한 의식이 차차 명확하게 되매 종래제주해녀의 입어관행을 일시금지하는 동시에 자기소유권의 확인을 동업자간에 선포케 되었다.²⁰¹⁾

199) 법률적인 의미에서 마을어장이라는 용어는 1995년 수산업법의 개정과정에서 새롭게 '마을어업'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어업령>에서 '제 6종 면허어업'이라는 용어로 처음 제시된 이후 1929년의 <조선어업령>에서 '전용어업'으로 바뀌었고, 해방 이후에는 1953년 <수산업법>의 제정과정에서 '전용어업' 대신 '공동어업'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용어의 변천에 따라 현재 '마을어장'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공동어장'의 명칭을 쓰는 경우도 간혹 보인다. 하지만 어촌의 연안을 어업의 경계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200) 『동아일보』, 1924년 4월 28일.

201) 『매일신보』, 1932년 3월 24일.

많은 경우 출가물질 대상지역의 해조류 등은 해녀들이 물질과정에서 새롭게 어장을 발견, 개척할 정도로 해녀들의 역할은 지대했다. 해녀들의 출가물질 이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미역의 경우에는 아예 채취의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지역어민들에게 입어료의 형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본래 어장 소유주인 지역 어민들과의 마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자신들 소유의 어장에 들어와서 수익을 올리고 떠나는 해녀들이 질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결혼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착한 제주출신 해녀들이 늘어나면서 제주해녀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1930년 <경성일보>의 기사를 보면 당시 해녀 입어료 협상의 과정에서 정착해녀들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부산 이북의 해안에 원정했던 해녀가 비린내가 나는 고향 제주도에는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토착해녀가 되어 연안 어부의 부인이 되어 변하는 수가 지금까지 상당수에 이르러 경남 당국이 조한 것에 의하면 부산의 1백여 명을 필두로 합계 약 3백 명이 있다는 의견을 보여 왔던 것으로 이번 개정협정안이 이 토착적 해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착해녀와 제주도 해녀단체와의 입어 관계와 채조 공동판매 매상수입에서 징수해야 할 경비와 수수료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곤란한 문제가 산만큼이므로 간단히 해결되지 않고 고민을 품고 있다.²⁰²⁾

제주의 해녀가 관련된 최초의 입어분쟁은 비교적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어업령>의 공포 직후인 1912년에 발생했다. 1911년 울산 장생포에 거주하는 일본인 야스토미(安富)는 한천의 생산을 위해 인근의 울산 해안마을들과 천초(우뭇가사리), 은행초 등에 대한 채취권을 연간 3,2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듬해인 1912년 5월 우뭇가사리의 채취기를 맞아서 제주의 해녀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야스토미(安富)와 선계약을 맺은 울산어민들이 해녀들의 입어를 거절하자 비로소 공론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사건에서 야스토미와 맞서는 갈등의 당사자는 해녀들이 아니었다. 야스토미 이전에 울산의 마을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던 해조류 무역상과 이를 대행하는 객주들이었다. 따라서 경상남도 당국은 물론이고 총독부까지 해결의지를 보이면서 원인을 제공한 계약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제주해녀들의 출가물질이 법적인 근거인 이른바 입어관행이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면서 출가물질의 대상이 되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이후의 출가물질 과정에서는 입어관행이라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제주의 해녀들이 입어료를 지불하고 당당히 출가물질 지역에서 어업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입어분

202) 『京城日報』, 1930년 7월 9일.

쟁이 남긴 또 다른 변화는 1913년에 울산군 서생면에 4개의 어업조합이, 동래군에 기장 어업조합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시행중이던 1911년의 <어업령>에는 '제6종 면허어장에 대한 어업권은 어업조합에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녀들의 출가물질이 활발했던 울산과 부산의 여러 해안마을들은 입어료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이 결국에는 어업조합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울산과 부산 일대를 중심으로 허가를 받은 강동, 대현, 온산, 서생, 동면, 기장의 6개 어업조합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해안지역에서 가장 일찍 설립된 어업조합인데 실질적으로 이들 어업조합의 가장 큰 설립목적은 어장관리의 명목으로 어업권을 확보하여 해녀들로부터 입어료를 징수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도 이들 경남 지역의 어업조합들의 운영비는 거의 대부분을 해녀의 입어료로 충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는 당시 조선의 어업생산성과 수익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과 해녀들의 물질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경남지역의 어업조합들이 입어료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은 해녀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 1931년 제주도 해녀는 1천7백20명으로 그 중 경남 동해안 부근에 5백명이 출가물질을 나가 부산에는 3원, 울산은 6원45전, 동래 5원25전의 입어료를 내야했는데,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²⁰³⁾ 그리고 어장을 임대하면서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 어업조합들의 입장에서는 입어료를 계속 인상하는 것보다 자기 지역의 어업조합에 가입시켜 조합비와 지속적인 수입이 더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는 해녀들과의 풀리지 않는 갈등의 씨앗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금년도 전과가치 오백여명의 해녀가 고기잡는 료금 일천오백원을 니이고 잡으랴 하얏더니 기장어업조합에서는 료금도 안이밧고 고기잡이를 엄금할뿐 안이라 주턱도 안이 밧니고 수화까지 서로 통치안이하고 그 어업조합에 가입하랴선던하다가 지난일인에는 마침니 해녀의 어구와 채취한 물건을 빼아숨으로 해녀측에서는 무리한 금지라고 반항을 하얏스나 그 사람들은 완력으로 구타하야 동군 대변리에서는 구타를 당한 해녀는 락티깅지 되얏는데 지금에 그 자세한 내용을 들은즉 기장인사 전부가 금지하는 것이 안이오 기장어업조합의 역원 몇사람의 소위인바 그 사람들은 이전에 제주히녀가 채취한 해산물 회수를 하든 사람이 제주히녀조합이 생긴후로는 해녀와 관계가 단절되야 리익을 어들수 업숨으로 해녀를 자괴조합에 가입케하야 리익을 엇고자 하는 수단이라는디...²⁰⁴⁾

경남지역 어업조합들로 하여금 출가물질을 허용할 수 있는 제주해녀의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주장에 명분을 제공한 것은 해녀들의 물질로 인한 어장황폐화였다.

203) 『매일신보』, 1931년 4월 5일.

204) 『조선일보』, 1923년 5월 10일.

해초가 근래등귀(騰貴)한 결과 제주도에서 출어하는 해녀의 수는 격증하여 최근 사오년간은 약육칠백인의 입어에 불과하였는디 작년은 천육칠백인의 다수에 상하며 종하여 해초는 태히 근절할 상태를 양함에 지하였는바 채취방법과 여(如)함도 종래는 해초를 적출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는디 입어자의 수가 증가한 결과 해초의 생흔 사역급암석 7지도 발취함에 지(至)하여 해초근절의 조(兆)를 정(呈)코자 하는지라 자에 지(至)하여 경상남도에서도 금후산맥의 감소를 염려하고 해녀입어의 수를 제한함을 요망하는디...205)

물론 출가물질이라는 것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장의 지속가능성에는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억지주장만은 아니었다.

3-3, 해녀조합의 형성과 출가물질의 확장

출가물질의 대상지역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해녀숫자의 제한 등에 맞서서 제주해녀들이 실행한 대응방안은 조합의 설립과 더불어 출가물질 지역의 다변화였다. 해안 지역의 어장을 근거지로 어업권을 부여받는 지역별 어업조합과 달리 ‘해녀’라고 하는 특정한 업종을 중심으로 그것도 출가물질에 나선 해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어업조합과의 이해관계 충돌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1920년 4월 16일에 해녀 조합원 8,200명을 가입시키면서 극적으로 설립을 완료하게 된다.

해녀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 변화는 우선 1차세계대전 직후 전세계적 차원에서 식민지의 해방을 지향하는 민족자결주의가 확산되고 1919년의 3.1운동을 통해 보여준 조선인의 강한 독립의지 표출에 따라 일제 식민지 당국에서 통치방식의 변화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 다이쇼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라고 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다방면에서 기존에 비해 덜 억압적인 사회구조가 자리잡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이른바 ‘문화통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내선융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선의 어업종사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어민의 조선 진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겠다는 총독부 내부방침의 변화도 있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해녀어업조합의 설립 승인과 동시에 해조류 수출전문회사인 조선해조주식회사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갈등의 양상이 발생하게 된다. 명목상 밝힌 해조주식회사 설립의 목적은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조류가 일본시장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조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당 회사의 보증으로 해녀어업조합이 초기 운영자금을 식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설립의 목적이었으나 이후의 과정을 보면 중

205) 『매일신보』, 1920년 2월 17일.

간이익을 수탈하는 객주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해녀들이 채취한 해조류에 대해 해조주식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리감독과 가격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총독부가 해녀 출가물질의 중간착취자로 비판하던 ‘객주’를 대신해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또 다른 객주’인 해조주식회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고 이에 따라 분쟁의 발생이 불가피했다.

…해녀의 생산한 물건을 공동으로 팔게 하며 중개도 하여주고 돈도 대어주기 위하여 제주도 당국의 량해를 얻어가지고 전라남도 당국에 교섭을 하였더니 전라남도 해각도지사(全羅南道 亥角道知事)는 일부러 경상남도 당국의 량해를 엇기 위하여 작년 겨울에 진주와 부산 방면에 출장을 하였었다. 그러나 마침 부산에서는 해녀의 생산하는 물품은 수산계에 막대한 금액이 되며 이것을 리용만 하면 리익이 큰 거를 알음으로 일본사람 암기모(岩崎某)등의 꾀로 부산에 해조주식회사를 설치할 계획이 잇섯든 터이라 해각도지사는 처음 뜻을 바리고 해조주식회사를 위하여 해녀조합을 그 회사에 부속케 하기로 내정까지 하고 도라 온일이 있다. 해녀는 이와 갖치 만흔 생산을 하면서도 객주나 중개인이나 일본사람의 종과 갖치 로동만 하여 줄 뿐이오 아모 리익도 엇지 못함을 개탄하여서…(206)

반발이 거셌던 이유는 조선해조주식회사가 제시한 해조류 수수료가 너무 과다했기 때문이다. 해녀들로부터 수매한 해조류 매상고의 50%를 조선해조주식회사가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나머지 18%가 해녀조합의 수수료로 공제되고 조합비, 뱃사공 임금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해녀의 실수입은 매상고의 20%밖에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이에 관계자 회의를 통해 협상의 극적인 타결이후 해녀어업조합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게 된다. 1920년 5월 조합원 총대회를 열어 조합자금 3만원을 식산은행 제주지점으로부터 대출받고 해녀들의 생산물을 조합 지부에서 공동경매로 붙이기로 하였다. 해녀어업조합의 공동판매고는 1921년 9만원, 1922년 19만원, 1923년 22만원, 1924년 경우 30만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²⁰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의 물질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는 결국 1932년 구좌,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녀항쟁이 발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입어료는 한 명에 대해 약 반년 기간 동안 동래 5원25전, 부산 12원, 울산 6원45전을 지불하고 있는데, 대체로 전체 채집 매상액 내에서 현지인이 18, 75, 해녀조합이 31, 25를 취한 나머지 5할은 조선해조회사의 수입보회가 되고 있어서 뽀 빠지게 일하는 해녀의 수입은 해녀조합의 3할 정도뿐이라서 이것은 이번 협정사항에서 아무튼 개정할 방안은 없을까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이라도 있다면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

206)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

207) 『동아일보』, 1924년 4월 28일.

도 아득한 제주도를 뒤로 하고 멀리 시마(志魔) 해안에서 쓰시마(對馬) 연안을 비롯해 경남의 파도가 거친 해안에서 일하는 약 6천명의 해녀가 활약하는 바다 세계에 세상 살아가기 힘든 세태의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⁸⁾

창립초기에 중점적으로 진행된 해녀조합을 통한 권익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지로의 출가물질은 해가 갈수록 대상지역 어업조합으로부터의 견제가 심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1925년 2월에 전라도와 경상도 당국사이의 협상의 결과물인 ‘해녀의 입어에 관한 협정’은 사실상 제주해녀들의 숫자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조치였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서 제주해녀들이 육지로 출가물질을 나설 경우 채취량의 절반을 해조회사에 팔아야 했으며 입어로 명목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 또한 50% 이상 인상되었다. 또한 부산, 울산 지역의 경우 출가물질의 인원도 1,712명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해조류의 최성기에 들어가 경남도 연해에는 목하 삼천의 제주도 해녀가 들어와 포어 활동을 하는터인데 부산으로부터 동해안까지의 제주도 해녀의 입어는 일천칠백명을 한하여 경 전양도에서 협정하였는바 벌써 동래만 구십명이 초과되었습으로 본도 수산과에서는 목하조사중으로 또 울산방면의 제한수 이상에 입어한 듯함으로 반죽해녀는 전부 축출하기로 되었더라.²⁰⁹⁾

해녀들의 숫자를 규제하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의 출가물질은 이전까지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체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출가물질에서 제외된 상당수의 제주도 해녀들로서는 육지로의 출가물질을 통해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변화는 오히려 출가물질의 대상지역을 한반도 남부의 해안지역에서 외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제주의 해녀들은 이 시기 이후에 일본,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로 출가물질을 나서게 된다.

매년 입어기에 들어가면 도내에 남아있는 사람은 매우 근소하고 그 대부분은 조선 내는 물론 멀게는 오사카, 근년에 이르러서는 미에현(三重縣) 방면의 내지인 해녀가 시대의 추세라고 말하는데 입어를 기피하게 된 관계상 이 방면까지 출가하는 형국이다.²¹⁰⁾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오히려 출가물질의 대상지역을 다변화시키면서 수익의 증대를 모색할 수 있었다. 이렇듯 출가물질을 통해 매년 외부로부터 일정 규모의 화폐가 유입되면서 제주사회는 해녀 노동을 기반으로 경제적 붕괴를 피하면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208) 『京城日報』, 1930년 5월 5일.

209) 『조선일보』, 1927년 5월 6일.

210) 『부산일보』, 1928년 10월 21일.

4. 일제강점기 해녀가 가져온 제주사회 변화 양상

이렇듯 해녀의 물질노동은 제주도지역에서의 물질활동과 외부로의 출가물질이라는 두 가지 방향의 이익추구활동을 통해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양상이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분명 제주의 해녀들로서는 다층적인 착취구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노동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은 적지 않았다. 특히 출가물질을 나선 제주해녀들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시기상으로 늦기는 하지만 1935년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육지에 “머슴”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머슴사리”를 나가는 것은 “사내”들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여편네”들이 머슴사리로 나가는 것이다. 육지에서는 일(一)년이 기한이나 삼(三)개월, 육(六)개월, 일(一)년 이러케 세종류가 있어서, 정월달에 접어들면, 남편에게 집안일을 보살피도록 하고는 머슴사리를 나간다. …(중략)… 이리하여 돌아올 때에는, 약 반년만에 적은때면 백여원 만들때는 이(二), 삼(三)백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일(一)년내 피땀을 흘려 머슴사리하고도 삼십(三十)원 내외밖에 만저 보지 못하는 육지의 “사내머슴”들은 부러워하여도 족할 것이다.²¹¹⁾

전체 해녀의 숫자와 출가물질 해녀의 숫자, 그리고 소득의 관계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정확하게 추계된 바가 없다. 1920년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전체 해녀수가 1만명이고 수 백만원을 벌어들이며 출가해녀는 4천명 정도이고 이들이 12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되어있다.²¹²⁾ 하지만 이보다 4년 후인 1924년 <매일신보>에는 해녀수는 동일하게 1만명이지만 수입은 70만원이고 출가해녀는 4천명에 소득은 40만원이라고 되어있다.²¹³⁾ 1935년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체해녀숫자는 밝히지 않은 채 전체수입은 27만원이고 출가해녀는 5천명에 수입이 70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 있다.²¹⁴⁾

비록 당시 신문을 통해 제주해녀가 출가물질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해녀 본인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제주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충분한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해녀의 기여는 당시의 신문지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바게 나가 잇는 해녀는 수(數)로 오천여명 삼월이 되어 남국의 바다까에 『올리브』 기름 가티 부드러운 난류(暖流)가 흘러오면 그들은 집을 버리고 아기를 떠나서 낚선 천

211) 『동아일보』, 1935년 8월 8일.

212)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

213) 『매일신보』, 1924년 12월 22일.

214) 『조선일보』, 1935년 8월 7일.

지로 출정한다. (…중략…) 그래서 한해동안에 해녀들의 바구니에 담겨서 섬으로 흘러 드러 오는 돈은 칠십만원을 해인다고 한다. (…중략…) 섬에서는 해녀야 말로 경기(景氣)를 가지고 오는 복의 계절조(季節鳥)이다. (…중략…) 그중에서도 제일 고령자인 한림시내의 김신성(金 信城) 로파에게 빚나는 지난간 날의 무용전(武勇傳)을 물어 보았다. 그는 일즉 이 열다섯살에 해녀를 시작했다고 하니 금년이 바로 오십주년 기념이다. 바다와 싸흐는 반세기 동안에 그의 발길은 멀리 강화로부터 對馬島에 까지 뻗치여서 삼십말직이가 섬에서 얼마나 되는 지는 몰라도 그만한 땅을 비창 하나로써 모았다고 한다.²¹⁵⁾

자작농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척박한 농업환경으로 인해 육지에 비해 생산력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제주의 상황에서는 해녀의 노동이 남성노동자들의 일본 공장취업과 더불어 거의 유일한 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주의 해녀들로서는 근대이전과 같이 밭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가소비를 위해 물질노동에 나서는 것보다는 물질을 전업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해녀숫자의 전반적인 증가와 더불어 포화 양상마저 보이는 상황에서 제주의 해녀들이 출가물질을 나서게 된 것은 그것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돌파구였기 때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출가물질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제주사회로 유입되면서 제주사회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부의 분포 역시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목축과 농경을 주력으로 삼은 중산간 마을은 이른바 ‘반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해안지역 마을의 주민들을 낮춰보는 경향이 강했고, 그러한 하대(下待)의 근거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녀들이 물질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수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출가물질이라는 적극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보하면서 해안지역 마을의 경제적 지위는 점차 중산간 마을을 앞서가게 된다. 다음의 <표 4-4>는 1939년 무렵에 중산간 이상의 마을과 저지대 및 해안지대의 마을의 생활비 차이를 보여준다.

<표 4-4> 1939년 지역별 제주도 농민의 생활비 비교²¹⁶⁾

(단위:엔)

고도별	고지대		중간지대		저지대		해안지대	
구분	노동	소비	노동	소비	노동	소비	노동	소비
1인당 금액	29.1	17.0	26.4	22.5	39.8	31.0	38.3	31.1

215) 『조선일보』, 1935년 8월 7일.

216) 타카하시 노보루,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上:총론·영농실태조사(전라도·경상도)』, 민속원, 2014, 512-513쪽.

이렇듯 어업 중심지역의 경제력이 농업 중심지역을 능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부터였고, 변화의 원인으로 해녀의 물질노동, 특히 출가물질이 크게 작용했다. 제주의 해녀들은 해안 모든 마을에 빠짐없이 존재했으므로 출가물질과 더불어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경제적 파급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므로 생산력 변화에 따른 지역간 경제적 위계의 변화 역시 해녀들의 노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해녀의 물질노동이 제주사회의 경제적 판도를 바꾼 한편으로는 노동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의 존재로 인해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발언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가부장제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았던 근대 이전의 여성들과는 달리 경제적 주도권을 기반으로 사회적 영향력의 확장까지도 가능했던 것이다. 일단 가족 집단 내에서의 지위부터 변화가 찾아왔다.

…대체로 여자의 권력이 강해서 남자를 강요 압박하려는 풍습이 있고 특히 해녀가 가장 심한 점.²¹⁷⁾

1916년 7월 <부산일보> 기사는 제주의 여성들의 부지런함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성의 발언권이 강해서 남성에서 맞설 정도로 이미 가부장적인 위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한다. 해당 기사는 낯선 타자의 시선으로 단편적인 모습을 보았을 뿐 관찰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아니므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를 찾아온 이방인의 시선으로 볼 때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육지와는 사뭇 다르게 보였던 것은 분명하다. 제주는 육지와 떨어져 있으면서 남존여비로 대표되는 유교적 여성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농업과 어업에서 두루 여성의 노동이 필요했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오래전부터 육지에 비해 더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대의 시작과 해녀들의 물질을 통한 노동 가치가 인정을 받으면서 비로소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해녀의 존재가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녀들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출가물질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가정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되어온 것이라는 점이 오히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수시로 어로 종사자들의 희생이 따르는 활동이 주요 산업이었던 제주도의 조건에서 여초현상이 일반적이었고, 가부장적인 유습이 상당부분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여성의 발언권이 강했던 것은 해녀의 ‘근면한’ 물질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7) 『부산일보』, 1916년 7월 18일.

인구가 십팔만 팔천 구백 이십 이인인디 그중에서 남자가 구만 삼천 삼백 삼십 일인이오 녀자가 구만 오천 오백 구십일인이라 즉 남자보다도 녀자의 슈효가 이천 이백여인이나 만흐며 따라서 제주도의 녀자들은 활동하는 힘이 대단히 왕성하고 대개는 해녀가 되어 물속에 드러가 전복, 소라, 등속의 조기와 메역, 다시마, 히의, 가스리등속의 해물을 뜻어다가 조그집에서 먹기도 하고 남에게 팔기도 해야 일년동안에 적지안이혼 버리를 하더라. 현재 그 섬에서 일년동안에 나는 해산물이 이십 이만 오천 이백 칠십원에 달하논디 그 중에서 녀자의 손으로 채취하는 것이 일십 삼만 오천 수백 칠십원이요 남자의 손으로 채취하는 것은 겨우 팔만 구천 팔백원이라 이 통계만 볼지라도 제주도의 해녀가 얼마나 남자보다 더 활동하는가를 알겠고...²¹⁸⁾

1916년 이 경우만 보더라도 남성들의 수산업 생산량과 비교해 볼 때 제주해녀들의 생산량이 월등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이든 아니면 지역사회이든 간에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의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대초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주의 여성들은 가계의 일정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보다 많은 부분을 책임져오면서 자신들의 가정 내에서의 발언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지위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제주의 남성들이 일본의 공업지대로 이주노동을 떠났다면 제주의 여성들은 육지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출가물질을 함으로써 산업기반이 전무했던 제주도 경제와 사회를 유지시켜나가는 물질적인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 출가물질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제주도내의 수산물 채취에 종사하던 도내활동 해녀들의 물질노동이 더해져 해녀는 그야말로 일제강점기 제주경제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과 국가를 넘나들면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제주해녀의 물질노동은 일제강점기 조선 수산업 어획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1936년 말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의 어획고는 조선인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조선인 어획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해녀의 노동이 없었다면 이러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어획고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제주해녀의 출가물질을 통한 왕성한 경제활동은 일제의 패망에 따라 출가물질 지역이 한반도 남부로 급격히 제한되고,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한반도 남해안 지역으로의 출가물질 역시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1970년대에는 사실상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게 된다. 비록 일제의 영토침략 과정에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제주가 ‘변방의 섬’이 아닌 동아시아의 중간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출가물질과 이를 통한 해녀노동의 경제적 이익발생이 가능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해녀의 물질노동, 특히 출가물질이 제주사회에 남긴 영향은 여전히 현재에도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때 만 명 전후의 해녀들이 출가물질에 나설 정도로 수적으로 늘어

218) 『매일신보』, 1916년 8월 3일.

난 제주의 해녀들은 해방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제주의 경제적 기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0년대 이후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 제주사회의 새로운 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해녀 숫자도 줄어들고,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도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적지 않다. 경제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녀의 노동생산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과 더불어 제주도 상징으로써의 가치도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제주해녀들의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출가물질 경험을 통해 해녀공동체의 근대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가물질에 나서면서 피치 못하게 겪어야만 했던 차별과 멸시에 맞서 해녀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해녀들 공동경험을 바탕으로 비로소 제주해녀들의 근대적 모습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경제적 기여를 바탕으로 제주사회 전반에서의 발언권을 확보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의 산업화과정에서 월정리 공동 하수관 매설이나 탐동 매립지 개발 등과 같은 개발사업에서 보듯이 마을어장 보전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해녀들의 주장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해상풍력과 같은 개발사업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해녀들이 출가물질을 나섰던 시기에 출가대상 지역의 주민들과 빚었던 마찰의 상당부분은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 문제였다. 해방 이후 점차적으로 출가물질이 다양한 이유로 제한되면서²¹⁹⁾ 남아있는 제주의 해녀들로서는 제주에 존재하는 마을 어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일정부분 약탈적인 어업활동을 하기도 했던 출가물질의 경우와 달리 각각의 마을마다 정해진 구역에서 행해지는 마을어장 내의 물질노동은 일정기간 채취활동을 공동체 규약으로 정하는 ‘금채’와 같은 제도를 공식화하면서 철저하게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²²⁰⁾ 일제강점기 대규모로 진행된 출가물질의 공동경험이 오늘날에 있어서 제주해녀 공동체가 보여주는 정체성의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이다.

219) 법적으로는 감포, 양포, 구룡포 어업협동조합은 1967년 3월 8일 제주도 출가해녀 1,070명을 상대로 제기한 입 어관행권 소멸확인청구소송에서 해녀측이 패소하면서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제주경제가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면서 제주의 해녀들을 대거 육지로 출가물질을 보낼 이유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220) 노우정, 『제주 해녀공동체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관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5. 맺음말

영등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한기와 해녀들 스스로 정한 금채기를 제외하고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수산물을 채포하는 해녀들은 오랫동안 억척스러운 정도로 부지런한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와 제주경제를 책임지는 제주의 대표적 여성상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러한 해녀 특유의 생활력과 근면함이 물질이라고 하는 노동의 형태로부터 그리고 해녀라는 직업군의 특성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회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694년 제주목사로 부임해 온 이익태가 쓴 <지영록>에 따르면 당시의 해녀들은 자신들에게 봉건적으로 부여된 물질노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물속에 헤엄쳐 들어가 깊은데서 미역을 캐는 것은 채복녀(採鰯女)나 다름이 없다. 익숙치 못하다고 핑계를 대어 위험한 것을 고루 피하려고만 한다. 이 잠녀(潛女)들은 괴로움의 차이는 현격하게 다르다. 장래에 전복잡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을 염려하고 또한 균역(均役)을 시키려고 하여, 전복잡이를 익히도록 권장하여 미역잠녀에게 추인복(搥引鰯)을 나누어 정하였다.²²¹⁾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양상은 바뀌게 된다. 바닷속에 들어가 해조류의 부리가 부착된 바위들을 들춰가며 채취할 정도의 적극적인 노동양상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1920년 <매일신보>의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근래 해조가 폭등함을 따라 제주의 해녀들은 해조채취를 더욱이 희망하고 작년의 혼창기일 때에는 바다속에 드러간 해녀가 일천륙백인에 달한 때문에 해조가 거위 근절코져하며 또 채취자가 다수가 된 관계로 채취법이 란폭되야 해조의 부리가 뾰흔 바위 부닥이 기타 돌꼬지 함부로 구을너 빠져 바린 때문에 일층 그 근절이 빨니된 상태가 되야서 경상남도에서논 전라남도에 대하야 해초보호번식을 인하야 해녀의 입어를 제한하기를 요망한일도 잇섯다.²²²⁾

본고는 일제강점기야말로 제주해녀 정체성의 본격적인 형성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시기 제주해녀의 활동상을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봉건적 부담 혹은 자급자족을 위한 부수적 활동에 머물던 해녀의 물질노동이 어떠한 이유로 일제강점기 제주사회에서 산업적 대안으로 부상되었고, 출가물질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집단적 이주노동으로 이어졌는지 살

221) 이익태,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85쪽.

222) 『매일신보』, 1920년 3월 6일.

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근대로 표상되는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등장으로부터 해녀 노동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것이야말로 제주해녀 집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본격화된 근대화는 오히려 일본이라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주의 해녀들은 자신들의 생산물이 갖고 있는 충분한 환금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사회 전체에 걸쳐 ‘해녀되기’ 열풍이 불게 되지만 일제를 등에 업고 제주 인근 바다에 등장해 주인공세를 한 일본어민들의 약탈적 어업이 어장 황폐화로 이어지면서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자 찾은 대안이 바로 ‘출가물질’이었다. 다양한 중간착취의 존재와 출가물질 대상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매 시기마다 곤란함을 겪으면서도 제주의 해녀들은 자신들만의 조합을 세우고 출가대상 지역의 확대를 통해 슬기롭게 이를 극복해나갔다.

한편으로 제주의 해녀들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물결에 맞서 출가물질이라는 이름의 이주노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크게 보면 제주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었다. 초기에는 자본에 종속되어 자본주의 경제체제 최하위층의 임금노동자로 출발했지만 자신들이 보유한 물질노동의 잠재력을 인식한 이후에는 일종의 자영업자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했으며, 대내외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해녀어업조합이라는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제주의 산업적 근간을 이루면서 가계와 지역사회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해녀들의 강인한 생활력은 자신들에게 시사각각 제기된 다양한 도전에 대해 시의적절한 수단으로 응전했기에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제주에 해녀가 없었다면 산업기반이라는 것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았던 제주에서는 가난의 일반화가 지배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디아스포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오사카를 필두로 한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에 적극 나선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주해녀는 그러한 비극적 사태를 미연에 막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주해녀의 출가물질이 계절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년의 반 정도 상당기간을 육지에서 노동으로 보내다가도 결국에는 제주에 다시 돌아와 가사와 육아를 수행함으로써 제주사회 내부적으로는 가족의 해체를 막을 수 있었고, 또 해녀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기반으로 제주사회라는 경제공동체 역시도 유지될 수 있었다.

제주의 해녀는 한반도 변방의 외딴 섬, 봉건적 수탈의 대상에서 자본주의 근대화를 가장 치열하게 체험한 직업을 가진 여성집단으로 식민지 상황에서 때로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경쟁과 때로는 공동체의 힘으로 뭉쳐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매 시기마다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여성들의 자매애를 기초로 공동체를 통한 개인적

이기심을 제어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오늘날 제주해녀의 정체성을 형성시킨 것이 바로 지난 100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일제강점기 해녀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분명 그 의미가 크다.

V.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면장(面長)에 관한 연구: 구좌·신좌·구우면을 중심으로

1. 머리말

지방자치의 강화와 맞물려 공개 모집을 통해 면장을 임명하는 ‘면장 공모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순천 낙안면장에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 출신이 임명되었으며, 충남 논산시의 경우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시 전체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에서도 일부 지역사회 단체에 의해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지역의 행정과 복지를 실현하는 자로서 면장의 역할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면이라는 제도가 성립되고 면장이 활동하기 시작하였을까? 그리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면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도 몇 개의 동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나름의 행정을 집행하는 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법제로 정비되지는 못하였다. 일제강점기 들어서야 수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 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제가 패망한 후 미 군정기에는 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실시되지 못하였다. 1961년에 와서는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면장을 군수가 임명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일제강점기 제주지역의 면장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비록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면장의 제도적 근거가 된 초창기 식민지 지방 지배 정책과 지방 행정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면장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바람직한 면장의 선출 방식은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 강압적 행정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면장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면장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자 역사적 접근인 것이다.

이 역사적 접근은 구체적으로 면장에 누가 임명되었는지, 그 임명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임명된 그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일제강점기 식민 당국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 지방에서의 지배 실현을 위해 면장을 활용한 지역의 구체적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접근과 필요성은 이러한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1910년 강제적 국권 침탈로 나라를 빼앗기며 시작된다. 시기별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갔다. 김운태(1998)에 따르면, 1910년 이후 일제는 지배정책으로 한국 산업경제의 종속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갔다. 1920년대의 통치는 이른바 문화통치의 기만성과 행정 개혁의 허구성만 보여주었다. 1930년 이후의 통치는 병참 기지화 정책과 전시 동원 체제를 성립시켜 식민지를 인적·물적으로 수탈하였다. 결국,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로 인해 조선은 사회경제적 갈등과 후유증이 생기게 되었고 일제의 황민화 정책으로 정치문화 또한 왜곡되었다.²²³⁾

이와 관련하여, 정태현(2007)은 왜곡된 식민지적 근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제국주의를 통하여 물리적 강제력과 함께 효율적 수탈체제로써 자본주의 제도가 이식된다. 둘째, 식민정책과 제국주의 자본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위해 이성적 요소가 강조된다. 셋째, 자본축적 기구의 확보를 통해 자본가 계급이 장악해야 할 국민 국가 수립이 압살당한다. 넷째, 근대성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민주화 교육과 민주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각 분야에서 봉쇄되고 민주적 정치지도자가 양성되기 어렵다.

이러한 식민지적 근대의 특성 속에서 계속되는 각종 차별에 대해 조선인들은 이에 저항하여 거부하기도 하고 순응하여 수용하기도 하는 이중적 반응과 대응을 보이게 된다. 당시 식민지 자본주의 운영과 정책 결정의 주체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제와 일본 상인을 포함한 일본 자본 세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하의 조선 자본가의 특성은 대외 의존적이었으며, 식민 통치의 말단 보조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 유지가 되기도 하였다.

식민지 자본주의하에서 그들은 사실상 부차적 존재였다. 이들 상층 자본가들은 식민 지배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가운데서 식민 통치 기구의 직접 참여 혹은 자문 역할을 하거나, 면 협의회에 진출하기도 하였다.²²⁴⁾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는 식민 당국의 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에 협조하는 조선인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중앙이 아닌 지방은 규모 면에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지방 나름의 전통 질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읍장은 일본인을 임명하고 면장에는 조선인을 임용한 것은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식민 당국에서는 지방의

223)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과 (지방)지배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김운태, 『일본제국 주주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8.

224) 정태현,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선인, 2007, 39~51쪽.

조선인 유력자가 필요했고, 이들을 식민정책의 구현과 집행에 사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식민 당국이 주목한 것은 지방에서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유지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말단 지방 행정 체제 안에서 관료화하려 했다. 결국, 지역의 유지를 포섭하여 식민 지배의 영향력이 지역 곳곳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각 행정구역인 면의 사무를 담당하는 면장의 역할을 주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식민지적 근대의 입장으로 보고, 이 시기 일제 지배 정책의 ‘최말단 수행자’이면서 면내에서는 ‘최고 실력자’인 면장과 그들의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면장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면장의 활동은 일제강점기 지방행정체제로서 면제(面制)에 근거가 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을 장악한 이후 지방에까지 지배력을 미치고자 면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면장의 충원에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지방 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지방에서의 지배가 어떻게 실제 구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장에 의한 일제강점기 지방 행정의 집행과 이를 위한 활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면장의 활동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제주지역 13개면 모든 면에 해당하는 면장들의 활동이다. 연구의 범위를 좁혀 이 13개면 중 면장의 적극적 활동과 일제의 보상 그리고 면민의 대응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진 면으로 구좌·신좌·구우면을 선정하였다. 우선 면장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지역 면장들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면 지역의 개발과 수탈과 관련된 면장의 간접적이고 매개적인 역할도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제강점기 지방 행정 제도로써 면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 둘째, 면 제도하에서 면장에게 요구된 조건과 부여된 지위 및 성격에 대해서 살펴본다.
- 셋째, 제주지역 면장 활동 중 구좌·신좌·구우면의 사례를 인물과 시기별로 정리한다.
- 넷째,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면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그 의미와 성격을 도출해본다.

연구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도 내 각 읍면에서 간행한 향토지 혹은 마을지가 있다. 면 현황에 관한 일반정보와 역대 면장을 파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제주에서의 면제 시행과 면장의 활동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연구의 주요한 자료로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관련 중요 신문 기사에 대한 해제가 담긴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역사자료총서가 있다.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사 원문에 대한 추가적인 검색을 실시했다. 국가기록원 소장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 일부도 활용하였다.

2. 일제강점기 지방지배정책과 면제(面制)

2-1. 면제 실시와 면장(面長)

면제의 제도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일제강점기 읍·면은 기본적으로 부(府)나 군(郡)의 아래에서 읍·면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 기구였다.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지방 관제」가 공포되었고, 1919년 10월에는 「면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전국 4,322개 면이 설치된다. 이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1913년 12월에는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공포가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면은 1914년 3월 전국 2,521개 면으로 축소되었다. 1917년 6월에는 「면제」가 공포되었고 지정면 제도가 실시되었다. 1920년 7월에는 면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1930년 12월에는 기존 면제가 「읍면제」로 개정되었고, 1931년 4월에는 「읍·면제」가 시행되어 읍회가 설치되었다.²²⁵⁾

면장 법제에 관해 조문을 통해 구체적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1917년 시행된 면제에서 면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면은 법령에 의하여 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면의 사무는 면장이 담당한다. 인사와 관련하여 면리원(面吏員)의 임명은 군수나 도사가 하지만, 면리원의 업무는 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²²⁶⁾

1920년 시행된 면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면에 협의회를 둔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정수는 8명에서 14명 사이에서 조선 총독에 의해 정해졌으며, 면 협의회 의장은 면장이 맡게 된다. 면장은 세입·세출을 포함한 예산을 정할 때나 법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사용료, 수수료, 부과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일시적 차입금을 제외한 제반 차입금에 관한 사항, 기타 새로 의무 부담을 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하는 사항,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면 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면 협의회에 자문은 권고사항으로써 사안이 급박하거나 면장의 필요에 의해 자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²²⁷⁾

1930년대 이후 읍·면제 시행에 따른 면장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면장은 면을 통할하며 면을 대표한다. 면장은 면의 사무를 담당한다. 읍면장은 리원(里員)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징계처분은 견책 또는 10원 이하의 과태금 및 해직으로 한다. 유급 또는 명예직 리원을 둘 수 있다. 읍·면장과 리원은 가택 혹은 영업소

225)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건: 통감부·조선총독부 편』, 2017, 465~471쪽.

226) 국가법령정보센터, 「면제」(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 1917.6.9 제정, 시행 1917.10.1).

227) 국가법령정보센터, 「면제」(조선총독부 제령 제13호, 1920.7.29 일부개정, 시행 1920.10.1).

를 임검(臨檢)하거나 장부 물건의 검사를 면세 부과에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²²⁸⁾

면제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일제의 면 법인화 조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면장과 면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과 면 직원 자질향상이라는 측면이다. 면 직원 임명권이 면장에게 부여되고, 면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면은 과거 군이나 상급 행정기관의 명령하에서 단순히 행정을 집행하고 대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법인으로서 독립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면 제도 변화에 발맞춰 경력직 면직원의 면장 임용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면제의 의미와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전성현(2019)은 면제의 변화가 실질적인 면에서 크게 1917년 면제, 1920년 면제 개정, 1931년 읍·면제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1920년 개정으로 자문 기능의 면협의회가 조직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1931년 개정으로 기존 법령에 의해 운영되었던 면이 법인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²²⁹⁾

조건(2019)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에서의 면제 시행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서구적 관료 행정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향촌의 지배 질서를 ‘비인격적 관료지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면에 일정 정도의 독자성을 부여하여, 그 아래에서 식민 통치하에서 면에 자치 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조선인들을 대거 임용하였다. 이는 이들을 일제 지배 정책에 협조 또는 순응하는 관리로 양성하기 위함이었다.²³⁰⁾

앞서 두 논의 외에 일제강점기 지방행정제도와 관련하여 김익한(1996a, 1996b, 1997)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익한(1996a)에 따르면, 1910년대 면제의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면의 사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 면으로 총독부가 지정한 곳에 상담역을 두고 또한 기채(起債)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동·리장을 폐하고 새로이 구장을 두도록 한 것, 호별세·지방세 외에 부과금 및 사용료·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한 것, 면 조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일제가 면제 제정과 입안에서 중요하게 반영한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²³¹⁾

김익한(1996b)은 1920년대에 일제가 지역의 명망가층으로서 신흥 유력자 집단을 중심으로 모범부락 정책을 실시하였음을 밝혔다. 면 단위의 모범면을 선정하거나 마을 단위로 모범부락을 지정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된 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제는 동리에 대한 직접적 장악을 위해 실시된 이 정책을 위해 새로운 중

228) 국가법령정보센터, 「읍·면제」(조선총독부 제령 제12호, 1930.12.1 전부개정, 시행 1931.4.1).

229) 전성현, 일제강점기 「『민익이 있는 바를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읍화와 그 한계-김해읍의 『지방통치』와 김해읍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2019, 45~51쪽.

230) 조건, 「1920년대 『朝鮮文 朝鮮』에 나타난 조선인 面吏들의 面治 인식」, 『숭실사학』 42, 2019, 253~281쪽.

231) 김익한, 「1910년대 일제의 지방 지배 정책-행정구획 통폐합과 면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0, 1996, 219~269쪽.

심인물을 파악하고, 인물이 확보된 곳에 모범부락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의 세세한 곳까지에 대한 직접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분열을 강조하는 민족 분열 정책의 실험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²³²⁾

김익한(1997)은 1930년대가 일제가 면 행정 제도 개정을 통해 면장과 면의 행정 능력과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한 시기라 주장하였다. 면장의 경우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유력자층 가운데서도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물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구장층에 대해서도 1930년대가 되면 관리가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구장에 대한 면의 감독과 관리가 철저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면 아래 지역 단위에 대한 조직적 강화정책 혹은 농촌진흥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준비와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³³⁾

다음은 면제실시에 따른 면장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면장은 면의 사무를 담임하기 때문에 곧 면의 사무가 면장의 사무가 된다. 식민통치기구로서 면의 관장 사무는 ①도로·교량 도선 하천제방 관계 배수 ②시장·조림·농사·양잠·축산 기타 생업의 개량 보급, 해충 구제 ③묘지·화장장·상하수·전염병 예방, 오물의 처치 ④소방·수방 ⑤기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²³⁴⁾

식민 당국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면장을 임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면장의 임용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30세 이상의 연령으로서 면내에 주소를 가진 자, 2) 면내 사정에 통달하고 상당한 자산과 신망을 가진 자 3) 면장에 걸맞는 학식과 재능을 가진 자, 4) 면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면에서 취급하는 공금연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2명 이상의 신원 보증자를 내세운 자 등이다.²³⁵⁾

이어서 임명되어 활동하는 면장의 지위에 관해 살펴보겠다. 기존 면장은 조선시대 말에 군수의 업무를 보조하며 관내의 사무를 집행하여 왔다. 직제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자택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이 본격적으로 지방 행정 단위가 됨에 따라 면장의 업무가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면사무소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정식으로 집무할 수 있게 되었다.

면장은 큰 범위에서 면 직원의 한 축이다. 면장은 일반적으로 군수에 의해 선정된 후보자를 도장관이 임명하였다. 면장은 판임관 대우를 받는다. 1910년 이전 면장은 신분과 재산상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면 안에서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면장에 대한 이익이나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 식민 당국에서는 면장

232) 김익한, 「1920년대의 일제의 지방지배정책과 그 성격-면행정제도와 모범부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3, 1996, 146~176쪽.

233) 김익한, 「1930년대의 일제의 지방지배와 면 행정」, 『한국사론』 37, 1997, 207~251쪽.

234)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2017, 465~471쪽.

235) 홍은정, 「일제시기 面職員의 존재형태와 해방 후 활동」, 『역사와 세계』 35, 2009, 229~283쪽.

에게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역 내 유력 인사가 면 행정에 참가하는 형태로 이들을 포섭하고자 했다.

면장에 대한 권위는 각종 규정과 상징으로 제도화 되었다. 면장의 휘장도 일종의 제도이며 상징이었다. 면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휘장의 실물이 최근 발굴되어 공개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917호에는 면장의 휘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휘장의 규격, 휘장의 패용 규칙 등도 만들어졌다.



(좌) 휘장 실물 사진

(우) 공식 휘장 도안

〈그림 5-1〉 일제강점기 면장 휘장

대구경북근현대연구소에 따르면, 면장 휘장은 조선총독부가 지방의 가장 말단 행정 기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²³⁶⁾ 왼쪽은 발굴한 실제 면장 휘장의 실물 사진이며, 오른쪽은 관보에 실린 휘장의 도안이다.²³⁷⁾

면장의 지위나 영향 및 활동에 관해 다음의 연구도 참조된다. 지수걸(2010)은 지방 유지의 '식민지적 삶'이라는 표현으로 일제 시기 면장을 포함한 유지 집단의 정치 사회 활동을 설명했는데, 이들은 주로 자신들의 개인적 민원을 해결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위한 활동, 그리고 학교나 관청을 유치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개발 활동 등에도 참여하였다.²³⁸⁾

236)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성현, 「대구경북근현대연구소, 일제강점기 면장 휘장 발굴 설명회 가져」, 2020년 8월 11일자.

23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관보 제 917호, 237쪽, 1915년 8월 23일자.

238) 지수걸,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 2010, 156~180쪽.

2-2. 제주에서의 면제 실시: 행정구획과 면장 명단

일제강점기 지방 행정 정책으로 제주에서의 면제실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전국적으로 1913년부터 본격적인 지방 제도의 개편이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1914년에 부·군과 면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였다. 1915년 제주도와 울릉도에 도제(島制)를 실시하였고, 1917년 면제를 실행하였다. 1915년 총독부령 제44호에 따라, 제주군이 폐지되었으며 제주도로 개편됨에 따라 제주지방에는 도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이 개편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해당하였다. 이유는 두 섬이 교통과 통신이 불편함에 따라 다른 군과 달리 도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1917년 면제 실시 이후 수 차례 지방 제도 개편을 실시하였다. 1930년 「읍·면제」, 1933년 「도제」 실시를 통하여 읍·면과 도에 법인격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지방 제도가 근간이 되어 1945년 일제가 패망하여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존속하게 된다.²³⁹⁾

전 조선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제주에서의 면제실시 또한 지방 행정의 말단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면을 제도적으로 완비하여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면장을 통해 사회 전반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배의 도구로써 면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과 명망이 있는 유력자로서 제주 지역의 면장은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인 관리가 아닌 조선인 관리 특히 현지인 관리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시에 기존 리·동장제를 폐지하는 대신 구장을 두어 읍·면장의 명을 받아, 읍·면 사무 중에 해당 리와 동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구장제의 도입은 구장을 면의 직접 지휘하에 둠으로써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²⁴⁰⁾

제주지역에서의 면제 실시와 면장에 관한 정보는 일제강점기 생산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일제강점기 직원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제 식민 지배 당국의 관료나 학자들이 작성한 기록에도 관련 사항이 일부 들어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면의 명칭, 인구, 면적, 소속 리 등과 같은 사항이 수치로 공식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시각적으로 일제강점기 제주지역의 행정 구역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도 자료가 몇 개 있다.

면의 지위와 명칭과 관련하여 몇 차례 변동 사항이 있었다. 제주면이 일반면에서 지정면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제주면이 제주읍으로 승격되었다. 1935년 면 소재지와 면 명칭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일제강점기 지도로 <제주행정구역지도>와 <제주도관내도>가 있다.

239) 부만근,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162쪽.

240) 부만근, 위의 책, 168~170쪽.

다음의 <제주도행정구역지도>는 1930년대 제작된 지도이다. 앞면 지도에는 1935년 이전 제주도 면·리단위까지 행정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5-2〉 제주도행정구역지도²⁴¹⁾

<제주도행정구역지도>에 표시된 명칭이 제주읍이 아닌 제주면인 점, 신우면·구우면, 구좌면·신좌면, 서중면·동중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1920년대 제주도의 행정 체계와 상황을 보여준다.²⁴²⁾



〈그림 5-3〉 제주도관내도²⁴³⁾

241) 원래 지도에 면 행정구역 명칭을 추가함, 소장 및 제공: 제주교육박물관.

242)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고지도,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2020, 283쪽.

〈제주도관내도〉는 1930년대 후반 제작된 1:250,000 축적의 지도이다. 도청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표시되어 있으며, 도내 곳곳의 면과 면에 속한 리, 면 간 관내 거리까지 세세히 적혀있다. 신좌면에서 조천면으로, 정의면에서 성산면으로와 같이 1930년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반영되어 있다.²⁴⁴⁾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각 면별로 소속 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⁴⁵⁾

〈표 5-1〉 일제강점기 각 면별 소속 리 현황

면 명칭	소속 리	리 수
신좌면 (조천면)	조천리, 신촌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선흘리, 와흘리, 대흘리, 교래리, 와산리	10개 리
구좌면	동북리, 서김녕, 동김녕,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덕천리, 송당리, 평대리,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연평리	14개 리
정의면 (성산면)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수산리,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 삼달리, 신평리, 신천리	11개 리
동중면 (표선면)	표선리, 하천리, 세화리, 토산리, 가시리, 성읍리	6개 리
서중면 (남원면)	남원리, 태흥리, 신흥리, 의귀리, 수망리, 한남리, 위미리, 신례리, 하례리	9개 리
우면 (서귀면)	서귀리, 상호리, 하호리, 신흥리, 보목리, 토평리, 동흥리, 서흥리, 법환리, 호근리, 서호리	11개 리
좌면 (중문면)	중문리, 하원리, 도순리, 강정리, 월평리, 영남리, 대포리, 회수리, 색달리, 상예리, 하예리	11개 리
중면 (안덕면)	화순리, 감산리, 창천리, 상창리, 상천리, 광평리, 동광리, 서광리, 덕수리, 사계리	10개 리
대정면	상모리, 하모리, 인성리, 보성리, 안성리, 구역리, 동일리, 일과리, 영락리, 무릉리, 신도리, 신평리, 가파리	13개 리
구우면 (한림면)	한림리, 대림리, 수원리, 귀덕리, 상대리, 동명리, 상명리, 금악리, 월령리, 금릉리, 협재리, 웅포리, 저지리, 조수리, 낙천리, 청수리, 신창리, 두모리, 금등리, 판포리, 용수리, 고산리	23개 리
신우면 (애월면)	애월리, 광지리, 금성리, 어도리, 어음리, 남읍리, 상가리, 하가리, 소길리, 장전리, 고성리, 금덕리, 광령리, 상귀리, 하귀리, 수산리, 구암리, 신엄리, 고내리	19개 리
제주읍 (제주면)	일도리, 이도리, 삼도리, 건입리, 용담리, 화북리, 삼양리, 도련리, 회천리, 봉개리, 용강리, 월평리, 영평리, 아라리, 오등리, 도남리, 오라리, 연동리, 노형리, 도평리, 해안리, 외도리, 내도리, 이호리, 도두리	25개 리
추자면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리, 예초리	5개 리

243) 원래 지도에 면 행정구역 명칭을 추가함, 소장 및 제공: 제주교육박물관.

244)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고지도,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2020, 282쪽.

245)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103~104쪽.

다음은 총독부 직원록과 제주도 항일운동 관련 자료 및 제주 지역 향토지를 종합하여 정리한 제주 각 면의 면장 명단이다.²⁴⁶⁾

〈표 5-2〉 일제강점기 각 면별 면장 명단

면 명칭	면장 명단
신좌면 (조천면)	김찬수(金贊洙), 김형식(金溼植), 김수호(金修鎬), 김두식(金斗植), 김태호(金泰鎬), 한보권(韓保權), 김문희(金文熙), 고경찬(高京贊) 외
구좌면	양도철(梁道哲), 이원화(李元華), 강공칠(康共七), 고흥종(高榮鍾), 전인홍(全仁洪), 김창오(金昌五) 외
정의면 (성산면)	고승호(高承昊), 고명훈(高明勛), 김학보(金鶴寶) 외
동중면 (표선면)	김평염(金平琰), 현원석(玄元錫), 송인석(宋仁錫), 조범구(趙範九) 외
서중면 (남원면)	양인석(梁仁錫), 김병주(金秉柱), 김일화(金日華),李大志(李大志) 외
우면 (서귀면)	강응세(康應世), 송문준(宋文準), 김찬익(金贊益), 오용국(吳龍國) 외
좌면 (중문면)	김태혁(金泰赫), 좌운용(左雲龍), 김구하(金龜河), 김우종(金禹鍾), 강형규(姜衡奎), 이재교(李在喬), 이기휴(李基休), 김익준(金益俊), 이두백(李斗白), 윤성종(尹聖鍾) 외
중면 (안덕면)	김수병(金洙柄), 강성호(姜成鎬), 강두규(姜斗奎), 김봉규(金奉奎), 양제선(梁濟善), 오용국(吳龍國), 김영봉(金英鵬), 홍형문(洪亨文) 외
대정면	이성교(李成喬), 오기룡(吳基龍), 김태식(金泰植), 우영하(禹寧夏), 장응선(張應善), 김대유(金大有) 외
구우면 (한림면)	김승태(金昇泰), 임창현(任昌鉉), 김창우(金昶宇), 현주선(玄周善) 외
신우면 (애월면)	김희수(金熙洙), 문창래(文昌來), 김도현(金道鉉), 김익준(金益俊), 진철후(秦撤厚), 윤창언(尹昌彦) 외
제주읍 (제주면)	이양우(李陽雨), 홍종시(洪鍾時), 최이순(崔季淳), 강부갑자웅(岡部甲子雄), 창원태희(倉元太喜) 외
추자면	원용배(元容培), 김승배(金承培), 이동선(金東善), 김일화(金日華), 박승규(朴昇奎) 외

246)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103~104쪽.

3. 면 현황과 면장의 활동: 구좌·신좌·구우면

3-1. 구좌면: 중심인물을 통한 모범면(장) 만들기

3-1-1. 일제강점기 구좌면의 행정 현황

일제강점기 구좌면은 14개 리로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동복, 서김녕, 동김녕, 월정, 행원, 한동, 덕천, 송당, 평대, 세화, 상도, 하도, 종달, 연평리로 구성되었다. 구좌면은 교육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학교 설립이 일찍 이루어진 곳이며, 야학 등이 발달해서 여기서 수학한 해녀들의 항일운동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타 면에 비해 인구도 많은 편이었다. 일제강점기 구좌면의 인구수는 제주읍, 구우면, 신우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곳이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일제 강점 시기 보도된 주요 신문 기사 중에는 구좌면에서의 면장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서당개혁, 연초(煙草) 경작, 양력 실시 등 일제 당국의 지배 정책에 매우 협조적임을 보여주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해녀항일운동과 관련되어 면장의 역할과 한계가 일부 드러나기도 한다. 당시 구좌면장은 일제 당국에 의해 여러 차례 모범활동자로 인정받거나 공로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제주 13개 면에서 유일하게 신사가 두 군데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표 5-3〉 일제강점기 구좌면 인구수²⁴⁷⁾

연도 읍면	1920년	1930년	1935년	1940년	비고
구좌면	24,031	19,975	20,202	20,016	단위:(명)
제주도(전체)	188,645	208,331	207,220	213,947	
구좌면 비율	7.8	10.4	10.3	10.7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에서는 전염병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 9월 7일자 경찰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구좌면은 다른 면 지역에 비해 유독 전염병 발생 환자의 수도 많았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7) 제주도, 『제주록: 조선총독부관보중』, 경신인쇄사, 1995, 481~489쪽.

〈표 5-4〉 일제강점기 면별 전염병 발생 및 사망자 통계²⁴⁸⁾

면별	현 읍·면	발생 환자 수	사망자 수	비고
구좌면	구좌읍	4,591	2,027	단위:(명)
정익면	성산읍	295	154	
신좌면	조천읍	1,026	340	
제주면	제주시	371	113	
신우면	애월읍	1,687	666	
좌면	중문면	155	38	
서중면	남원읍	30	15	
구우면	한림읍	225	87	
동중면	표선면	40	15	
총계		8,420명	3,455명	

3-1-2. 일제강점기 역대 구좌면장

다음은 일제강점기 역대 구좌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초대 양도철(梁道哲, 재임기간:1906~1908) 면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2대 면장은 행원리 출신 이원화(李元華, 재임기간:1908~1913)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면의 행정은 사무소 없이 면장 자택 혹은 민가, 이른바 마을의 ‘도가집’에서 이뤄졌다. 첫 면 소재지는 행원리였다. 이원화 면장의 거주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한동리와 평대리로 옮겨지다가 4·3사건 이후 세화리로 이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송당리에는 이원화 면장 기념비가 남아있다.



면장 기념비(비문)

면장 기념비(전경)

〈그림 5-4〉 구좌면 이원화 면장 기념비

주) 2021년 11월 20일 저자 촬영, 구좌읍 송당리 산 153번지(가족공동묘지)

248) 구좌읍지편집위원회,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2000, 195쪽.

제3대 강공칠(康共七, 재임기간: 1913~1935) 면장은 역대 하도리장 명단에 초대 하도리 경민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온다.²⁴⁹⁾ 1901년 재임하기 시작했고, 이후 후임 경민장이 1906년에 재임한 것으로 보아 약 5년간 지금의 리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4대 고흥종(高榮鍾, 재임기간: 1935~1937)은 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교가 떠난 이야기에 향리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5대 전인홍(全仁洪, 재임기간: 1937~1945)은 일제강점기 말에 구좌면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제주도청에서 과장을 맡았으며, 해방 이후 제주도의회 의장과 제주도지사를 역임하였다.

〈표 5-5〉 일제강점기 구좌면 역대 면장 명단²⁵⁰⁾

구분	대수	성명	취임년	이임년	본적	기타
면장	1	양도철(梁道哲)	1906	1908	세화리	3년
	2	이원화(李元華)	1908	1913	행원리	4년
	3	강공칠(康共七)	1913	1935	하도리	21년
	4	고형종(高榮鍾)	1935	1937	평대리	3년
	5	전인홍(全仁洪)	1937.2.1	1945	월정리	7년

3-1-3. 구좌면 면장의 활동

논의에 앞서 미리 밝혀둘 것은 1910년대 면장의 활동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특정면이 아닌 전체 면장협의회에 관한 기사는 보도되고 있다. 1917년 면제 시행 이후 1910년대 후반부터 제주지역에서 몇차례 면장협의회(혹은 면장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1918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면장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면제 실시 이후 인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생활 상태에 관한 의견이 오고 갔다. 이후 제주도사가 훈시를 하였고, 각 면장들이 건의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923년 열린 제주도 면장회의에는 협의 안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장소는 제주도 청사 내에서 열렸으며,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도사의 훈시가 있었으며, 재무과(財務課)에서 주관하는 사무가 논의되었다. 이어서 권업과(勸業課) 관련 협의가 열렸는데, 두 번째 날에는 서무과 주관 사무협의, 법원 지청 판사와의 협의도 있었으며, 회의 마지막에는 도사의 폐회사가 있었다. 이 면장회의 개최 중 광주지방법원 지청장의 민적법(民籍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924년 면장회의에서는 좌면 중문리 사

249) 하도향토지발간위원회, 『하도향토지』, 태화인쇄사, 2006, 374~376쪽.

250) 부영성,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55쪽 ; 구좌읍지편집위원회,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2000, 700쪽.

숙(私塾)이 도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후원의 권위를 편의상 부여하기로 협정되었다. 면장 협의회에서 마을 관련 건의나 희망 사항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면장회의는 식민 당국에서 부여된 임무가 도를 정점으로 해서 각 면장들에게 전파되는 회의이자 공간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업, 재정, 사법과 관련된 분야의 부서에서 직접 면장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면장은 이에 대한 수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요구하고 협의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구좌면장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우선, 교육 분야와 관련되어서는 개량 서당과 학교 설립 관련 기사가 눈에 띈다. 1920년 구좌면 하도리에 진행되고 있는 서당 운영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기존 방식의 서당을 개량하여 보통학교 과정의 응용을 통한 교수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생도(生徒)의 수가 매우 많아지고 있음이 보도된다. 여기서, 기존 방식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한학으로 보이며 응용된 방식은 보통학교의 과정 응용이란 국어인 일본어와 실생활에서 필요한 계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⁵¹⁾ 이러한 교육 환경개선에 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구좌면은 교육열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산간 마을에도 사숙(私塾)이 없는 곳이 없으며, 사숙은 보통학교와 비교하여도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면민들은 또한 장래에 완전한 중등 교육기관의 설치를 원하고 있었는데,²⁵²⁾ 이러한 면민의 요구에 당시 강공칠 면장이 교육 관련 건의나 청원(請願)에 앞장섬으로써 면민들에게서 긍정적 평가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3년에도 구좌면 하도리 인사들의 교육열에 관한 보도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개량사숙을 설립하여 아동 교육에 힘써오던 중 교육 입학 지원자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바 지역 주민들의 발기로 사립보통학교 설립을 하기로 하였다. 마을 인사들이 금전 혹은 토지와 물품을 내어 놓았으며, 삼백 호 마을에 불과하지만 거액이 모여 주변 마을에 모범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²⁵³⁾

이와 관련하여, 하도초등학교 부근에는 고 강공칠씨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여기에는 원 사립하도보통학교 설립자 고 강공칠씨 기념비라는 비석명으로 “모든 어려움을 배제하여 이 학교를 창설하고 힘써 경영하여 반석 위에 올려 놓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51) 『매일신보』, 1920년 5월 20일자, 「제주도 서당 개혁」,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역사자료총서8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매일신보(이하 총서 8)』, 2019, 일신옵셋인쇄사, 130쪽.

252) 『매일신보』, 1922년 5월 24일자, 「제주 구좌면 교육열」, 총서 8, 200쪽.

253) 『조선일보』, 1923년 3월 25일자, 「하도리 인사의 교육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역사자료총서4,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조선일보(이하 총서 4)』, 2017, 일신옵셋인쇄사, 44~45쪽.



면장 기념비(비문)

면장 기념비(전경)

〈그림 5-5〉 구좌면 강공칠 면장 기념비

주) 2021년 11월 20일 저자 촬영, 구좌읍 하도초등학교

1920년대 초반에는 구좌면의 교육과 관련하여 서당 개혁, 개량 사숙, 보통학교 설립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좌면에서도 1920년대 중반이 되어 면제가 확립되고 면장 취임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면제가 공고화되고 면장의 활동이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1926년을 전후한 때는 구좌면장 강공칠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다. 다양한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모범면으로 보도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강공칠 면장 사진

매일신보 모범면(장) 기사

〈그림 5-6〉 구좌면 강공칠 면장 사진 및 신문기사

주1) 하도향토지, 646쪽.

주2) 매일신보, 1926년 6월 8일 기사 2면 3단, 국립중앙도서관

1926년 당시 구좌면 하도 청년회에서 일반사회 사업으로 어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어업의 부진을 타개하고자 자본금 9천 원으로 장비나 시설을 매입하고 이를 부산과 목포에 반출하였다. 또한 일반 어부들에 대해 자금을 융통하는 사업의 장래가 유망하였는데, 이 사업의 중요 간부를 강공칠 면장이 맡았다.²⁵⁴⁾

1926년 '전조선 모범면 순례'라는 특집 연재 기사로 <철두철미 면무 쇄신에 앞장서는 제주 구좌면장 강공칠씨의 공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있을 정도로 강공칠 면장은 당시 면장 활동을 왕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²⁵⁵⁾

1926년 제주도 연초(煙草) 경작 확장 계획이 발표되었다. 연초 경작지를 확장하려는 계획은 당시 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 전체 900여 정보를 확장하기로 하였다. 구좌면은 일백칠십여 정보를 배정 받았으며, 구좌면장 강공칠이 그 배정 받은 면적을 면민에게 배당하는 데 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²⁵⁶⁾

192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구좌면장의 활동과 성과는 일제 당국에 의해 신망을 받고, 그 행정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1930년 1월 30일자 관보에 따르면, 칙령 제188호에 근거하여 제주지역 면장들 일부에게 '대례기념장'이 수여되었다.²⁵⁷⁾ 대례기념장이란 일제강점기 내려졌던 상훈의 일종으로 기념장이다. 기념장(記念章)이란 국가적 행사 참가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훈국이 발행하였던 것으로 대표적으로 한국을 병탄 일여 기여한 이들에게 주었던 한국병합기념장, 천황의 즉위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내리는 대례기념장이 있었다. 대정대례기념장은 대정 4년(1915) 이른바 다이쇼 천황 즉위식에 참여한 이들에게 수여하였고, 소화대례기념장은 소화 3년(1928) 이른바 쇼와 천황 즉위식에 참여한 이들에게 수여하였다. 여기에 구좌면장 강공칠이 포함되었다.²⁵⁸⁾

반면 면장이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였느냐라는 질문에는 해녀항일운동에서의 면장의 역할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구좌면에서 일어난 해녀항일운동은 일제강점기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었으며 육지에서 응원 경찰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해녀 항일운동의 주도자였던 김옥련은 당시 하도리는 강공칠이 구좌면 면장이면서 해녀조합의 지부장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실을 우선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⁵⁹⁾ 해녀항일운동은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 구좌면에 평대 지부장을 면

254) 『동아일보』, 1926년 2월 3일자, 「제주하도청년회...」,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역사자료총서1(이하 총서 1),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동아일보, 2016, 일신출판인쇄사, 2016, 293쪽.

255) 『매일신보』, 1926년 6월 10일자, 「전조선모범면순례」, 총서 8, 412쪽.

256) 『매일신보』, 1926년 12월 20일자, 「제주도 연초경작 확장계획」, 총서 8, 449쪽.

257) 『조선총독부 관보』, 1930년 1월 30일자.

258) 1928년 칙령 제188호의 뜻에 의하여, 1928년 11월 16일 대례기념장을 받은 면장의 명단이 나와있다. 여기에는 신유면장 김도현, 서중면장 김병주, 동중면장 현원석, 추자면장 이동선, 대정면장 김태식, 구우면장 김창우, 구좌면장 강공칠, 좌면장 김익준, 우면장 송문중, 정의면장 고명훈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읍장과 신좌면장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나 그 이유는 불확실하다. 또한 이 기념장은 원래 천황 즉위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포함된 면장 모두가 즉위식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제주도, 『제주록: 조선총독부관보중』, 1995, 186쪽.

담하려고 세화리까지 갈 무렵 강공칠 면장이 나타나 해녀들을 인근 밭에 모아놓고 요구 사항을 들어준다고 하고 헤어졌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때 신임 도사 겸 제주도해녀조합장이 1월 24일에 경찰관 세화 주재소와 구좌읍사무소에 초도 순시가 있으니, 해녀들의 요구 사항을 알리는 면담을 알선하겠으니 양해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지만 그 이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거나 해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⁶⁰⁾

강공칠은 면장 퇴임 이후 면협의회에도 당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동아일보 1935년 6월 2일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당선된 면협의회원이 면별로 소개되고 있다. 여기에 구좌면에서는 한철필, 강영효, 김성종, 강공칠, 김용승, 오은호, 김시화, 고평호, 김호진, 윤철, 김유정이 당선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²⁶¹⁾ 면장 활동 이후에도 면 협의회원으로 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 시기 선거는 여러 가지로 면민들의 참정권이 실제로 제약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1935년 10월 1일에는 다년간 직무에 정려각근(精勵恪勤) 종사하며 그 직책을 다하여 성적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관리에게 조선총독부 시정(始政) 25주년에 당하여 은배 1조(銀杯 1組)를 수여하였는데, 여기에도 구좌면장 강공칠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공칠 면장의 활동을 통해,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면장으로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마을 단위에서 하도리의 구장을 역임했다. 이후 면장의 취임하게 된다. 면장 취임 이후 일제강점기 식민 당국의 행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는 일제 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포상을 받으며 그 협력의 성과가 인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된 민선 면 협의회에서도 당선되며 면장 시기 활동에 대한 면민의 평가가 결과적으로 부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구좌면의 행정을 이어받은 면장은 고평호이다. 그러나 고평호 면장에 관한 기사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에는 전인홍이 구좌면장을 맡게 된다. 1938년 초 전인홍 구좌면장은 양력 사용을 장려하는 선전물을 배포하였으며 이를 위해 긴급 구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100%의 좋은 성적을 얻었으며, 연중행사로 치러지는 마을 포제의 경우도 구정 초정일이 아닌 때에 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²⁶²⁾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1930년대 이후 구장의 역할과 면장과의 관계이다. 구장은 마을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면장과의 관계에서 면장이 내리는 지시 사항을 수직적으로 받아들여 리민들에게 행하는 보조자이자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된다. 면장은 이에 따라 면내 리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줄이면서 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면내 리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59)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운동실록』, 31쪽; 87쪽; 106쪽.

260)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2004, 135~164쪽.

261) 『동아일보』, 1935년 6월 2일자, 「당선 면협의회원 제주도」, 총서 1, 739~740쪽.

262) 『매일신보』, 1938년 1월 25일자, 「제주도 구좌면 양력 실시 철저」, 총서 8, 733쪽.

1939년 3월 2일에는 전인홍 면장 외 다수 유지들의 청원으로 식민 당국이 신사(神社) 설립을 허가하였다. 신사 역시 다른 기구나 시설처럼 식민 당국에 청원을 함으로써 설치 가능하였다. 특이한 점은 일제강점기 도내 13개 면 중 유일하게 한 면에 신사가 두 개 설치되었던 곳이 구좌면이었다. 첫 번째는, 구좌면 세화리 신명신사 설립의 건, 두 번째는, 구좌면 김녕리 신명신사 설립의 건이 허가되었다.²⁶³⁾ 당시 신사는 제주도사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막대한 재정을 들여 신성한 신앙처로 조성되었으며, 도내 식민지 교육기관과 함께 신사 참배가 이뤄지고, 제사 의식이 치러졌다.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제주도민, 해당 면민에게 주입되는 공간이었다. 이 때문에, 일제의 통치에 분노했던 면민들이 해방 직후 신사를 불태우거나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몇몇 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해방 직후 면장이 면민들에 의해 구타당하는 일도 있었으나 구좌면에는 이러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사의 설립과는 별개로 1940년대 막바지에도 교육 확대를 위한 활동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 5월 20일 당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세화 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고 같은해 6월 5일 개교하였다. 당시 구좌면 관내에서는 김녕리에 공립보통학교가 하도리 및 월정리에는 사립보통학교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세화리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시 구좌면장 전인홍과 세화리 구장 김시화를 중심으로 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지고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하고 기부받아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후 학교 설립에 공헌한 인사로 전인홍(全仁洪)이 소개되어 있다. 설립 당시 구좌면장으로 재임 하였고 학교설립추진위원회 대표로서 설립인가 등 학교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50년대에는 제주도의 회 의장과 제주도지사를 역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⁶⁴⁾

구좌면의 경우 일제강점기 타 면에 비해 적극적 행정을 실현한 곳이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구좌면 전체적으로 교육열이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교육 시설의 적극적 설립과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면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면장에 대한 평가도 외견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식민 당국에 의해 면장의 활동에 대해 포상을 받기도 하였고, 면민들에 의해 면 협의회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조합을 통한 수탈에 면민들을 반대했다. 해녀 항일운동 당시 면장은 면민들의 저항에 힘을 보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면장이 갖고 있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인홍 면장의 사례는 수탈이 상대적으로 심했던 일제강점기 말기 면장 활동을 하였지만, 해방 이후 공직 생활도 가능했으며,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와 같은 왕성한 정치적 활동도 가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기 면장의 의미 고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63) 강동식·강영훈·황경수 공저, 『일제강점기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261~263쪽.

2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떠난 우리고장 이야기 제주시 IV 구좌읍·조천읍』, 2014, 208~210쪽.

3-1-4. 소결론: 중심인물을 통한 모범면(장) 만들기

강공칠 면장은 외견 면민 투표에 의해 주민의 지지 속에서 면 협의회에 당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시 면 협의회 선거는 일종의 제한 선거였다. 특별한 인물, 특정한 수준 이상의 재력이 있는 자들만 투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민주적 대표 현상은 1926년 열린 면 협의회 투표 선거 인원과 전체 인구 비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구좌면의 교육 열기도 강공칠 면장의 개인의 역량과 의지의 결과는 아니다. 면민과 리민의 집단적 요구가 있었으며, 면장은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면장은 일제 지배의 효율적 수단이었다. 단지 면장으로서 이에 적극 부응한 인물이 강공칠 면장이었다. 그는 식민 당국에 의해 선택받은 중심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제의 지방지배정책 실현을 위한 일방적 인사일 뿐이다. 이를 통해 구좌면이 모범면이 되고 자신은 각종 포상을 받으며 일제의 의해 모범면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강공칠은 식민 당국의 시각에서 모범면장이자 결코 면민에게 모범면장은 아니었다. 식민 당국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받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힘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면민을 상대로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강제적이며 억압적인 행정을 실현하였다.

요컨대, 당시 강공칠 면장은 당국에 절대적 복종을 보인 전형적이고 이상적 면장이었다. 이 일방적 식민 기억이 담긴 비석이 존재하였다. 이는 곧 사후 미화 내지 친일적 활동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향토지에는 친일 성격의 행적은 누락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긍정적 활동만 소개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향토지에는 강공칠 면장에 대한 칭찬 일색의 서술이 이뤄졌고, 심지어 그들의 후손이 현재에도 잘살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의 논리가 이후 면장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인홍 면장의 경우도 일제강점기 면장 이력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정치적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도 이 지점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3-2. 신좌면: 계속되는 지역유력인사 포섭하기

3-2-1. 일제강점기 신좌면의 행정 현황

일제강점기 신좌면은 10개 리로 이루어졌다. 당시 10개 마을은 조천, 신촌, 신흥, 함덕, 북촌, 선흥, 와산, 대흘, 와흘, 교래리이다. 제주도 항일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가 신좌면과 구좌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신좌면과 구좌면이 각각 조천 만세운동과 해녀 항일운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신좌면은 현재 제주항일기념관의 소재지이다. 1905년에서 1945년 사이 독립 유공자 출신 지역의 분포 상황을 확인한 결과 147명 중 38명이 신좌면 출신일 정도였다. 1919년 조천 만세운동 이후에도

1920~1930년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신좌면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²⁶⁵⁾

신좌면은 조선시대 관영(官營) 포구가 운영되었고 이러한 점에 기인해서 여러 면에서 개방적인 공간이었다. 육지와 바다 연결로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유배를 받은 사람들이 오면서 학문이 발달할 수 있었으며, 부임하거나 퇴임하는 관리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고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신좌면의 유력자 집단은 식민 당국의 문화 정책에 적응·동화하거나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해 항일운동에 참여하는 부류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제강점기 신좌면장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6〉 일제강점기 신좌면 인구수²⁶⁶⁾

읍면 \ 연도	1920년	1930년	1935년	1940년	비고
신좌면	17,049	15,613	14,897	15,693	
제주도(전체)	188,645	208,331	207,220	213,947	
신좌면 비율	11.1	13.3	13.9	13.6	

1920년 1월 13일 전라남도 고시 제74호에 의거 면제 시행 규칙 6조에 근거하여 관내 각 면의 인구를 인정하였다. 신좌면은 당시 인구로 17,049인이 인정되었다. 〈표 5-6〉은 일제강점기 신좌면의 인구 통계이다.

3-2-2. 일제강점기 역대 신좌면장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신좌면의 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초대 신좌면장은 김찬수(金贊洙, 재임기간:1912~1914)이다. 초기 신좌면장은 주로 조천리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김수호 면장을 제외하면 재임 기간이 대부분 2년 정도로 짧은 편이었다. 2대 김형식(金滢植, 재임기간:1914~1916), 3대 김수호(金修鎬, 재임기간:1916~1922), 4대 김두식(金斗植, 재임기간:1922~1924), 5대 김태호(金泰鎬, 재임기간:1924~1926) 역시 조천리 출신이었으며 재임기간이 대부분 2년 내외였다. 6대 면장 한보권(韓保權, 재임기간:1926~1935)은 함덕리 출신으로 10년 동안 면장 활동을 하였다. 조천리 출신 7대 김문희(金文熙, 재임기간:1935~1940)가 5년간 면장 활동을 하였다. 해방 직전까지는 북촌

265) 강만익,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탐라문화』 57, 2018, 273~306쪽.

266) 제주도, 『제주록: 조선총독부관보중』, 1995, 481~489쪽.

리 출신 고경찬(高京贊, 재임기간:1940~1945)이 8대 면장으로 재임하였다.

김형식은 1914년부터 3년간 신좌면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동생과 조카 등은 모두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김형식의 당숙 김문희도 신좌면장으로 재임했다. 김형식의 후임인 김수호도 6년간 신좌면장으로 재임하였는데, 그의 아들 김시철(金時喆)역시 광주 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학생 항일운동에 가담하였다. 1924년부터 1년 반 가량 재임한 김태호 면장의 아들 김시용(金時容)은 항일운동으로 일관하다 해방을 맞기 직전 목포 형무소에서 옥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 가족 사이에서 친일과 항일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대표적 지역이 신좌면이었다.²⁶⁷⁾

〈표 5-7〉 일제강점기 신좌면 역대 면장 명단²⁶⁸⁾

구분	대수	성명	취임년	이임년	본적	기타
면장	1	김찬수(金贊洙)	1912. 1	1914.12	조천리	2년 11개월
	2	김형식(金溎式)	1914.12	1916. 1	"	1년 1개월
	3	김수호(金修鎬)	1916. 1	1922. 5	"	6년 4개월
	4	김두식(金斗植)	1922. 5	1924.10	"	2년 5개월
	5	김태호(金泰鎬)	1924.10	1926. 4	"	1년 6개월
	6	한보권(韓保權)	1926. 5	1935. 4	함덕리	8년 9월
	7	김문희(金文熙)	1935. 5	1940. 3	조천리	4년 10개월
	8	고경찬(高京贊)	1940. 4	1945. 8	북촌리	5년 4개월

3-2-3. 신좌면 면장의 활동

다음으로는 면장의 활동을 담은 신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17년 면제 실시 직후 신좌면장 김수호가 부식물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자가 소장해오던 감저종(甘藷種子) 삼십 석을 일반 국민에게 대부해주었다. 당시 지방 유력자들이 집합하여 식림에 대해 상당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주재소 감독 순사들의 입회하에 진행되었다.²⁶⁹⁾ 면제 초기 면장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졌으나 실제에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행정 보조로서 순사들이 면장의 행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 집행에 순사를 동원한 강압적 분위기의 1910년대와는 달리 1920년대는 신좌면 민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좌면 조천리에서 지역 유지들의 발

267) 김동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27, 2008, 63~92쪽.

268) 제주도, 『조천지』, 1976, 76쪽 ;김민주 편저, 『朝天邑誌』, 제주문화원, 1991, 38~39쪽, 면장의 활동 연도와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읍지에 나오는 임기와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 여기에서는 명단은 읍지를 참고하되, 활동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69) 『매일신보』, 1917년 3월 27일자, 「제주: 부식물재배 장려」, 총서 8, 77쪽.

기로 청년운동회가 죽도 광장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²⁷⁰⁾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조천 공립보통학교의 보습과를 증설하기 위해 다수의 기부를 모집하였고, 함덕리에서는 교육진흥회장을 포함한 유지들의 발기로 부설 학교를 신청하였으며 여기에 지역 유지이자 면장 출신 김두식과 김수호가 발기하였다.²⁷¹⁾

신좌면의 경우 면장 출신 대부분이 지역 유지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 모금, 행사 개최, 상업 행위 등에서 면장 출신 인물들이 상당한 경제적 기부를 행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적 영향력은 1920년대 조천 우편소 신설, 조천 공의(公醫) 배치 청원과 같은 면민들의 필요에 의한 시설이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던 원동력으로 보인다.

대표적 유지 출신 면장 중에는 김태호와 한보권이 주목된다. 김태호는 면장 활동 전후로 당시 신문 기사에 중요한 인물로 보도되고 있었다. 김태호는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지역 실업가로서 조천에 병원과 회사를 유치하였으며, 목화직조회사(木花織造會社)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을 모집하기도 했다.²⁷²⁾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 김태호는 제주도청 학교평의회 의원으로서 서당 개량을 통한 교육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²⁷³⁾ 뿐만 아니라 조천 공립보통학교 학년 연장 인가 후 부족한 경비에도 김두식과 함께 이십원을 내놓았다.²⁷⁴⁾ 무역 분야와 관련해서도 대판(大阪)²⁷⁵⁾ 향로의 개척, 관세의 완화, 성산항의 무역항 개장의 기회를 이용하여 대판에 가서 무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²⁷⁶⁾ 김태호는 해녀 어업과 관련하여 도 당국의 협력을 얻어 제주 해녀조합을 설립하여 제반 편리를 도급하는 결과 소위 물주 객주배의 고리대금과 무리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였다.²⁷⁷⁾ 지역 유지로서 경제, 교육, 무역 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신좌면에서는 지역사회 시설과 관련한 우편소 신설 운동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5년 신좌면에 조천 우편소 신설되었다. 당시 조천리가 제주 최고의 상업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통신 기관이 불편해 일반인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던 차 면장 김두식의 노력에 의해 면리 인사들과 협의하여 기세비를 나누고 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태호 면장도 우편소 신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보권도 지역 유지로서 면의 교육 활동과 경제적 개발에 크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보권은 면장이 되기 전 이미 기사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영향이 큰 유지인 것이 확인되는데, 함덕리 해안 부근에는 개척되지 않은 공유수면 만여 평에 대해 관련 주민과 원만히

270) 『매일신보』, 1921년 6월 12일자, 「제주운동의 성황」, 총서 8, 164쪽.

271) 『매일신보』, 1924년 6월 15일자, 「신좌공보교 진전」, 총서 8, 291쪽.

272) 『매일신보』, 1918년 1월 20일자, 「제주: 직조회사계획」, 총서 8, 85쪽.

273) 『매일신보』, 1921년 3월 31일자, 「지방통신: 제주서당 개선안」, 총서 8, 155쪽.

274) 『동아일보』, 1926년 6월 25일자, 「조천공보 학년연장 허가 다수 동정으로」, 총서 1, 314쪽.

275) 대판(大阪)은 현재의 일본 오사카 지역 일대를 말한다.

276) 『조선일보』, 1923년 4월 29일자, 「일본무역의 초보」, 총서 4, 65~66쪽.

277) 『조선일보』, 1923년 5월 14일자, 「제주 해녀의 고통과 가장 어업조합원의 무리」, 총서 4, 78쪽.

협의를 한 후 당국에 출원(出願)하여 매립 허가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온다.²⁷⁸⁾ 이때 한보권은 면장은 아니었으나 지역 관련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한보권 면장 취임 이후 구체적 활동은 신좌면 공의 배치 청원이다. 공의 배치를 청원하는 내용의 기사 속에는 신좌면장, 조천 우편소장, 신좌면 협의회 대표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 신좌면은 호수가 삼천팔백여 호, 인구가 약 일만 오천 명이며, 서쪽으로는 제주 읍내까지 삼리를 격하고 있었고, 동쪽으로 호수가 사천여 호 인구가 약 이만여 명 되는 구좌면과 상접(相接)한 지역이었다. 개항이 되어 날로 발전되어 오는바 조천 의원이라는 사립병원이 있다가 폐원되는 바람에 일반 주민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많았기에 공의 설치원을 도 당국에 제출한 것이다.²⁷⁹⁾

이처럼 1920년대까지는 면민들의 요구와 식민 당국의 의도가 일정 부분 합치하는 한에서 면장들은 그 중개자로서 나름의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후에도 이런 면장의 공적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내려졌다.

한보권 공덕비에는 면장을 11년 동안 역임하면서 행한 지방 발전 업적이 후배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공립보통학교 창설을 획책하여 학교 부지를 자진 기증함과 아울러 기성회 초대 회장에 피선되어 많은 계획과 노고로 결국은 학교를 설립하고 함덕리 출신 아동들이 초등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면장 공덕비(앞면)



면장 공덕비(뒷면)

〈그림 5-7〉 신좌면 한보권 면장 공덕비

주) 2021년 11월 20일 저자 촬영,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278) 『매일신보』, 1925년 5월 22일자, 「제주 함덕 방축공사 매립에 착수」, 총서 8, 358쪽.

279) 『조선일보』, 1929년 4월 19일자, 「공의배치청원 제주조천에서」, 총서 4, 372쪽.

하지만 1920년대와 달리 1930년대부터는 면사무소에 의한 기타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축산조합비 부정 징수가 면사무소의 책임이다라는 기사로 축산조합비를 부정하게 증수(增收)하고 독촉하는 면장을 면민들이 비난하였다. 이에 면장은 이 부정이 구장의 책임이라고 기자에게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기자가 기사를 내리기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²⁸⁰⁾ 1930년대는 일제가 본격적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고, 이것의 일환으로 제주도에서도 목장 조합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종래 구좌면 소유의 목야지는 육백 정도였다. 이에 추가로 면민 소유 사만정보 이상의 목야지를 매수하여 우마 방목지로 정하고 시설 방법을 면장 한보권이 면민과 연락을 취하며 계획하였는데 이 또한 면민들의 반발을 샀다.²⁸¹⁾ 1930년대 면장은 관제 조합을 통해 면민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징수를 하여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산 것이 여러 차례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년대 후반부터 수탈의 기구가 되었던 제주도 농회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5년 제주 신좌면에서 구약(蒟蒻)²⁸²⁾ 재배 장려가 이뤄졌다. 도 농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홍보했고, 면장 김두식이 종식하였는데 성적이 타 농산물에 비해 약 2배 이상이었다. 일반 면민에게도 권고하여 종자를 공동 구입하여 심었으며, 농회 계원들이 출장하여 지도를 하였던 데, 구약 재배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²⁸³⁾

위 사례와 같이 농회²⁸⁴⁾의 초기 핵심 사업은 농·축산 분야에서 다양한 상품작물의 재배를 장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전시 체제 수탈을 시작하며, 면작, 양잠, 축산 증산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농회 조직의 운영에서도 면장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농회의 의사결정은 통상총회에서 결정된다. 여기에는 회장, 부회장, 특별위원이 참여하는데, 군도 농회의 경우 회장은 군수 혹은 도사, 부회장은 민간의 유력자가 맡는다. 이사는 권업과장, 감사는 서무 주임이 맡게 되며, 통상의원(평의원)에는 각 면장이 임명되었다. 농회는 면에 지회 또는 분구를 설치하였는데, 분구장 또한 면장이 겸직했다. 일반 농업의 장려뿐만 아니라 제주도 농회에서는 육지면(陸地棉) 우량품종 보급이 활발히 이뤄졌는데, 여기에는 읍면장, 면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통상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통상의원(면장)들은 공업용 알콜 원료로 이용되는 감저 재배를 특수사업으로 장려하고 생산 실적의 증감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280) 『조선일보』, 1931년 11월 1일자, 「축산 조비 부정 징수는 면사무소의 책임」, 총서 4, 505~506쪽.

281) 『매일신보』, 1934년 1월 25일자, 「제주 신좌면서 대목축을 경영」, 총서 8, 624쪽.

282) 천남성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서 담(痰)을 삭이고 여혈(瘀血)을 푸는 효과가 있으며 타박상(打撲傷), 종창(腫瘡), 담수(痰嗽), 적체(積滯)를 치료하는 약재임, 표준국어대사전 및 한국전통지식포털.

283) 『매일신보』, 1925년 7월 17일자, 「제주 신좌면에서 구약재배장려」, 총서 8, 368쪽.

284) 제주도 농회 공식 설립과 허가는 1926년 이뤄졌는데, 1925년대에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농회 하부 조직으로 제주도 농회가 실질적으로 있었으나, 본격적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농회 조직의 설립 청원과 허가는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강동식·강영훈·황경수 공저, 앞의 책, 147쪽~148쪽.

것으로 보인다.²⁸⁵⁾

신좌면의 경우 지역의 유력한 인사가 면장으로 임명되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대표적 인물로 김태호와 한보권을 들 수 있었다. 김태호의 경우 지역의 유지로서 각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경제 활동을 주도한 인물이었으며, 한보권 역시 지역의 경제적 유력자였다. 이는 조천 만세운동 이후 지역 면민들의 불만 내지 반일 활동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920년대 일제의 면 정책과 면장 선임이 지방의 원만한 지배 질서를 구축함에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위해 지역의 유력자를 면장에 활용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930년대 이르러 신좌면장 한보권의 조합을 통한 수탈과 일방적 정책 진행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제의 지배정책이 초기 의도와는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면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이어지자 그 불만이 면 행정과 면장에 대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3-2-4. 소결론: 계속되는 지역유력인사 포섭하기

신좌면은 제주에서 3·1 만세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곳이다. 3·1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제의 지배정책을 강압적 정책에서 유화적 정책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 세력에 대한 강력한 억압 대신 참여와 일정 수준의 자율적 활동을 용인했다.

신좌면장 김태호를 중심으로 해녀 조합을 만드나 곧 식민 수탈기관이자 어용 조합이 된다. 일정 부분은 면민의 보호를 위한 의도와 달리 식민 당국에 의해 바로 수탈 기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신좌면은 항일과 친일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적극적 항일인사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항일인사의 가족 중에는 면장이 된 이도 다수였다. 또한 면장끼리는 친척관계로 뒤섞이며 항일과 친일의 경계를 흐려 보이게 했다.

1920년대 이후 신좌면 면민의 요구와 식민 당국 이해가 일부 맞아 떨어지는 시기에는 면장의 역할이 일정 부분 강조되기도 한다. 신좌면에서 우체국 설치가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수탈의 본격화와 중일전쟁 시작에 따른 동원체제 실시에 따라 식민 지배의 본격적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 시기 1930년대 한보권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 일정 정도 지역 유지 포섭에 성공하였고, 이후 면장으로 활동하는 김문희의 경우 해방 후에 도청 관료가 되기도 하였다.

유지의 잦은 교체는 식민 당국에 의한 나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많은 사람을 고위 관직에 등용하는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유지를 친일 혹은 식민 당국에 협력하게 유도함으로써 민족 분열을 교묘하게 유도한 것이다.

285) 강만익, 「일제하 제주도농회의 운영 실태와 성격」, 『탐라문화』 38, 2011, 198~202쪽; 208~218쪽.

신좌면 면장의 활동을 살펴보면 일제에 의한 계속되는 지역 유지 포섭하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3. 구우면: 식민지배와 이어지는 면민 저항

3-3-1. 일제강점기 구우면의 행정 현황

연구 대상의 한 지역으로 구우면의 연혁과 개요를 살펴보겠다. 일제강점기 당시 구우면은 한림, 대림, 수원, 귀덕, 상대, 동명, 명월, 상명, 금악, 월령, 금릉, 협재, 옹포, 저지, 조수, 영락, 청수, 신창, 두모, 금등, 판포, 용수, 고산리의 23개 마을로 이루어졌다. 마을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읍과 더불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이후 제주면이 곧 지정면 그리고 읍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 내 일반면 중에는 구우면이 가장 많은 인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8〉 일제강점기 구우면 인구수²⁸⁶⁾

연도 읍면	1920년	1930년	1935년	1940년	비고
구우면	27,280	29,118	29,926	31,275	
제주도(전체)	188,645	208,331	207,220	213,947	
구우면 비율	14.5	14.0	14.4	14.6	

제주지역 근대 역사문화 시설에 관한 연구 중 근대 시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구우면이 조사되었다. 일제강점기 축조된 향만 시설에 인접한 마을 주변에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있었는데, 특히 구우면은 이 연구의 대상 64곳 중 16곳이나 포함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⁸⁷⁾ 따라서, 구우면에서 일제강점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데에는 면장의 활동이 타 읍·면보다 활발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면민들의 요구와 수용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호 작용 과정이 신문과 같은 각종 자료에 남아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위한 면장의 활동과 주민의 역할과 떠안아야 했던 부담을 파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식민당국의 중간 지점에서 역할을 했던 면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구우면에서는 한림향과 같은 기반 시설 개발이 이뤄졌다. 또한, 지역 면민들에 의해 구우면장이 배척받아 면장이 새로 임명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86) 제주도, 『제주록: 조선총독부관보중』, 1995, 481~489쪽.

287) 문순덕, 「제주지역의 근대 역사문화 시설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 『海峽圈研究』 14, 2014, 133~149쪽.

1915년 제주도에 도제(島制)가 실시됨에 따라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기존 제주목 구우면이 제주도 구우면으로 바뀌었다. 1935년 4월 1일부터 제주도 구우면이 제주도 한림면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1946년 도제(道制)가 실시되어 제주도(濟州島)가 제주도(濟州道)로 바뀌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두게 되면서, 제주도 북제주군 구우면이 되었다. 이후 1956년 구우면이 폐지되고, 한림읍과 한경면으로 각각 분리되었다. 일제강점기 구우면의 면사무소는 몇 차례 이전을 거듭했다. 풍헌 시대에는 풍헌의 자택에서 면 업무를 맡아 보다가, 면장제로 바뀌자 명월 성내의 사환 곡창 일부를 면사무소로 사용했다. 1928년 임창현 면장이 면사무소를 옹포리로 이전하였다. 1936년 김창우 면장은 면사무소 소재지를 한림리로 옮기게 되었다.

3-3-2. 일제강점기 역대 구우면장

일제강점기 구우면장을 지낸 인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초대 면장으로는 수원리 출신 김승태(金昇泰, 재임기간:1909~1913)가 임하였다. 2대 면장으로는 대림리 출신 임창현(任昌鉉, 재임기간:1913~1928)이 부임하였고, 15년 가까이 면장으로 활동하였다. 3대 면장으로는 귀덕리 출신 김창우(金昶宇, 재임기간:1928~1945)가 부임하였는데, 역시 17년이라는 비교적 오랫동안 면장으로 활동하였다.

〈표 5-9〉 일제강점기 구우면 역대 면장 명단²⁸⁸⁾

구분	대수	성명	취임년	이임년	본적	기타
면장	1	김승태(金昇泰)	1909.6.13	1913.5.19	수원리	3년 11개월
	2	임창현(任昌鉉)	1913.5.20	1928.7.29	대림리	15년 2개월
	3	김창우(金昶宇)	1928.7.30	1945.11.29	귀덕리	17년 4개월

2대 구우면장을 역임한 임창현은 해방 후에 당시 64세 나이로 독촉 북제주군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2019)에 따르면, 4·3사건 당시 우익단체 희생자 피해 내역 중 초기 무력 충돌 시기인 5월 14일 임창현 전 구우면장이 희생된 것으로 나온다. 아마도 친일의 경력, 단독 선거 참여 이력 등으로 무장대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정된 살해의 이유 중 친일의 경력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3년에서 1928년까지 구우면장을 역임한 임창현은 그 기간 중 무정부주의를 신봉하던 그의 아들인 임상국(任祥國)이 1930년 항일 비밀결사인

288) 제주도, 『한림읍지』, 전문인쇄사, 1963, 183~184쪽 ; 한림읍장·한림지 편찬위원회, 『한림읍지』, 신명인쇄사, 1999, 1286~1289쪽.

우리게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 당국에 협력 내지 부응 했던 개인적인 상황에서 가족인 아들은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다. 임창현 면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창우 면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창우의 아들 김대원(金大元)은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에 학생 항일운동을 주도해 실형을 받은 독립 유공자이다.²⁸⁹⁾

3-3-3. 구우면 면장의 활동

다음은 시기별로 일제강점기 당시 신문에 구우면과 구우면장의 활동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임창현 면장은 1913년에 취임하여 1928년까지 활동한다. 임창현은 당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제주 면업주 식회사 감사역, 제주 통운주식회사와 제주통신주식회사의 취체역(取締役)을 맡았다.

취임 초기라 할 수 있는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초 임창현 면장은 교육과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당시 면장으로서 보명서숙을 신설하였는데, 면민 자제들의 학문하는 열기는 더욱 올라서게 된다. 이에 면민들이 노력한 결과 일면 공동 기부로 연 사백팔십원의 경비 지출이 확정되었고, 학도의 수가 매우 늘어나게 되었다.²⁹⁰⁾ 교육 분야에서 임창현 면장의 활동은 이후 이를 기리기 위한 공적비에서도 잘 나와있다. 임창현의 기념비는 전면에 ‘전면장임창현기념비’라 적혀있으며, 비문의 내용은 “소나무밭을 내어놓아, 먼저 학업을 권장하셨네, 이에 하나의 빛돌에 드러내니, 밝은 덕 없어지지 않으리”²⁹¹⁾라는 내용으로 학교 설립에 부지를 기증한 것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우면에는 대림리, 후면에는 소화 12년 4월이라 적혀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임창현 면장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녀 어업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임창현은 사업확장을 주장하였고, 일부 타 지역 면장들이 찬동하였다.²⁹²⁾ 임창현 면장은 해녀 어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타 지역 상대 면장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면장으로서 당해 지역 면의 활동뿐만 아니라 도내 면장들 사이에서도 개발 추진과 사업확장에 관한 추진력에 대해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창현은 일제강점기 제주 면장 중 산업 분야, 금융 분야, 상업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한 것이 다수 기사에서 확인된다.

이에 일제 당국에서는 구우면을 모범면으로 소개해 많은 시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89)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95쪽.

290) 『매일신보』, 1918년 4월 14일자, 「제주:…보명서숙 중흥」, 총서 8, 93쪽.

29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한림읍 역사문화지』, 2014, 194~196쪽.

292) 『매일신보』, 1923년 8월 3일자, 「제주도의 해녀어업회의」, 총서 8, 237~238쪽.

7일 소화(昭和) 운송주식회사의 취체역이었던 김창우(金昶宇)는 1940년 2월 23일 창씨개명에 의하여 김택창우(金澤昶宇)로 변경하여 등기되어있었다.²⁹⁵⁾ 또한 관직 생활을 영위 하는 데 있어서도 창씨개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총독부 직원록을 조회해보면, 기존과 달리 1940년부터 창씨개명된 정보가 올라와 있다.²⁹⁶⁾

김창우 면장 시절 한림포가 당도의 중요한 항만이므로 지방의 발전을 위해 교통의 불편을 없애고자 제1사업으로 여항 건축을 제창(提唱)하였다. 도 당국과 협의하고 약 1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계획되었다.²⁹⁷⁾ 구우면 항만 개발에 있어 김창우가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면장 김창우 기념비는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 뒤쪽에 세워져 있다. 시멘트 흔적으로 볼 때 원래 세워진 곳이 아니라 옮겨온 것으로 보이며, 1937년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은 “비둘기 날아오른 자리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이곳을 좋은 항구로 개척하시며, 옛 물통을 지금 새롭게 정비 하셨으니, 그 공을 잊지 않겠네”라는 내용으로 한림항 건설의 공로를 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석은 1937년에 세워졌으며, 좌면에는 소화 9년 3월, 후면에는 발기인 이민근, 홍용규로 적혀있다.²⁹⁸⁾



면장 기념비(앞면)

면장 기념비(옆면)

〈그림 5-9〉 구우면 김창우 면장 기념비

주) 2021년 11월 20일 저자 촬영, 한림읍 한림항

295) 강동식·강영훈·황경수 공저, 앞의 책, 315~317쪽.

2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에서 확인.

297) 『매일신보』, 1928년 12월 2일자, 「한림포에다 여항을 계획...」, 총서 8, 503쪽.

298)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한림읍 역사문화지』, 2014, 196쪽.

면장 김창우 역시 일제 당국의 신임을 받은 듯하다. 1930년 1월 30일자 관보에 따르면 1928년 칙령 제188호의 뜻에 의하여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을 수여하였다. 여기에 구우면장 김창우(金昶宇)이 포함되었다.

1932년에는 한림 시장의 상황이 담긴 기사가 나와있다. 면 면적도 제2의 대면으로서 농산물 수확과 기타 산물이 풍부하여 전도 산업계 제1위를 점하고 있으나 구우면에는 보통 시장이 없었다. 지방산업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면장이 지방 유지들과 상인들을 초대하여 협의한 결과 당면의 중심지인 한림리에 월 6회, 매 4일과 9일에 시장을 열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개항과 더불어 농수축산업의 상품화 자본화 시장 구조에서 과거 조선의 전통적 시장 구조는 상설시장이 아닌 오일장 체제였다. 전통의 시장 체제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체제로 개편되었다. 당시 쌀, 콩, 면의 교환 체계 속에서 왜곡된 농업 경제의 구조가 가속화 되었고, 지역 상인과 유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적응함으로써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 배경에는 당시 지역 유지층의 활동과 이를 도운 면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⁹⁹⁾

1930년대 김창우 면장은 교육 시설 추진과 확립과 관련하여 면민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1934년 구우면은 제주도 구우보통학교 이축에 착수하였다. 학교가 명월성 안에 있어 교통이 불편하였고 이에 면장 김창우의 열성으로 도 당국과 수 차례 절충한 결과 거액을 들여 일주 통행하는 한림리 서부 기지에 삼천이백 평의 땅을 매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요 비용을 면민 부담으로 처리되게 되었다.³⁰⁰⁾ 같은 해 구우면에서 민사소송 중인 70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개량사숙을 중심으로 한 분쟁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판포리의 서당을 해산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면장을 대표로 하는 서당 조합이 조직되었다. 1년을 2기로 나누어서 매기 매호 평균 삼십 전씩의 서당 조합비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전 면민들에게 발부되었다. 면민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 후에도 김창우가 발기하여 구우면에 제2보통학교를 설립하려다가 면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구우면 신창리에 개량서당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서당조합비를 납부하는 데 주민들이 격양하여 불납 운동을 일으켰다.

일제 말기 면장 김창우는 중일전쟁 관련 공로자로 인정받았다. 조선총독부 지나사변공로자 공적조서에는 김창우의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적 사항과 관직에 관한 공적 정보가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아직 김창우는 이 시점에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씨명(氏名)은 김창우(金昶宇)로 생년월일(生年月日)은 1894년 10월 23일생(明治27)로 나와있다. 김창우는 판임관대우 4등(昭和14 待判四等)의 지위에 있었으며, 제주도 구우면장(濟州島 翰林面長) 관직(官職)으로서 주공기간(奏功期間) 1937년 8월 1일~1940년 4

299) 김동노, 『근대와 식민의 서곡』, 창비, 2009, 179~194쪽.

300) 『매일신보』, 1934년 7월 4일자, 「제주구우보교 이축착수」, 총서 8, 631쪽.

월 28일(昭和12~昭和15)동안 합계 2년 8월 27일 기간 지나사변과 관련된 공출 업무에서 공을 쌓았다. 주공사항(奏功事項)으로는 군용물자의 조달과 공출에 관한 업무의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生牛) 760두, 대맥(大麥) 196,534석, 제모피(諸毛皮) 262매, 돼지(生豚) 2,974두, 돈피(豚皮) 255매를 조달하였다. 국방헌금(國防獻金)은 3,088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와있다.³⁰¹⁾

당시 구우면 면장의 활동 특성을 정리해보겠다. 구우면은 애초 면장들의 임기가 타 면에 비해 매우 길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식민 당국에서도 면장의 면 사무가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었으며, 면민의 입장에서 이들을 통해 어느 정도 그들의 요구를 제시하고 수용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역 교육 사업에 대한 면장의 노력과 향만 개발과 같은 지역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에 대한 면장의 활동이 면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누적된 면 행정에 대한 불만과 면사무소 이전에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로 면장이 배척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구우면 면장 활동 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구우면의 일제강점기 면장을 지낸 두 면장이 이후 행적이다. 임창현 면장은 4.3사건 이후 피살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아들 임상국이 구우면 초대 면장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면장을 역임한 김창우는 해방 이후에 한림읍장이 되기도 한다.

3-3-4. 소결론: 식민 지배와 이어지는 면민 저항

구우면장 임창현과 김창우는 각각 15년 이상 식민 당국의 지배 정책으로서의 면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우면이 모범면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일제로부터 각종 포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의 추진·집행·실행이 구우면 지역의 발전을 위함은 아니었다. 면작과 해산물을 포함한 산업의 원료가 되는 자원이 풍부해서 이에 대한 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토대로 개발 정책을 가속화한 것이다.

구우면은 상업의 장소로서 오일장이 활성화되었다. 향만도 물자 유출을 위한 창구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금융 조합은 자본 종속을 가속화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구우면은 외견 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수탈의 구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임에 불과하다.

임창현 면장은 면장 재임 이후 지속되던 행정에 대한 불만과 면사무소 이전 관계로 면민에 의해 배척받은 특이한 사례를 보여준다.

김창우 면장의 행정 수행에서도 면민들의 만만찮은 저항이 있었다. 강요되는 개발 과정

301) 『조선총독부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 376~377쪽

에서 억압과 면민의 고통이 있었다. 면장이 왜풍의 민속을 교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도 있었다.

두 면장에 의해 식민 당국의 지방 지배를 위한 행정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대한 면민들의 계속되는 저항은 구우면이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지속적인 대립이 지역의 일선에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구우면 역시 임창현과 김창우의 공덕비가 현재에도 남아있다. 임창현은 비록 4·3사건을 전후하여 피살되었지만, 그의 아들은 항일운동 경력이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구우면장이 되기도 하였다. 김창우 면장 본인은 일제강점기에 면장을 역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다시 면장이 되었다.

구우면은 일제강점기 면장이 일방적이고 편협한 차원에서 친일파라고 단정 짓기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면장의 복잡성과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면장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주도내 면 중 일부인 구좌·신좌·구우면을 선정하여 면 현황에 대한 개요를 살폈다. 면장의 명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발행 신문들에서 면 행정 및 경영과 관련된 면장의 활동을 시기와 주제를 고려하여 인물 별로 정리해보았다. 각 면에 따라 면장의 활동에서 특성이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면장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나름의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제주에서 온전한 의미의 정치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자격을 갖춘 경제적 상층부 인사들만이 행정과 행정에 대한 자문을 위한 협의기구인 면 협의회원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시 주민, 구체적으로는 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일제의 지배와 행정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수용만 한 것은 아니다. 1920년대 특히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설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적극적 청원 활동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면장의 역할이 필요했다. 1920년대는 식민 당국의 의도와 주민들의 필요 사이에서 일정한 공통분모가 있었다. 이에 따라 면장은 그 중간에서 공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속에서, 식민 당국에 의한 포상이 있었으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면장은 일제강점기 그들의 요구 사항을 관에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 나름의 필요와 의미가 있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면민들에 대한 무리한 징수가 불만을 야기하게 되었다. 1930년

대가 되면서부터 일제가 전시 수탈체제를 가동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이른바 농촌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농촌의 진흥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하나, 이는 민민들에게 삶의 터전과 기반에 대한 수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가 되면 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대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식민 당국과 지역 면민 사이에서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면장의 활동을 어떻게 정리해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

요컨대, 일제강점기 제주 면장의 역할은 첫째, 일제 식민 지배를 위한 지역의 정책과 행정을 실현하는 자, 둘째, 제주도 전체 면장들의 조직인 면장회의의 구성원, 셋째, 해당 면의 자문기구이자 의결기구인 면 협의회 당연직 의장, 넷째, 면과 관계된 각종 조합의 책임자, 다섯째, 제주도 농회 통상의원, 여섯째, 민민의 이해를 반영하여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로 정리할 수 있겠다.

면장의 평가에 대한 복합성은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 식민 당국의 입장에서 면장은 일제강점기 지방 행정과 지배정책의 실행자이자 주된 협력자였다. 지역 민민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역의 필요한 사항을 식민 당국에 전달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식민 지배가 지속될수록 민민들에 대한 수탈과 강압적 지배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 마을 구장의 입장에서는 면 업무의 수직적 명령이 내려지는 상위 행정기관이었다.

가족의 차원에서는 본인은 면장으로 활동하나 자식과 형제가 항일운동에 참여해 일제에 대해 협력과 저항이 공존하는 이중적 상황에 면장이 있었다.

또한, 당시 면장의 지위나 영향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민 당국의 요구와 지역 민민의 요구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 면장의 영향력은 세질 수 있었다. 반면 식민 당국의 목표와 지역 민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고 수탈이 지속된다면 이를 거부하는 민민에 의해 면장은 비난받고 그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면장으로서의 복무와 활동이 과연 친일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과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면장으로 복무한 사람이 반민족행위자인 경우는 다수이지만, 면장 활동을 한 것이 반드시 친일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반민족행위 처벌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이는 드러난다.³⁰²⁾ 또한 일제강점기 면장을 역임한 이들의 해방 이후 왕성한 정치적 활동과 행적에서도 이들이 친일 행위로 인해 모두가 비난받았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일제강점기 면장에 관한 평가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식민 지배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관한 또 다른 차원의 연구 필요성과 논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공한다.

302) 미군정 과도입법의원 친일파 관련 규정 초안에는 모든 면장이 친일파의 범주에 포함된 규정이 논의되었다. 친일파 범주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박수현·이용창·허종 공저,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8, 일제의 친일파 육성과 반민족 세력』,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31쪽.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면장에 관한 논의는 지방에서의 친일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와 민족의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많으나, 지방 차원의 논의는 매우 드물다. 최근에서야 지방에서의 친일 청산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상대적으로 지방 특히, 중소기업의 지역이 배경이 된 친일 행위와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공개는 개략적으로 다뤄지거나 소홀히 여겨진 측면이 있다.³⁰³⁾ 특히 제주의 경우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혈연과 지역, 학연과 같은 다양한 연결 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친일 행위자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책임 추궁은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향토지 혹은 마을지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발간하는 제주도 지에도 일제강점기 면장의 행적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강점기 면장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역사 자체를 무시할 수 없으며 당시 있었던 주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다행히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교가, 교표, 교목·교화, 교훈, 석물, 학교문화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식민지 시기 폐습이 조사되었다.³⁰⁴⁾

이러한 연구와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가능했다. 이 조례를 통해 비민주적인 일제 흔적 등을 지우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교육감에게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게 하였다.³⁰⁵⁾

이와 유사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활동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도 청산 활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나와있다. 청산 활동에는 식민 잔재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변경, 처분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³⁰⁶⁾ 교육영역과 더불어 공적 영역에서의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기대된다.

제주도 외에 유사한 지역 사례 중 세종시의 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은 식민지 역사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리적 훼손, 삭제와 순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단죄문 및 알림판 설치이다. 기

303) 김해규, 「지역의 친일잔재청산이 중요하다」, 『내일을 여는 역사』 70, 2018.

3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0.

30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313호, 2019. 7. 10 제정, 시행 2019. 7. 10).

30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704호, 2020. 12. 31 제정, 시행 2020. 12. 31).

존의 역사적 시설이나 기념물을 그대로 둠과 동시에 이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³⁰⁷⁾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제주지역 면장 전체를 다루지 못했다. 발굴되지 않은 많은 자료를 찾아내어 제주도 내 전체 면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과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면장의 활동을 파악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시 자료들이 공공문서이거나 신문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당 시대의 또 다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면민의 구체적인 대응이나 반응을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1940년대 면장에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도 부족했다. 일제강점기 말 1940년대를 살았던 지역 주민에 대한 구술 자료 수집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제주에서의 일제강점기 연구는 수탈이나 탄압에 집중한 연구 혹은 이에 대응하여 저항한 항일 민족운동의 집중한 연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일제의 강압적 식민 지배에 협력적이면서도 지역 면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그 의미가 제대로 고찰되거나 평가받지 못한 일제강점기 면장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307)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 일제강점기 문화자원의 잔존현황과 활용방안』, 2021.

VI. 일제강점기 제주도 지식인의 저항운동 : 죽암(竹岩) 고순흙의 생애와 활동을 중심으로

1. 머리말

일제강점기 제주 지식인들의 활동과 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은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인민위원회 등 사회조직의 정치지도자 인선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제주도의 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이후 달포 만에 결성되었는데 각 읍면 대표 100명 가까운 인물들이 제주농업학교 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당시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준 지도자를 뽑기 위한 선거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독립 의지와 저항적 자세를 갖춘 인물들을 지도자로 추대하는 여론의 암묵적인 기준이 있었다. 당시까지 권세를 휘두르던 대일 협력자들이 자취를 감춘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저항운동을 했던 인물들 중에는 조선시대 후기 제주로 유배 온 학자들로부터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은 다양한 지식인 그룹이 있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제주4.3 시기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의 존경을 받으며 제주 사회를 이끌었던 지식인들도 있었고, 학살의 국면에서 대중들과 운명을 함께 한 지식인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식인’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특정 인물 또는 지적 공동체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거나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활동했던 인물들로 한정해서 서술하려고 한다.³⁰⁸⁾

제주도민들은 공업지대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거 오사카를 찾으면서 오사카와 제주 간에는 경제·문화·교육·사회운동의 연계가 생겼다. 일제의 치안당국이 오사카 사회운동가 김문준의 영향력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를 했던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오사카의 구 재판소 三木今二 검사의 보고서를 보면 당시 제주 지식인과 사회운동의 단면이 드러난다.

308)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귀중한 『통신중학강의록』 원본 열람과 사진 촬영을 허락해주신 조천향일기념관, 『공제』에 실린 고순흙의 귀중한 원고를 제공해 주시고 필명 확인을 해주신 아나키스트 연구자 김명섭 선생님, 그리고 고순흙에 관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향토사학자 고영철 선생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홍일심 장학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

고순흥의 뒤를 이어 제주인의 사상운동을 지도한 것은 김문준이다. 김문준은 1927년 7월에 도일했다.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 출신으로 그는 공산주의 이론에 밝고, 홀연 오사카 한국인 노동운동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는 오사카조선 노동조합의 상임위원이 되어 오사카 제주도인을 규합하여 지반을 굳게 하고, 전남 완도 출신 서울계인 정창남과 함께 화요계와 투쟁하며 재일 한국인 노동운동의 패권을 획득하려고 했다. 이에 제주도 출신 노동자는 거의 김문준의 지도 아래 있었고 극좌운동의 주력은 제주도민의 손에 있었다.³⁰⁹⁾

마키(三木今二) 검사의 보고서대로 김문준의 지도 아래 있었던 인물들은 건준과 인민위원회에도 볼 수 있다. 건준 집행위원 조몽구는 김문준이 정의보통공립학교 교사 시절 제자로서 스승과 함께 오사카조선노조, 신간회, 동아통향조합 활동을 했다. 건준 집행위원 현호경은 와세다대학 출신의 유학생으로 김문준과 함께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산하 전협화학노조와 일본공산당에서 활동했다. 건준 산업부장 김용해는 신간회 활동을 함께 했다. 인민위원회 조천면 위원장이었던 안세훈은 김문준과 함께 조천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중국 간도로 건너가 민족 운동 기관인 간도 간민교육 연구회 상무 서기로 활동했고 김문준의 장례위원으로서 김문준의 유해를 고향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았고 제주도 민족주의민족전선(민전) 의장단 대표를 역임했다.³¹⁰⁾

제주도는 유배지라는 독특한 특성에 따라 반체제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관계를 맺었다. 유배지식인은 제주도에서 교학활동을 통해 반체제성과 비판정신을 계승했다. 예컨대 중종대(中宗代) 김광필의 문인이었던 이세번은 동문인 조광조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자 무죄를 주장하다가 7년간 유배되었다가 제주에서 사망했다. 이세번의 후손인 이재교(李在喬)는 1905년 대정에서 개성학숙(開成學塾)을 설립해 청소년교육에 매진했다. 이재교의 후손으로는 신축항쟁(辛丑抗爭)의 장두(狀頭)로 유명한 이재수와 이승진 등이 있다. 이승진은 김달삼이라는 이름으로 제주4.3의 무장대 사령관을 역임했다.³¹¹⁾

한편 가문의 대를 이어 학문과 사상, 저항운동을 펼친 지식인도 있다. 조천김씨 가문 출신의 송산 김명식이 바로 그런 지식인의 유형이다. 고려 충정왕 때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한 김관을 중시조로 받들며 서로 다른 세 개의 입도 지파를 형성한 김해김씨 삼현파 중에서도 학문으로 명성을 얻은 김광택(1746~1838)이 살았던 조천 이동(梨洞)의 명칭을 딴 이동파 문종인 김명식의 할아버지는 정의현에 귀양 중인 이승훈에게 수학했으며 고종18년(1881) 상경해 대원군과 민태호를 면담한 것을 계기로 충청도 해미현감 겸 홍주진관 병마절제도위 좌양포토사로 임명되었으나 임오군란으로 인해 사직하고 귀향했다. 1910년 경술국치를 보고 자호를 농은(農隱)으로 짓고 은둔하다가 1915년 5월 일본인 이

309)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52~153쪽

310) 신소연, 『일제강점기 김문준의 사회운동 연구』, 2018, 석사학위 논문, 59~66쪽.

311) 양진건, 「조선조 제주 교육사상사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70~172쪽.

마무라도모가 제주도사로 임용되자 식음을 전폐해 83세로 사망했다. 굴은의 아들 김문주(1859~1935)는 정의현감을 역임하여 1891년 2월 이완평·현계환이 지방관의 수탈에 항거하여 난을 일으켰을 때 이를 진압했다. 그는 의병·항일운동에 직접 투신하기보다는 학문을 닦고 후학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항일을 하고자 했다. 김문주의 아들 김명식은 일본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했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여 상호평등의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중국·대만 유학생들과 함께 국제적 비밀결사 신아동맹단의 단원으로 활동했다. 1920년 대한독립단원인 고순흙, 장덕수 등과 상해 임시정부헌법기초를 위한 국내 기초안 작성에 관여했다.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의 사상적 이념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산아동맹단 한국지부를 사회혁명당으로 개편하여 1921년 5월 상해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 참여해 고려공산당 중앙총감부 산하 선전업무를 담당했고 국내부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명식은 기관지 『아성(我聲)』을 통해 유물사관과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등의 사상을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다. 1920년 조선 최초의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에 참여했고 1921년 제3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고순흙은 간사로 선출되었다. 김명식은 동아일보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대중에게 많이 전파하였다. 1922년에는 박희도, 이순준 등과 함께 출판사인 '생활사'를 창립해 이사 겸 주필로 활동하기도 했다. 일제가 1923년 『신생활』을 폐간조치할 때 저항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었고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한 고문과 함흥형무소 노역 중 건강이 악화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으며 고막이 터져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는 등 평생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1943년 3월 53세로 숨졌다.³¹²⁾

제주도 지식인의 저항운동은 시기별 변천을 보여준다. 1910년 전후는 김윤식과 최익현 등 유배지식인의 영향을 받아 척사위정사상과 개화사상이 무르익었다. 특히 근대교육기관 설립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근대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1907), 중등교육기관인 사립의신학교(1907), 제주공립농업학교(1910), 정의공립보통학교(1909), 신성여학교(1910)는 제주인의 의식변화와 항일운동을 지속화시켰다.

1920년대는 3.1운동의 영향으로 신교육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났고 일본 내의 사회주의 사상과 제주인의 노동진출이 결합되며 사상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으로 유학하거나 일본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사상에 영향 받은 지식인들은 일본에서 겪은 인권탄압에 대한 저항은 물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항일저항운동으로 발전했다.

1930년대 지식인들은 대중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했는데 대표적으로 '해녀항일운동'을 꼽을 수 있다. 제주 야체이가 사건은 제주인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대중운동으로 일본으로 진출했던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깨우쳐 사회주의 대중운동을 펼쳤다. 사회주의

312) 김동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27, 2008, 74~86쪽.

사상은 노동계는 물론 제주청년과 일반인, 학생이 참여하는 항일운동의 성격으로 확대되었다.

1940년대에는 사상운동과 대중운동이 쇠퇴하면서 종교와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교육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청년운동이 주도했기 때문에 노동, 사상, 여성, 학생, 종교가 결합된 총체적인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제주의 대표적인 종교사건은 1936년 무륵 대도관 사건과 1938년 미륵교 사건, 1941년 천주교 사건이다. 일제 당국은 종교사건에 과도한 형량을 부여했는데, 이는 종교계의 저항운동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을 이끈 지식인의 저항운동을 아나키스트 사상가이자 운동가인 죽암 고순흙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순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제주도의 저항운동이 본격화된 제주 유림의 척사위정 활동에 이은 근대 교육 운동과 노동 운동의 흐름에 있어서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고순흙은 19세기 유배 지식인의 반체제운동과 일제강점기 저항운동을 연결시켜주는 적합한 인물이다. 외국에서 당시 주요했던 사상이 유교사상을 가진 변방의 작은 섬에 맞게 변용되는 과정을 고순흙이 잘 보여준다. 만약 제주도 특유의 사상적 맥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나키즘 사상에 대한 찬양이나 복종 이외에 어떠한 변용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변용을 근거로 저항과 투쟁이 체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아나키즘 사상가 고순흙에 대한 사상적 변용 연구는 제주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중요성을 띤다. 그리고 제주도 지식인의 저항운동은 대중과의 밀접한 유대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인데 고순흙은 지식인과 대중의 이상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며 제주와 오사카에 머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중과의 연대에 대해서 고뇌했다는 점에서 지식인의 저항운동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아나키즘은 중앙권력의 반대쪽인 개개인에게 집중한다. 실제로 고순흙이 펼쳤던 사업은 개개인을, 정확히 말하자면 개개인의 사상적 각성을 꾀하고 있다. 각성된 개개인이 연결된다면 운동과 사업이 탄력을 받았겠지만, 각성과 연결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업은 좌절됐고 고순흙이라는 이름도 대중으로부터 잊히게 되었다. 아나키즘 사상적 측면에서도 고순흙은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고순흙은 공맹(孔孟)으로 대변되는 정통 유학 가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시대적 변화와 7세에 선실부친(先失父親)이라는 개인적 불행이 뒤섞여 근대 교육에서부터 아나키즘 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조선시대부터 ‘유배지’라는 특수성과 출륙억제 정책이라는 상황 속에서 특유의 저항적 에너지가 형성되었는데, 기호학파나 영남학파라는 학통에 앞서는 건 ‘유배’라는 공통 분모였다. 특정한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학문이 정교하지 않은 반면 유연성과 융합성은 더욱 고조되었다. 유배자 반체제성 아이덴티티가 교육활동을 통해서 전수되는가 하면,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경우와 같이 ‘계급편파 교육적’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식민지

근대 제주도의 저항운동과 광복 이후 제주4.3에는 유배 지식인들의 반체제성이 계승되며 영향을 미쳤다. 박영호의 개화교학활동 역시 학교 설립운동과 원예작물 재배법 도입 등 농촌계몽활동으로 제주도의 봉건적 교학분위기를 뒤흔들었으나 일제 당국의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계몽주의의 한계를 나타낼 뿐 아니라 민중을 치안의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문제점도 보인다.³¹³⁾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전개되었던 수많은 활동들은 이와 같은 이중성과 제주도 특유의 맥락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제주도의 독립투쟁 의지에 불을 당긴 1919년 3.1운동은 조천 지역에서 위정척사 학파의 유림 계층이 주도하였고 서귀포 일부 지역에서 화답할 뿐이었지만, 3.1운동이 제주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운동이 분출된 전환점이었을 뿐 직접적 영향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의 뿌리가 3.1운동이었고 이를 주도했던 것은 조천의 유림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림 6-1〉 고순흙 사진 (연합 아카이브)

처음에는 고순흙, 고병희 등 서울이나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온 ана키스트들이 소비조합 운동과 야학 운동, 자주운동항운동을 펼쳤지만 김문준 등 공산주의 지도자가 활약했고 일본에 갔던 노동자들이 해방과 함께 대거 유입되면서 공산주의 조직의 세력이 커져 대중적 지지가 확대되면서 두 진영 간의 격렬한 내전 양상이 전개되었다. 고순흙이 1920년 조선 노동공제회 창립을 주도하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당하면서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탈퇴하는 사건은 ана키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13) 양진건, 앞의 논문, 179쪽.

“사회운동계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무정부주의 운동은 퇴조하기 시작했다”³¹⁴⁾는 김창후의 주장과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은 결국 조선민족을 억압하는 일제와 정면으로 맞붙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³¹⁵⁾이라는 염인호의 주장은 공산주의 운동과의 관계에서 아나키즘 운동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운동의 전사(前史)처럼 다루고 있다. “1920년대 전반기에는 대판(大阪)에서 한국인운동에서 고순흠(高順欽)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나 무정부주의자가 된 후에 점차 운동에서 소외된다.”³¹⁶⁾는 강재언의 진단은 아나키즘이 운동 소외를 일으키는 원인처럼 묘사하고 있다.

김명섭은 “한국 아나키스트들은 무조직·무계획의 취약한 단체 운영과 경직된 전술로 인해 해방 후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서 뚜렷한 독자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고, 정치 세력화하는 방략도 실패하고 말았다”³¹⁷⁾고 주장했는데 이는 아나키스트의 사회전략 관점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긴 했지만 아나키스트가 사회적 결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실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양영수는 고순흠이 불세비기 사회주의자들의 ‘국가 폭력을 용인하는 정치만능주의’와 ‘권력지향적 사대주의’에 환멸을 느껴 조선노동공제회를 탈퇴한 일을 평가하며 그가 바라는 사회가 “‘최소한의 자치공동체인 코뮌’에 기초하는 지역분산적 공동체였고, 각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자율적 행복이 그가 추구하는 목표”³¹⁸⁾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자기결정의 의지와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이는 고도의 교육수준을 요하는 것”³¹⁹⁾이라고 말했다.

이호룡은 염인호, 츠카사키 마사유키, 김찬흠의 제주도 아나키즘 연구 및 고순흠에 관한 연구사를 검토하면서 공산주의운동과 아나키스트운동의 관계를 넘어 국내 아나키스트운동과 제주 아나키스트운동의 관계를 파악했고, 자주운향운동이 제주 민족자본뿐 아니라 국내 아나키스트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바로잡았다. 그 외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제주도 아나키스트운동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시켰다. 국내 아나키즘운동이 아나코생디칼리즘이라는 생산자조합 중심의 사회운영이었는데 제주도 역시 자주운향운동을 소생산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아나코생디칼리즘으로 본 것이다.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2001), 『한국의 아나키즘-운동편』(2015)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아나키스트운동과의 흐름 속에서 제주 아나키스트 운동을 살펴보니 제주도 지역의 특

314)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312쪽.

315) 염인호, 「일제하 제주도에서 전개된 아나키즘운동」, 『한국 근현대 지역운동사Ⅱ. 호남편』, 역사문제연구소(여강), 1993, 307쪽.

316) 제주도, 앞의 책, 58쪽.

317) 김명섭,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이학사, 2008, 322쪽.

318) 양영수, 「제주 4.3사건에 대한 아나키즘적 해석」, 『제주도연구』 45, 2016, 54쪽.

319) 앞의 논문, 58쪽.

수성을 반영한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서 전개된 한국인 아나키스트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호룡은 아나키즘의 관념성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아나키즘이 주장하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는 관념상의 자유에 불과하며 아나키즘은 “민중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즉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 자유에 대해서는 무관심”³²⁰⁾했다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일상투쟁을 통한 민중들의 권익 옹호나 지위 향상보다는 사상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한 결과 민중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이호룡은 아나키즘이 한국에서 제3의 사상으로써 민족해방운동과 자주적 민주국가 건설운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극단적인 좌우 대립 상황을 견디지 못했고, 그 결과 “좌우 대립을 완충시킬 수 있는 제3의 사상의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민족의 사상적 통합에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었다”³²¹⁾고 비판하였다. 이호룡의 비판은 당시의 아나키즘 운동에 있어서는 정당한 비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나키즘 사회운동이 제기한 현재적 의미와 근본 질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는 아나키즘과 공산주의가 실천적인 영역에서 대척점을 보였는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자주운향운동’이었다. 염인호의 연구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들은 “자주운향운동=소비조합운동은 전체 운동 가운데 비중이 적은 부차적인 부문 운동에 불과”³²²⁾했으며 “조선공산당의 지도를 받던 제주도내 공산주의자들은 오사카 공산주의자들이 전개한 이 운동을 처음에는 냉담하게 바라보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자주운향운동은 그 자체가 아나키스트들의 목적이었던 반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또는 수단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다.

고순흙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아나키즘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자주성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대오로 조직화되는 조직성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회운동도 시민의 지지와 동참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의 성장은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시민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조직과 단결이 없다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고순흙의 활동 전반에서 노출되었던 문제다.

신채호, 박열, 고순흙 등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는 초기 아나키스트들은 전통 윤리관을 바탕으로 아나키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즘 사상과 전통 윤리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김갑수(2007) 등 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김갑수는 노장(老莊) 사상 같은 도가사상에 입각해 고순흙과 아나키즘의 융합을 비교하였을 뿐 고순흙이 정통 유학에 뿌리를 두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³²³⁾

320)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363쪽.

321) 앞의 책, 262쪽.

322) 염인호, 앞의 책, 305쪽.

본 연구에서는 고순흙의 사상에서 노장사상뿐만 아니라 정통 유학의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아나키즘 윤리관과 전통 윤리관의 관계와 변용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아나키즘의 프리즘을 통해서 고순흙을 바라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고순흙으로 대표되는 19~20세기 전통적 부리를 두면서도 아나키즘을 수용한 지식인들이 왜 아나키즘을 수용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나키즘의 본령에서 바라보면 민족주의와 반공사상을 가지고 있는 고순흙의 아나키즘을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그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아나키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식민지라는 제약과 지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즘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나키즘 사상사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 특유의 맥락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짚은 비판들을 질문으로 재해석하면서 고순흙이 제기한 질문의 현재적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고순흙이 사회적 약자의 각성을 돕게 된 과정을 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고순흙의 독특한 아나키즘 사상과 전통사상과의 변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림 6-2〉 만년의 고순흙 (연합 아카이브)

323) 김갑수, 앞의 논문, 89~91쪽.

2. 불행한 탄생·성장과정이 일으킨 전통사상과 아나키즘 사상 간의 긴장

2-1.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과 고순흙의 인성론(人性論)

고순흙은 노사(蘆沙)학파의 거유(巨儒) 기정진(奇正鎭)의 문하로서 성균관 교수를 지낸 정통 유학자인 능봉(陵峰) 고성겸(高誠謙, 1856~1897)의 아들이다. 41세인 1896년(고종33)에 제주에서 실시된 향시(鄕試)에 합격해 성균관 재생(齎生)으로 선발되었고, 이듬해(고종34) 성균관 유생 자격으로 응시한 문과 초시인 관시(館試)에 합격하였는데 이때 지은 「황극론(皇極論, 왕도 정치의 극찬을 논한 글)」이 일곱 번째에 뽑혀 성균관 교수에 임명되었다. 이때의 시관은 태학장관(太學長官) 서상봉(徐相鳳)이었다.

고성겸이 속해 있던 노사학파는 조선후기 기호학파의 일파로 제주인들의 출륙이 용이했던 전남과 경남서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고성겸은 안달삼(安達三) 등과 함께 장성(長城)에서 기정진에게 직접 수업 받아 학풍을 접하게 되는데 기정진의 사우록(師友錄)에도 등재되었으므로 초전제자(初傳弟子)라 할 수 있다.³²⁴⁾ 노사학파의 특징은 화서학파와 같이 외세의 압력에 저항하는 척사위정의 민족주체적 의식을 드러내고 의병운동을 주도하였다. 19세기 말 제주 유림은 기호학파 이항로 계열인 화서학파 계통이 주류였다.³²⁵⁾ 특히 제주도는 화서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과 노사학파의 영향으로 척사위정의 사상이 만개했다.³²⁶⁾ 고순흙의 사상과 실천에서도 고성겸의 척사위정 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성겸은 교수로 임명된 해에 갑작스럽게 사직하고 제주로 귀향하였다. 어머니 흥씨(흥일돈)가 70세에 가까운 나이로 노쇠해졌기 때문이다.³²⁷⁾ 최익현과 사제동행으로 유명한 굴당(橘堂) 이기온(李基溫)(1834~1886)이 개설한 칠봉서당(제주시 오라동 소재)의 향학장(鄕學長)으로 후진 양성에 매진하던 중 제자의 실수로 화재가 나고 말았다. 고성겸은 제자를 구하려다 함께 세상을 뜨고 만다. 고성겸을 성균관 교수로 천거했던 서상봉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묘비명을 썼는데, 이 글에는 정통 유학자로서 고성겸의 위상을 보여준다.

나 서상봉은 탐라의 한 문사(文士)를 발견하여 천거하니 성균관 교수로 임명되어 얼마 동안 활동하다가 귀향하여 후진들을 가르친 지 몇 해 아니되는데 그가 급몰하였다는 전갈을 받았도다. (중략) 그가 살아 있을 때엔 문사들이 모두 기뻐하여 오도(吾道)[유교(儒敎)]가 유망하다 하였으며 그가 죽음에 문사들은 슬퍼하여 오도가 무너졌다.³²⁸⁾

324) 윤영선(尹榮善), 『조선유현원연도(朝鮮儒賢淵源圖)』, 권하(卷下).

325) 김동진, 『제주향일독립운동사』, 171쪽.

326) 양진건, 앞의 논문, 128~129.

327) 김찬흙, 같은 책, 166쪽.

이때 고순흙의 나이 5세에 불과했다. 고순흙은 스무 살에 서울로 유학을 떠나 1914년 3월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의 전신)을 졸업하자마자 귀향하여 사립조천보통학교(현 조천초등학교 전신) 창설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길을 갔으며 조천청년회, 조천신용조합, 제주청년수양회, 제주경제조정회, 흥진상회, 제주해녀조합 등 민중 계몽운동을 통해 경제 자립과 민권 회복에 힘썼다.

고순흙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위상은 아버지에 못지않다. 그도 그럴 것이 고순흙이 5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대학까지 교육시킨 것은 어머니였으며, 고수직을 박차고 귀향한 아버지의 70 노모에 대한 효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고순흙이 경성전수학교에 유학하고 첫 번째 겨울에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는 그의 효성이 절절히 표현돼 있다.

인천의 김제종 씨 편으로 보내주신 옷과 돈은 며칠 전에야 싸늘해지기 시작하자 찾아가되 일부분만 받았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이렇게 보내주시다간) 가정 형편이 피폐해질 터인데 여유로움이 습관이 되면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올해부터는 가난하지만 배는 부르고 춤지만 몸은 건강하니 이후로는 여비 부치실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중략) 작년부터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멀리 밖에서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부디 조심하시기 바라는 마음에 십전대보탕 한 제와 감기예방약 성분을 담은 쌍화탕 열 첩을 전송합니다. 아침 식전에 대보탕 한 첩, 저녁 식전에 쌍화탕 합 첩, 하루 두 첩식 교차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곁에서 직접 탕약을 해드리지 못하니 정성스럽지 못한 부끄러움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모쪼록 못한 자식의 마음을 안심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³²⁹⁾

어찌 보면 시시콜콜한 글을 담은 것 같지만 고순흙의 성품과 스타일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상대방의 세세한 불편함과 생활의 문제들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정책이며 고순흙의 아나키즘 사회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는 위의 내용 외에도 향리 인척인 갑환의 어머니, 고재륜(高載崙, 독립운동가)의 어머니, 둘째 이모님 등에 대한 안부도 묻고 있다. 고순흙의 온화하지만 사상적으로 단단한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은 근80의 나이에 눈병 수술을 하면서도 문하생 김순겸과 함께 사제공동전(師弟共同展) 준비를 격려하는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회기가 박두하여 지었네. 아무리 공사중일지라도 표구옥(表具屋)에 작업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9월 전시도 불급하게 되네. 임기(霖期, 장마)중에도 음력 6월달은 표구에는 空間으로 치는 일기라네. (중략)

둘째로 전시 주제와 용어 문제인데 서예(書藝)라면 형이하학에 속하고 서도(書道)라면 형이상학에 속한다. 서예는 기교를 위주로 하게 되므로 추상파(抽象派)와 생명파(生命

328) 김찬흙, 「애국지사 죽암 고순흙의 생애(1)」『교육제주』, 167쪽.

329) 이 편지는 고순흙의 문하생인 서예가 김순겸이 소장한 것으로 선화지(仙花紙)에 국한문 혼용 초서(草書)로 쓴 것을 필자가 졸역(拙譯)했다.

派), 전위파(前衛派)와 창조파(創造派)라 할지라도 초연파(超然派)까지 정리되고 윤희케 되지만 서도는 연원을 존중하며 해자(楷字)를 위시로 정중(鄭重)·엄정(嚴正)·고상(高尚) 삼법이 조화되어야 성영체(性靈體)를 이루게 되니 이것이 곧 도원(道源)이 된다(중략)

나는 다행히 장님을 면하게 되었네. 수술 끝에 한약으로 시력이 회복케 되어서, 그러나 생계가 막연하게 되어 어쩌면 다 환고향(還故鄉)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봉추절익(鳳趨折翼)이나 불실천인상기(不失千仞翔氣)의 서도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내 용기가 그대로 있으니 귀군이 비장충천(飛將衝天)이요 오장경인(鳴將驚人)의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아수박” 문화부 중국 일본위원까지도 초청하며 활동하여 주기 바라네.³³⁰⁾

그 사람의 연행에서 드러나는 성품은 거대한 업적이나 사상의 부리를 이룬다. 어머니의 감기를 걱정하는 마음은 눈 건강을 회복해 서예 전시회를 열고자 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아나키스트 고순흙의 사상적 뿌리인 정통 유학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준다. 서울로 유학을 떠나는 스무 살 아들을 얹혀 놓고 어머니는 엄하게 훈계한다.

“너는 한양에 유학 가서 신식 공부를 하더라도 선친 능봉이 걸어온 바에 따라 공맹지학을 배울 것이며 이 어머니로서 너에게 주는 「모훈육조(母訓六條)」를 명심히 아로새겨 일평생 지켜 나가라.”³³¹⁾

어머니의 여섯 가지 가르침은 고순흙이 직접 쓴 묘비명인 「유인여산송씨지차(孺人礪山宋氏之差)」에 수록돼 있다.

가르치시기를 공맹지학(孔孟之學)을 위주로 하였으며, 꼭 본받을 바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양도지본(養盜之本)이니 집안에 금품을 두지 말 것.

둘째, 대사지적(大事之敵)이니 절대로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 것.

셋째, 사기지원(詐欺之源)이니 절대로 도박을 하지 말 것.

넷째, 과실지인(過失之因)이니 술 마시는 일에 조심할 것.

다섯째, 선친이 순직한 것은 석유 등불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니 석유불을 조심하라 하니 10년이나 석유 등불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어린 아들을 일깨워주는 요결을 가르쳐 주시고 아울러 세상을 근심 걱정하는 법식을 지도하여 주셨다. 또 학업을 성취시킬 목적으로 천리타향 한양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대의와 명분에 알맞은 처세를 하다가安神(安神)한 상태에서 인생의 종언을 고하라고 알려주던 그 어머니의 극진한 교훈이 있으시었다.³³²⁾

330) 김찬흙, 위의 글, 175~176쪽.

331) 김찬흙, 앞의 책, 169쪽.

332) 김찬흙(1987), 204~205쪽.

고순흠과 어머니의 관계는 ‘열린 가족’과 ‘닫힌 가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고순흠이 어머니에게 했던 지극한 효성(孝誠)은 아버지 고성겸이 그의 어머니에게 했던 효성에서 기원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상기시킨다. ‘세상을 근심 걱정하는 법식’과 ‘대의와 명분에 알맞은 처세’를 지도한 어머니는 고순흠의 지도자이자 동료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연대 조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가족구조가 하지 못하는 일로 ‘열린 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³³³⁾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고순흠도 고순흠의 어머니도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틀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고성겸과 어머니, 고순흠과 어머니로 이어지는 3대의 행적은 유교적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 바탕을 두면서 동시에 이를 뛰어넘는다. 전통적인 가족 관념은 차등애(差等愛)인 반면 고순흠 부자가 보여줬던 관념은 박애(博愛)에 가깝다. 서당에 불이 났을 때 고성겸이 지체없이 목숨을 버리는 행동은 차등애(差等愛)에 반한다. 아나키즘 사상을 체계화했으며 고순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크로포트킨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 모두의 자녀”라는 말로서 ‘열린 가족’ 개념을 제시했다. 고순흠은 전통적인 유학 개념의 차등애라는 ‘닫힌 가족’을 뛰어넘어 제주도민을 포함하는 ‘열린 가족’의 개념으로 나아갔으며, 이것은 아나키스트적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의와 명분, 그리고 ‘세상을 근심 걱정하는 법식(法式)’은 유학(儒學), 즉 고순흠 표현대로 말하면 공맹지학(孔孟之學)의 특성을 깊이 담고 있다. 박정희가 군정에서 민정으로 바뀐 1963년 고순흠은 「조야(朝野)에 호소한다」(재일교포의 시국정치관)를 발표하는데 두 번째 항목인 “위정자의 체질개선”에서는 광복 이후 국론 분열과 동족상잔 등 민족적 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고찰했는데 성품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우리 민족은 본래 순박 선량한 인간으로 예의에 순종하고 살인을 불공(不貢)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특징이었다. 그런데 8·15 해방 후 졸변(卒變)이 되어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 등 사단(四端)의 본성이 시비지심(是非之心)만 떼어 놓고는 다른 삼단정신은 마비가 되어 버리고 잔인박행의 성격으로 변질이 되어 시기·질투·반목·모략·중상·사기·횡령·살인·강도 등 패륜무도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케 된 원인이 어데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건데 첫째는 인위적 민족 분열의 38선이요, 둘째는 피난민의 월남 동포 800만이요, 셋째는 정취 대상인 80% 적산(敵産)이다. 이 팔자 소관인 삼대원인으로 극렬한 골육상잔과 극심한 적산 습유전에서 살육을 자행케 되었고 초동물적 만행을 공인케 되는 바람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확충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만이 “천리(天理)”라는 착각적 인식이 보편화되어 도덕 윤리는 고사하고 정치·법률·경제·사회 질서 할 것 없이 함께 문란에 빠지고 말았다.³³⁴⁾

333) 콜린 워드, 앞의 책, 122~127쪽.

334) 김찬흠, 앞의 글, 183~184쪽.

불행한 이를 보면 자연스런 동정과 연민이 발현되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之心)과 염치를 알고 사양할 줄 아는 사양지심(辭讓之心)이라는 성품은 내던지고 옳고 그름이라는 차가운 이성 집착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악육강식을 진리로 생각하고 남을 짓밟는 것을 정의라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진단은 맹자(孟子)의 사단(四端)에 기초한 고순흙 특유의 아나키스트적 진단이며 사단의 균형상태가 깨지고 옳고 그름이라는 이념적 대립만 남았기 때문에 제주4.3과 한국전쟁, 독재정권이라는 비극적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사단 중에서 마비가 되어 버린 삼단 정신(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은 공교롭게도 공맹사상의 핵심인 인성론적 특성들이다.

고순흙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당시의 아나키스트들은 정통 유학의 성격뿐 아니라 민족주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민족주의는 아나키즘과 양립할 수 없기에 고순흙 등은 아나키즘의 본령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동아시아의 아나키즘을 분석한 영국의 존 크럼 요크대 교수는 식민통치와 분단이라는 시대적 조건이 민족국가와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주의로 퇴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³³⁵⁾ 고순흙의 아나키즘은 반제국, 반식민, 반봉건, 반인권을 분쇄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이자 실천 윤리 지침으로 채택된 방법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2. 고순흙의 성장과정에서 만난 여성들

고순흙은 1893년 1월 14일 정통 유학 가문에서 태어나 지방의 유림 자제들이 통상적으로 거치듯 향리에서 한자를 익히다가 1907년 7월 제주의신학교 보통과에 입학했으며 1910년 4월 제주공립농업학교에 편입해 1911년 3월 졸업 후 1912년 서울로 유학했다. 1914년 3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7월 대동청년단에 가입한 뒤 고향으로 돌아왔다.³³⁶⁾

고순흙의 탄생과 성장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가 사회의 기득권에서 사회적 약자로 신분의 붕괴를 경험했으며 모친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 받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봤다는 점이다. 고순흙은 어머니의 묘비명에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했다.

듣건대 당시 명문(名門)인 파평윤씨 댁에 시집을 갔으나 일찍이 남편을 타계하시었다. 곧 남편의 뒤를 따르려 했으나 시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해야 하겠다는 뜻이 깊어 죽지 못했다. 시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자 치신(治身)하여 시가(媳家)를 일으키니 각계각층에서 신임을 얻어 이웃에서 찬사를 받게 되시었다. 그 총명함이 널리 알려져 또한 명성이 높

335) 김갑수(2007), 「아나키즘의 윤리관과 전통 윤리관의 만남 및 변용」, 『시대와 철학』 제18권 1호, 2007, 77~78쪽(각주 13).

336) 김찬흙, 앞의 책, 168~169, 172~173쪽.

아지자 소위 정려표창(旌閭表彰)이 미치게 이르렀다.

아! 하늘이여 서럽도다. 과부이며 열녀로서 나이 40이 지나 첫 아들을 낳으니 가히 유가(儒家)의 집안에 변사(變事)가 일어났다고 야단들이었다. 친척들이 모자를 해하고자 하니 해산 당일 10여처로 피신하며 돌아다녔다. 떠돌이 신세로 3년이 지나서 아들의 아버지인 성균관 교수 고성겸 공이 내방하시자 한 손님으로 여겨 단연 만나기를 사절하고 의연하게 떠나기를 재촉하시었다.³³⁷⁾

고순흠은 죽은 자를 추모하는 묘비명과 만시, 비문 등을 많이 남겼는데 묘비명에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상세히 기록했고 자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순흠의 사회적 실천은 자서전의 내용과 일치했다.

고순흠은 자필 회고인 「무정부주의자가 된 동기」에 “7세에 선실부친(先失父親)하고 가위 독학으로 하게 되니 17세에 성선과 성악, 양설을 다 부정하고 「성본무색투명(性本無色透明)」이라, 자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했는데, 열녀로 칭송을 받았던 어머니가 과부로서 외간남자와 아들을 낳고 나서 변사(變事)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8세까지 성장하자 이제는 자결할 뜻을 가졌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유년 시절은 우울한 나날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성선과 성악이라는 전통의 지적 논쟁에 무상함을 느끼고 성본무색투명(性本無色透明)과 노자·장자의 학설에 귀를 기울이게 된 인과성이 보인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여성에게 주목한 것은 어머니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자신과 함께 사회운동을 했으나 작고했던 김시숙 여사에 대한 묘비명에는 마치 어머니의 또 다른 자아를 기록해 놓은 듯하다. 어머니와 김시숙 여사의 차이점이라면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고통 받았다면, 김시숙 여사는 고통을 거부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재래의 불합리한 도덕과 윤리는 특히 여자의 개성과 인권을 무시하였다. 그 결과 약자는 거기에 순종하였으나 강자는 반역케 되었다. 그런데 반역자는 왈(曰) “탕녀(蕩女)”, 순종자는 왈(曰) “열녀(烈女)”란 전도된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실(史實)에서 순정의 애도 진정한 정조도 발견할 수도 없다. 남성의 그것이 없는 이상 여성에게만 그 존재가 설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순된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열녀라면 충실한 반역자 무릴 것이며 동시에 비참한 시대적 희생계급이다. (중략) (김시숙(金時淑) 여사는) 결국 결혼생활은 실패하고 사십세에 꺾기하여 초학을 약수(略修)한 후, 부인여명(婦人黎明)과 유년교육(幼年教育)을 개척하고 도일하여 여공노동소조의 창업과 수성운동에 몰두하다가 시기의 불우(不遇)인지, 그 사업도 모두 소멸되고 자신도 54세되던 계해 7월 15일 대판 적십자 병원에서 주인 없는 송장을 이루고 말았다. (중략) 한망후(韓亡後) 27년 병자 7월 15일 건지(建之) 고순흠 근지(謹識)³³⁸⁾

337) 김찬흠,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4」, 『교육제주』 60, 1987, 204~206쪽.

김시숙 여사는 고순흙과 동향인 조천 출신이며 13년 연상이다. 일본에 건너오기 전 조천에서 강평국, 이재량 등과 함께 부인들의 수양기관인 부인회(婦人會)를 조직하였고, 야학을 통해 문맹자퇴치운동을 열정적으로 벌인 경력을 눈여겨 본 고순흙은 재일여공노동소비조합(在日女工勞動消費組合)을 조직해 재일교포 노동여공의 복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³³⁹⁾ 일본에서의 여성교포들은 방직공장에 고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온갖 경제적 수탈과 정신적 예속, 신체적 학대에 고통 받고 있었다.

고순흙이 제주해녀어업조합을 창립(1920년 4월)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객주와 거간꾼에게 채취한 해조류의 판매대금을 약탈당했던 해녀의 사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주도 유지들과 함께 1918년 1월 수산조합을 조직하여 해녀의 권익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만 여의치 않자 1919년 10월 김태호 외 유지 인사 여럿과 해녀조합을 조직했다. 전라남도 당국과 설립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해조(海藻)주식회사의 지정 판매에 맞서며 해녀가 채취한 해물을 4할인으로 조선해조주식회사에 팔고, 해녀는 주주가 되어 이익배당을 받는다는 요구를 통과시켜 제주해녀어업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데 성공한다.³⁴⁰⁾ 고순흙이 제주해녀어업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은 매우 적극적이며 지속적이다. 당시 해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으며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간접적으로 지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순흙에게는 제주 해녀의 빈곤 탈출이 목적이었고, 제주 해녀가 자주성을 찾고 스스로 투쟁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주는 것이 과제였다. 1931년~1932년 동안 이루어진 해녀 투쟁을 주도했던 부춘화 등은 야학에 다니면서 성장했고 일제 당국에게 지정판매제 폐지를 얻어낸 결과 바다에서 떠난 물건을 제값에 팔 수 있었다.³⁴¹⁾

1924년 32세의 나이에 오사카로 도일한 고순흙은 제주의 여성들이 방직공장에서 경제적 수탈과 정신적 예속, 신체적 학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1910년부터 일제 당국은 오사카자본의 노동자모집에 ‘알선’이라는 명분으로 깊숙이 개입했는데, 제주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제주도사가 오사카를 방문해 제주도민에 대한 자유도향을 교섭하고 오사카 공장주에게 제주도민을 저임금에 고용해 달라는 ‘애원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당국은 제주도공제회(내지도항자조합→제주도공제조합→제주도공제회)를 설립해 경찰서장을 겸임하는 제주도사를 회장으로 각 면장을 지부장으로 조직해 도항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해서 한 번 도항할 때마다 1원씩의 회비를 강요했다.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선할 수 없으므로 도항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도항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착복했다.

1937년 가미가야마루를 타고 오사카에 간 현시옥의 회고에 따르면 “우리 제주도에서

338) 김찬흙, 「애국지사 죽암 고순흙의 생애2」, 『교육제주』 58, 1986, 168~169쪽.

339) 앞의 책, 168쪽.

340) 이호룡, 앞의 논문, 58~59쪽.

341) 염인호, 앞의 책, 127~128쪽.

탄 자는 배의 가장 낮은 곳, 부산에서 탄 사람은 그 위의 곳, 가장 높은 선실에는……기 모노를 입은 일본인만의 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도민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오사카 현지인의 차별도 극심했는데 “정어리인가 생선인가, 찬밥도 밥인가, 조센징 이 인간인가”라는 말이나 일부 셋집 앞에는 “개나 조센징 사절”이라 붙였다. 1920년대 오사카에서는 “제주놈 대가리 두드리면 술이 나온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육지출신 조선인들이 제주도출신 노동자를 갈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다. 재일조선인 사회 안에서도 “제주놈, 육지놈이 서로 비방, 경멸, 반목”하는 지방차별도 심각했다.³⁴²⁾

고순흠은 여성 노동자들을 일본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인노동동맹, 조선여공보호회를 조직해 투쟁했다. 이때 13년 연상이며 동향인 김시숙 여사와 명콤비를 이뤘다. 김찬흠은 “죽암은 김시숙 여사로 하여금 재일여공노동소비조합이란 단체를 조직 하게 하여 교포 근로여성들의 복리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또 상호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게 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³⁴³⁾고 말했다. 고순흠의 활동 내용 중에 여성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여성의 굴레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골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고순흠의 여성관을 엿볼 수 있는데, 고순흠에게 있어서 여성은 남성 못지않은 재능과 지혜를 지닌 동등한 인간에 다름 아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자주성을 찾을 때 여성을 멸시하는 전 근대적인 편견이 분쇄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오사카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일본인 자본가만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같은 지역의 남자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도 대단했다. 고순흠이 남성으로서 여성의 자주성을 온몸으로 응원할 때 주변의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2-3. 노자(老子)의 삼보(三寶) 정신에 입각한 자주운향운동

자주운향운동은 1929년 고순흠 등이 결성한 소비조합인 우리계(宇利契)가 제주도-오사카 항로를 둘러싸고 전개한 운동이다. 일본 선박회사인 니기기선과 조선우선의 횡포에 맞서 고순흠의 동료들은 기업동맹 기선부를 설립하고, 1928년 12월 10일에 가맹원 16명이 300원을 출자해 순길환(順吉丸, 1,400톤)을 임대운행했으며 첫 운행일은 1929년 4월 16일 오후 6시였다.

자주운향운동에 대한 고순흠과 우리계의 활약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글에서는 상술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순흠과 그의 아나키스트 동료들은 왜 이처럼 무모한 사업을 벌인 걸까? 비유하자면 왜 계란으로 바위를 친 걸까?

342) 이준식, 앞의 논문, 19~22.

343) 김찬흠, 앞의 책, 168쪽.

우리계의 출자액과 조합원은 김문준이 주도한 동아통항조합(조합원 1만명, 융통한 자금 6,000원)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적다. 기업동맹 기선부의 설립 취지문과 유인물을 보면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봄부터 대판 제주도간 재래의 향로에 대한 비난의 운동이 제창되자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그 운동 자체가 민중적화(民衆的化)케 된 것은 즉 일반의 뇌중(腦中)에 횡일(橫溢)하는 불평과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 때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도리어 피 토할 인욕의 체험만 얻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당시에는 맨손이었던 우리로서는 도무지 현실적 준비와 적극적 대책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이에 대해 느낀 바가 있어 본동맹에서는 미력을 불계하고 담대히 그런 대중적 희망이 만일에 부응키 위하여 이번 봄 대판-제주도간 독립향로의 경영을 솔선하여 실현케 되었습니다.³⁴⁴⁾

일본 선박회사의 폭리와 학대를 견디지 못한 제주도민은 1928년 4월에 자유도항과 배삯 인하를 요구하는 대회를 열었지만 조롱만 들었을 뿐 꿈쩍도 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기업동맹 기선부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고순흙의 의도가 담겨 있다.

금후의 경영은 당연히 제주도민 전체의 직영으로 돌려보내게 되오니, 여러분은 신속히 공영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인계하여 가시기 바라는 바이외다. 그러므로 본 동맹에서 직영하는 동안의 이해 처분도 역시 제주도민 전체의 본위로 행케 됩니다. 즉 승선자의 동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인원수의 비례를 따라 제주도 13면 167개 리의 지방산업과 교육자금의 재원을 삼기 위하여 각리 리유재산으로 편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공동재단을 조직하여 독립향로의 영구한 유지책과 흥산장학의 시설에 공헌하고 순공영자금으로 제공기로 결정된 바 불감이나마 이 사실을 미리 공개하고 약속하여 두나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공기(公器)가 출현하면 대중은 반드시 그것을 잘 운용하고 성장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향로의 운명도 첫째 여러분의 민족적 각성의식의 정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³⁴⁵⁾

고순흙은 제주-오사카 향로를 이용하는 제주도민을 소비자로 한정짓지 않고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업을 인계하고 성장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후 펼쳐진 상황들은 고순흙의 기대와는 달랐다. 하지만 자주운향운동은 ‘밀지는 장사’였을까? 김문준 등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운향운동에 가세하여 판이 커졌으며, 일본의 두 선박회사는 8년간 유지되었던 3등실 10원50전(평균)을 3원으로 낮춘 데다 3회의 식사 제공에 수건과 비누

344) 김찬흙, 앞의 책, 192쪽.

345) 김찬흙, 앞의 책, 192쪽.

도 제공해 주고 손님 접대도 친절해졌다.³⁴⁶⁾ 사회적 약자로 취급 받던 제주도민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낯선 풍경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어처구니없는 취급을 받더라도 ‘현실적 준비와 적극적 대항책’ 없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자주운향운동과 ‘우리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계에 대한 고순흙의 자술을 보면 노자의 사상과 현실 인식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계는 경찰을 제외하고 도청은행 금융조합 학교 등의 공무원과 각종 실업가 기타 도민 유지를 제주도 환12포별로 총망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금도 계원당 매월 3백원씩 「우리계」 명의로 식산은행에 예치키로 되어 있었다. 노자의 이른바 근(勤)·검(儉)·양(讓) 삼보(三寶)를 표방했고, 유흥비는 완전히 배제했다. 노자의 생존시는 전국시대였지만, 그가 거주한 5백리 주위는 평화로운 자연적 세계가 보존되고 있었다 한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일제히 가혹한 식민지 통치의 제한내에서일망정 가능한 한 이상에 가까운 사회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 아래 모인 계원의 명부를 압수했지만 사건을 성립시키기 어려웠다. 당국은 처음에 계획했던 65명의 체포를 포기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여 15,6명만 문초한 끝에 고병희 외 5명을 주모자로 기소했던 것이다.”³⁴⁷⁾

우리계 사건은 일제 당국이 대대적 검속을 하기 위해서 버리고 있었지만 고순흙은 치밀한 준비로 틈을 주지 않았고 결국 일제 당국은 계획을 축소하여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도민에 대한 애정과 이상뿐만 아니라 철저한 현실 감각이 없다면 운동세력은 일망타진되었을지도 모른다. 자주운향운동뿐 아니라 해녀조합 설립 등 해녀 투쟁과 일본에서의 여공보호회 등의 활동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순흙이 언급한 노자의 삼보는 자애로움과 검소함과 감히 나서지 않는 태도이다.

자애로움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고, 감히 나서지 않기 때문에 기물을 완성하여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함을 취하며, 검소함을 버리고 넉넉하기를 취하며, 자신을 뒤로 물리는 미덕을 버리고 앞에 나서는 것을 취하니 죽게 될 것이다. 무릇 자애로움으로 진을 치면 승리하고,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견고하니, 이러한 사람을 하늘이 장차 구하는 것은 자애로움으로 지키기 때문이다.³⁴⁸⁾

346) 이호룡, 앞의 책, 81쪽.

347) 김찬흙, 앞의 글, 227~228쪽. 노자의 삼보(三寶)는 ‘자(慈)·검(儉)·양(讓)’이나 ‘근(勤)·검(儉)·양(讓)’으로 오인한 듯하다.

348) 김시천, 『노자도덕경』(전통문화연구회), 2020, 208~209쪽.

앞장에서 나왔던 성품론을 연상하는 노자의 삼보 사상은 사랑의 아나키스트 고순흙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사랑하는 마음은 무한한 용기를 샘솟게 해 승리를 거머쥔 수 있으며 일제 강점기를 타파할 수 있는 힘도 사랑에서 나온다. 아나키스트가 권위와 강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사랑으로서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 온화한 성품과 애국, 애족의 마음이야말로 고순흙의 아나키즘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고순흙의 교육계몽 사상과 덕치주의적 반공사상

3-1. 고순흙의 교육계몽 사상

일제 당국은 식민지 통치 방법으로 우민정책(愚民政策)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설립을 극히 제한하였다. 당연히 극소수의 부유층 자제들만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고순흙은 기초적인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민중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고순흙은 28세 때 저렴한 비용을 받고 교과서를 우편으로 배포하는 중학강의록 제작 사업을 전개했다. 당시에는 이처럼 강의록이 많이 발행되었지만 대부분은 일본 교과서를 번역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고순흙은 직접 저술했기에 내용적으로 풍부했다.

조선에 앞서 동방에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대치하여 서로 전쟁할 때 고구려가 가장 강하고 백제가 가장 약하더니 수의 양제 집권시에 고구려와 경계를 두었던 수나라가 대군 113만을 끌고 기원전 612년에 직접 요하강을 건넜다. 고구려군을 대파하고 드디어 요동을 포위하였으나 촘촘히 성을 지키는지라 좌익대장군 내호아(來護兒)가 강희(江淮)의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해도로 고구려에 도착해 평향성을 끼고 60리에서 고구려병을 꺾고 성에 들어가 대파하고 돌아갔다.

우문술 등 9인이 나뉘어 여러 길로 나아가 압록강 서쪽에 회합하여 고구려군과 하루에 7회나 격전하였고, 청천강 살수의 싸움에서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에게 대패하여 장군과 병사들이 흩어졌다. 하룻밤만에 압록강에 도착하여 나아가니 450리를 이동했으나 9군이 강을 건너니 30만5천명이 돌아왔다. 요동에 도착한 자는 오직 2700이였으며 이듬해 다시 병사를 일으켜 내침하다가 불리하였다.³⁴⁹⁾

『중학강의록』의 내용은 평이하고 상식 수준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교과서를 번역한 것은 어떤 내용일지 생각해본다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학생을 위한 일본 교과서

349) 고순흙, 『중학강의록』, 18호(제주항일기념관 제공).

라면 고구려 이야기, 그것도 수나라 113만 대군을 무찌른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었을까? 독자는 수나라 대군에서 일본을 연상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강의록의 교과목은 수신(修身), 국어, 한문, 영어, 동양역사, 일본지리, 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물리, 화학, 과학 등이 수록되었으며 매월 1일과 15일 두 번에 걸쳐 발행하고 송부하는 일을 도맡았다. 하지만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³⁵⁰⁾

1. 학비체납의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강의록 발송을 정지케 되는 규례(規例)가 있으니 (학비가 다하거나 또는 부족이 발생할 때는 “학비진(學費盡)” 인(印)을 날송(捺送)한 강의록의 차호까지만 1책을 가송한 후 또 그 차호부터는 발송을 중지함) 학비가 중단 되지 않도록 전납금을 계송(繼送)할 사(事)
2. 회답(回答)을 요하는 통신에는 반드시 반송료를 첨부할 사(事)
3. 강의록은 중도유실의 경우가 많으니 매양 수신소가 일정함이 필요하고 학원(學員)이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즉시 주소변경계를 제출할 사(事)
4. 일체의 통신에는 자기의 씨명(氏名) 위에 학원번호(즉 학원증 호수)를 반드시 기재할 사(事)
5. 강의록은 매월 1일, 15일 일정기 이외에는 발송치 않게 되니 그 어간 독촉은 물송(勿送)할 사(事)³⁵¹⁾



〈그림 6-3〉 통신중학강의록 (제주항일기념관 소장)

중학강의록에 적힌 주의사항을 보면 어머니의 십전대보탕을 챙기던 고순흙의 세심한 성품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철저히 생활인, 학생, 약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일상생활과

350) 김찬흙, 앞의 책, 166~167쪽.

351) 고순흙, 앞의 책, 학원주의(學員注意).

가계를 세밀히 살피며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전개한 활동가들은 폭력투쟁이나 조직 활동 등에 천착하느라 생활과 문화, 교육, 일상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순흙은 어찌 보면 소소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겼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학습자를 최대한 존중하는 아나키스트 교육자의 태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있어 강력하게 인심(人心)을 지배한 두 명의 학자가 있었다. '다윈'과 '맑스'가 즉 그이다. 한 사람의 학자는 일반문중의 인생관을 뿌리로부터 혁명적인 것으로서 현실의 사회적 투쟁에 짝한 정신적 투쟁의 중심점이 되어 있다.

맑스설과 다윈설의 과학적 중요는 양자가 다같이 진화설을 발전시킨 바에 의한다. 단 후자는 생물체에 대하여, 전자는 인간사회에 대하여, 이를 구명한 바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진화설은 반드시 새로운 학설은 아니었다. 다윈과 맑스 이전에도 헤겔은 이미 이로써 그 철학의 중심점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윈과 맑스와의 특이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³⁵²⁾

「맑스설과 다윈설」을 기고한 시기는 고순흙이 수준 높은 문물과 지식, 사상을 왕성하게 받아들이는 시기였다. 스스로 새로운 문물을 공부하고 동료들에게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조직할 때도 노동자 스스로 공부하고 각성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순흙의 계몽주의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고순흙은 19세기 후반 사상계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두 사람으로 다윈과 맑스를 꼽으면서 두 사람 모두 진화설을 발전시킨데 과학적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윈은 생물체에 맑스는 인간 세계에 기여하였다고 말했지만 「다윈설과 맑스설」에서는 주로 다윈의 학설을 소개하였다.³⁵³⁾ 고순흙이 다윈을 중요하게 다뤘던 까닭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과의 연관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크로포트킨은 '적자생존'이 진화에 중요한 요소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상호부조' 역시 생물계 진화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개별투쟁보다 상호부조를 많이 한 종이 번성했으며 인간 사회 역시 상호부조에 따라 '자유연합' 상태가 최선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여러 동식물이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에 순차적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하는 학설은 19세기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그 이전에는 현존하는 동식물 수천 수만 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는 "천지창조의 날 신이 각종을 낸 것이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그때까지는 각종의 동식물은 옛날부터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으로 믿어졌다. 따라서 학문상으로 발견하더라도 부모는 자신의 특질을 자식에게 전하였고 동식물

352) 고순흙, 「맑스설과 다윈설」, 『공제』, 1921, 64쪽.

353) 하지만 장기 연재를 염두에 둔 이 기획이 강제폐간으로 인해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다윈의 학설에 비중을 두었다기보다는 맑스의 학설을 미처 소개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의 각 종은 불변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³⁵⁴⁾

그 동안 신의 섭리나 신비로만 얼버무렸던 자연 세계의 정교한 기능들은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 덕분에 이해될 수 있었다. 다윈은 자연선택뿐 아니라 생명이 마치 나뭇가지가 뿔어 나가듯 진화한다는 이른바 생명의 나무(*free of life*) 이론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생명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신이 자연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생명체를 심어 놓았으므로 “자연의 사슬 중 어디든, 그것이 열 번째든 1만 번째든, 하나라도 끊어지면 전체가 무너지리라.”(알렉산더 포프(영국 시인))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된 ‘존재의 대사슬’ 또는 ‘생명의 사다리’ 개념이었다. 하지만 생명의 나무 이론에 따르면 침팬지도 인간도 600만년쯤 전에 어떤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지간일 뿐 아니라 침팬지도 인간도 개미도 고래도 세균도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 나름대로 적응해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다. 다윈은 지구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생각을 과학적으로 부정했을 뿐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특정한 종이 다른 종을 지배하는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환상도 격파해 버렸다. 인간은 철저히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고수힘은 힘있는 민족이 힘없는 민족을 지배하고 ‘힘이 곧 정의’라고 하는 저급한 세계 질서와 도덕관을 다윈의 학설을 통해 격파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자녀가 부모와 달라지는 모습, 품종계량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선택을 자연이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윈은 오랫동안 그 문제를 고찰하여 드디어 ‘생존경쟁’이라 하는 해결에 도달하였다. 이 생존경쟁 중에는 다윈의 시대에 인간사회의 생산조직의 반영이 보인다. 당시 생산계에는 자본가적 자유경쟁이 전성기였으므로 다윈은 자연히 이를 통해 자연계에 일어나는 생존경쟁의 일대까지 생각이 미친 것이다. 그것은 다윈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맬서스의 저작을 읽고 처음으로 그 일에 정신을 둔 것이다. 맬서스는 당시 자본적 사회에 있어 빈곤기아가 이렇게 커진 것은 현존한 의식의 재료에 비해서 인구의 증가가 현격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설명에 의하면 인구에 비하여 식량이 적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다수는 그 경쟁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적 자유경쟁과 거기에 짝하여 비참과 빈곤 문제는 피하지 못할 자연법이라고 한 것이다. 다윈은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고 나서 “‘생존에 편리한 변이는 생존하기 쉽고 그렇지 못한 변이는 멸망하기 쉽다’는 관찰 결과 새로운 종의 형성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³⁵⁵⁾

354) 같은 책, 64~65쪽.

355) 같은 책, 68쪽.

다윈이 맬서스의 『인구론』을 정독하고 학문연구의 힌트를 얻은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과학계에서는 최근에는 ‘생존경쟁’(struggle of existence)을 ‘생존투쟁’으로 번역하고 있다. “저들은 각종 특유의 성질과 무기로서 다른 동물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싸우고, 추위와 더위, 건조와 습한 환경과 싸우고, 기타 전 세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들과 싸운다”³⁵⁶⁾는 고순흙의 설명처럼 번식 성공을 위한 경쟁 및 기후 조건을 포함한 외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는 ‘생존경쟁’보다는 ‘생존투쟁’이 적합하기 때문이다.³⁵⁷⁾ 경제학과 생물학이 융합해 자연선택이라는 생명 진화의 능동적 힘을 발견한 것이다.

「다윈설과 맬스설」이 실린 『공제』 8호는 안타깝게도 마지막 발행지였다. 9호가 제작되긴 했지만 일제에 의해 간행이 허락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3호에서 6호까지는 압수당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잡지는 1호와 2호, 7호와 8호 뿐이다. 「다윈설과 맬스설」의 마지막에 “속(續)”이라고 표시된 것으로 보아 연재를 계속 진행하며 고순흙이 하고자 하는 주장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당국은 잡지 검열을 가혹하게 적용하였고 『공제』는 수정에 수정을 반복해야 하는 지루한 작업 끝에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다윈설과 맬스설」의 내용은 다윈의 학설을 소개하는 것으로 머문 것이 아닐까? 『공제』 9호와 10호 등이 이어서 간행되었다면 「다윈설과 맬스설」은 어떤 이야기를 펼쳤을까?



〈그림 6-4〉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 고순흙의 묘³⁵⁸⁾

356) 같은 책, 69쪽.

357) 찰스 다윈(장대익 옮김이 서문), 「장엄한 사상의 시작을 목격하라」, 『종의 기원』, 사이언스북스, 2019, 24쪽.

358)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3-2. 고순흠의 덕치주의적 반공사상

나는 5세 때에 유림 태자후보였었다. 아버지 호는 몽봉(夢峯), 휘는 성겸, 성균관 교수로 행문관 직시관이었으니 더 말할 것 없이 공맹의 정통파였었다. 그러나 7세에 선실부친(先失父親)하고 가위 독학으로 하게 되니 17세에 성선과 성악, 양설을 다 부정하고 「성본무색투명(性本無色透明)」이라, 자각을 하게 되었다.

그 뒤에 노자의 성소설(性素說)을 발견케 되어 19세에 불혹이 되었다. 따라서 치평지도(治平之道)는 황제무위이치를 절대전법으로 긍정케 된 것이고, “빠구닝”이나 “구로포도깡”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 둘이 다 변애(變愛) 과보(果報)의 희생물로서 대삼영(大杉榮)보다 행덕추수(幸德秋水)를 나는 경애한다.

노장으로 대표되는 도가 사상이 아나키즘의 선구이자 세계 아나키즘의 근원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서양 학자들에게서 제기돼 왔다. 클라크(J.Clark)와 마샬(P.Marshall) 등이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러셀(B. Russel)은 장자를 아나키즘의 창시자로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의 오기하라와 무로부세, 중국의 호적(胡適) 등 동아시아 학자들도 이 주장에 가세했다.³⁵⁹⁾ 공자와 『논어』가 17세기 중반부터 유럽에 전해져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근대에 지적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³⁶⁰⁾ 18세기 서양 철학자들이 라틴어 번역본인 『노자』를 읽었고 깊이 연구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계는 경찰을 제외하고 도청 은행 금융합, 학교 등의 공무원과 각종 실업가 기타 도민유지를 제주도환 12포별로 총 망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금도 계원 당 매월 3백원씩 우리계 명의로 식산은행에 예치기로 되어 있었다. 노자의 이른바 근(勤)·검(儉)·양(讓) 삼보를 표방했고 유흥비는 완전히 배제했다. 노자의 생존시는 전국시대였지만 그가 거주한 5백리 주위는 평화로운 자연적 세계가 보존되고 있었다 한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의 제한 내에서일망정 가능한 한 이상에 가까운 사회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었다.³⁶¹⁾

일제 당국은 우리계가 무정부주의자들의 운동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1930년 7월 일제 검거하고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고병희는 6년, 조대수는 5년 등의 중형을 언도했다. 고순흠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유로 화살은 피할 수 있었다. 제주4.3 당시 조대수는 학살당하고 말았는데 고순흠이 조대수를 위해서 쓴 비문에는 우리계에 대한 설명과 조대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두 가지 원인을 명시하고 있다.

359) 김갑수, 앞의 논문, 88쪽.

360) 황태연,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김영사, 2015, 36~47쪽.

361) 무정부주의운동사 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 운동사(전편)』, 244쪽에서 재인용.

아! 순수한 기질에 참다운 인격을 갖춘 민족독립운동자에게는 항상 두 얼굴의 적이 있었으니 전자는 유물론을 숭상하는 공비(共匪)요, 후자는 부일하는 민족반역자들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른바 우리에게 비밀결사 사건으로 5년 투옥되고 해방 후 제주4.3 당시는 반역분자의 무고한 모략 때문에 국군(國軍)의 오인 사격을 맞게 되었다.³⁶²⁾

고순흙의 아나키즘 사상에는 반공(反共) 사상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등 역대 독재정권과 군부정권이 국시(國是)로 신봉하는 반공주의와는 다르다. 조선노동공제회 탈퇴 사건으로부터 일본에서 조총련에 대항한 민단 결성 운동에 이르기까지 고순흙은 평생 동안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비난하여 왔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은 이승만 정권이 정치 경제적인 위기에 한계를 드러내며 지지부진했었던 상황이었다. 고순흙은 1월 5일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함께 재일동포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자유인구락부(自由人俱樂部, 자유인클럽)”을 결성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³⁶³⁾ 이 자리에서 고순흙은 반공사상을 펼쳤다.

지력(知力)에 의한 것이 최상책이고 금력(金力)에 의한 것이 차선책이며 무력(武力)에 의한 것이 삼선책이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금력과 무력에 의한 반공 투쟁은 일시적인 승리를 획득할지 몰라도 그것은 바로 진공의 반공이며 근본적인 방위 수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천시(天時, 기회)는 지리(地利, 실력)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 인심의 설복)만 같지 못한 법이다. 사상의 투쟁은 사상의 힘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완전히 극복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³⁶⁴⁾

고순흙의 반공사상에는 맹자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천시, 지리, 인화라는 용어 자체도 『맹자』의 개념³⁶⁵⁾을 원용했으며 반공사상 역시 공자와 맹자의 덕치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힘으로써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것은 상대방이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부족해서다. 덕으로써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70인의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시경』에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구나’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³⁶⁶⁾

362) 김찬흙, 앞의 책, 231쪽.

363) 김찬흙, 앞의 글, 170쪽. 참석자는 고순흙, 정찬진, 우한용, 장상운, 정태성, 박울래, 송세하, 이원세, 정철, 김문곤, 김용균, 김광준, 장기설, 박준, 정갑진, 성춘하, 김태욱, 유석준 등 18명이다.

364) 김찬흙, 앞의 글, 171쪽

365) 『맹자』 「공손추장구하」, 1장

366) 맹자」 「공손추장구상」, 3장

고순흠이 정세를 진단했던 1954년만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지구의 절반 이상을 장악할 정도로 기세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북한이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던 때였다. 일본 사회에서도 북한 산하의 18~19개 조직체가 완전한 통일체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사상단체를 조직하여 주민, 직업, 성별, 학생, 청년, 소년, 농민, 학계, 정계 등 사회, 문화 각 방면의 조직체계를 완성한 상태였다. 결국 지력(知力)의 싸움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압도하여 공산주의에 치우쳤던 대중들이 반공사상에 마음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고순흠의 반공정책이다. 공자와 맹자의 덕치주의는 피통치자에게 권위와 무력으로 강제하지 않고 마음으로 감동시켜 복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권위와 강제를 부정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순흠 특유의 아나키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순흠의 아나키즘이 반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 반공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오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고순흠을 반공주의자라고 한다면 조지 오웰을 반공주의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중요한 점은 고순흠이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운동, 그리고 대중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다지도 증오에 가까운 반감을 가지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당시 아나키스트들은 공산주의자들과 극렬한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고순흠은 거대한 전선의 한 병사에 비유할 수 있다. 고순흠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공산주의자들이 보이는 권력지향과 중앙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향을 보이는 ‘사대주의’, 그리고 파벌주의다. 특히 파벌주의에 대해서는 고순흠과 대척점에서 활동했으며 같은 제주공립농림학교 2회 졸업생이었던 공산주의 지도자 김문준도 같은 입장이었다. 김문준은 1927년 7월 오사카로 건너가 노동자 중심의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재일조선노동총동맹 내 일부 간부파는 그가 서울파 공산주의그룹이라는 이유로 공격했다.³⁶⁷⁾ 그리고 오사카조선노동조합에서 활동할 무렵에는 오사카 조선노조의 전신이었던 오사카연합회 노동운동가와 재일조선노동 본부 또는 조선공산당 인물들 간에 파벌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일조선노동의 해산에 적극 찬성하였다.³⁶⁸⁾ 재일조선노동이 노동조합전국협의회(이하 ‘전협’)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문준은 재일조선노동의 오류를 청산해야 하므로 전협조선위원회 활동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즉시 전협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협조선위원회 측은 ‘전국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문준에게 분열주의자, 스파이, 서울파, 제주도지역 편파주의자 등으로 매도했다. 그때 김문준은 재일조선노동의 한계로 인해 노동운동이 분산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³⁶⁹⁾ 일본 당국에 의해 1930년 8월 8일에 검거돼 1932년 4월 12일 오사카구재판소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367) 신소연, 『일제강점기 김문준의 사회운동 연구』, 2018, 석사학위 논문, 28-29쪽.

368) 신소연, 앞의 논문, 35-38쪽.

369) 신소연, 앞의 논문, 45-46쪽.

하던 중 1934년 3월 2일 병보석으로 풀려난 김문준은 오사카의 유일한 조선어 신문인 『민중시보』 발간에 힘을 쏟으며 당파적이지 않는 것을 취지와 목적이라고 선언했다. 당파주의와 파벌주의는 대중들의 힘을 결집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³⁷⁰⁾

고순흙과 김문준은 추구했던 길은 달랐지만 대중의 힘을 결집하는 데에 몰두했으며 반대로 대중의 힘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자라는 입장 차이로 가려질 수 없는 공통점이다.

4. 맺음말

일제 강점기 제주의 지식인들은 대중들과 연대하며 투쟁하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라는 상황과 시기별 상황에 따라 저항운동의 결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저항정신은 다르지 않았다. 지주와 소작의 계급 구도가 강력하지 않았던 제주도에서는 지식인이 정치인이며 동시에 지주가 됨으로써 대중들과 계급 차이를 보였던 육지부와는 달리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지식인은 대중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뒤에서 돕는 일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방 이후 별도의 선거 절차 없이 대중들이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을 인민위원회 간부로 추대한 것은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주도의 지식인들은 일제강점기 시기별로 저항 방법을 달리 하였고,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유배 지식인으로부터 배운 학문적 전통과 근대 교육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고순흙처럼 동양철학과 아나키즘 사상의 변용이 나타날 수 있었다.

아나키스트 사상가 고순흙은 자신의 지적 바탕인 유학 전통과 노자 철학에 뿌리를 둔 채로 아나키즘 사상을 수용했다. 노자의 삼보 정신, 특히 자애(慈愛)의 정신은 고순흙의 활동과 기획의 동기이다. 아나키스트는 권위와 강제, 조직을 반대하지만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 넣는 사람이다. 착취와 학대에 내몰린 제주도민들의 고통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의 발현이며, 제주도민의 고통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수오지심(羞惡之心)의 발현이며, 자주운항운동을 추진하고 해녀조합 결성을 지도하면서도 끝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으려는 마음은 사양지심(辭讓之心)의 발현이자 겸허(謙虛)의 정신이다. 이와 같은 태도가 닿는다면 대중은 마음으로 복종하는데, 민심(民心)을 얻는 것은 덕치주의의 기초다. 이것이 고순흙의 아나키즘 사상이자 동양철학적 변용이다.

370) 신소연, 앞의 논문, 50-51쪽.

서도(書道)와 서예(書藝)에 대한 고순흠의 견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상의 핵심을 형성하는 원천은 단순하며 보편적이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온화한 성품과 자애로운 마음에서 뿌리를 이룬다. 뒤집어 말하면 광복 이후의 혼란은 온화한 성품과 자애로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옳고 그름이라는 차가운 이성적 판단이 정치와 사상, 운동을 지배할 때 갈등과 동족상잔의 비극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은 현재 제주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명분과 실리에만 집착하며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상이나 실천이 없다면 제주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통유학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나키즘을 수용하게 된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문에 밝힌 것처럼 고순흠 등 일제강점기의 아나키즘은 정통 아나키즘과 이질적인 면이 있으며 때로는 아나키즘의 본령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고순흠의 경우는 민족주의와 반공 사상이 엮보이는데 이는 모두 정통 아나키즘에서는 금기하는 것들이다. 이로써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 반제국, 반식민, 반봉건에 이어 반인권을 돌파하는 수단으로써 아나키즘을 수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아나키즘이 현지화되는 좋은 모델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통 유학과 노장사상이 아나키즘 사상의 변용 형태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크로프트킨을 축으로 하는 고전적인 아나키즘 개념으로 아나키스트 고순흠을 분석했으며 동양사상과 아나키즘의 변용 형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 고찰하였다.

정통 동양사상과 아나키즘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고순흠이 실제 현실에서 실천하는 활동 역시 변용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성균관 교수로 활동하다가 어머니가 70 고령이 돼 노쇠해졌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지체 없이 제주로 귀향했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였던 고순흠은 유독 여성의 처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단순 지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처지가 개선될 때까지 집중했던 모습은 제주해녀어업조합 창립 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순흠의 책임감은 여성을 넘어서서 당시 교육 기회가 적었던 청소년을 위한 통신강의록 배포 사업에서 엿보이고, 제주-오사카 항로로 생계를 잇던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배 값을 부과한 일본 선박회사에 대항한 자주운항운동에 나타난다.

아나키즘 사상은 개인의 자주성을 수호하지만 거대한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사상은 강력한 조직력과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강력하게 맞설 수 있지만 개인이 소외되거나 희생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주성이 소외된다면 조직력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는 일제강점기 활동가와 지식인들을 괴롭혔고 고순흠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동양철학의 인성론과 자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을 연결시키고 덕치주의 정치를

펼침으로써 돌파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아나키스트 고순흙의 생애와 활동, 사상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저항운동을 고찰하였으나 고순흙과 동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과의 비교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순흙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동향이며 동시대를 살았고 오사카라는 같은 활동무대에서 활약했던 김문준과 비교 작업이 필요하다. 고순흙과 김문준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교육활동, 노동조합 활동 등 사회운동을 비교하면 고순흙과 김문준이 당대의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 차이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공산주의자 김문준과 아나키스트 고순흙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김문준은 공산주의 내의 파벌주의를 지속적으로 비판했고 고순흙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고순흙-김문준 이외에도 당대 지식인의 영향관계 또는 갈등관계를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 4.3 전후의 제주의 저항운동과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저항운동을 비교 연구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참고문헌

II. 일제강점기 제주 주요 항만의 축항과 영향

자료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목포신보』, 『부산일보』, 『경성일보』.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직원록』.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조선총독부, 『조선토목사업지』, 1930.

上田耕一郎 著, 『濟州島の經濟』, 釜山商工會, 1930.

梶田一二 著, 洪性穆 譯, 『濟州島の地理學的 研究 : 1930年代의 地理·人口·産業·出稼 狀況 等』,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김은희 譯,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연구저서

나애자,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국학자료원, 1998.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道評議會·道會議員을 중심으로』, 선인, 2011.

河原典史, 「植民地期の朝鮮における水産加工業-缶詰製造業を中心に-」, 『近代日本の地域形成』, 海靑社, 2007.

연구논문

고광명, 「일제강점기 竹中缶詰製造所の 제주도 진출과 사업전개」,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주학회, 2015.

고광명·진관훈, 「제주도 기업가 曁岩 朴宗實 연구」, 『한국학』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태우,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궁민구제토목사업과 지역개발」, 『역사와 현실』 86, 한국역사학회, 2012.

김광렬, 「1920~30년대 조선에서 실시된 일본의 ‘窮民救濟’ 토목사업」, 『근·현대 한일관계와 제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서일수, 「1930년대 전반 窮民救濟土木事業의 대도시 사례와 성격-京城·釜山·平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기훈, 「일제강점기 도서지역의 교통과 일상생활」, 『島嶼文化』 45,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5.
- 이상의, 「1930년대 日帝의 勞動政策과 勞動力 收奪」, 『韓國史研究』 94, 한국사연구회, 1996.
- 이종범, 「1930년대 초의 '窮民救濟土木事業'의 性格」, 『전남사학』 2, 전남사학회, 1988.
- 진관훈, 「日帝下 濟州島 農村經濟의 變動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하지영, 「조선총독부 해운정책과 朝鮮郵船株式會社의 항로 경영」,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전자자료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국토지리원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e-book/search/index.jsp>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 <http://www.jst.re.kr/main.do>

Ⅲ.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의 초등 교육기관 설립과 그 특징

자료

-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 善生永助, 『생활상태조사(제주)』, 1928.
- 고정종, 『제주도 편람』, 1930.
-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1939.
- 석주명, 「제주도의 회상」, 『지리학연구』 14(5), (일본어)(『제주도자료집』에 재수록), 1937.

연구저서

- 제주교육박물관, 『사진으로 엮은 제주교육 100년(1905-2009)』, 2009.
-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행정발전사』, 19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2011.

진관훈,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도서출판 각, 2004.

연구논문

강익준, 「해방 직후 제주 지역 중등학교 설립과 발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21.

김형목, 「일제강점 초기 개량서당의 기능과 성격」, 『사학연구』 78, 2005.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박래봉, 「일제 통치 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6, 1984.

박진동, 「일제강점하(1920년대) 조선인의 보통교육 요구와 학교설립」, 『역사교육』 68, 1998.

박진동, 「일제강점하(1920년대) 보통학교 6년제 승격운동의 전개와 귀결」, 『역사교육』 102, 2007.

백차훈, 「화북리 명칭의 변천과 화북교의 설립」, 『탐라문화』 10, 1990.

송찬섭, 「일제강점기 개량서당의 형성과 실상-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27, 2014.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초등학교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1, 1992.

양진건,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4, 1995.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교육사 연구」, 『한국교육사학』 19, 1997.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 운동」, 『탐라문화』 24, 2004.

오성철, 「근대 이후 서당교육의 사회적 특질」, 『한국초등교육』 32(1), 2021.

정성영,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최해경, 「일제강점기 보통학교의 설립과 교육활동-경기도 군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31, 2010.

Ⅳ. 일제강점기 해녀노동의 재인식과 제주사회의 변화

자료

『매일신보』,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京城日報』, 『木浦新報』.

이익태, 『知瀛錄』.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조선수산지』 3권, 1909.

靑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1903.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 4, 1903.

연구저서

강대원, 『제주잠수권익투쟁사』, 제주문화, 2001.

좌혜경, 권미선, 『제주해녀노래집-이여 이여 이여도사나』, 제주해녀박물관, 2010.

김정인 외, 『한국근대사.2: 식민지 근대와 민족 해방 운동』, 푸른역사, 2016.

무라야마 지준, 『조선인의 생로병사:1920~1930년대:무라야마 지준 사진집』, 신아출판사, 2014.

진관훈, 『오달진 근대제주: 신문기사로 본 근대 제주 경제와 사회』, 학교방, 2019.

_____,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각, 2004.

타카하시 노보루, 『조선반도의 농업과 농민.上:총론·영농실태조사(전라도·경상도)』, 민속원, 2014.

연구논문

박찬식, 「개항 이후(1876~1910)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 『역사와 경계』 68, 부산경남사학회, 2008.

안미정, 「식민지시대 한일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진관훈, 「일제하 濟州島 경제와 海女勞動에 관한 연구」, 『한국학』 2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일제강점기 신문기사로 본 제주 해녀 연구」, 『濟州島研究』 52, 제주학회, 2019.

김수희, 「조선후기 멸치어업 성립과 개항 후의 어업 변화 과정」, 『한국민족문화』 3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 「일제시대 남해안 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21, 부경역사연구소, 2007.

V.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면장(面長)에 관한 연구: 구좌·신좌·구우면을 중심으로

자료

- 『동아일보』, 『매일신보』,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조선일보』.
- 구좌읍지편집위원회,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2000.
-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고지도,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2020.
- 김민주 편저, 『朝天邑誌』, 제주문화원, 1991.
- 부영성,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 제주도, 『제주록: 조선총독부관보중』, 경신인쇄사, 1995.
-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 제주도, 『조천지』, 1976.
- 제주도, 『한림읍지』, 전문인쇄사, 1963.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동아일보』, 2016.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매일신보』, 20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떠난 우리고장 이야기: 구좌읍·조천읍』, 20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0.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한림읍 역사문화지』, 20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조선일보』, 2017.
- 표준국어대사전.
- 하도향토지발간위원회, 『하도향토지』, 태화인쇄사, 2006.
- 한림읍장·한림지 편찬위원회, 『한림읍지』, 신명인쇄사, 1999.

연구저서

- 강동식·강영훈·황경수, 『일제강점기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8.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 일제강점기 문화자원의 잔존현황과 활용방안』, 2021.
-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기사전:통감부 조선총독부 편』, 2017.

박수현·이용창·허중, 『일제의 친일파 육성과 반민족 세력』,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부만근,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정태현,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선인, 2007.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운동실록』, 1995.

연구논문

강만익, 「일제하 제주노동회의 운영 실태와 성격」, 『탐라문화』 38, 2011.

강만익,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탐라문화』 57, 2018.

김동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27, 2008.

김익한, 「1910년대 일제의 지방 지배 정책-행정구획 통폐합과 면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0, 1996.

김익한, 「1920년대의 일제의 지방지배정책과 그 성격-면행정제도와 모범부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3, 1996.

김익한, 「1930년대의 일제의 지방지배와 면 행정」, 『한국사론』 37, 1997.

김해규, 「지역의 친일잔재청산이 중요하다」, 『내일을 여는 역사』 70, 2018.

문순덕, 「제주지역의 근대 역사문화 시설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 『海峽圈研究』 14, 2014.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2004.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 아체이카 사건」, 『한국사연구』 70, 1990.

염인호, 「농촌진흥기 제주지방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제주도사연구』, 1991.

전성현, 「일제강점기 '민익이 있는 바를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읍회와 그 한계-김해읍의 '지방통치'와 김해 읍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2019.

조건, 「1920년대 『朝鮮文 朝鮮』에 나타난 조선인 面吏들의 面治 인식」, 『송실사학』 42, 2019.

지수걸,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 2010.

홍은정, 「일제시기 面職員의 존재 형태와 해방 후 활동」, 『역사와 세계』 35, 2009.

전자자료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 <http://www.jst.re.kr/main.do>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

Ⅵ. 일제강점기 제주도 지식인의 저항운동 : 죽암(竹岩) 고순흙의 생애와 활동을 중심으로

자료

고순흙, 『공제(共濟)』, 8호.
고순흙, 『중학강의록』, 18호.

연구저서

구승희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김상숙, 『10월 항쟁』, 돌베개, 2016.
김시천, 『노자도덕경』(전통문화연구회), 2020.
김명섭,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이학사, 2008.
염인호, 「일제하 제주도에서 전개된 아나키즘운동」 『한국 근현대 지역운동사Ⅱ 호남편』, 여강, 1993.
이호룡,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6.
-----, 『한국의 아나키즘-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
-----,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이한우, 『논어로 맹자를 읽다』, 해냄, 2015.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전예원, 1994.
좌혜경, 권미선, 『제주해녀노래집-이여 이여 이여도사나』, 제주해녀박물관, 2010.

찰스 다윈(장대익 옮김), 『종의 기원』, 사이언스북스, 2019.

콜린 원드, 『아나키즘, 대안의 상상력』, 돌베개, 2004.

황태연,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김영사, 2015.

연구논문

강재언, 「제주도와 대판(大阪)- 大阪에서의 동아통항조합과 노동운동」, 『제주도연구』 13, 1996.

김동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27, 2008.

김봉옥, 「일제하 제주에서 탄압 착취상황」, 『제주도사연구』 6, 1997.

김갑수, 「아나키즘의 윤리관과 전통 윤리관의 만남 및 변용」, 『시대와 철학』 18(1), 2007.

김찬흠,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 『교육제주』, 1986~1990.

서현주, 「1920년대 도일조선인 노동자계급의 형성」, 『한국학보』 63, 1991.

신소연, 「일제강점기 김문준의 사회운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심옥주,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2013.

양영수, 「제주4.3사건에 대한 아나키즘적 해석」, 『제주도연구』 45, 2016.

양진건, 「조선조 제주 교육사상사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 야체이카사건」, 『한국사연구』 70, 1990.

이준식,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의 오사카(大阪) 이주」, 『한일민족문제연구』, 2002.

이호룡,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 『제주도연구』 47, 2017.

전자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연구진

연구책임	양 정 필	제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노 우 정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오 승 주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현 미 애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현 수 성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제주학연구 75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

발행인 || 김 순 자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TEL.(064)726-5623 FAX. (064)747-6140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